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국 가 보 훈 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금 융 위 원 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2024. 8.

정 무 위 원 회

목 차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 1
Ⅱ. 심사경과 ····· 3
Ⅲ. 결산개요 및 검토보고: <붙 임> 참조 ····· 6
Ⅳ. 대체토론 요지 ····· 7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8
Ⅵ. 심사결과 ····· 10
Ⅶ. 소수의견 요지 ····· 11
Ⅷ. 시정요구사항 ····· 12

【붙임 1】 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 13
【붙임 2】 2023회계연도 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 211

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4. 8.

정무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국가보훈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세입·세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세출

○ 기　　금

- 보훈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세출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4. 금융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기　　금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년 5월 31일

2. 회부일자 : 2024년 6월 27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가보훈부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4. 8. 28.)

(상정・소위원회 회부・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심의・의결)

• 제3차 정무위원회(2024. 8. 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4. 8. 28.)

(상정・소위원회 회부・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심의・의결)

• 제3차 정무위원회(2024. 8. 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4. 8. 28.)

(상정・소위원회 회부・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심의・의결)

• 제3차 정무위원회(2024. 8. 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라. 금융위원회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4. 8. 28.)

(상정・소위원회 회부・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심의・의결)

• 제3차 정무위원회(2024. 8. 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4. 8. 28.)

(상정・소위원회 회부・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심의・의결)

• 제3차 정무위원회(2024. 8. 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4. 8. 28.)

(상정・소위원회 회부・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심의・의결)

• 제3차 정무위원회(2024. 8. 29.)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Ⅲ. 결산개요 및 검토보고 요지: <붙 임> 참조

【붙임 2】 2023회계연도 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최병권, 전문위원 : 황승기, 최기도)

Ⅳ. 대체토론 요지

1. 국가보훈부 소관

(없　음)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없　음)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없　음)

4. 금융위원회 소관

(없　음)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없　음)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없　음)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에 대하여 5건의 시정, 21건의 주의, 28건의 제도개선 등 총 54건의 시정요구 및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하여 1건의 시정, 26건의 주의(예비비 시정요구사항 4건 포함), 26건의 제도개선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를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12건의 주의, 14건의 제도개선 등 총 26건의 시정요구를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4. 금융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등에 대하여 25건의 주의, 47건의 제도개선 등 총 72건의 시정요구 및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

로 의결함.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1건의 시정, 11건의 주의, 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를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3건의 시정, 5건의 주의, 12건의 제도개선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를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Ⅵ. 심사결과

1. 국가보훈부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4. 금융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Ⅶ.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Ⅷ. 시정요구사항

【붙임 1】 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붙임 1】

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2024. 8.

1.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 총 239건(결산 · 예비비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국가보훈부	-	-	5	21	28	-	5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포함)	-	-	1	26	26	-	53
공정거래위원회	-	-	-	12	14	-	26
금융위원회	-	-	-	25	47	-	72
국민권익위원회	-	-	1	11	2	-	14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3	5	12	-	20
합계	-	-	10	100	129	-	239

※ 부대의견 3건(국가보훈부 소관 2건, 금융위원회 소관 1건) 첨부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국가보훈부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 과오급 연례적 발생 방지 대책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금 과오급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과오급금 환수액 수납부진에 따른 세수결손을 유발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행정착오에 따른 보훈급여금 과오급 발생 현황>
<table><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건수(건)</td><td>46</td><td>56</td><td>74</td><td>61</td><td>67</td></tr><tr><td>금액(백만원)</td><td>247</td><td>350</td><td>726</td><td>677</td><td>735</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금 과오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범죄경력 조회 빈도 확대 및 행정착오 발생에 대한 책임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지급계획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상금(1132-300)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상금 집행잔액에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 이·전용 규모는 642억 4,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 ○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보상금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제 지급인원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것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지급인원 감소 추세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급대상자 현황 파악 등을 바탕으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상금 잔액을 활용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추계 정확성 향상을 통한 집행실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활조정수당(1133-302)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생계지원금 2023년 집행률은 예산액 81억 2,400만원 중 14억 3,000만원을 타 사업으로 내역변경(감)하였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62.8%수준으로 저조하며, 2022년 집행률 역시 56%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지급대상가능인원 추계 시 자연적인 감소요인을 추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주의가 부족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자연적 감소요인 반영 등 추계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집행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인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참전명예수당(1133-307)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인 참전유공자는 고연령으로, 그 지급 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수요는 높아 의료비는 연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의료비 부족분(보훈병원진료 부족분, 위탁병원진료 부족분, 제대군인의료지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이·전용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이용 내역: 보훈병원진료(2150-365) 부족분 140억 8,500만원, 위탁병원진료(2150-366) 부족분: 79억 4,600만원, 제대군인의료지원(2150-450) 부족분 22억 8,400만원 ※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실적: '20년 173,733명, '21년 161,577명, '22년 146,932명, '23년 132,479명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해 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의료비 증가율 추계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참전명예수당(1133-307)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인 참전유공자는 고연령으로, 그 지급 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수요는 높아 의료비는 연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의료비 부족분(보훈병원진료 부족분, 위탁병원진료 부족분, 제대군인의료지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이·전용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이용 내역: 보훈병원진료(2150-365) 부족분 140억 8,500만원, 위탁병원진료(2150-366) 부족분: 79억 4,600만원, 제대군인의료지원(2150-450) 부족분 22억 8,400만원 ※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실적: '20년 173,733명, '21년 161,577명, '22년 146,932명, '23년 132,479명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예산편성 시 의료비 증가율을 추계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명확한 보상정지 처리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상금지급관리(1137-31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훈대상자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범죄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등 제재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품위손상행위자 실형 기간 외 추가 보상 정지 기간 평균 1년 6개월 ○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와 같이 명백히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에도, 보상 정지를 위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요청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 정지 제도의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상 정지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 등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사업 관련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심사위원회운영(1142-327)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은 회계연도 개시 전 직제 증원(’22. 12. 13.)에 따라 ‘전문경력관 다군’이 10명 증원되어, 심사지원 전문인력 지원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4억 5,6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직제개정과 관련된 부처 간 협의가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시작(22년 9월)되었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었다면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 사업 관련 절차 진행을 국회에 적시 설명·보고함으로써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중장기 인력 운용 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심사위원회운영(1142-327)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의 심사지원 전문인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이 부재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 관련 시설 전반의 인력 운용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 개선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등록관리(1143-328)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등록관리”의 내역사업인 “증서관리” 중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내내역사업의 계획 대비 발급률이 36.6%(2023년 6월~12월 말)로 저조하고 2024년 1분기와 2분기의 발급률 역시 저조함. 이로 인해 사업 종료 예정일인 2024년 말보다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예정된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국가보훈부의 보훈단체에 대한 월권 행사 방지 대책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3년 5월 국가보훈부 간부가 3단체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고,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관리·감독권과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등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강요한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월권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것 및 정부안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사업대상 선정 시 사업 추진가능성 점검 및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보훈회관 건립(1238-32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특히 2021년부터는 이월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지자체 사업 포기(부산 서구, 충남 홍성군)로 3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고, 행정절차 이행,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실집행률 부진 및 예산 이월(제주도, 함평, 성주, 속추, 진천, 안동, 강진, 대구 동구, 김포, 용인)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의 실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교부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월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도시철도, 광역철도 감면 이용액 보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도시철도, 광역철도 감면 이용에 대해 보조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사업 중단이나 축소가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광역철도 감면 이용액을 보조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문제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 위탁병원 진료(2150-366), 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진료비 보전금 규모 산정이 부정확하여 매년 과다한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모든 세부사업에서 부족한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연도말 증액 소요가 발생함. - '보훈병원 진료' 사업은 '보상금' 세부사업과 '참전명예수당' 세부사업으로부터 총 393억 8,500만원을 이용하였고, '위탁병원 진료' 사업과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참전명예수당' 세부사업으로부터 각각 79억 4,600만원, 22억 8,400만원을 이용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향후 의료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진료인원과 진료단가에 대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방문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 위탁병원 진료(2150-366), 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방문재활서비스는 확대되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의료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방문재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추계 정확성 제고 및 예산 변경 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 2023년도 예산의 산정근거를 보면, 지원인원은 실제 인원보다 과다추계(243,732명)되었으나, 실적단가는 실제 단가 대비 과소추계(△15,880원)되었음.

<2023년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계획/집행실적 비교>
(단위: 명, 원)
<table>
<tr><th colspan="2">2023년도 예산계획(A)</th><th colspan="2">2023년도 집행실적(B)</th><th colspan="2">추계오차 (A-B)</th></tr>
<tr><th>예상지원인원</th><th>예상실적단가</th><th>지원인원</th><th>실적단가</th><th>지원인원</th><th>실적단가</th></tr>
<tr><td>4,169,499</td><td>93,244</td><td>3,925,767</td><td>109,124</td><td>243,732</td><td>△15,880</td></tr>
</table>
자료: 국가보훈부

- 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2019-2021) 추세가액인 93,244원을 반영하였는데 직전연도인 2021년의 실적단가인 98,349원을 반영하였다면, 보다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사업 예산편성 시 직전시점의 실적단가 반영 등을 검토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이·전용 등에 의한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및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의료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2156-382), 대구보훈병원 주차장 증축(2156-392),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2156-39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숫자로만 강조되는 보훈·복지 강화 기조가 매년 각종 시설 사업의 공사 지연, 이월 등을 유발하고 있음. ○ 특히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예산편성 시 보조금 이월 등으로 추가 예산이 편성될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국가보훈부는 추가 예산 편성을 강행하였고, 2023년도에 30억원의 대규모 보조금이 재차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2156-382)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은 2023년도 보조금 3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전액 교부하였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6억 4,8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18.7%에 불과함. - 동 사업은 설계용역 지연, 착공 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됨으로써 과다한 규모의 보조금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공정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보조금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규모의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철저한 보조금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156-38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적보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학습보조비 연례적 부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2241-453)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연례적으로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학습보조비 연례적 부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2241-45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교육비 지급 단가의 인상이 필요함 * 교육급여 비교 : 2024.3월부터 적용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61천원, 중학생 654천원, 고등학생 727천원(1인당 연1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교육비 지급 단가를 인상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콘텐츠 구축사업 관련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3144-33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중 “독립기념관 콘텐츠 구축” 내역사업은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 계약 모두 매년 입찰업체 부족(단일 응찰)으로 유찰된 후 재입찰 공고 없이 입찰 참여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제안 설명회 개최 등 경쟁입찰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독립기념관 연구 기능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3144-33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 및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 수집·보존·조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함에도, 독립운동가 발굴 및 연구사업보다 행사·홍보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자체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료를 보다 상세히 국회에 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계약 체결 시 관계법령 철저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정신계승발전(3145-401)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훈문화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 체결한 계약 중 2건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 초과됨에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일부(9,200만원 중 5,500만원)는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행하였음. - 국가보훈부는 지방보훈청과 수탁기관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의해 과제를 추진하였다는 입장이나, 법적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예외 조항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계약 체결시 관계법령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낙찰차액을 활용함으로써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행태를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일회성 홍보 사업 지양 및 본연 업무 집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정신계승발전(3145-40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면서 보훈 문화 확산 사업의 예산이 23년 전년 대비 5배 넘게 증액(31.7억→172.7억)되었는데, 예산 급증 과정에서 토크콘서트, 퀴즈 경연대회 등 일회성 위탁사업으로 10억원이 넘게 사용된 것은 6.25자녀수당 예산의 부족분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 순위 설정이 잘못된 예산 집행이었다고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일회성 홍보 사업에 지나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유공자 예우 등 국가보훈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국외 탐방국 다양화 대책 및 홍보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내외사적지탐방(3145-40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내외사적지탐방”은 청소년, 청년, 교사 등에게 국내외 사적지 탐방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는 미국, 멕시코,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의 부재로 탐방국의 대부분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치우쳐 있고, 2023년도 선발인원 경쟁률은 1.74:1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외 탐방국의 다양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적지탐방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적극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예산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충시설건립(3146-40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LA 흥사단 건물 매입”은 “현충시설건립사업”의 세사업 중 하나인데, 국가보훈부는 2023년 2월 LA 흥사단 단소를 295만불에 매입하였음. 국가보훈부는 2023년 11월 LA 흥사단 단소 활용방안 수렴을 위해 미주 한인 대상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나 일부 한인 단체들과의 소통부재를 비판하는 현지 언론보도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LA흥사단 단소 착공 전까지 많은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부적정 사용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충시설관리(3146-406)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현충시설관리” 중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보훈인물 AI 디지털 휴먼 HW 구입”)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3억 1,400만원 및 타 내역사업 예산 8,000만원을 세목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등 부적정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충시설관리(3146-406)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현충시설관리”는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방점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예산의 절반을 동 사업 중 안중근의사기념관 및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등 대표 현충시설 기념관 인물들을 AI 디지털휴먼으로 제작하는 내역사업인 ‘현충시설 AI 디지털휴먼’에 소진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3146-410)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주지중화사업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진출입로에 3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을 지중화하려는 사업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그린뉴딜지중화사업”을 통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원 규모로 전주지중화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지중화사업”에 대한 인지 부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 추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동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3146-410)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공무직 인건비 23억 7,200만원 중 9,300만원을 불용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국내 독립기념행사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3147-41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의 내역사업인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국내 독립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5억 3,200만중 22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2,500만원이 불용됨. - 2023년도 국내 독립기념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내 독립기념행사의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3147-41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독립기념행사 관련하여 회계부적정 및 목적외 사용, 기부금 리베이트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2023년도에 실시한 국가보훈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회계부적정 및 목적외 사용이 47건(45,224,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독립기념행사지원 단체의 기부금 리베이트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10건, 39,910,000원)과 관련해서는 수사 의뢰가 진행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구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예산 편성 목적과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3248-34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중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내역사업은 후손확인위원회 증회 수당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예산 대비 9,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중 50%에 달하는 4,500만원을 예산안 편성 당시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홍보” 내역사업의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목조정하여 사용하였고, 300만원은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조정하여 사용하였음. - 후손확인위원회 증회 등을 위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사 횟수 및 심사 인원의 경우 2022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향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집행을 위해 증액된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3248-345)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중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심사위원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광복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조건도 완화하였으며, 법적 근거 없는 특별 분과위를 신설하는 등 친일이력 인사 재평가를 위하여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국립3·15묘지 시설의 조속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국립3·15묘지(3250-35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립3·15묘지” 중 “시설보수공사” 의 예산 18억 8,000만원 중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예산은 18억 7,000만원이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 지연에 따른 이월액 9억 6,4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에스컬레이터 설치 입찰공고가 집행부진의 사유로 유찰되었음. 이는 국립묘지의 품격에 맞는 시설환경 조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편의 측면에서도 조속히 진행되었어야 할 사안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포함하여 국립3·15묘지의 시설을 조속히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국립호국원 봉안당 확충 공사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임실호국원(3250-358), 국립영천호국원(3250-359), 국립이천호국원(3250-360), 국립산청호국원(3250-361), 국립괴산호국원(3250-36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립호국원 안장 잔여기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봉안당 확충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과다한 이월액(153억 6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공사가 진행 중인 5개 호국원의 안장 잔여 기수는 5,423기에 불과한데, 호국원 안장 대상 생존자는 2024년 4월말 기준 17만 678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90세 이상 고령자가 2만 6,956명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완공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호국원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착공 전 사전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시키는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적정한 공무직 인건비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임실호국원(3250-358), 국립영천호국원(3250-359), 국립이천호국원(3250-360), 국립산청호국원(3250-361), 국립괴산호국원(3250-36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영천·이천·산청·괴산호국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출 증가로 '공무직 등 인건비'가 당초 예산 대비 초과집행(집행률 100% 초과)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인력상황을 점검하여 공무직 인건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적정한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대군인전직지원금(4160-39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당초 예산액은 신청자 2,086명을 전제로 6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금 지원자가 3,248명으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30억원을 보상금에서 이·전용하여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에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낙찰차액 부적정 사용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4161-417)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6·25전쟁 정전70주년 기념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목) 낙찰차액 4억 6,3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을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임의로 집행함. - 동 사업의 낙찰차액 4억 6,3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2023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 연계 정전70주년 사전 붐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낙찰차액을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에 임의로 집행하지 말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적극적 사업 홍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4161-417)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제복의 영웅들사업'의 예산현액 52억 5,500만원 중 44억 7,2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8,300만원이 불용됨. - 제복지급 대상인원 4만 3,794명 중 신청인원은 3만 6,176명으로, 신청률이 82.6%에 불과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2</td><td rowspan="3">처본부운영
사업의 적정한
집행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처본부운영(7112-27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배정된 예산(약 33억 원)의 2배 수준(약 6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이·전용으로 본부운영비를 과다 사용하였으며, 5억 5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
- ①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을 위해 예비비 28억 4,500만원 증액, ② 공공요금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사업에서 1억원 자체이용 증액 ③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사업에서 270만원 자체전용 증액
<2023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9">2023년</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
등</th><th rowspan="2">예비비</th><th rowspan="2">예산
현액(B)</th><th rowspan="2">집행액
(C)</th><th rowspan="2">다음년도
이월액(D)</th><th rowspan="2">불용액
(E)</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3,374</td><td>3,374</td><td>23</td><td>370</td><td>2,845</td><td>6,612</td><td>6,097</td><td>10</td><td>50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처본부운영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과도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을 지양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3</td><td rowspan="3">보상금 등
예산을
본부운영비
등으로 이·전용
지양</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처본부운영(7112-27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가보훈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배정된 예산(약 33억 원)의 2배 수준(약 6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이·전용으로 본부운영비를 과다 사용하였으며, 5억 500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킴.
- ①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을 위해 예비비 28억 4,500만원 증액, ② 공공요금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사업에서 1억원 자체이용 증액 ③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사업에서 270만원 자체전용 증액
<2023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9">2023년</th></tr>
<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
등</th><th rowspan="2">예비비</th><th rowspan="2">예산
현액(B)</th><th rowspan="2">집행액
(C)</th><th rowspan="2">다음년도
이월액(D)</th><th rowspan="2">불용액
(E)</th></tr>
<tr><th>본예산</th><th>추경(A)</th></tr>
<tr><td>3,374</td><td>3,374</td><td>23</td><td>370</td><td>2,845</td><td>6,612</td><td>6,097</td><td>10</td><td>50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등 보훈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을 본부 운영이나 기본경비 등의 예산에서 이·전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연구용역 관리 및 적정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정책개발(7167-42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3년 예산현액이 12억 9,700만원에 불용액이 6.,500만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은 20억 7,800만원이 편성됨. ○ 이월액 1억 1,700만원은 연구용역 계약 지연(무응찰 등), 연구기간 연장(현안반영 등 연구 심화) 등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관리 부실로 추정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 영업구조 개선 방안 수립**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재료비·인건비 상승 등 영업비용 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특히 인천보훈병원 등 보훈병원의 영업손실 규모가 상당하여 2023년 기준 509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2019-2023년) 공단의 손익현황을 보면, 2023년 당기순손실 규모가 509억원으로 같은 기간 최대 규모임. 또한 같은 기간 매년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을 초과하여 최소 196억원(2019년)에서 최대 1,177억원(2022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훈병원 특성화 등에 따라 영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국가계약법령 준수 및 경쟁입찰을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2160-430)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수의계약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나누어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 추석 장관 위문품 및 연말 장관 위문품 두 건의 계약 건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견적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위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연간 반복적 구매 물품에 대한 경쟁입찰 및 과도한 국외출장 경비 집행 사례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160-44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노인생활지원용품 구매 시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건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쟁이 가능한 한 건의 입찰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집행임. ○ “복지사업운영” 사업에 편성된 국외출장을 수행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였는데, 이는「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되는 집행이며, 차량임차료를 임차료(210-07) 비목이 아닌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 것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간 반복적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도한 국외출장 경비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160-44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의 계획액 중 불용액이 73억 3,9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결원이 대거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결원 충원을 위해서는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관리 강화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보훈요양원 건립(2161-44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3년말 기준 보훈요양원 입소대기자는 1,480명에 이르고 특히 수도권 대기자가 1,102명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권의 경우 보훈요양원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개원이 필요한 상황임. ○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공사가 계획대로 착수되지 못해 완공 시점이 지연되고 2023년에 교부된 공사비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였음. ○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국가보훈부는 집행 실적과 관계없이 편성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고,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위배되는 보조금 교부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의 계획액 편성을 통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보훈장학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장학금(2242-326)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2년도에는 보훈장학(대학원) 신청자격 강화로 인해 2,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3년도에는 보훈장학(대학원) 신청자 감소로 4,400만원의 발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신청자격 강화, 신청자 감소를 이유로 연이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보훈장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장학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보훈대상자 위탁대부 사업 미상환 채권의 지급보증을 위한 지출 방식 개선**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대부(2259-387), 5·18민주유공자 대부(2259-388) 특수임무유공자 대부(2259-389), 국가유공자 대부관리(2259-390), 5·18민주유공자 대부관리(2259-391),특수임무유공자 대부관리(2259-392)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업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채권 양수 재원을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직접대부 재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 이는 직접대부를 위해 편성된 재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권 양수 방식의 지급보증이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지출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채권 양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원을 직접대부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지출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인건비 등의 상승률을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골프장위탁운영(2362-434)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당초 계획액 보다 7억 6,200만원이 늘어난 177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등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못하고 계획액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인건비 전년 대비 2억 6,700만원, 재료비 전년대비 1억 8,200만원, 경비 전년대비 2억 2,500만원 증액 집행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보훈성금 납부 축소 가능성을 감안한 사업 축소 대책 마련**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재향군인회지원(4163-436)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재향군인회 수익업체의 보훈성금 납부 규모 축소로 인해 24억 2,6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훈성금 납부 축소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 축소 대비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 기금존치평가 결과 이행 필요**	관련사업명	순애기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3141-40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2년 순애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에서 기획재정부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재 국가보훈부는 친일국가귀속재산 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친일 재산 발굴을 위한 후속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국회에 대면보고할 것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여비의 사후적 전용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2023년 잔여재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국내출장을 먼저 실시하고 정산단계에서야 부족분을 확인하여 예산을 사후적으로 전용(증)하였는데, 이는 전용될 예산의 용도가 적정한지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등의 취지에 맞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사전에 출장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이·전용 등을 실시하여 재원을 먼저 마련함으로써 정산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총리보좌 및 정책조정 실패에 따른 업무추진비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7011-251)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정책조정 등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법에 명시되었으나, 2023년에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LH 부실 아파트 시공, 새만금 잼버리 대화 졸속 시행,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묻지마 흉기난동 등 국가재난급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음에도 책임 있는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위 재난을 관리하지 못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만 펼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2023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같은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가대테러종합 훈련 방향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테러센터 운영(7032-303)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대테러센터는 테러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매년 1회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일반용역비(210-14) 1억 6,500만원을 들여 훈련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2023년도 훈련 시에 일반 시민의 참여는 없었으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음.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테러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려 했던 당초 훈련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다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대테러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훈련의 목표로 한다면 더 많은 일반 시민이 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내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만약 안전 등의 문제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테러 현장대응능력 강화' 목적에 집중하여 범정부적으로 준비해 온 대테러 관계기관들의 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할 것		
4	**전문임기제 충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권보호관 지원(7032-304)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반이 구성·운영되고 있음 ○ 지원반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1인, 전문임기제 직원 1인, 공무직 근로자 2인으로 구성되는데, 2023년 전문임기제 직위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인건비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해당 직위의 지원자 미달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직위의 충원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규제심판부의 회의실적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제도의 운영을 위해 2023회계연도 예산에 일반수용비 2억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규제심판부 회의 개최실적이 17건에 불과했으며, 이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포함하여 일반수용비 집행액이 3,650만원(집행률 17.4%)에 그쳤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규제심판부의 현실적인 회의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과도한 불용의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6	**덩어리규제발굴 사업 등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덩어리 규제발굴,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의 경우 총 4억 2백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고 2억 4,100만원(60.0%)이 집행되었으며, 발굴 규제 검토·개선 사업은 총 3억 8,500만원 중 1억 9,600만원(50.9%)이 집행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정책연구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의 정책연구용역을 지연 발주하여 정책연구비를 연례적으로 이월하였고, 2023년에 추진한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지체상금 납부에 대한 고려 없이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등 변경계약 과정에서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당초) 2023.10.27.~ 2023.12.31. → (변경) 2023.10.27.~ 2024.4.30. / 2023.12.27. 변경계약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정책연구비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8	**존속필요성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직제 반영을 적극 협의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안과제 추진 지원(7035-301)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및 세월호피해지원단을 별도정원과 비별도파견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2008년에, 세월호피해지원단은 2015년에 설치되었지만 아직까지 존속기한 설정 없이 운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임시조직이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직제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 처리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7035-306)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위원회가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해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그런데, 종합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한 확정 종합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1~2월경 국회에 보고되었지만, 이 종합시행계획의 수정과 관련된 보고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예산 전용이나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실시 등 '사업 변경'을 이유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필요는 없어,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신규사업 추진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도 내에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이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7035-306)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는 ODA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 위원회의 직접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ODA 정책·사업 관련 정보(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명시하였음 ○ 그런데, ODA KOREA 홈페이지 확인 결과, 위원회평가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관역량진단의 경우 개별 사업시행기관의 명칭을 익명처리하여, 어떤 기관이 어떤 평가결과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ODA사업과 관련된 위원회평가 결과를 국민 접근성이 높은 홈페이지 화면에 배치하고, 공개 시에는 사업시행기관 명칭 및 사업내용과 그 평가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개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 기여금 산출근거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7035-31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무조정실</td></tr>
<tr><td>지적사항</td><td>○ OECD 기여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근거로 OECD의 기여금 인상 요구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OECD 정책센터 경쟁정책센터에 지급되는 기여금이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인상되고 있음.
- 양해각서(§8②)는 직원 고용, 주요 작업내용 관련 모든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OECD 입장에서는 기여금 인상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
<최근 4년간(2020~2023년) 경쟁정책센터 OECD 기여금 편성 및 지급현황>
<table><tr><th>연도</th><th>예산편성 기준(€)</th><th>실집행액(€)</th></tr><tr><td>2020</td><td>200,000</td><td>217,105</td></tr><tr><td>2021</td><td>200,000</td><td>222,249</td></tr><tr><td>2022</td><td>230,000</td><td>238,303</td></tr><tr><td>2023</td><td>240,000</td><td>218,184</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은 기여금을 증액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하도록 하고, 양해각서의 추가 연장 예정일(2026년 7월 1일)에 앞서 양해각서상의 관련 조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항의 내용을 조정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필요성의 면밀한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무조정실</td></tr>
<tr><td>지적사항</td><td>○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2024년까지만 운영된 후 2025년부터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으로 대체될 예정임에도, 2023년도 예산에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사업비(12억 5,000만원)가 반영된 후 전액 불용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
<2023회계연도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table>
<tr><th colspan="3">국무조정실</th><th colspan="4">출연기관(한국고용정보원)</th></tr>
<tr><th>예산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r>
<tr><td>3,775</td><td>2,525</td><td>1,250</td><td>2,525</td><td>2,493</td><td>32</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 간 연계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청년DB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무조정실</td></tr>
<tr><td>지적사항</td><td>○ 청년DB는 당초 계획(연 평균 2만명)에 비해 2023년 말 기준 회원가입 인원(17,399명) 및 프로필 등록 회원 수(9,711명)가 저조함

<청년DB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현황>
(단위: 명)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3">성 별</th><th colspan="5">연 령 (만나이)</th></tr>
<tr><th>합계</th><th>남</th><th>여</th><th>합계</th><th>19~24</th><th>25~29</th><th>30~34</th><th>35~39</th></tr>
<tr><td rowspan="2">'23.12월말 기준</td><td>회원가입 현황</td><td>17,399</td><td colspan="2">-</td><td>17,399</td><td colspan="4">-</td></tr>
<tr><td>프로필 등록현황</td><td>9,711</td><td>5,125</td><td>4,586</td><td>9,711</td><td>1,983</td><td>3,139</td><td>2,995</td><td>1,594</td></tr>
<tr><td rowspan="2">'24.4월말 기준</td><td>회원가입 현황</td><td>21,471</td><td colspan="2">-</td><td>21,471</td><td colspan="4">-</td></tr>
<tr><td>프로필 등록현황</td><td>11,761</td><td>6,011</td><td>5,750</td><td>11,761</td><td>2,206</td><td>3,768</td><td>3,716</td><td>2,071</td></tr>
</table>
- 또한, 2023년에 청년DB를 통해 공공기관·지자체 등과 연결되어 활동한 건수는 총 385건으로 프로필 등록 회원(9,711명) 중 3.9% 수준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은 청년DB가 청년층의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분과위원회 다양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7035-319)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민간위원(76→32명)과 분과위원회(8→4개)이 축소개편된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및 분과위원회 다양화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것		
15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문임기제 미채용에 따른 업무공백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7035-319)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전문임기제 가급 1인, 나급 1인 공석 기간의 장기화로 1억 6,200만원 불용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전문임기제 미채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자 채용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의 운영 장기화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7036-311)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을 일곱 차례 개정하여 설치 이후 약 10년간 운영하는 등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임시조직을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한 감사원 감사결과('22.6월)·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정부조직관리지침(행정안전부 지침)」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함 * 2020회계연도·2021회계연도·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직제 반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운영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것		
17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조세심판원	주의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
		지적사항	○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최근 5년간의 평균 사건처리일수를 살펴보면, 2021년도 196일, 2022년도 234일, 2023년도 172일 등으로 법정처리기한 90일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처리제도의 경우 처리건수가 최근 4년간 최대 29건에 불과하고 전체 처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근 4년간 최대 0.3%에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을 마련하여 청구사건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고, 우선처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전자심판제도
운영 부진</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7036-30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조세심판원의 전자심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총 접수건수 대비 전자심판 접수 비율이 22.9%이며, 다른 연도에도 비슷한 실적을 나타냄
<전자심판 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수)
<table>
<tr><th>연도</th><th>총 접수건수</th><th>전자심판 접수건수</th><th>전자심판 비율</th><th>증감</th></tr>
<tr><td>2020</td><td>12,795</td><td>3,037</td><td>23.7%</td><td>-</td></tr>
<tr><td>2021</td><td>13,025</td><td>3,214</td><td>24.7%</td><td>1%p</td></tr>
<tr><td>2022</td><td>10,373</td><td>3,235</td><td>31.2%</td><td>6.5%p</td></tr>
<tr><td>2023</td><td>16,781</td><td>3,842</td><td>22.9%</td><td>△8.3%p</td></tr>
</table>
❍ 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의 온라인 청구 비율을 확인해 보면, 2023년도에 68.7%에 이르고,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전자심판 접수비율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본사업 시행 가능성이 낮은 ISP 수립사업 실시로 인한 예산 낭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주의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
		지적사항	○ 조세심판원은 2023년도에 일반연구비(260-01) 1억 4,450만원을 들여 조세전자심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실시하였음 - 이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청사이전 예산과 함께 반영되었음 ○ 조세심판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세전자심판시스템 개발사업의 단독 실시 가능성이 낮음에도 2023년에 별도로 '조세전자심판시스템 ISP 수립'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 본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ISP 수립 집행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옴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다른 기관과의 사업 중복 가능성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0</td><td rowspan="3">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은
정책연구비로
집행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조세심판원의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 과제를 살펴보면, 3건 모두 조세심판원의 정책 개발 및 현안에 관한 사항임에도 정책연구비(260-02)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였음

< 일반연구비(260-01)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table>
<tr><th>연도</th><th>과제명</th><th>집행액</th><th>계약기간</th></tr>
<tr><td>2021</td><td>포스트코로나 조세심판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td><td>20,000</td><td>2021.12.8. -
2021.12.31.</td></tr>
<tr><td>2022</td><td>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연구</td><td>45,455</td><td>2022.12.1. -
2023.3.31.</td></tr>
<tr><td>2023</td><td>심판결정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td><td>20,000</td><td>2023.10.6. -
2023.12.22.</td></tr>
</table>
○ 조세심판원은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함으로써 정책연구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연구결과물의 평가 및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정책 개발 및 현안에 관한 연구는 정책연구비로 집행하여 관련 법령상 절차를 준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시민사회위원회 운영경비 편성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7037-302)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총리비서실은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폐지된 시민사회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계획임에 따라 매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경비 예산(1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①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내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폐지를 권고한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②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음에도 매년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이 2024년 8월 현재까지 지연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③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음 * 2023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억 4,300만원 중 8,400만원(58.7%)이 집행되고, 5,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경청간담회, 교권 정상화 등 의견수렴 관련 교육개혁 경청간담회 등 시민사회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간담회 개최 및 시민사회비서관실의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와 관련성이 낮은 간담회 등에 예산액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법령상 설치근거가 없고 미구성된 위원회의 운영경비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2</td><td rowspan="3">민정실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의
적정성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7037-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td></tr>
<tr><td>지적사항</td><td>❍ 민정실 직원이 「예산안 편성지침」상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조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특정업무경비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 민정실의 주요업무 중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등 특정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업무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실 직원 현원 42명 중 41명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특정업무경비(250-03목) 편성 관련 지침>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26
· 적용대상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 세부지침 :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예산 편성 금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민정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시민사회위원회 필요성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7037-302)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후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위원회의 운영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위원회의 지속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며 국정운영의 부실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훈령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하반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24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2023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	시정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비슷한 시기 갤럽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높으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이 수행한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잘못된 조사를 바탕으로 국정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등의 수행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제도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주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지적사항	○ 출연연구기관은 결산잉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에 우선 적립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연구개발·교육훈련·기관발전 및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자체 청사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9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세공과금 일부를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해 납부하고 있음.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제세공과금은 청사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매년 부과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국토연구원 등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한 경상적 성격의 제세공과금 납부를 지양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적정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지적사항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 및 용역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 한국교통연구원(0.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0.2%)		
		시정요구사항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물품 및 용역의 총 구매액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논문게재료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지적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별 논문게재료 지급지침 여부 또는 세부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지급 금액의 상한 역시 편차가 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은 논문게재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급금액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논문게재료 관련 공통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게재료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공동채용
확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경제·인문사회
연구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개별 연구기관별로 실시하던 신규직원 채용을 공동운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출연연 공동채용 위탁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관련하여 3억 2,535만원을 집행하였음.
○ 그러나 공동채용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 및 채용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2023년도에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채용한 총 1,317명 중 68명(5.2%)만이 공동채용을 통해 채용되었음.
<공동채용 참여기관 수 및 채용인원>
<table>
<tr><th>구분</th><th>참여기관 수</th><th>채용인원</th></tr>
<tr><td>2021년</td><td>6개</td><td>19명</td></tr>
<tr><td>2022년</td><td>18개</td><td>127명</td></tr>
<tr><td>2023년</td><td>16개</td><td>68명</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공동채용 사업의 확산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재정정보시스템 보급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지적사항	○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출연연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표준화된 예산·결산 관리시스템 개발사업으로서 추진되었으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4억 2,4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24년 예산도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2023년도를 기준으로 27개 연구기관 중 8개 기관만이 재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24년에도 1개 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만 당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참여기관 확보, 출연연구기관 예·결산 투명성 제고 등 성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협동연구의 취지에 맞는 성과인센티브 운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주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지적사항	○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에서는 총연구비의 10% 이내로 성과인센티브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조사나 행사성 경비의 증가만으로도 성과인센티브가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음. - 그런데 총연구비에는 협력기관의 기여도와 무관한 위탁연구개발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기관의 기여도와 상관없는 위탁연구개발비가 증가되더라도 총연구비가 증가하여 책정가능한 성과인센티브의 한도액이 증가하게 됨. - 2023년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위탁연구개발비가 총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9.4%까지 분포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비에서 단순 조사 및 행사성 사업 등에 관한 위탁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가액을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평가사업 변별력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방식**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지적사항	○ '연구기관 인센티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평가사업 결과에 의해 선정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경상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억 8,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음 ○ 연구회는 평가사업 결과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관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균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2018-2023년) 수행한 평가사업에서 최소 22개 연구기관이 A등급 또는 B등급을 받는 등 평가결과가 중간화되고 있어 변별력이 크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개선을 위한 적정수준의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통신비의 지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1532-301)	제도개선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지적사항	○ 공공요금에 전신전화료·이동전화사용료로 2,160만원을 편성하여 부서장 휴대전화 및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전액 집행하였는데, 원장에 대해서는 단말기와 휴대전화 사용료 실비를 상한 없이 지급하였고, 부서장 등에 대해서는 업무형태 및 업무 수행상 필요를 검증하지 않고 매월 정액 통신비를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통신비 지급 대상 업무 형태, 실제 업무용 전화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통신비를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국가균형발전 연구사업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토연구원(1533-301)	제도개선	국토연구원
		지적사항	○ 2023년 국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정책 지원사업’(1.8억원)과 ‘국가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도로 서비스를 위한 도로정책지원 연구사업’(2억원)을 추진하였고,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정책 지원사업’의 예산(1.8억원)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중 연구비 예산이 가장 적음. - 국·공유지연구센터사업(3.71억원), 중소·중견기업 소규모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3.6억원), 주거복지정책 지원사업(3.24억원), 토지정책 지원사업(2.24억원) 등의 사업과 비교해서도 예산 규모가 적음		
		시정요구사항	○ 국토연구원은 향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연구원 설립 취지에 맞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비중을 높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일반사업 구조 조정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연구원(1535-301)	제도개선	산업연구원
		지적사항	○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예산은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2024년에는 북경지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고정비 1억 4,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6,200만원 수준의 예산만이 편성되었음. - 「직제규정」 상 북경지원의 업무분장 중 첫 번째 업무가 ‘본원 연구지원 업무’라는 점에서 당해 사업은 일반사업으로서의 고유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북경지사에 근무하는 인원도 1명에 불과하여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 및 확대가능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국종합연구’ 예산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2024년 예산인 5,800만원은 2023년 예산 1억 7,900만원에 비해 32% 수준이며 2020년 예산 3억 5,000만원에 비해 17% 수준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산업연구원은 출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을 위해 지속가능성 및 성과창출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사업을 활성화 또는 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일괄적인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지급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1537-301)	제도개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적사항	○ 자가운전차량유지비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연구원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연구원 소속 부연구위원 이상 및 책임행정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2억 4,035만원이 집행되었음. ※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 월 30만원, 부연구위원 및 책임행정원: 월 20만원 - 자가운전차량유지비의 지급은 업무와 관련한 출장의 수행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업무 관련 출장수행 여부 또는 빈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출장 이력이 없거나 그 횟수가 극히 적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이를 지급함. - 자가운전차량유지비의 수령자는 출장 시 업무용 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장 시 여비를 일부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아 여비를 중복 지급함.		
		시정요구사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출장수행 여부 또는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가운전차량유지비의 일괄적인 지급을 지양하고, 동 유지비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왜곡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연구기획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연구원(1538-301)	주의	통일연구원
		지적사항	○ 통일연구원의 연구기획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살피면 비목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연구기관 운영에 있어 기초적 토대가 되는 성격의 활동에 편성·집행되는 경상운영비로 집행되어야 할 사안을 연구기획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 연구기획사업비 내 수용비 집행 중 '물품구입비 지급' 명목으로 집행한 273만원은 마트, 카페, 식당 등이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회의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명함제작·연하장제작·신문구독료 등의 경우 수용비가 아닌 경상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함. - 연구기획사업비 내 전문가활용비 660만원을 '연구위원 스냅사진 촬영비 지급' (550만원), '2023년 인권경영위원회 개최'(110만원)의 명목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기관의 일반적인 활동에 해당하므로 경상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 통일연구원은 연구기획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기획사업의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예산 집행에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수시연구사업비 사업 · 예산 관리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주의	한국개발연구원
		지적사항	○ '수시연구사업비'는 한국개발연구원 기본사업비 중 기관고유사업의 일종으로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을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임. ○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시연구사업비 예산현액 9,2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을 이월하였음. ○ 한편, 2023년 수시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총 5개의 연구과제는 정책의 수립과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적 연구과제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시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됨.		
		시정요구사항	○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구원의 정관상의 목표, 기관의 특성 정책 및 환경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시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연구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수시연구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정확한 예산추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주의	한국개발연구원
		지적사항	○ 민간투자지원사업은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질의답변 등의 정책서비스와 민간투자 연구 및 세부요령 마련 등 민간투자제도의 운영 및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7억 2,000만원 중 6억 4,200만원(89.2%)을 집행하였음. ○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예산 7,200만원 중 4,100만원이 집행되고 3,1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여, 이월액 규모가 43.1%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추계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산매각계획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교육개발원(1540-301)	제도개선	한국교육개발원
		지적사항	○ 충북 진천 신청사로 이주하면서 기존 구청사를 매각하여 822억 5,000만원 금액을 확보해 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청사 매각 계획 달성에 실패하여 금융부채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2010년부터 구청사 매각공고를 진행하였으나 2024년 5월까지 총 12회 유찰된 바, 신청사 매입에 따른 이자비용은 총 110억 2,510만원 발생하였고, 2023년 부채비율은 161.86%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교육개발원은 지속적으로 매각이 유찰되는 구청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계약관련
법령준수노력
미흡</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교육과정
평가원</td></tr>
<tr><td>지적사항</td><td>❍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워크숍 행사, 합숙 시설 임차에 대하여 감염병(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려움.
<table>
<tr><th>계약명</th><th>계약상대방</th><th>계약금액(만원)</th></tr>
<tr><td>수업연구회 컴퓨터 기반
자율평가 출제 역량 강화 연수(워크숍)</td><td>코리아나호텔</td><td>17,757</td></tr>
<tr><td>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등학교 5학년 및
중학교 2학년 성취수준 설정 워크숍</td><td>코리아나호텔</td><td>15,982</td></tr>
<tr><td>채점본부 격리 합숙 시설 임차(3월)</td><td>건설경영연수원</td><td>5,728</td></tr>
<tr><td>채점본부 격리 합숙 시설 임차(6월)</td><td>건설경영연수원</td><td>5,728</td></tr>
</table>
❍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계약 기준·절차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과는 별도의 「회계규정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법령이 정한 계약절차에서 벗어나 자의적 예산집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계규정시행규칙」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준용규정을 도입하거나 「회계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국가계약법령상의 각종 기준·절차를 기관 운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주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 경상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목으로 포상금을 총 1,460만원을 집행하였음. - 10년 근속자 22명에게 30만원씩 총 660만원, 20년 근속자 5명에게 40만원씩 총 200만원, 정년(명예)퇴임자 6명에게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급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장기근속자 및 정년(명예)퇴임자에 대한 포상금을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이월을 통한 자체수입 초과분 직접사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노동연구원(1543-301)	제도개선	한국노동연구원
		지적사항	○ 'KLI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초과수입을 동일사업 예산으로 이월하여 편성·집행하였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서는 자체수입 초과달성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의 사용처: 퇴직급여충당금에 선적립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 후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노동연구원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입분을 예산집행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적립금 적립 등 자체수입 초과분 사용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1547-301)	주의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지적사항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의 세부과제인 '개원 40주년 국제학술회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238만원을 초과한 6,238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사 관련 비용을 별개의 타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음. ※ 당초 편성된 행사용역비 5,000만원 중 4,950만원 집행, 그 외 동 사업 예산 250만원 집행, 타 사업 예산 1,038만원 집행 ○ 학술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성과들을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고, 국제 학술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발제자 1명을 제외하면 발제자 및 토론자 모두 국내연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학술회의와의 차별점도 찾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별 연구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여러 연구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성과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0</td><td rowspan="3">기본연구사업
외부용역비
집행 주의</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1548-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한국조세재정
연구원</td></tr>
<tr><td>지적사항</td><td>○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외부기관에 위탁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일반적인 원고 위탁 및 외부용역 등은 지양하도록 정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 연구과제 3건에 대하여 연구과제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상당부분 참고하여 연구과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table>
<tr><th>연구과제명</th><th>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목</th><th>외부용역비
집행액</th></tr>
<tr><td>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td><td>부가가치세
장기세원분포 분석</td><td>1,200만원</td></tr>
<tr><td>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td><td>구조모형을 통한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td><td>1,000만원</td></tr>
<tr><td>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td><td>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td><td>1,000만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의 책임성 및 기관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연구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외부용역비을 집행하는 경우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1</td><td rowspan="3">임차료 등
과다집행</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1548-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한국조세재정
연구원</td></tr>
<tr><td>지적사항</td><td>❍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회의실 임차는 정부·공공기관 보유 시설을 최대한 우선 활용하고, 호화로운 호텔 임차 등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정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 중간보고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센터에서 개최하면서, 시설 임차료 1,593만원·우등버스 임차료 176만원, 국내여비 716만원, 회의비 1,015만원, 수용비 117만원 등을 집행하였음.
<table>
<tr><th>구분</th><th>착수보고심의회</th><th>중간보고심의회</th><th>최종보고심의회</th></tr>
<tr><td>임차료</td><td>250만원</td><td>1,769만원</td><td>-</td></tr>
<tr><td>국내여비</td><td>-</td><td>716만원</td><td>46만원</td></tr>
<tr><td>회의비</td><td>613만원</td><td>1,015만원</td><td>787만원</td></tr>
<tr><td>수용비</td><td>4만원</td><td>117만원</td><td>7만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사업 수행관리를 위한 각종 심의회 개최시 정부·공공기관 보유 시설을 최대한 우선 활용하여 과도한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일반연구사업과 연구지원사업 통합발주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1549-305)	제도개선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지적사항	○ 연구지원사업인 'HRD웹정보서비스 생성·운영사업',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화사업'과 일반사업인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사업'을 통합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함. - '기관고유사업'인 연구지원사업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전체로 심의를 받고 '일반사업'은 매년 개별 연구과제마다 그 타당성을 심의받아 특정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시스템 운영비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통합발주 시 일반사업을 제외하여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규제사후영향 평가센터 (세종연구실) 운영 내실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행정연구원(1552-301)	제도개선	한국행정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행정연구원은 2023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에 규제사후영향평가센터(세종연구실)를 개소하였음. ○ 그러나, 한국행정연구원은 세종연구실을 사후영향평가팀 소관의 연구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후영향평가팀 직원은 한국행정연구원 본원(서울 은평구)에서 근무하되 2명씩 2개월마다 세종연구실에 순환하여 단기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후영향평가팀 팀원(석사급 연구원) 전원(6명)을 계약직(비정규직) 연구인력으로 충원하였는데 직원 채용공고에 세종특별시 근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당해 인원들을 세종연구실에 상주하게 하지 못하고 단기의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시정요구사항	○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시행을 위해 인력 충원·활용 방안 및 조직·정원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경상경비 부적정 집행**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553-301)	제도개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적사항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3년 11월 21일 ‘하이브리드 근무환경(태블릿PC) 구축 관련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통해 총액 7,167만원에 iPad Air(5세대) 79대를 구매하여 공급받았음. ○ 2024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103명이 근무하는 연구기관에서 79대의 iPad 구매는 기관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경상경비를 활용하여 구매한 iPad 79대를 모두 연구위원·행정원 등 직원 개인에게 지급(대여)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해당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경상경비를 이용하여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구입 행위의 적정성 및 수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계약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기관 평가 인센티브 사용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환경연구원(1554-301)	주의	한국환경연구원
		지적사항	○ 2023년 연구기관 평가 인센티브 배정금액으로 3차례에 걸쳐 의류를 구매하였고, 3차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함. - 3건 모두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함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형식도 통상적인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로서 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연구기관 평가 인센티브 집행 시 직원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였는바, 일종의 상품권과 같은 성격을 지니므로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 평가 인센티브 사용 시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법령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공정거래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1	**예산 집행절차 적절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다수의 세부사업에서 해당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세부사업(또는 다른 비목)으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전용 또는 조정을 통해 지출과목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하였음. ○ 과목정정을 통한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주의한 집행관리로 잘못된 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후관리도 미흡하였음. -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목정정 누락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출장 관련 여비가 일반수용비로 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항목별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 조정 등 해당 항목의 예산확보 절차를 선행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과징금
임의체납액에
따른 장기
미수납액 증가
문제</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과징금(59-56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회계연도 과징금 미수납액 중 임의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은 780억 600만원으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임의체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7.4%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임의체납 : 체납자의 재력부족, 거소 불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미수납액

<최근 3년간 과징금 미수납액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colspan="5">미수납 유형별 현황</th></tr>
<tr><th>납기미도래</th><th>징수유예</th><th>임의체납</th><th>비중</th><th>합계</th></tr>
<tr><td>2021</td><td>475,644</td><td>8,370</td><td>43,668</td><td>8.3%</td><td>527,682</td></tr>
<tr><td>2022</td><td>431,013</td><td>37,263</td><td>64,754</td><td>12.3%</td><td>533,030</td></tr>
<tr><td>2023</td><td>177,679</td><td>29,465</td><td>78,006</td><td>27.4%</td><td>285,150</td></tr>
</table>
❍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시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저해되므로 임의체납액을 최소화하라는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의체납액이 증가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재산조사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강제징수 등을 통해 체납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카르텔환경개선(1241-320)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국내출장 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 12월에 수행한 국내출장 26건과 관련한 여비 2,301,560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체전용 등을 통해 국내여비 재원을 확보하였는데, 전년도 여비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불필요한 예산 전용의 추가 소요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 집행시 보다 면밀히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집행함으로써 전년도 여비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4	**부실한 자율규제 제도 운영**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발표에 있어 소상공인과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율규제가 운영되고 있음. 자율규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감독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자율규제 제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입점업체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검토·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5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노력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1261-34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위 자체 인력만으로 경쟁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3년부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용역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전환 이후에도 경쟁제한 규제개선 실적이 예년보다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경쟁영향평가 : 규제가 신설·강화되기 전에 시장 경쟁에 어떠한 영향(진입장벽, 사업자 경쟁요소 제한 등)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 ○ 또한 경쟁제한적 규제발굴 및 개선* 건수는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실적은 발굴건수(40건)와 개선건수(22건) 모두 최근 5년간의 평균 실적(발굴 42.6건, 개선 25.4건)에 미치지 못하고, 발굴건수 대비 개선건수 비율인 합의비율(55%) 역시 절반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임.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이미 제정·개정된 경쟁제한적 법령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실적을 제고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쟁영향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분쟁조정사업의
적극적 추진</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공정거래
조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도 분쟁조정 사건의 종결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건 대비 조정성립률은 41%이며, 종결사건을 제외한 처리건 대비 성립률은 79%로서 성립률 제고가 필요함.
<2023년도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4">처리현황 및 유형</th><th rowspan="2">성립률
[A/(A+B)]</th><th rowspan="2">전체 처리건 성립률
[A/(A+B+C)]</th></tr>
<tr><th>계[A+B+C]</th><th>성립[A]</th><th>불성립[B]</th><th>종결[C]</th></tr>
<tr><td>소계</td><td>3,151</td><td>1,278</td><td>350</td><td>1,523</td><td>79</td><td>41</td></tr>
</table>
* 종결: 각하, 신청취하,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조정절차의 실익이 없는 경우
○ 또한 2023년 처리 사건 중 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한 비율은 3.3%로서 전년 대비 감소 추세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 불성립 원인을 분석하고 분쟁조정 성립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수탁연구용역
확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공정거래
조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도 기타수입 중 수탁연구용역 수입예산은 2,300만원이며 공정위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수탁하여 900만원(39.1%)의 수입실적을 달성함.
○ 최근 5년간 수탁연구용역 수입예산 대비 수입실적은 연례적으로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탁연구용역 수행과제는 연간 한건 내지 두건에 불과함.
<2019년~2023년 수탁연구용역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 분</th><th>당초예산</th><th>수정예산(A)</th><th>수입실적(B)</th><th>차액(B-A)</th><th>비율(B/A)</th></tr>
<tr><td>2019년</td><td>107</td><td>107</td><td>67</td><td>△40</td><td>62.6</td></tr>
<tr><td>2020년</td><td>40</td><td>40</td><td>36</td><td>△4</td><td>90.0</td></tr>
<tr><td>2021년</td><td>40</td><td>40</td><td>23</td><td>△17</td><td>57.5</td></tr>
<tr><td>2022년</td><td>54</td><td>54</td><td>11</td><td>△43</td><td>20.4</td></tr>
<tr><td>2023년</td><td>23</td><td>23</td><td>9</td><td>△14</td><td>39.1</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구용역 추가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8	**온라인 교육과정 정비 및 홍보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교육센터)의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통한 교육과정 중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인 교육과정이 다수 있음. - 10명 이상 수료한 교육 프로그램 64개 중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인 강의가 50개(78.1%)이고, 50명 미만인 강의는 40개(62.5%)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의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임.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공정거래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교육플랫폼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 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체결 실적 대비 협약이행평가 실적은 52.1%로, 가맹·유통·대리점거래 분야의 협약이행평가 실적이 각각 62.5%, 96.2%, 90.9%인 점과 대비하여 현저히 낮음.
<연도별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평가 실적>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협약체결 실적</th><th colspan="5">협약평가 실적</th></tr><tr><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하도급분야</td><td>280</td><td>292</td><td>306</td><td>359</td><td>380</td><td>157</td><td>168</td><td>182</td><td>197</td><td>198</td></tr><tr><td>가맹분야</td><td>16</td><td>17</td><td>17</td><td>17</td><td>16</td><td>11</td><td>12</td><td>13</td><td>11</td><td>10</td></tr><tr><td>유통분야</td><td>25</td><td>27</td><td>25</td><td>25</td><td>26</td><td>23</td><td>24</td><td>24</td><td>25</td><td>25</td></tr><tr><td>대리점분야</td><td>-</td><td>9</td><td>11</td><td>11</td><td>11</td><td>-</td><td>-</td><td>8</td><td>10</td><td>10</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참여
유인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 대리점거래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43%로 저조하며, 가맹 분야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참여 역시 저조함.

<2023년도 가맹·대리점·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단위: 개, %)>
<table>
<tr><th>구분</th><th>실태조사 대상</th><th>전체</th><th>사용</th><th>미사용</th><th>사용률</th></tr>
<tr><td>표준가맹계약서</td><td>가맹본부</td><td>200</td><td>192</td><td>8</td><td>96.0</td></tr>
<tr><td>표준대리점계약서</td><td>공급업자</td><td>546</td><td>234</td><td>312</td><td>43.0</td></tr>
<tr><td>표준유통계약서</td><td>유통납품업체</td><td>2,333</td><td>2,296</td><td>37</td><td>98.4</td></tr>
</table>

<최근 3년간 협약체결 및 이행평가 현황(단위: 개)>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1</th><th colspan="2">2022</th><th colspan="2">2023</th></tr>
<tr><th>체결</th><th>평가</th><th>체결</th><th>평가</th><th>체결</th><th>평가</th></tr>
<tr><td>가맹 분야</td><td>17</td><td>13</td><td>17</td><td>11</td><td>16</td><td>10</td></tr>
<tr><td>대리점 분야</td><td>10</td><td>8</td><td>11</td><td>10</td><td>11</td><td>10</td></tr>
<tr><td>유통 분야</td><td>26</td><td>24</td><td>25</td><td>25</td><td>26</td><td>25</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자율분쟁조정위
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처리건수 등 그 실적이 감소추세에 있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내역>
<table><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비고</th></tr><tr><td>개최횟수</td><td>23회</td><td>24회</td><td>24회</td><td>22회</td><td></td></tr><tr><td>접수건수</td><td>675</td><td>844</td><td>454</td><td>368</td><td></td></tr><tr><td>처리건수
(진행중)</td><td>813
(101)</td><td>945
(94)</td><td>549
(38)</td><td>407
(20)</td><td>이월건수 포함</td></tr></table>- 특히 보조금의 지급·관리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2021년 이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의뢰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임.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 감소와 더불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성립건수 또한 감소추세에 있음.
<분쟁조정 처리결과별 현황>
<table><tr><th>구분</th><th>종결사건
(진행중 사건
제외)</th><th>조정성립</th><th>법원 외부
조정성립</th><th>조정전
당사자 합의</th><th>합의율</th></tr><tr><td>2020년</td><td>712</td><td>46</td><td>5</td><td>231</td><td>39.6%</td></tr><tr><td>2021년</td><td>851</td><td>58</td><td>5</td><td>207</td><td>31.7%</td></tr><tr><td>2022년</td><td>511</td><td>35</td><td>8</td><td>145</td><td>36.7%</td></tr><tr><td>2023년</td><td>387</td><td>29</td><td>10</td><td>84</td><td>31.7%</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자율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12	**동일 자율과제의 연례적·관성적 선정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소비환경개선 사업은 자율과제 공모 시 동일 소비자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선정하였고 2024년에도 유사한 내용을 제안요청함. - 2023년 선정된 자율과제 2건 중 1건의 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과제로 연이어 선정되었고, 나머지 1건 역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한 과제로 선정됨. - 2024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된 '소비환경개선'의 사업범위 중 일부는 과거부터 자율과제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선정됨. ○ 2023년 소비환경개선 사업의 자율과제는 소비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ChatGPT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23년 '소비자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중 실무자교육 내역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은 당초 사업목적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환경개선 사업의 자율과제 사업수행 기관과 과제를 다변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노력하고, 소비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지원 인원
축소 및 매칭
비율 약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청년소비자 역량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중 소비자교육봉사사업은 당초 목표한 1:1 매칭을 통한 교육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됨.
- 목표인원을 노인층 10,000명, 봉사활동 수행 중·고등학생 10,000명으로 설계하여 1:1 매칭을 계획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중·고등학생 2,119명을 모집하여 노인층 7,037명에 대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함.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사업계획 및 실적>
(단위: 명)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당초 계획</th><th>수정 계획</th><th>참여 실적</th></tr>
<tr><td rowspan="3">2022</td><td>청년</td><td>500</td><td>500</td><td>562</td></tr>
<tr><td>중·고등학생</td><td>10,000</td><td>10,000</td><td>2,781</td></tr>
<tr><td>노인</td><td>10,000</td><td>10,000</td><td>10,268</td></tr>
<tr><td rowspan="3">2023</td><td>청년</td><td>500</td><td>500</td><td>415</td></tr>
<tr><td>중·고등학생</td><td>10,000</td><td>1,500</td><td>2,119</td></tr>
<tr><td>노인</td><td>10,000</td><td>7,000</td><td>7,03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의 민간 참여가 필요한 경우 참여대상별로 적절한 유인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수준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연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14	**출연금을 통한 수탁용역 사업 추진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고유사업비에 속하는 대외협력비 일부 3,900만원을 수탁사업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사업에 집행하여 출연금 산정 시 계획했던 고유사업의 수행의 축소가 우려됨.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공정위의 위탁용역비 및 사업자의 심사비용을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유사업비를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고유사업과 수탁사업간 설정을 명확히 하고, 고유사업비와 수탁사업비를 구분하여 관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집단분쟁조정
활성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한국소비자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면 2023년 집단분쟁조정 접수건수는 2건에 불과함.

<집단분쟁조정 접수 실적>
(단위: 건, 명)
<table><tr><th>구 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tr><td>접수 건수</td><td>12</td><td>11</td><td>1</td><td>2</td></tr><tr><td>소비자 수</td><td>1,061</td><td>12,991</td><td>682</td><td>102</td></tr></table>* 집단분쟁조정 :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결정</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한국소비자원은 대규모 집단 사건 조정을 통해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16	**자체수입 과다계상에 따른 결손액 발생 및 고유사업 축소 문제**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수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규모의 자체수입을 계상함에 따라 결손액이 발생하여 고유사업의 축소로 이어짐. - 2023년도에는 자체수입 항목의 수납실적이 부진하여 총 11억 1,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기타수입(△4억 5,700만원), 전년도 이월금(△4억 4,600만원), 수탁용역사업수입(△2억 9,400만원) 순으로 괴리가 발생함. - 기타수입의 경우 수납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6억 100만원의 동일한 규모로 수입예산이 계상되고 되고 있어 매년 약 75% 이상의 수입결손이 반복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납 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여 결손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자체수입 현실화를 통해 적정 규모의 수지차를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17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사제도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위는 2023년 4월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음. ○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위 운영의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8월 기준 공정위는 72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있으나 23개 직위에 대하여 전문관을 선발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장급 5개 전문직위는 모두 전문관을 선발하지 아니함. * 인사혁신처는 2022년 및 2022년 전문직위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주의 처분 등을 한 바 있음. ○ 한편, 공정위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명칭을 '조사관'으로 통일하고 있으나, 정책기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주무관'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정책·총괄·운영지원 분야의 경우 '주무관'으로 민원조사, 신고심사, 행정심판조사, 법령분석, 제도개선 분야의 경우 '조사관'으로 정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전문직위 운용 활성화 등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18	**계약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0)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물품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월 3,074,400원, 1년간 총 계약금액 36,892,8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서 일반경쟁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공정위는 당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 또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있으나, 1년간 자동연장된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2023년도까지 계약금액을 지급하였음. 이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정하는 「국고금 관리법」에도 부합하지 않은 집행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경쟁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단년도 계약으로 다년간 예산을 지출하였으므로 계약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19	**영상회의장비 활용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1)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위는 세종심판정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사비 997만원, 자산취득비 8,999만원 등 약 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 2023년 9월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2024년 5월까지 영상회의를 실시한 실적이 없으며, 2024년 6월 및 7월 각 1건의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피심인은 심의기일에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등 원격 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심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심판정에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상장비를 활용한 심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20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제 개선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1)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전원회의 불참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남. -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 민감한 안건을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은 물론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 받는 수당은 안건 검토와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업무 과중도에 비례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관련 수당을 개선하고, 비상임위원의 수를 확대하거나 비상임위원의 수를 줄이고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21	**예산 집행 절차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행사 대행 용역'을 위하여 일반용역비 2,2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행사를 실시하고 행사종료 후 사후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상 계약기간 : 2023. 1. 13. ~ 2. 12., 계약일과 지출원인행위일 : 2023. 2. 27. - 용역의 과업 내용 및 그에 대한 반대 급부의 지급을 상호간에 확정하는 계약의 선행이 예산집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사후계약 체결은 법령상 허용되기 어려운 부적정한 집행방식임.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보고 등 행사 진행시 행사가 진행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2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2)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자료발송 등을 위한 우편요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 12월에 발생한 우편요금 846,500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지출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 우편요금의 소요금액을 사전에 파악한 후 '기본경비 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재정법」을 준수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23	**지출원인행위 관련 행정절차 지연**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정거래지원(7031-300)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도록 함. - 지출원인행위 기재가 지연되는 경우 정해진 세출예산에 비해 지출원인행위가 과도하게 실시되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공정위는 'IPTV 및 OTT 탑재용 위원회 홍보 콘텐츠 원고 작성 및 후반작업'계약을 2023년 9월 4일 체결하였으나, 그 사실을 2023년 11월 29일에 이르러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위반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금관리법령 상의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사실을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24	**과징금 환급업무 조기완료**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소송수행(7031-301)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소송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연 3.5%의 이율로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수입감소가 발생하게 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예규)을 통해 최대 8근무일 이내에 과징금 환급 조치를 완료하도록 정함.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과징금 환급업무가 시작된 18건의 과징금 환급조치 완료까지 평균 13.8일을 소요하였고, 그 중 12건(66%)은 판결문 등이 접수된 날부터 8근무일을 초과하여 환급업무를 완료하였음. ○ 또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일부취소된 9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재산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금만을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은 2023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환급업무를 조기에 완료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산권 침해 및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25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예산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소송수행(7031-301)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선임료 부족으로 기타운영비 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였고, 소송비용부담액 부족으로 일반수용비 650만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였음. ○ 2022년도 및 2021년도에도 변호사 선임료 부족으로 국내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하는 등 변호사 선임료 부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수임료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예산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적절한 변호사 수임료를 반영하는 한편 직원 직접소송 승소사건 격려금을 인상하여 직접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26	**장기계속계약 시 1차년도 사업지연에 다른 차년도 사업의 연쇄적 예산이월 유의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7032-503)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터포털 구축사업을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추진하면서 1차년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차년도, 3차년도 사업 모두 예산의 일부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함. - 2021년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1차'사업 계약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2021년, 2022년, 2023년 모두 사업 예산 중 일부(잔금 50%)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함. ○ '데이터포털 구축감리' 사업의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여 사업 종료 후 집행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선금 지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업체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차년도 사업 지연에 따른 연쇄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요청이 없더라도 선금지급 불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할 것		

라. 금융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보조금 이자수입의 예산안 연례적 미편성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5)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매년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을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고 있으나 예산안에 이를 편성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세입예산안 편성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반납받는 이자수입을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편성할 것		
2	**신속한 보조금 정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5)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핀테크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시, 정산보고서 접수 후 8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자수익 등을 수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실적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핀테크 지원사업(1134-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출시 현황을 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56건으로 전년(52건) 대비 증가한 반면, 출시 건수는 15건으로 전년(46건)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기산일을 기존 ‘지정일’에서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했기 때문으로, 지정일로부터 서비스 출시 시점이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지정 시에는 심사기준에 부합했더라도 지정기간 개시일(서비스 출시일)에는 혁신성 등이 떨어질 수 있음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출시 현황>
(단위 : 건)
<table>
<tr><th>구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4.7월말</th><th>계</th></tr>
<tr><td>지정 건수</td><td>77</td><td>58</td><td>50</td><td>52</td><td>56</td><td>62</td><td>355</td></tr>
<tr><td>출시 건수</td><td>24</td><td>47</td><td>39</td><td>46</td><td>15</td><td>22</td><td>193</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점에 비해 서비스 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D-테스트베드 사업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핀테크 지원사업(1134-30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D-테스트베드 사업은 정보화 사업임에도,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음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없이 편성·운영되는 등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에서 누락되고 있음 - 'D-테스트베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9억 6,000만원)은 ① D-테스트베드 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② 전문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③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산안 편성지침」상 정보화 사업에 해당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5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1332-501)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정보분석원은 운영비(일반수용비, 210-01목)로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 조달수수료 2,133만원, 정보보호필름 구입비용 585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여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규정상 관서운영경비 지출한도를 초과하였음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에 따르면 운영비(210목)는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건당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금융정보분석원 내실 있는 인사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FIU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7102-101)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및 2023년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 파견인력에 대한 개선이 미흡함 -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력부족분을 비별도 정원(국세청·관세청 등 중앙행정기관 7인, 민간 3인)을 파견받아 충원하고 있으나 비별도 파견인력은 원소속기관이 결원을 보충할 수 없고 인건비가 원소속기관에서 집행된다는 문제가 있음 * 예산액 대비 불용률: ('21년) 5.0%, ('22년) 10.0% ('23년) 12.6% - 한시조직(제도운영기획관, 가상자산검사과)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례적으로 연장하고 있으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정당화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외 파견인력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결원문제 해소를 위해 정원 내에서 인사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청년도약계좌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유사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가입을 제한하면서 신규 가입 인원을 과다 추계(306만명)하여 기여금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87.4%(3,008억원)의 이월액이 발생(23년말 46.9만명 가입)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8	**청년도약계좌 합리적 성과지표 설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청년도약계좌의 성과지표를 가입유지율로 설정하고 2023년 목표치를 55%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연도말 가입유지율이 91.8%로 나타나는 등 성과지표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 발생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 의지와 청년층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할 것		
9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환수액 국고 정산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한 기여금 환수액의 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출연금 정산과정에서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진흥원에 유보되는 상황		
		시정요구사항	○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출연금 편성을 위해 기여금 환수액을 국고로 정산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청년희망적금 출연금 과다 이월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1831-880)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청년희망적금의 장려금은 만기(24.2~3) 시 일괄 지급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장려금 소요 재원의 50%를 2023년 예산으로 출연하여 전액 이월함. -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은 만기인 2024년 2월말부터 일괄지급(계좌개설은 2022년 2~3월 진행, 2년만기)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출연금 과다 이월에 따른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가능한 규모의 재원만을 반영할 것		
11	**청년희망적금 적정 규모 출연금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1831-880)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스스로 설정한 성과목표상 가입 인원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근거로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려움. - 성과지표 상 가입유지율 목표는 55%이고, 실제 가입유지율은 70.9%이며, 예산안 편성 시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반영한 가입유지율(예상)은 90%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신규 가입 인원 및 해지 추이 등에 근거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보증사고 리스크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1831-88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율의 증가 추세로 인해 전액 재정 출연금으로 이루어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를 위한 출연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이는 금융위원회의 유사 보증사업에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대위변제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증가 추세가 빠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재정의 장기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사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3	**정책대출 모니터링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1831-88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올해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대규모 신용 사면 등으로 저신용자·서민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으로 오인될 우려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정책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예산 확정 후 주요 사업방식 변경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2023년에만 도입했던 매칭방식은 기(旣)결성된 펀드나 결성이 거의 완료된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모험자본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방식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산 확정 후 사업 추진방식을 일부 변경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예산 확정 후 주요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5	**사업방식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검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2023년에만 도입했던 매칭방식은 기(旣)결성된 펀드나 결성이 거의 완료된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모험자본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방식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산 확정 후 사업 추진방식을 일부 변경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에 도입되었던 매칭방식이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공정한 펀드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성장지원펀드(매칭)은 지원한 운용사가 당초 운용보수 조건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자펀드운용사에게 지급하는 운용보수 조건을 변경 고시하여, 관리보수율은 기존 자펀드 운용사보다 0.15%p 이상 더 높게 설정하고, 성과보수는 초과수익 전액을 우선적으로 자펀드운용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자펀드운용사에 비해 유리하게 운용보수를 설정하여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회수될 재정·정책자금의 누수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펀드운용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특정 펀드운용사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책펀드를 운영할 것		
17	**운용사 추가인센티브 적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매칭펀드 운용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대상인 운용사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조건 설정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조속한 운용사 선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차(6월 , 10월~11월)에 걸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민간 금융사의 장부 마감 시기인 연말에는 자펀드 운용사의 투자자 확보가 곤란하여 자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자펀드 운용사가 투자자 유치를 통한 조속한 자펀드 결성을 위해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및 운용사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		
19	**신속한 투자집행을 위한 관리보수체계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자펀드운용사 관리보수체계가 선제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크지 않게 설계됨(투자잔액과 유보액에 대한 관리보수율 격차가 0.2%p로 미미)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자펀드 운용사의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보수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회수재원 재출자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회수재원 재출자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내부규정을 제정하면서 이 규정 내에 회수재원 재출자의 구체적 기준을 포함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회수재원 재출자와 관련하여 재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 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며, 회수재원 규모와 활용방안, 재투자 분야, 재정모펀드의 성과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치를 할 것		
21	**현지법인 운영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한국산업은행	제도개선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 한국산업은행 일부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저조하거나 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되는 등 현지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산업은행은 현지법인의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 관리를 강화할 것		
22	**현지법인 배당 실시계획 검토**	관련사업명	한국산업은행	제도개선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한국산업은행이 현지법인에 약 9,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최근 5년간 현지법인의 국내 배당 실적이 전무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현지법인의 배당 실시 계획 및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자본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한국산업은행	제도개선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 한국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특수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수익성 관련 지표도 타 은행 대비 낮은 수준임 ※ 2023년도 BIS 비율: 산업은행 13.7%, 시중은행 평균 17.14%, 특수은행 평균 14.35% 2023년도 순이자마진: 산업은행 0.51%, 시중은행 평균 1.69%, 특수은행 평균 1.04%		
		시정요구사항	○ 한국산업은행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를 강화할 것		
24	**주목적 투자비율 준수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한국산업은행	제도개선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정부 출자 정책펀드들의 자펀드 운용과정에서 일부 펀드들이 주목적 투자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산업은행은 자펀드 운용 과정에서 주목적 투자 비율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정책펀드의 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5	**투자실적 저조한 정책 자펀드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한국산업은행	제도개선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 정책펀드 조성 이후 투자 기간 대비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 자펀드가 일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산업은행은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저조한 자펀드 현황을 관리하고 투자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자펀드 결성 지연 대응 강화**	관련사업명	한국산업은행	제도개선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1개 운용사의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인해 한국산업은행 및 재정의 예정 출자액(9,000억원) 중 1,600억원이 2024년도 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산업은행은 정책펀드 위탁운용사의 자펀드 결성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27	**재정출자 펀드 회수액 관리 및 처리방식 규정화**	관련사업명	한국산업은행	제도개선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 재정모펀드의 회수액이 발생하거나 펀드 청산 후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의 절차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산업은행은 재정출자 펀드에 대한 회수액 관리 및 처리 방식을 규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8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의 타당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한국산업은행	제도개선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상업적 업무로의 지속적인 확장은 민간금융 발전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전체 대출 규모 중 83.4%가 보증 공공기관으로부터 100% 보증을 받고 있어 손실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택자금시설자금대출에 정부보증을 바탕으로 한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기간산업안정기금 청산 관련 규정 마련	관련사업명	한국산업은행	제도개선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법」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되므로, 기간산업업체에 대한 여신의 안정적 회수 및 만기도래 채권 상환의 관리 필요성이 있음. ○ 2025까지 존속하는 기금의 청산과 관련한 법적 조항이 부재하여 그 처리방식이 명확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업체에 대한 여신의 안정적인 회수 및 만기도래 채권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기한, 잔여재산 반환 대상 및 방법 등 청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0</td><td rowspan="3">정부 재원 출자
규모 재산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규모를 30조원으로 예상하고 채권매입가율 60%, 부도율 20%를 적용해 정부의 자본금 출자규모를 3조 6,000억원으로 추정함.
❍ 정부의 새출발기금 출자규모 대비 2023년도 사업실적은 매우 저조함.
<table>
<tr><th>구분</th><th>총 계획규모</th><th>실적(2024년 6월 기준)</th><th>계획 대비 실적</th></tr>
<tr><td>채권매입 규모</td><td>30조원</td><td>4조 7,932억원</td><td>15.9%</td></tr>
<tr><td>채권매입 소요금액</td><td>18조원
(평균 매입가율 60%)</td><td>2조 687억원
(평균 매입가율 43.2%)</td><td>11.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새출발기금을 위해 재정을 추가 출자하는 때에는 채권매입 실적 및 매입가율 등을 고려해 출자 규모를 재산정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협약기관 확대 등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규모를 30조원으로 예상하고 채권매입가율 60%, 부도율 20%를 적용해 정부의 자본금 출자규모를 3조 6,000억원으로 추정함. ○ 정부의 새출발기금 출자규모 대비 2023년도 사업실적은 매우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저조한 채권매입 추이에 근거하여 전체 매입계획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관련 협약기관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32	**채무조정 효과 확인을 위한 정확한 수치 표기**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는 동 사업의 채무조정 효과 목표치(성과목표)를 35%로 설정하고, 48.4%의 실적을 내어 138%의 목표 달성도를 나타냄. ○ 실적을 위와 같이 비율로만 명시하는 것은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을 왜곡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효과 실적을 비율로만 명시하지 말고, 측정산식에 적용된 값(원리금 감면예정액, 채무조정 약정체결 대출원금)을 정확한 수치로 표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정책모기지 사업 목적에 충실 및 상품요건 변경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2632-301)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정책모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게 그 대상을 고소득자까지 확대하고, 신규주택 구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도록 운영함에 따라 가계부채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모기지와 달리 소득기준을 없애고, 대상주택가격도 9억원까지 확대(기존 6억원). -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였다는 지적도 제기 -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발표(23.1.)와 달리 2023년 9월부터 소득기준 제한이 없었던 일반형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정책모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기존 발표내용과 다르게 상품요건 등이 변경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34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예산 집행 부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연례적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3년 집행실적이 오히려 예년보다 부진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 ※ 집행율: ('23년) 82.7%, ('22년) 97.5%, ('21년) 95.2%, ('20년) 94.9%,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기본경비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 부진의 사유를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관례적인 국외업무여비 편성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국외업무여비는 이전의 사업추진 경과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관례적인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 매년 집행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그 중 일부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관례적인 국외업무여비 편성을 지양하고 계획대로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36	**부적정한 비목 편성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1)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의 비목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를 상용임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잘못된 비목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지침에 부합하게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ISP 구축 사업 목표 및 대상 명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7111-25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고도화' 및 'ISP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ISP 구축사업'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확대하여 확대 부분과 함께 통합발주함에 따라 사업의 지연 및 사업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예산을 이월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ISP 구축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안 편성시부터 ISP 구축 목표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38	정보시스템 관련 감리사업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7111-25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이 아닌 'ISP 구축사업'을 감리대상 사업인 '시스템 고도화'사업과 통합발주함에 따라 당초에는 불필요했던 ISP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감리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감리비가 부족하여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예산을 함께 편성하고 정보화사업의 통합 발주로 인해 불필요한 감리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계획과 다른 정보화사업 확대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7111-251)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고도화’ 및 ‘ISP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ISP 구축사업’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확대하여 확대 부분과 함께 통합발주함에 따라 사업의 지연 및 사업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예산을 이월하였음.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이 아닌 ‘ISP 구축사업’을 감리대상 사업인 ‘시스템 고도화’사업과 통합발주함에 따라 당초에는 불필요했던 ISP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감리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감리비가 부족하여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정보화사업 내용을 확대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병행되어야 할 감리사업 예산이 미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0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7111-251)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고도화’ 및 ‘ISP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ISP 구축사업’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확대하여 확대 부분과 함께 통합발주함에 따라 사업의 지연 및 사업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예산을 이월하였음.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이 아닌 ‘ISP 구축사업’을 감리대상 사업인 ‘시스템 고도화’사업과 통합발주함에 따라 당초에는 불필요했던 ISP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감리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감리비가 부족하여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한대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무상 유지보수 대상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유상 보수 집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7132-504)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도 유상 유지보수 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비 기간 산정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음. - 2022년 도입장비의 경우 2023년 8월 21일까지 무상보수기간이었으나, 하반기 6개월분을 반영하여 유상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산정하고 계약을 체결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 유상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42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 정비사업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7132-504)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조사단 포렌식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계약절차의 공정성, 경쟁입찰을 통한 비용절감 가능성 및 다른 부처의 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례를 고려할 때 수의계약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보수 사업 추진 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과다 및 수행기관 편중 재발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책연구개발(7135-302)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25건의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23건(92.0%)은 계약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2건(8.0%)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또한,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살펴보면, 25건의 계약 중 특정 4개 수행기관이 전체 계약의 60%인 15건을 수행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 및 특정 수행기관 편중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44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사업의 대규모 불용**	관련사업명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8411-880)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세수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함. ○ 향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할 수 있는지 의문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금융감독원의 민간인력 파견 활용제도 정비**	관련사업명	금융감독원 지도·감독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감독원이 업무 공조 등을 위해 민간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 대상 기관에 과도한 인건비 등의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민간인력 활용 규모의 적정성을 상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타기관 인력 파견 규모의 적정성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민간 금융기관 등→금융감독원: 36명, 금융감독원→타 기관: 67명 (금감원 현원 2,054명)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민간인력 파견 활용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타 기관 파견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지도·감독할 것		
46	**기금 청산 일정에 맞춘 안정적인 전입금 필요**	관련사업명	공적자금상환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 / 기금예수금((94-943)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부채 상환을 위한 최근 5년간의 평균 수입액이 4조 2,485억으로 나타나, 청산까지 남은 4년 간 채무잔액 약 28조원(연평균 7조원)의 상환 완료를 낙관하기 어려움. ○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금 상환을 위해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자 등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통해 기금 청산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는 상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최소화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재계산 결과에
따른 상환 재원
확보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공적자금상환기금 -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재정과 금융권의 총 상환부담이 2018년 재계산에서는 58.1조원(2002년 현가), 2023년 재계산에서는 58.8조원(2002년 현가)으로 나타나, 두 차례 재계산 결과 모두 당초 상환부담(69조원) 보다 감소한 수치를 나타냄.
- 재계산 제도는 2002년 상환대책 수립 이후 재정 및 금융권의 상환 이행실적과 재계산 시점에서의 회수예상금액 등을 감안하여 총 상환부담과 재정 및 금융권의 부담분 등을 다시 추정하는 것을 말함.

< 재계산에 따른 총 상환부담액 추이 >
(단위: 조원, 02년 현재가)
<table>
<tr><th>구분</th><th>2002년
상환대책</th><th>2008년
재계산</th><th>2013년
재계산</th><th>2018년
재계산</th><th>2023년
재계산</th></tr>
<tr><td>기부담</td><td>-</td><td>9.2</td><td>21.9</td><td>31.1</td><td>46.2</td></tr>
<tr><td>향후부담</td><td>69.0</td><td>40.7</td><td>33.8</td><td>27.0</td><td>12.6</td></tr>
<tr><td>총부담</td><td>69.0</td><td>49.9</td><td>55.7</td><td>58.1</td><td>58.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재계산 결과에 따른 주체별 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확보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저축장려금(1631-30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회계 사업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예·결산심사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2023년도 수입 총액 중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이 99.8%를 차지하고,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 총액의 99.9%가 2023년도 저축장려금으로 집행되어, 단년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 예산 사업과 유사한 집행 형태를 나타냄. ○ 금융위원회 역시 해당 기금을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관계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할 것		
49	**적정 재원 조달 방안과 수행기관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저축장려금(1631-30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회계 사업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예·결산심사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장려저축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재원 조달 방안과 수행기관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수입의
연례적 과다계상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신용보증기금은 팩토링 매출채권 결제기일 소요에 따른 회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타경상이전수입을 과다계상하여 매년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21~'23년)간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계획액(A)</th><th>징수결정액</th><th>수납액(B)</th><th>수납률(B/A)</th></tr>
<tr><td>2021년</td><td>39,750</td><td>13,592</td><td>13,592</td><td>34.2</td></tr>
<tr><td>2022년</td><td>79,500</td><td>57,890</td><td>57,890</td><td>72.8</td></tr>
<tr><td>2023년</td><td>99,375</td><td>73,225</td><td>73,225</td><td>73.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차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편성 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1</td><td rowspan="3">구상권 회수실적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구상권 회수’는 2023년 징수결정액(1,214억 4,100만원) 대비 수납률이 2.1%(25억 4,100만원)로 매우 저조하고, 계획액(3,661억원) 대비 수납률이 69.4%로 계획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음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구상권 회수’ 과목의 결산내역>
(단위 : 억원, %)
<table>
<tr><th colspan="10">2023년</th><th>2024년</th></tr>
<tr><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계획
현액</th><th rowspan="2">징수
결정액(B)</th><th rowspan="2">수납액
(C)</th><th rowspan="2">수납률
(C/A)</th><th rowspan="2">수납률
(C/B)</th><th rowspan="2">미수납액</th><th rowspan="2">불납
결손액</th><th rowspan="2">계획액</th></tr>
<tr><th>당초</th><th>수정(A)</th></tr>
<tr><td>3,661</td><td>3,661</td><td>3,661</td><td>121,441</td><td>2,541</td><td>69.4</td><td>2.1</td><td>102,412</td><td>16,488</td><td>3,44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자 상환능력별 맞춤형 구상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상권 소멸 전 채무가 변제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구상권 수납실적을 제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2</td><td rowspan="3">구상권관리
사업의 연례적
불용 방지를
위한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구상권관리(2431-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구상권관리 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며 불용액이 과다한데, 이는 특히 구상권 집행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용인 공탁비용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3년 공탁비용은 계획액 699억 9,000만원 중 343억 6,300만원(49.1%)만을 집행하여 333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최근 4년간 구상권관리 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
<tr><td>계획현액</td><td>72,694</td><td>74,343</td><td>107,831</td><td>101,681</td></tr>
<tr><td>집행액</td><td>58,029</td><td>47,121</td><td>47,273</td><td>60,107</td></tr>
<tr><td>집행률</td><td>79.8</td><td>63.4</td><td>43.8</td><td>59.4</td></tr>
<tr><td>불용액</td><td>14,665</td><td>27,222</td><td>60,558</td><td>41,57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현금공탁에 따른 담보제공 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상권관리 사업의 연례적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 및 자정 노력을 강구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3</td><td rowspan="3">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의 실수요를
고려하여
적정예산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경영지도(2431-307)</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2년과 2023년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컨설팅 실적이 부진하여 소상공인의 수요가 저조함에도, 2022년 신규로 추진된 후 매년 동일한 예산(42억 7,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2022~2023년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제공 건수>
(단위 : 건, %)
<table><tr><th>구분</th><th>계획(A)</th><th>신청</th><th>실적(B)</th><th>달성률(B/A)</th></tr><tr><td>2022년</td><td>4,750</td><td>3,088</td><td>2,976</td><td>62.7</td></tr><tr><td>2023년</td><td>4,750</td><td>3,938</td><td>3,308</td><td>69.6</td></tr></table>주: ‘계획’ 건수는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 산출 시의 건수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의 저조한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만이 편성되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사후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이차보전지원(2431-313)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산출금리의 적정성, 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의 실제 부담률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 산출된 실제 대출금리를 파악한 후 실제 대출금리와 평균 산출금리를 대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7월 기준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실제 대출금리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기관별 실제 대출금리의 진위 여부 및 계획액 편성 시 반영되었던 평균 산출금리가 적정 수준이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함 - 동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평균 산출금리(6.3%)와 대출 적용금리(3.3%)의 차이의 70%를, 금융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율은 2.1%로 고정되었는데, 대출금리가 5.4%(3.3%+2.1%) 미만일 경우 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보다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더 높은 금리를 수취할 수 있게 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해 개산급 형태로 지급한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금의 실제 정산을 수행하고, 정산 결과 대출금리가 5.4% 미만일 경우 금융기관의 이차보전금 수취 분만큼을 국고로 환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면밀한 사업설계 필요**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이차보전지원(2431-313)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은 공급실적이 부진*하자 대규모 불용방지를 위해 두 차례 사업을 개편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원되는 소상공인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당초 사업 설계 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여 실수요에 비해 과다편성되었으며 잦은 사업변경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 * 2022년 말 기준 대출액 4.8조원 중 한도소진율 30.1%(1조 4,439억원), 이차보전액 1,000억원 중 한도소진율 5.4%(54억원) ** 당초 소상공인 48만명(대출 4.8조원÷대출한도 1,000만원)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개편 후 8만명(대출 2.4조원÷대출한도 3,000만원)으로 목표치 하향조정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실수요에 비해 과다편성한 후 사업을 과도하게 개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설계를 보다 면밀히 할 것		
56	**신용정보 사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여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신용보증기금 - 신용정보(정보화)(2431-315)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2021년 신규 편성 이후 사업비가 매년 감소*했으나 이와 같은 과도한 예산삭감은 연구 위축을 야기할 수 있고, '온라인 안심거래 구축(7,400만원)' 등 예산액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않은 내역사업이 있는 등 실제 필요한 사업에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였음. * 예산액: ('21년) 40억원, ('22년) 32억 900만원, ('23년) 23억 2,300만원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정보화) 사업의 철저한 사업 분석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 방안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7</td><td rowspan="3">대환보증의
저조한
공급실적을
고려한 출연금
반납 검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 당초 취지와 달리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보증공급 실적이 2022년 말 기준 공급목표의 3.4%, 2023년 말 기준 13.7%로 매우 저조함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목표 및 실적>
(단위 : 억원, %)
<table>
<tr><th>구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6월말</th></tr>
<tr><td>목표 누적 보증액(A)</td><td>67,500</td><td>85,000</td><td>95,000</td></tr>
<tr><td>신규 보증액</td><td>2,321</td><td>9,333</td><td>2,947</td></tr>
<tr><td>누적 보증공급 규모(B)</td><td>2,321</td><td>11,654</td><td>14,601</td></tr>
<tr><td>달성도(B/A)</td><td>3.4</td><td>13.7</td><td>15.4</td></tr>
</table>
- 또한,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을 위한 출연금 총 7,600억원은 운용배수 12.5배를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공급실적 부진으로 2024년 6월 말 기준 대환보증 계정의 운용배수는 2.0배에 불과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계정 보증공급 현황>
(단위 : 억원, 배)
<table>
<tr><th>계정명</th><th>구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6월말</th></tr>
<tr><td rowspan="4">저금리
대환보증</td><td>보증잔액(A)</td><td>2,316</td><td>11,276</td><td>13,544</td></tr>
<tr><td>신규보증액</td><td>2,321</td><td>9,333</td><td>2,947</td></tr>
<tr><td>기본재산(B)</td><td>6,730</td><td>7,159</td><td>6,810</td></tr>
<tr><td>운용배수(A/B)</td><td>0.3</td><td>1.6</td><td>2.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실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만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종료 이후 잔여재원 반납을 검토하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전체 출연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감액편성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8</td><td rowspan="3">대환보증
프로그램
재편성안 강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 당초 취지와 달리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보증공급 실적이 2022년 말 기준 공급목표의 3.4%, 2023년 말 기준 13.7%로 매우 저조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환보증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재편성안을 강구할 것</td></tr>
<tr><td rowspan="3">59</td><td rowspan="3">대환보증
대위변제 계획액
과다추계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대위변제 계획액의 53.9%(1,206억원)를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지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 감액하였고, 그럼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
<2023년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계획현액</th><th rowspan="2">집행액(B)</th><th rowspan="2">집행률(B/A)</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A)</th><th>수정</th></tr>
<tr><td>222,731</td><td>103,131</td><td>103,131</td><td>24,788</td><td>11.1</td><td>78,34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수요와 지원 요건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과다한 수준의 공급계획 수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0</td><td rowspan="3">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주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신용보증기금 -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대위변제 계획액의 53.9%(1,206억원)를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지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 감액하였고, 그럼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
<2023년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2">계획액</th><th rowspan="2">계획현액</th><th rowspan="2">집행액(B)</th><th rowspan="2">집행률(B/A)</th><th rowspan="2">불용액</th></tr>
<tr><th>당초(A)</th><th>수정</th></tr>
<tr><td>222,731</td><td>103,131</td><td>103,131</td><td>24,788</td><td>11.1</td><td>78,343</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최초 공급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관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총괄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는 2023년말 기준 16.8배, 2024년 6월 기준 17.3배로 전년도 14.6배에 비해 증가하였는바, 기금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여 법정 운용배수(20배)에 근접함에 따라 향후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24년 6월 기준 운용배수 : 17.3배 - 향후 농신보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 이하로 회복되기 위하여 장기간의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운용배수 진입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62	**수입계획액의 연례적 과다추계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연례적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과 면허료 및 수수료 계획액을 산출할 때 의지지표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수입계획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례적 징수실적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 계획액 대비 수납률(단위: %) - 기타경상이전수입 : (`20)79.3→(`21)84.9→(`22)62.3→(`23)48.6 - 면허료 및 수수료 : (`20)82.9→(`21)75.4→(`22)75.5→(`23)68.9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의지지표와 가중치의 사용을 지양하여 적정 수준의 계획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관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금(2432-680)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및 유류비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불건전 보증과 대위변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2023년 대위변제액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07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당초 계획액 3,196억원 대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900억원(+28.2%)을 증액변경하였음. * 2024년도 상반기 대위변제금 집행률: 61.9%		
		시정요구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비효율적 인력 구조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인건비(2432-680)	주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고직급·고호봉 위주 인력구조에 따른 과다한 인건비 발생의 개선을 위해 효율적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직급·고호봉 위주의 인력 운용이 심화되고 있음. - 2023년말 기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실무자급(5급 이하) 이상 비율은 2019년 37.2% 대비 3.0%p 감소한 34.2%으로 나타난 반면, 중간관리자급 이상(4급 이상) 비율은 2019년 62.8% 대비 3.0%p 증가한 65.8%로 나타남. - 2019년 말 기준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농협중앙회 대비 0.1호봉 높았으나, 2023년말 기준으로는 0.7호봉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행적 상용임금 계획액 편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비(3277-201)	주의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지적사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정규직 인력 대체 등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한 계약직 및 전문인력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상용임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20명 미만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31명을 기준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고 있어 2020년 이후 매년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부진하였음.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예산상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계획액 대비 집행률 (`20)32.7%→(`21)56.1%→(`22)79.7%→(`23)63.1%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기금관리비 상용임금을 현원기준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6</td><td rowspan="3">구상권 관리
철저</td><td>관련사업명</td><td>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구상권관리(2631-30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59 - 596)</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당초 예상보다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신규유입 채무자 동반 증가로 인해 공탁비용 등이 증가하였으나, 대위변제 및 구상권 관리 집행액 대비 구상권의 회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임.
[주택신용보증계정 구상권 발생액 및 회수액] (단위: 억원,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예상)</th></tr>
<tr><td colspan="2">구상권 발생액(A)</td><td>2,989</td><td>2,150</td><td>1,870</td><td>1,784</td><td>2,488</td><td>2,286</td><td>3,168</td><td>5,891</td><td>15,588</td></tr>
<tr><td rowspan="2">회수</td><td>연도중(B)</td><td>1,846</td><td>1,355</td><td>1,145</td><td>1,182</td><td>1,447</td><td>1,145</td><td>1,098</td><td>1,259</td><td>1,823</td></tr>
<tr><td>누계(C)</td><td>18,392</td><td>19,747</td><td>20,892</td><td>22,074</td><td>23,521</td><td>24,666</td><td>25,764</td><td>27,023</td><td>28,846</td></tr>
<tr><td colspan="2">구상권 잔액</td><td>31,628</td><td>30,616</td><td>27,418</td><td>24,259</td><td>21,829</td><td>21,051</td><td>21,769</td><td>24,671</td><td>34,819</td></tr>
<tr><td colspan="2">구상권 발생액 대비 회수율</td><td>61.8</td><td>63.0</td><td>61.2</td><td>66.2</td><td>58.2</td><td>50.1</td><td>34.7</td><td>21.4</td><td>11.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구상권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상권 수납률을 제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7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대위변제 지출 적정수준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2631-303)	제도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적사항	○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의 보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전세자금 보증사고액은 약 7,100억원으로, 전체 보증사고액의 67.0%를 차지하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약 4,983억원으로 전체 대위변제액의 84.6%에 이름.		
		시정요구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		
68	**기금재산의 건전성 강화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2631-303)	제도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적사항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되면 기금지출이 증가하여 기금재산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총액의 한도가 감소하여 신용보증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계정 및 주연보계정의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대위변제 후에도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기금재산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9	**여유자금의 전출 규모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901)	주의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지적사항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 등의 수입 발생 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또는 여유자금 예치를 하고 있음. - 2023년의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수준인 2조 6,000억원만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 ○ 그러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본질적으로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국공채(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을 위해 편성 및 운용되는 기금이라는 점에서, 여유자금 운용은 결과적으로 미래 재정수입을 담보로 차입을 통한 투자 행위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여유자금 발생 시 통화금융기관·비통화금융기관 예치를 통해 운용하기에 앞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을 통해 공적자금을 조속히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0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	관련사업명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901)	주의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지적사항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 등의 수입 발생 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또는 여유자금 예치를 하고 있음. - 2023년의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수준인 2조 6,000억원만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음. ○ 그러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본질적으로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국공채(예금보험기금채권)의 상환을 위해 편성 및 운용되는 기금이라는 점에서, 여유자금 운용은 결과적으로 미래 재정수입을 담보로 차입을 통한 투자 행위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다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생명 보유지분 매각과 서울보증보험 IPO를 조속히 재추진하여, 보유주식 매각 시 발생하는 예보채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신속히 상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1</td><td rowspan="3">임차보증금
환입금 등
수입내역 적시
반영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59-59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예금보험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과거 발생한 예금보험공사의 임차보증금 등 감액분 35억 2,000만원과 그 이자 3억 5,000만원을 합해 총 38억 7,000만원을 2023년도에 수납하였음.

< 임차보증금 등 환입 세부내역 >
(단위: 억원)
<table>
<tr><th>구 분</th><th>2010년 감액분</th><th>2011년감액분</th><th>2020년감액분</th><th>2021년감액분</th><th>합 계</th></tr>
<tr><td>사옥 임차보증금</td><td>7.3</td><td></td><td>27.7</td><td>0.01</td><td>35.01</td></tr>
<tr><td>전신전화 보증금</td><td></td><td>0.2</td><td></td><td></td><td>0.2</td></tr>
<tr><td>합 계</td><td>7.3</td><td>0.2</td><td>27.7</td><td>0.01</td><td>35.21</td></tr>
</table>
○ 공사의 임차보증금 등이 감액된 경우 당연히 상환기금으로 환입했어야 함에도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으로 잘못 환입함에 따라 이 수입내역이 상환기금에 적시 반영되지 못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 간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수입 내역을 적시에 반영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2</td><td rowspan="3">기금간 운영경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공사 임차보증금 분담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예금보험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운영경비에 대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분담비율이 3%이므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분담비율 역시 3%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공사 임차보증금의 84.4%를 부담하고 있음.

< 운영경비 분담 비율 및 임차보증금 부담 비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운영경비
분담 비율</th><th colspan="3">사옥 임차보증금</th></tr><tr><th>사옥 임차보증금</th><th>기금 간
부담 금액</th><th>기금 간
부담 비율</th></tr><tr><td>상환기금</td><td>3%</td><td rowspan="2">37억 3,700만원</td><td>31억 5,400만원</td><td>84.4%</td></tr><tr><td>예금보험기금</td><td>97%</td><td>5억 8,200만원</td><td>15.6%</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 청산 전에 공사 임차보증금 분담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것</td></tr>
</table>

마. 국민권익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이행강제금 부과 시 관계법령 신중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이행강제금 과오납금반환금 발생은 구법에 규정된 원인행위에 대해 신법을 근거로 처분하였다가 법적 근거 부재가 문제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유로 패소한데 기인하고 있고, 수입과목 수납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과오납금반환금은 어느 과목에서 반납되었는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 시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 및 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입규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계약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정무직 전용 차량 임차와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 준칙)에 반하여 차년도 예산으로 매달 지급할 임차료 관련 계약을 전년도에 체결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반하여 차량 임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정보화사업 예산 집행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1132-321)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정보화예산임에도 동 세부사업 내 공공요금 예산 300만원을 정보화 이외 사업(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_1136-366)으로 자체 전용하여 국내여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음. 이는 정보화 예산의 자체 이·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예산 집행지침에 반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전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정보화예산을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집행지침에 반하여 자체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발생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렴권익민간협력(1133-333)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청렴권익민간협력” 중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내역사업의 근거인 훈령이 2023년 2월까지 유효함에도, 해당 훈령의 유효기간 개정을 전제로 2023년 전체 기간(12개월)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대부분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된 예산 일부(900만원)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훈령은 2023년 2월 25일에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되었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당초 계상하였던 예산 1억 8,600만원 중 1억 5,200만원(81.4%)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법령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다 편성된 예산을 타 용도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정부통합콜센터
인지도 개선 노력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정부통합콜센터는 통합 연계되는 국가기관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지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콜센터 대표변호로서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정부통합콜센터의 인지도 제고 및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과거 국정감사나 결산 심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2014년 ·2016년 국정감사, 2017년 결산)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정부통합콜센터(110) 인지도 조사 결과 >
<table><tr><th>구 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r><tr><td>인지도(%)</td><td>39.1</td><td>44.3</td><td>38.6</td><td>39.0</td><td>45.2</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콜센터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예산 편성 취지에 반하는 사업 예산 50% 삭감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충민원조사활동(1135-35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확대가 필요함에도, 2023년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5,000만원에 불과하였고, 5,000만원을 격오지 민원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차량 지원 등 임차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목조정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편성한 사업 예산의 50%를 삭감하여 집행하는 등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부실한 사업 수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1136-36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컨설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분석 사업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외부 연구용역으로 추진하였으나, 해당 연구용역은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그치는 등 사업 성과물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워크숍 실시에 대한 내용 외에 당초 사업목적인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프로그램 설계', '진단·분석 결과물 산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임.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 예산 편성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해 당초 편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교육 · 강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다변화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청렴 교육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문적 강의내용이 아님에도 특정 프로그램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집행 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 10회 이상의 강사료를 동일인에게 지급한 사례가 2023년의 경우 17건, 2022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건, 13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2023년에 가장 많은 횟수(21회)의 강사료 지급이 이루어진 강사(판소리 전문가)의 경우, 동일인에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7회에 걸쳐, 도합 1억 1,241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강사 및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양하고 신규 강의개발 및 교육내용·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부패신고자
보상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부패신고자보호보상(1136-364)</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부패신고자보호보상”은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어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고, 2023년에는 최근 4개년(2020~2023) 중 최대 규모인 14억 4,2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음. 이는 부패신고자 대상 보상금이 매년 과소추계되었기 때문임.

< 최근 4년간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본예산(A)</td><td>3,233</td><td>2,582</td><td>2,682</td><td>2,832</td></tr>
<tr><td>실집행액(B)</td><td>3,878</td><td>3,540</td><td>2,999</td><td>4,274</td></tr>
<tr><td>부족분(B-A)</td><td>645</td><td>958</td><td>317</td><td>1,442</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사업에 적정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구조금 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패신고자보호보상(1136-364)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중 “부패신고자 구조금” 내역사업은 부패신고자 지원을 통해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편성 예산 2,000만원 중 300만원만 집행되는 등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고, 평균처리기간은 194일로,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금 지급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보상금 지급을 위한 반복적인 인건비 전용 및 내역변경 지양</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부패신고자보호보상(1136-364), 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5),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1136-366), 청탁금지제도운영(1136-367),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1136-368)</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신고 유형별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인건비 전용과 내역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잉여재원의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집행으로 볼 수 있음.

<최근 4년간 신고자 보상금등 전용·내역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부패신고자보호보상</td><td>646</td><td>959</td><td>320</td><td>1,447</td></tr>
<tr><td>공익신고제도 운영</td><td>△506</td><td>△996</td><td>722</td><td>△931</td></tr>
<tr><td>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td><td>△115</td><td>37</td><td>-</td><td>△41</td></tr>
<tr><td>청탁금지제도 운영</td><td>△25</td><td>△40</td><td>△3</td><td>△38</td></tr>
<tr><td>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td><td></td><td></td><td>△5</td><td>△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건비 전용을 통해 보상금 등의 부족분을 조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고 유형별 지급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내역변경을 최소화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사업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전용 발생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1136-366)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예산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엄밀한 사업계획 및 정확한 예측 없이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에서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연말 동 사업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타 사업에서 동 사업으로 불필요한 추가 전용이 발생하게 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엄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탁금지제도 운영(1136-367)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최근 4년간(2020-2023) 결산내역을 보면, 당초 계상되었던 예산 일부를 타 사업에서 집행하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 집행률이 최대 80% 미만 수준에 그침. ○ 이는 청탁금지제도 운영 실적의 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 매년 예산이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임. - 최근 4년간(2020-2023) 청탁금지제도 관련 신고 처리건수는 2020년 273건에서 2023년 131건으로 142건(△52.0%)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집행액도 2020년 3억 800만원에서 2023년 1억 7,8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42.2%) 감소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제도 운영 관련 실적 감소 추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국내여비 적정 집행 및 전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심판 운영(1137-37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행정심판 운영”의 내역사업인 “행정심판운영지원”은 국내여비로 4,200만원이 편성됨. 그러나 편성예산의 50%에 달하는 2,200만원을 전용하여 6,60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여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예산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고,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사 내용을 형해화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요불급한 국내여비 집행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상각 관리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무결산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른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내용연수를 5년으로 설정한 반면, 2023년도에 취득한 보안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모두 1년으로 설정하였음. - 짧은 내용연수의 상각은 비용의 과다계상 및 자산의 과소계상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기존 자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요불급한 자산을 새로이 취득할 근거가 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합리적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여 자산을 적절히 관리할 것		
2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 비중 단계적 축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통	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출연사업은 직접 수행 비중을 높이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 2023년 기준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위탁수행되고 있음. - 예산의 출연은 '국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것으로, 한 부처의 포괄적인 사업을 대부분 특정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사업방식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움. ○ 정책·제도 개발이나 홍보, 국제 협력, 가명정보 제도운영 등은 100%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충분히 자체 수행 가능하다고 보임.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연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접 수행 사업을 늘려나갈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출연사업과 무관한 자체 경비성 사업 집행 문제**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통	시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지적사항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연사업과 무관한 자체 경비성 사업을 출연사업을 통해 집행한 것은 각 출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자체 기본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용자산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임차료' 191만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연사업마다 쪼개어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업과 무관한 자체 경비성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당초 출연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4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부적절한 예산 전용**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원회운영지원(1030-300)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년인턴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일용임금(110-04목)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다르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전용함.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물건비(200목)에서 인건비(100목)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집행지침의 전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출연사업의 통합수행에 따른 회계적 책임성 문제**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원회 정보화 지원(정보화)(1030-302)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러 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을 합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위탁운영 사업'으로 통합수행·집행하여 회계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소관 부처별 예산에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수행을 면밀히 관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6	**교육포털 인프라 사업 계획 변경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원회 정보화 지원(정보화)(1030-302)	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초 2억 6,400만원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교육포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1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G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집행은 차년도로 이월함. - 국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자체 ISP 및 지능정보화 관련 상위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모두 민간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전제) ○ 이로 인한 차액 1억 6,000만원은 감리사업 및 보안소프트웨어 구매에 사용함.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국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출연 및 직접수행 방식의 정책연구 간 차별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사업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관련 연구라는 점에서 기술전문성의 필요가 높지 않고, 일부 연구용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수행하는 연구용역과 그 내용이 유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을 통해 별도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임.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술전문성이 필요한 연구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되,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연구 및 주요국 동향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정책연구 간의 차별성을 확보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적 부진</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개인정보보호
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개인정보처리자 ‘수준별 교육’은 교육 참여인원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55.9% 수준에 불과함.

<2022~2023 개인정보 처리자 ‘수준별’교육 운영 실적>
(단위: 명, %)
<table>
<tr><th rowspan="2"></th><th colspan="4">2022</th><th colspan="4">2023</th></tr>
<tr><th>회차</th><th>목표
인원</th><th>참여
인원</th><th>달성률</th><th>회차</th><th>목표
인원</th><th>참여인원
(전년대비
증가율)</th><th>달성률</th></tr>
<tr><td>실적</td><td>30회</td><td>9,000</td><td>7,212</td><td>80.1</td><td>37회</td><td>9,800</td><td>5,479
(△24.0)</td><td>55.9</td></tr>
</table>
○ 또한, 정보주체 교육에서 취약계층 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과 교재를 매년 개선하였음에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신청인원의 부재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 수요를 면밀히 살펴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자율규제 활성화 사업의 법적 위탁근거 보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개인정보보호
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주된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 가능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법 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 관련 업무 및 위탁가능 업무>
<table><tr><th>법 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 관련 업무</th><th>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위탁가능 업무</th></tr><tr><td>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td><td>○</td></tr><tr><td>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td><td>○</td></tr><tr><td>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td><td>×</td></tr><tr><td>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td><td>×</td></tr><tr><td>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td><td>×</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무 위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규제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사업 실적
부진</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개인정보보호
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등 지원의 2023년도 사업목표를 29명이 하루 평균 3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 20,880건으로 설정하였음.
<아동 · 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 처리건수 목표>
* 29명 × 3건 × 20일 × 12개월 = 20,880건
(시범사업 시행 시기에 따라 투입인력·비율 조정)
* 사업 총괄(1명), 삭제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전담(2명)
○ 그러나 실제 운영결과, 신청건수 11,487건, 처리실적 10,813건으로 목표 대비 처리실적이 약 52%에 불과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사업 실적을 개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사업 출연 문제**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당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3.14. 개정, 2024. 3.15. 시행)을 통해 종전 '진단' 업무를 '평가'로 전환함. - 위원회는 이에 따라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담당인력을 증원(1명→2명)함. ○ 그러나 위원회는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스로도 공공기관의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업무 위탁은 위법 소지도 존재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고, 조직·인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출연금을 편성·집행 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받는 기관이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개발지원 내역사업의 직접 수행 필요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1031-304)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구조가 단순(6억 3,000만원 중 5억 5,000만원을 기업에 배분)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선정 및 결과 평가의 경우 개인정보위원회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는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출연 필요성이 낮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동 사업의 출연금 편성을 지양하고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 사업의 직접 수행 필요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1031-305)	주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지적사항	○ 직원의 출장경비를 제외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조사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 등 전액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갖춰야 할 정책역량과 네트워크 역량이 기관 내에 누적되지 않아 향후 출연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될 우려가 있고, 출연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 역시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 수립 및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의 존립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수행 사업의 비중을 높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신규지정현황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제도 신설 직후에는 2020년 5건, 2021년 13건으로 비교적 활발히 지정되었으나, 이후 2022년 3건 2023년 2건으로 지정실적이 점차 감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활성화하여 가명정보의 결합·가공을 통한 가치 창출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		
15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사업을 통해 가명정보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가명정보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을 받은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중장기적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제도와 연계 지원방안을 고려할 것		
16	**가명정보 시스템 수시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최근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알리페이에 고객 4천만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동 사업에서 가명정보 활용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맡아 왔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위원회는 대기업 등이 가명정보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도 그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개인정보기술 표준 개발지원 과제 공고 예고기한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기술 표준 개발지원(R&D)(1033-303)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지적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과제의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지원(R&D) 사업의 과제 예고를 2023년 2월 8일에 진행함.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것		
18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1034-301)	주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1단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함. - 2024년 5월 해당 사업을 완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음. ○ 2024년 2단계 사업은 사업기간을 9개월로 예상하고 사업을 수행(2024.3.15.~12.31.)하고 있는데, 1차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은 1차 사업의 종료 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년도 사업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는지 우려가 있음. ○ 또한, 2차 사업의 수행업체는 1차 사업의 수행업체와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는바, 1차 사업을 통해 구축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해당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사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부적정 비목 집행**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7011-251), 위원회기본경비(운영지원과)(7011-253)	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로 ① 간담회·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식사 비용을 처리하고 추후에 관서업무추진비로 정정하거나 ② 기관 내부 운영을 위한 다과류를 구입하거나 ③ 국외출장 시 통역비용을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 시 식사비용, 다과류 구입비용, 통역비용 등을 사업·관서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적정한 비목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20	**지자체 조례 제·개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7011-251)	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개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 2024년 7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개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72개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 운영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개정 지원을 강화할 것		

3. 시정요구사항(예비비)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예비비 집행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7035-321)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위원회 미구성, 예비비 과다요구·배정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특히, 내역사업인 국가위원회 운영사업과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7.8%, 18.4%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불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7035-321)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2022년 12월부터 국가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 업무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2억 4,250만원(57.9%) 집행된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		
3	**예비비 불용방지를 위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7035-322)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른 운영비 소요 등을 사유로 예비비 6억 5,8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연도 중 지출할 시급성·보충성 및 집행가능성이 결여된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받음에 따라 불용(1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음 - 국외업무여비(220-02목)로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연도 중 해외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전액이 불용되었음 - 공사비(420-03목)로 서울회의실 공사비 4,350만원, 세종사무실 공사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세종사무실 공사비는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에서 지출되고, 서울회의실 공사비는 예상보다 적게 소요되는 등 55.3%(2,600만원)가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비비 요구 시 시급성·보충성 및 집행가능성 등 예비비 편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임시조직의 별도 회의장 조성을 위한 예산낭비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7035-322)	주의	국무조정실
		지적사항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서울회의실 조성·원상복구 및 임차를 위해 약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동 위원회는 1년간 운영된 한시조직이라는 점 및 서울회의실의 실사용기간(9개월)을 고려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음 * 약 1억 1,200만원 = 2023년 서울회의실 공사비 2,080만원 + 2024년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회의장 원상복구비 1,562만원 + 10개월분의 임차료 7,574만원 - 서울회의실 조성(2023.7.12.) 전에는 서울청사 회의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 등에서 임차료 집행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 별도 회의장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임시조직의 별도 회의장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부대의견

가.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착공 전 사전절차가 지연된 사업 등에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해 연례적으로 이월시키는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국가보훈부의 시설투자비를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의 이·전용 등에 관한 국회 문서 제출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다.

나.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상환계획을 재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붙임 2】

2023회계연도 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4. 8.

【 국가보훈부 소관 】

Ⅰ. 일반회계

1. 세출

1) 보상금지급관리: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 정지 제도 운영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상금지급관리’ 사업은 보훈급여금 등의 과오급금 회수와 신상조사, 보훈급여금 체계개편 및 업무개선을 위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사업으로,[1] 2023년도 예산현액은 1억 1,600만원으로 이 중 1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보상금지급관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상금지급관리	116	116	-	-	116	115	-	1	110

자료: 국가보훈부

1) 세부사업: 보상금지급관리(1137-311)

(2) 검토의견

보훈보상대상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거나 보상 정지를 위한 위원회 심의요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상 정지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 관계 법령[2]에 따르면 현재 보훈대상자가 형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는 경우 실형기간 동안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되고 있고, 그에 더해 범죄 사유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추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 뿐만 아니라 의료·주택공급·대부지원 등 각종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형·보심위 의결에 따른 보상 정지 구분 >

구분	금고 이상 실형	보심위 심의·의결
정지기간	실형 기간	3년 이내
정지대상	보훈급여금 정지	보상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상 정지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보상 정지는 총 315건이며, 구체적 사유는 법·명령 위반 45건, 품위손상행위 23건, 금고 이상 실형 247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보상의 정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보상의 정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보상의 정지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예우의 정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지원의 정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4조(예우의 정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예우의 정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원정지)

으로 확인이 됨.

< 보상 정지 사유별 보상 정지 처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정지 처분 사유		
		보상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보훈급여금 정지
		법·명령 위반3)	품위손상행위4)	금고 이상 실형5)
2019년	52	-	1	51
2020년	51	-	-	51
2021년	63	14	4	45
2022년	74	30	2	42
2023년	75	1	16	58
계	315	45	23	247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형법상 처벌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 수준이 낮더라도 품위손상행위 여부에 따른 보상 정지가 적용되는 경우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는 등 제재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나타남.6)

○ 참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품위손상행위에 적용되는 실

---

3) 신체검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등 해당

4) 유공자 신분을 이용한 부당한 혜택 강요·알선 행위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8조 등)

5) 형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실형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 정지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2항 등)

6)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
o A는 청소년수련원에 불을 질러 건축물을 소훼하고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고 말하며 당구공으로 상해를 가하는 한편, 교통사고 후 별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기간만 보상 정지
o B는 파출소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징역 8개월의 실형 기간 외에 추가 정지 2년 등 총 2년 8개월의 보상 정지

형 기간 외 추가 보상 정지 현황에 따르면 추가 보상 정지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6개월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됨.

< 최근 5년간 추가 보상 정지 현황 >

사례	선고 형량	정지기간= 실형기간	품위손상행위로 인한 정지	
			정지기간	의결 고려사유
A	징역1년	1년	3년	동종 범죄로 6차례 실형
B	징역6월	6개월	1년	이외 3차례 범죄
C	징역10월	10개월	1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D	징역6월	6개월	1년	동종범죄 재범
E	징역8월	8개월	2년	이외 3차례 범죄, 수사기간 중 반복적인 범죄
F	징역6월	6개월	6개월	건강상태, 생계곤란사유 고려
G	징역8월	8개월	2년	동종 범죄 등 3차례 범죄
총7건	-		평균 1년 6개월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첫째, 보훈대상자의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법원의 형량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고, 둘째, 보훈대상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일선 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요청이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였음.[7)]

< 보심위 의결 누락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

연번	형사 처벌	범죄사실	위반 법률	보상 정지 현황	
				실형	보심위 의결
1	징역 1년 10월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 행사	제144조(특수공무방해)	1년 10개월	보심위 의결 누락 (심의요청 ×)
2	징역 8월	집회 참석 중 경찰관을 밀어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257조(상해)	8개월	
3	징역 1년 6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위조 및 실습비 부정이득 등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357조(배임수증재),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1년 6개월	
4	징역 1년 2월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 및 폭력 행사	형법 제257조(상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년 2개월	
5	징역 1년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 입히고 구급활동 방해	형법 제257조(상해), 소방기본법 제16조제2항(소방활동방해 금지)[8)]	1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재작성

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06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형평성 고려해 보상 정지해야)

○ 판결문에 공무집행방해로 명시된 행위에 대하여 보상 정지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업무 처리로 보이고, 누락 사례 5에서와 같이 판결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명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에 따라 심의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9]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품위손상행위에 따른 추가 보상 정지 적용 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판결문에 따른 범죄인정사실 등을 고려하여 범죄사유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위 손상 행위 관련 보상 정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음.

8) 1~4까지의 사례는 공무집행방해가 명백히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데도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반해 해당 건의 경우 판결문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가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미요청한 것으로 확인함. 그러나 실질적인 범죄사실로 볼 때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9) 실질적인 범죄사실로 볼 때 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 심의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2)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 계약 관련 예산 전액 미집행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요건 및 상이의 정도 등을 심사하고 의학적 연구자료의 수집·분석 등을 위한 사업으로,[10] 2023년도 예산현액은 20억 6,400만원으로 이 중 14억 6,5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2,064	2,064	-	-	2,064	1,465	-	599	1,620
공무직 등 인건비	450	450	-	-	450	309	-	141	462
보훈심사 운영	1,146	1,146	-	-	1,146	1,144	-	2	1,146
보훈심사홈페이지 관리	12	12	-	-	12	12	-	-	12
심사지원 전문 인력 용역	456	456	-	-	456	-	-	456	-

자료: 국가보훈부

10) 세부사업: 보훈심사위원회 운영(1142-327)

(2) 검토의견

회계연도 개시 전 직제 증원에 따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된 일반용역비가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부처 간 협의 등 진행 상황이 적시에 설명·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세부사업 중 '심사지원 전문인력 용역' 내역사업은 보훈심사의 전문성 확보와 동시에 보훈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보훈심사 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통해 적기에 국가유공자 예우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일반용역비 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 일반용역비 세부산출내역 >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기본급	241,269	2,010천원×10명×12월
상여금	10,000	1,000천원×10명
급식비	16,800	140천원×10명×12월
자격수당	3,600	30천원×10명×12월
시간외근무수당	34,632	(2,010천원/209시간*1.5)×20시간×10명×12월
연차수당	4,618	(2,010천원/209시간*8시간)×10명×6일
복리후생비	4,000	400천원×10명
보험료	30,401	4대보험료×10명
퇴직금	23,677	10명
일반관리비	22,139	6%
이윤	23,467	6%
부가가치세	41,460	
합 계	**456,063**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예산이 전액 불용된 이유는 회계연도 개시 전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2. 12. 13.)됨에 따라 '전문경력관 다군'이 10명 증원되어 심사인력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11)]

< 직제개정 전후 보훈심사위원회 정원표 >

(단위: 명)

구분	직제개정 전 ('22.7.19. 기준)	직제개정 후 ('22.12.13.)	비고
고공단	5	5	-
3·4급	2	2	-
4급	2	2	-
5급	10	10	-
6급	10	10	-
7급	20	19	△1 (통합정원 운영)
8급	2	1	△1 (통합정원 운영)
9급	3	3	-
전문경력관	4	14	+10 (소요정원 반영)

자료: 국가보훈부

□ 특정 목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산 반영이 확정된 사업이 회계연도 시작 전 다른 형태로 그 목적이 실현됨으로써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부실한 사업 계획이나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으로 인한 불용과 비교할 때, 사업 추진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음.

11) 국가보훈부는 2022년 9월 '정원 증원(전문경력관)을 위한 수시 직제개정 요구'를 시작으로 개정 노력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은 2022년 9월부터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이 예산심의 전에 조속히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고려되었다면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이 확실시되는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예산 편성 전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관계부처 간 신속한 협의 및 정부 내 진행 절차에 관한 예산 심사과정에서의 적시 설명·보고 등을 통해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 저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등록관리’ 사업은 전·공상이자 등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판정 및 등록을 결정하고, 대통령 명의 증서, 국가보훈 등록증 발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12] 2023년도 예산현액은 61억 6,000만원으로 이 중 60억 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등록관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등록관리	5,005	5,005	1,155	-	6,160	6,009	-	151	6,732
신체검사	1,579	1,579	-	-	1,579	1,579	-	-	1,697
증서관리	1,818	1,818	-	-	1,818	1,818	-	-	2,920
생활수준조사 금융통지	20	20	-	-	20	20	-	-	20
신고포상금	9	9	-	-	9	6	-	3	9
공무직 등 인건비	846	846	-	△3	843	748	-	96	1,431
등록기록관리	147	147	1,155	-	1,302	1,302	-	-	84
국가보훈기록관 운영	572	572		3	575	537	-	38	571
통합보훈서류 입력 시스템 유지보수	14	14	-	-	14	-	-	14	-

자료: 국가보훈부

12) 세부사업: 등록관리(1143-328)

(2) 검토의견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여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정된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증서관리’ 사업 중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 내내역사업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하고, 휴대전화에도 저장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같이 도입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임.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승격과 함께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및 선순위 유족 66만명을 대상으로 고령자부터 연령별 순차적으로 교체발급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의 202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4년 말까지 종료하도록 그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2개년도로 나누어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계획 >

구분	발급시기	대상	계획
시범발급	'23. 6.~7.	신규등록자	2천명
정식발급	'23. 8.~9.	1935년이전 출생자	7만명
	'23. 10.~12.	1936년~1945년생	11만명
	'24. 1.~3.	1946년~1949년생	12.7만명
	'24. 4.~6.	1950년~1955년생	12.4만명
	'24. 7.~9.	1956년~1965년생	11.4만명
	'24. 10.~12.	1966년 이후 출생자	11.8만명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실시한 교체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대비 36.6%로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현황 >

(단위: 명, %)

구분	발급시기	대상	계획(A)	실적(B)	발급률 (B/A)
시범발급	'23. 6.~7.	신규등록자 등	2,000	8,280	37.2*
정식발급	'23. 8.~9.	1935년 이전 출생자	70,000	18,489	
	'23. 10.~12.	1936년~1945년생	110,000	39,886	36.3
합 계			182,000	66,655	36.6

* 6~9월 발급 계획과 실적을 합산하여 환산

* (연령별 10부제 예시) 1925. 6. 25.생 국가유공자의 경우, '23. 8~9월 기간 내에 5, 15, 25일 중 관할지(방)청을 방문하여 발급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원활한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도 6.5.~7.31.까지 신규등록자, 순위변경자 등을 대상으로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두었으며, 8월 이후 고령자부터 연령별 10부제로 정식 발급을 하게 되어 발급률이 다소 낮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분기와 2분기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계획대비 발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2024년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현황 >

(단위: 명, %)

발급시기	대상	계획(A)	실적(B)	발급률 (B/A)
'24. 1.~3.	1946년~1949년생	127,000	46,621	36.7
'24. 4.~6.	1950년~1955년생	124,000	35,280	28.5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사업 예산 변동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도 (A)	2024년도 (B)	증감 (B-A)	비 고
IC국가보훈등록증 제작 (일반수용비)	1,500	2,092	592	· 카드 단가 상승분 등 반영
발급부품 및 발급기기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81	453	372	· 발급기 부품·소모품, 기기 유지보수 등 소요 반영

구분	2023년도 (A)	2024년도 (B)	증감 (B-A)	비 고
S/W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	187	187	· 시스템 관리 용역비 반영
발급기기 교체 (자산취득비)	44	44	-	· 전년 동결
교체발급인력 인건비 (일용임금)	641	1,097	456	· 23년 7개월, 24년 12개월분 반영
4대 보험료 등 (고용부담금)	71	214	143	· 23년 7개월, 24년 12개월분, 퇴직금 반영
합 계	**2,337**	**4,087**	**1,750**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동 내역사업의 경우 2024년 종료를 목표로 그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을 실제 담당하는 인력과 관련한 인건비의 경우 2023년과 비교할 때, 2024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교체발급인력 인건비의 경우 사업 시행기간을 고려하면 34명분의 인건비 예산은 동일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23년 및 2024년 교체발급인력 현황 및 예산액>

구분	인원(명)	예산액(백만원)	비고
2023년	34	712	7개월분('23.6. ~ '23.12.)
2024년		1,311	12개월분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이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후에는 예정된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음.

4) 위탁병원 진료(2150-366): 연례적 이용 등 예산 조정 집행 개선 필요

(1) 사업 및 계획안 개요

□ ‘위탁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13] 2023년도 예산현액 2,753억 8,700만원 중 2,753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2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위탁병원 진료	267,441	267,441		7,946	275,387	275,385		2	256,315
우수위탁병원 인증제	15	15	-		15	15	-	-	-
위탁진료관리비	2,383	2,383			2,383	2,383			2,383
위탁병원진료비	265,043	265,043		7,946	272,989	272,987		2	253,932

자료: 국가보훈부

13) 세부사업: 위탁병원 진료(2150-366)

(2) 검토의견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이·전용 등의 예산조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실소요 예산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위탁병원 진료’사업은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매년 보상금 등에서 이·전용 등을 실시하여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참전명예수당 사업에서 79억 4,600만원을 “이용”하여 위탁병원 진료 보상금에 집행하였음.

< 최근 5년간[14] 위탁병원 진료 사업 이·전용 등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사유
		세부사업		세부사업	
’19	내역변경	보훈병원진료 (2150-365)	8,101	위탁병원진료 (2150-366)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20	이용	보상금(1132-300), 참전명예수당(1133-307) 등 21개 사업	25,189	위탁병원진료 (2150-366)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21	이용	보상금 (1132-300), 참전명예수당(1133-307)	15,526	위탁병원진료 (2150-366)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23	이용	참전명예수당 (1133-307)	7,946	위탁병원진료 (2150-366)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자료: 국가보훈부

14)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의료기관 내원이 감소하여 위탁병원 진료 사업 예산 3,072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그런데 위탁병원진료 사업의 진료비 예산 부족으로 타 사업 예산 등을 조정·충당하는 집행 관행에 대해서는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문제 제기 및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에도 79억 4,600만원에 달하는 예산 조정이 발생하였음.

○ 국회는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위탁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진료비를 편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였으나, 같은 문제점이 2023년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위탁병원 진료비 연례적 이·전용에 대한 최근연도 국회 결산 지적 >

대상연도	지적요지	시정요구사항
2019결산	❍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의 부정확한 추계로 의료지원 사업에서 매년 대규모의 이·전용·조정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병원 지정 확대 및 진료인원의 증가로 동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함	❍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조정을 통해서 편성액과 집행액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탁병원 진료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주의)
2020결산	❍ 지속적인 위탁병원 지정 확대, 대상자 연령 증가 등으로 진료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의 부정확한 추계로 위탁병원진료 사업에서 매년 이·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음 - 예산액 대비 2018년 12.1%, 2019년 3.3%, 2020년 11.1%를 이·전용으	❍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 진료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진료비를 편성하여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 (제도개선)

대상연도	지적요지	시정요구사항
	로 충당함	
2021결산	○ 진료단가 및 진료인원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여 지원금 부족에 따른 이·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음 - 위탁병원 진료 사업에서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021년 155억원 이용, 2018년 296억원 내역변경 등 연례적인 이용·내역변경이 발생함	○ 국가보훈처는 적정 진료단가를 반영하고 진료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발췌

○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조치에 대해 매년 제출한 조치결과에서 각 연도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진료인원 및 단가 등 관련 데이터를 충실히 분석·검토하고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였음.

< 위탁병원 진료비 이·전용 시정요구 조치결과 제출 내용 >

대상연도	조치결과	조치상황
2019결산	○ 진료비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 최근 진료실적치 등 기본 데이터를 충실히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소요가 반영되도록 노력 * 보훈의료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진료비 산정체계 연구용역(‘19.5~10월) ○ 21년도 위탁병원 진료예산은 전년대비 3.6% 증액 편성, 향후에도 적정진료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20년 226,806 → ’21년 234,985백만원(+8,179백만원)	○ 조치중 (’21.4.30.기준)

대상연도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0결산	○ 각 진료대상별(국비, 감면) 진료현황 및 인원 등 추계를 분석하여 적정 진료비가 '23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추진 ※ '22년 중기재정계획 제출(1월말)	○ 조치중('22.4.30.기준) - 조치기한: '22년 12월
2021결산	○ 대상별 진료인원 및 단가 등 관련 데이터를 충실히 분석·검토하고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소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중('23.4.30.기준) - 조치예정일: '23년 12월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정부 제출) 중 발췌

□ 국가보훈부가 위탁진료비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예산 편성 및 국회 예산 심의 등 다른 주체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이같이 예산 조정 집행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국가보훈부의 자료 분석 및 설득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조정 집행에 대한 국회 결산 지적 취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실소요 예산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당초 편성 목적과 달리 대규모의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5)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156-383): 보조사업자 정산 지연 및 보조금 교부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은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치과치료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병원시설 낙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으로,[15] 2023년도 예산 119억 8,500만원이 전액 집행됨.

< 2023년도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11,985	11,985	-	-	11,985	11,985	-	-	-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매년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적보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5)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156-383)

□ 국가보훈부는 2018년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치과병원 증축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2023년 12월 18일부터 치과병원 건물에서 진료를 재개하였음.

□ 동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총 230억 6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음.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에 투입된 사업비(국비) >

(단위 :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1,586	4,299	2,718	2,418	11,985

자료: 국가보훈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개월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2024년 2월말까지 정산을 마친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공단은 2023 회계연도에 대한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2024년 7월 1일에 제출하였고, 보조금이 지급된 2019년부터 제출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기를 살펴봤을 때,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없었으며, 특히 2019년, 2021년, 2022년의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보고서가 제출되었음.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현황 >

회계연도	제출기한	제출일
2019년	2020.2.29.	2021.2.24.
2020년	2021.2.28.	2021.8.24.
2021년	2022.2.28.	2023.3.27.
2022년	2023.2.28.	2024.6.27.
2023년	2024.2.29.	2024.7.1.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7]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안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8]

1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의 서류를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공단의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실적보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는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판단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기초자료로서 정부의 보조금 잔액 및 이자정산, 차년도 보조금 교부 여부의 결정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자료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향후 이와 같은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기한 내에 정산을 마쳐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6)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콘텐츠 구축 사업 관련 수의계약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독립기념관 전시·연구, 교육·문화사업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19] 2023년도 예산현액은 290억 6,700만원으로 전액 집행[20]되었음.

< 2023년도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독립기념관운영 및 활성화	29,067	29,067	-	-	29,067	29,067 (27,841)	-	-	28,176
경상비	11,212	11,212	-	-	11,212	11,212 (11,212)	-	-	11,381
기본사업비	13,847	13,847	-	-	13,847	13,847 (13,509)	-	-	12,861
활성화사업비	4,008	4,008	-	-	4,008	4,008 (3,120)	-	-	3,934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동 사업 진행 후 매년 입찰업체 부족으로 인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9) 세부사업: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3144-333)
20) 전액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278억 4,100만원임.

□ “독립기념관 콘텐츠 구축 사업”은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1억 4,500만원 편성되었고 그 중 1억 4,450만원이 집행되었음.

< 독립기념관 콘텐츠 구축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액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액	계약금액=집행액	계약업체	계약방식
2020년	259.7	259.7	A	수의계약
2021년	236.9	230	B컨소시엄	수의계약
2022년	266.4	265	B컨소시엄	수의계약
2023년	145	144.5	D	수의계약

자료: 독립기념관

○ 그런데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과정 및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 계약 모두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이후 단일 응찰로 유찰된 후 재입찰 공고 없이 제안서 평가 등을 실시한 이후 입찰 참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됨.

< 독립기념관 콘텐츠 구축 사업 계약과정 >

구분	사업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
2020년	·공고명: 2020년 콘텐츠 구축사업 ·제안공모 시행보고(5/4) ·제안공모 공고(5/18~6/8) - 공고처: 조달청 나라장터 - 사전규격공개 포함	·제안서 평가 계획보고(6/9) ·제안서 평가 실시(6/10) - **입찰업체: 1개 업체** - 평가항목: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위원: 5명(외부3, 내부2) - 평가결과: 80.87점(적격)	·계약 의뢰(6/15) ·계약 체결 (6/18~11/30)
2021년	·공고명: 2021년 콘텐츠 구축사업 ·제안공모 시행보고(4/19) ·제안공모 공고(4/20~5/10) - 공고처: 조달청 나라장터 - 사전규격공개 포함	·제안서 평가 계획보고(5/13) ·제안서 평가 실시(서면평가*, 5/14) - **입찰업체: 1개 업체** - 평가항목: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위원: 5명(외부3, 내부2) - 평가결과: 90.67점(적격)	·계약 의뢰(5/18) ·계약 체결 (5/28~11/30)
2022년	·공고명: 2022년 콘텐츠 구축사업 ·제안공모 시행보고(4/7) ·제안공모 공고(4/8~4/27) - 공고처: 조달청 나라장터 - 사전규격공개 포함	·제안서 평가 계획보고(4/29) ·제안서 평가 실시(서면평가*, 5/2) - **입찰업체: 1개 업체** - 평가항목: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위원: 5명(외부3, 내부2) - 평가결과: 88점(적격)	·계약 의뢰(5/4) ·계약 체결 (5/10~11/30)
2023년	·공고명: 2023년 콘텐츠 구축사업 ·제안공모 시행보고(5/18) ·제안공모 공고(5/19~6/12) - 공고처: 조달청 나라장터 - 사전규격공개 포함	·제안서 평가 계획보고(6/16) - **입찰업체: 1개 업체** ·제안서 평가 실시(6/19) - 평가항목: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위원: 6명 (외부3, 내부2, 옴부즈만1) - 평가결과: 91점(적격)	·계약 의뢰(6/23) ·계약 체결 (6/28~10/31)

* 코로나 19 대응관련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조치방안 2단계+a 적용에 따라 온라인 등비대면 방식 회의 개최

자료: 독립기념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공고 입찰 이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1)]

□ 그런데 독립기념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적용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해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됨.

□ 독립기념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 이후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고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 단독 입찰(유찰) 이후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고시규정을 근거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입찰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

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제7조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22] 이는 수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재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 한시적·특례적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 성질, 계약업체의 업종 등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한편, 독립기념관 콘텐츠 구축 사업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르면,[23]

---

22)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의 입찰공고문을 보면 이조차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매년 입찰업체의 부족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입찰공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독립기념관은 지금까지와 같은 국가계약법령의 예외규정에 기댄 관성적·반복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사업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국가계약법령의 원칙인 경쟁입찰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7) 국내외사적지탐방: 국내외 사적지 탐방 실적 저조 및 탐방국 다양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내외사적지탐방사업’은 청소년, 청년, 교사 등에게 국내외 사적지 탐방을 통해 생생한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24] 2023년도 예산현액은 23억 5,900만원으로 이중 23억 2,500만원이 집행되고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내외사적지탐방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내외 사적지탐방 (3145-403)	2,359	-	-	-	2,359	2,325	-	34	1,303 (이관)
청소년, 청년 및 교원 등 탐방지원	799	-	-	-	799	799	-	-	
보훈현장탐방	780	-	-	-	780	779	-	1	
현충시설탐방	780	-	-	-	780	747	-	33	

※ ’23년 유사 탐방사업 예산 통합 : 보훈현장탐방(3145-401), 현충시설탐방(3146-406)
※ ’24년 예산부터 ‘국내외사적지 탐방(3145-403)’세부사업이 폐지되고, ‘보훈문화조성(3145-401)’ 내역사업으로 이관·편성
자료: 국가보훈부

24) 세부사업: 국내외사적지탐방(3145-403)

(2) 검토의견

국외 탐방국 대부분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치우쳐 있어 동 사업의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외 탐방국의 다양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국내외사적지 탐방 실적을 보면, 2019년 578명, 2020년 908명, 2021년 1,046명, 2022년 330명이고, 2023년은 8,345명이 탐방을 실시하였음.

< 최근 5년간 국내외사적지탐방사업 실적 >

연도	지역		대상	기간	인원(명)	집행액(백만원)
2023년	국내	현충시설 등 국내 사적지	청소년, 청년 등 일반인	연중 (당일~2박3일) *244회 운영	7,890	1,560
		강원,경상권 보훈사적지	교원 (교장, 교감 교사 등)	7.26.~10.20. (2박3일) *4회 운영	70	736
	국외	중국	청년 (대학생 등)	7.3.~9.7. (5박6일) *3회 운영	330	
		카자흐스탄	청소년, 청년 등 일반인	7.29.~8.4. (5박7일)	35	
		일본	독립유공자 후손	2.7.~2.10. (3박4일)	20	34
	소 계				**8,345**	**2,330**
2022년	국내	강원,경상,전라 3개권역별 보훈사적지	청년 (대학생 등)	7.26~8.3 中 (2박3일) 17회 운영	237	490
		강원,경상,전라 3개권역별 보훈사적지	교원 (교장, 교감 교사 등)	8.9~10.28 (2박3일) 4회 운영	64	
	국외	미국, 프랑스	국내탐방 우수 활동자	12.17~12.24	29	
	소 계				**330**	**490**
2021년	국내	현충시설 등 국내 사적지	일반시민	4.30~11.30	60	50
			보훈교육원이수	4.14~12.30	20	120

연도	지역		대상	기간	인원(명)	집행액(백만원)
			교원			
			보훈문화 확산기여자	4.14~12.30	42	
	국내	현충시설 등 국내 사적지	청소년, 대학생, 국가유공자 등 일반국민	6.1~12.15	16	35
				5.1~9.12	79	20
				8.26~9.26	121	40
				5.22.~11.7.	71	40
				5.7~9.30	307	40
				7.30~9.26.	36	15
				8.22~11.15.	50	15
				11.10~11.12	13	10
				6.28~8.31.	16	10
				7.20~9.15.	40	10
				6.25~9.27	36	5
				4.13~10.8.	37	12
				8.21~9.13	55	16
				5.1~9.30	47	12
	소 계				**1,046**	**450**
2020년	국내	현충시설 등 국내 사적지	독립유공자 후손 등	10.15.	50	15
			청소년 등	11.4~11.7	35	30
			보훈교육원 이수 교원	9.8~11.30	64	76
			청소년, 대학생, 국가유공자 등 일반국민	10.30~11.30	169	70
				9.16~12.4	85	35
				9.28~11.22	134	48
				8.31~10.11	78	35
				10.26~11.29	293	35
	소 계				**908**	**344**
2019년	국외	일본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2.7~2.10	20	90
		중국		4.11~4.15	18	
		러시아		11.5~11.8	20	
	국외	중국	독립유공자 후손대학생	7.22~7.26	29	177
		러시아	5개교 사관생도	8.19~8.23	24	
		중국	'18년도 보훈연수교원, 창의체험학교 우수교원	6.3~6.7	38	
		중국		6.10~6.14	34	
		중국		7.29~8.2	35	
		러시아	청소년 등	7.25~7.29	31	100
		러시아		8.15~8.19	31	
		중국	100주년서포터즈 (대학생 등)	3.18~3.23	20	35
		러시아	청소년, 대학생, 국가유공자 등 일반국민	4.26~4.30	23	35
		중국		5.8~5.12	31	35
		중국		7.3~7.7	26	35
		일본		7.8~7.12	23	35
		중국		7.13~7.17	27	35

연도	지역		대상	기간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러시아		7.15~7.19	23	35
		러시아		8.3~8.7	22	35
		중국		8.5~8.9	28	35
		중국		8.5~8.10	26	35
		중국		8.18~8.23	21	35
		중국		8.19~8.23	28	35
	소 계				578	787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국외 탐방 현황을 보면 2019년은 578명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나라를 탐방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은 국외탐방의 실적은 없고 2022년에 29명이 미국, 프랑스를 탐방하였으며, 2023년 385명이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을 탐방하였는바, 탐방인원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탐방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일부 국가로 치우쳐 있음.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전체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54.6%가 중국, 일본, 러시아에 분포되어 있고, 독립운동사적 가치가 큰 중점사적지의 79.8%가 중국, 일본,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주요 탐방국 위주로 선정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을 보면 미국, 멕시코,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의 부재로 탐방국의 대부분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치우쳐 있어 동 사업의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탐방에서 소외된 탐방국의 사적지에 대하여 국가적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고, 소외된 탐방국의 사적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제고를 위하여 국외 탐방국의 다양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

총합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멕시코	카자흐스탄	쿠바	유럽	기타
1,032	483	159	123	69	53	25	13	34	73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2023년도 '국내외사적지탐방' 사업의 선발인원 대비 신청인원 비율을 보면 국외의 경우 평균 경쟁률은 1.74:1, 국내의 교원 탐방 경쟁률은 1: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도 국내외사적지 탐방 신청·선발인원 현황 >

구분	지역	일시	신청인원(명)	선발인원(명)	경쟁률	비고
교원 탐방	국내	1차: 7.26.~7.28.(2박3일)	17	17	1:1	
		2차: 8.8.~8.10.(2박3일)	11	11	1:1	
		3차: 9.20.~9.22.(2박3일)	22	22	1:1	
		4차: 10.18.~10.20.(2박3일)	20	20	1:1	
청소년·청년 탐방	국외 (중국)	1차: 7.3.~7.8.(5박6일)	371	100	1.86:1	
		2차: 7.10.~7.15.(5박6일)		100		
		3차: 9.1.~9.6.(5박6일)	68	30	2.27:1	
	국외 (카자흐스탄)	7.29.~8.4.(5박7일)	38	35	1.09:1	
	국외 (일본)	2.7.~2.10.(3박4일)	20	20	1:1	
국내 탐방	현장탐방	연중(당일~2박3일)	(93회)	3,449		지방관서 직접 수행

구분	지역	일시	신청인원(명)	선발인원(명)	경쟁률	비고
	시설탐방	연중(당일~2박3일)	(151회)	4,441		공모사업

자료: 국가보훈부

○ 신청인원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국내외 탐방 정보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탐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 국외 탐방의 경우 중국, 러시아 등 동일 지역의 반복으로 인한 탐방 매력도의 저하, 국내 탐방은 학교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하여 선착순 마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저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신청인원의 저조는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는 등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중국, 러시아 등에 한정되어 있는 탐방국가를 미국, 유럽지역까지 다양화할 수 있도록 탐방국 및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 국내외 탐방인원도 현재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인스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탐방형태도 숙박형 탐방, 가족단위 탐방 등 탐방 프로그램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탐방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 전주지중화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미흡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보존 및 전시,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즐겨 찾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체험교육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25] 2023년도 예산현액은 103억 6,300만원으로, 이 중 95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	10,260	-	103	-	10,363	9,583	-	780	9,815
전주지중화 사업	563	-	-	-	563	-	-	563	-

자료: 국가보훈부

25) 세부사업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3146-410)

(2) 검토의견

국가보훈부는 ‘전주지중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대문구청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동 사업 추진을 보류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주지중화사업’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함)의 진출입로에 전주 공중선이 3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기념관 경관 저해 및 고압전류로 인한 보행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 공중선을 지중화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은 5억 6,300만원으로 전액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기간은 한국전력 측 신청일로부터 140일 내외이며, 사업대상은 기념관 앞 전주 2기를 지중화하는 것으로서, 공사비 세부내역은 케이블 전선설치 및 제반전기공사 등 본공사비 3억 3,800만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1억 2,400만원, 자동화 공사설치비 1,400만원, 미관개선공사 1,300만원 등 총 5억 6,300만원임.

< 전주지중화사업 공사비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소요액
본공사비(케이블전선설치, 제반전기공사, 토공사, 매립, 철거 등	338
설계용역비	11
감리용역비	113
포장복구비	11
테스트용역비	10
검사비	10
폐기물처리비	10
위치탐사비	11
도통시험비	10
자동화공사설치비	14
미관개선공사비	13
기타부대공사비	12
합계	**563**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전주지중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020년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그린뉴딜지중화사업”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한국전력공사에 동 사업 요청시 심의 후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 한국전력공사 50%, 지자체 30%를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임.

○ 이에 따라, 2022년 서대문구에서는 기념관 앞 통일로 전주 그린뉴

딜지중화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자체 심의 결과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3순위)로 선정되어 추진이 보류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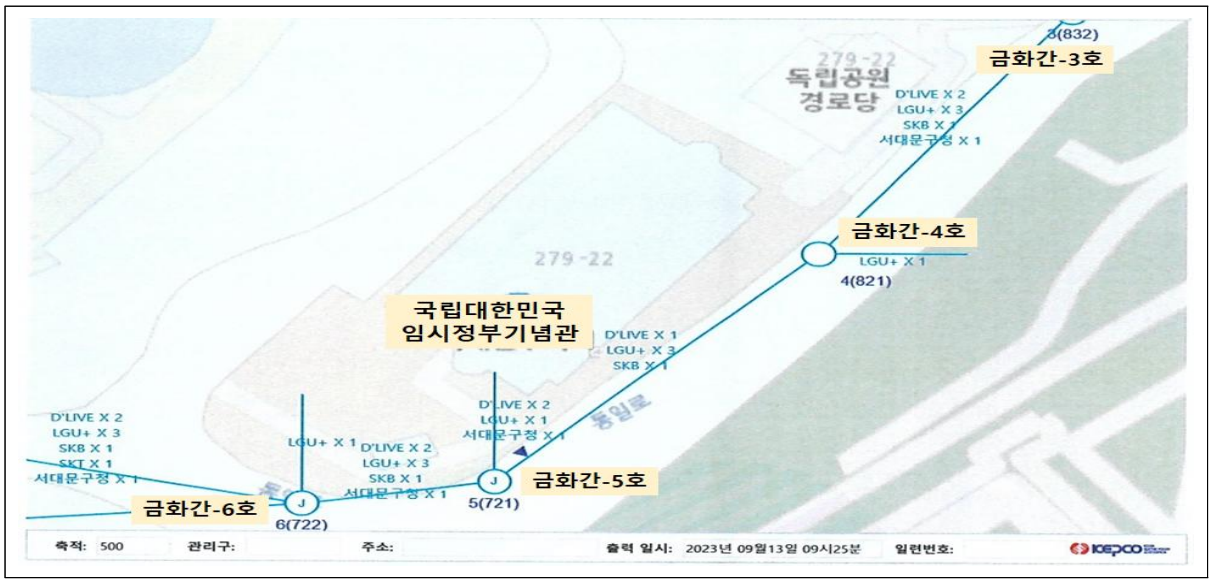
○ 전주지중화사업은 국가보훈부가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관련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지중화사업”을 고려하고 기념관 앞 도로인 통일로 전반에 걸친 지중화 규모, 사업비 부담,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및 통신선 등 협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대문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전주지중화사업 국가보훈부·지자체 추진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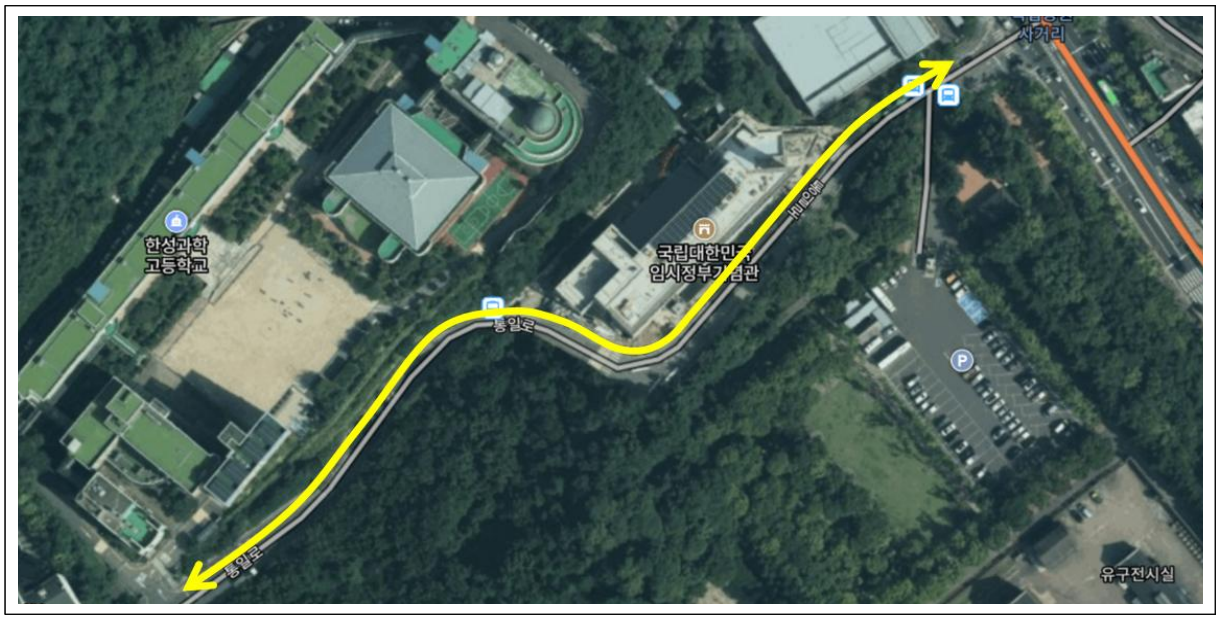
구분	국가보훈부 추진	서대문구 추진
사업명	· 일반지중화사업	· 그린뉴딜지중화사업
지중화 규모	· 전주 2본	· 전주 11본
사업비 편성	· 기념관 전액 부담	· 한국전력 50%, 국비 20%, 시비 15%, 구비 15%
허가 및 협약	· 지자체에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승인 필요 · 지하매설물(가스·수도 등) 이격거리 확보 위한 지자체 검토 필요 · 기념관 주관으로 각 통신사 협약 및 인근 지역주민 협의 추진 · 지자체 통신선 철거 협의 필요	·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자체승인 · 지하매설물 이격거리 자체 검토 · 서대문구 주관으로 각 통신사 협약 및 인근 지역주민 협의 추진 · 지자체 통신선 철거 자체 추진
추가 소요 예산	· 전주 지중화 공사비 외 각 통신사 및 지자체 통신주 철거 및 지중화 공사비 예산 별도 필요 · 공사완료 후 도로복구비 예산 별도 필요	· 기타 부대비용 기 확보

자료: 국가보훈부

<기념관 자체 추진 전주 2본 지중화 공사 배치도>



<서대문구 추진 전주 11본 지중화 공사 사업 구간>



○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지중화사업”에 대한 인지 부족,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 승인 문제, 통신선 철거 협의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전주지중화사업의 추진은 서대문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동 사업 추진을 보류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바, 동 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의 미흡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처리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추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기관과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계획 수립과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전주 지중화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대문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임.

<서대문구 지중화사업 세부추진계획>

① 사업위치 : 통일로 279-79～통일로 279-24 구간 0.31km

② 사업내용

- 지하분야 : 지중관로 설치, 전기·통신선을 땅속으로 지중화

- 지상분야 : 전주·통신주·가공배전선 철거, 배전기기 설치 등

③ 공사내역

- 철거분 : 전주 11본, 특고압 긍장 0.3km 철거
- 신설분 : 고압케이블 0.44C-km, 개폐기 8대, 변압기 3대

④ 소요예산 : 2,365백만원

- (지중화공사비) 1,900백만원(한전 950백만원, 국비 473백만원, 시비 238.5백만원, 구비 238.5백만원)
- (도로복구비) 465백만원(전액 구비)

⑤ 추진일정

- ('24. 8월) 한국전력공사, 각 통신사 협약 체결
  *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 체결 완료('24.4.26.)
- ('24. 10월) 지상기기 설치 장소 인근 기관 및 지역주민 협의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협의 예정(10월 중)
- ('24. 10월) 한국전력공사 실시설계 및 사업비 납부
- ('25. 3월) 공사 착공
- ('26. 12월) 관로공사, 전기·통신공사, 부대공사 등 추진

※ 지중화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시행, 도로복구공사는 서대문구에서 시행

9)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사업: 집행실적 저조 및 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사업’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국내 독립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26] 2023년도 예산현액은 25억 3,200만원으로 이중 22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독립운동관련사업 등지원	3,235	-	-	-	3,235	2,902	-	333	1,815
국내독립기념행사지원	2,532				2,532	2,207		325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국내 독립기념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적정한 회계 처리 및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6) 세부사업: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3147-413)

□ 최근 4년간 국내 독립기념행사지원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대비 행사 집행은 축소 운영되었고(2020년: 220개→96개, 2021년: 198개→128개, 2022년: 218개→158개), 2023년의 경우에는 회원 고령화로 인한 행사 진행 어려움 등의 사유로 16개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였으며(212개→195개), 1개 단체[27]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보조금이 미지급되어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음.

< 국내 독립기념행사지원 사업 집행실적 >

연도	행사계획		행사집행		실적 부진 구체적 사유
	예산액	행사 개수	집행액	행사개수	
2018년	1,689	255	1,680	230	불가피한 주변여건 악화(겨울철 혹한, 구제역 및 AI발생 등)로 인한 행사 취소
2019년	1,502	200	1,501	200	-
2020년	1,481	220	1,250	96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
2021년	1,893	198	1,813	128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
2022년	2,216	218	2,096	158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
2023년	2,532	212	2,207	195	부정수급 의혹 단체 보조금(200백만원) 미지급 및 16개 행사 취소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도 국내 독립기념행사 취소 또는 축소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회원고령화로 인한 행사진행 어려움으로 인한 축소, 사업회

27)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내부사정에 의한 행사 취소, 옥천군 학교의 참여율 저조로 인한 행사 취소, 독감 유행 및 예산 부족으로 행사 취소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음.

< 2023년도 국내 독립기념행사 취소 및 축소 현황 >

연번	행사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천원)	행사 축소 및 취소 사유
1			7,000	회원 고령화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 행사로 축소
2		우사김규식박사기념사업회	3,000	기념사업회 회장 작고에 따른 내부 사정으로 행사 준비 어려워 취소
3		광복회 고양시지회	1,000	예산 부족으로 행사 취소
4		㈜서경방송	5,000	이태원 참사 이후 참가자 보험 의무가입 등 경비 초과로 행사 취소
5		장곡3.1운동유족회	3,000	4월 발생한 홍성지역 산불로 행사 불가하여 취소
6		대호지·천의장터4.4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	5,000	4.2. 발생한 당진시 대호지면 산불이 행사 당일(4.4.)까지 진화되지 않아 행사 불가하여 취소
7		예산모현사업회	3,000	사업회 내부사정으로 사업 추진 불가하여 행사 취소
8	**수당고택 음악회**	수당이남규기념사업회	4,000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되어 중복 신청으로 인해 행사 취소
9		문의면연합번영회	5,000	충북도지사 친일논란 등 부정적 여론으로 행사 취소
10	충민대제 및 검한재 문학제	(재)순국선열김순구선생외25인기념재단	2,000	옥천군 학교의 참여율 저조로 원활한 행사 진행 불가하여 취소
11		홍암나철기념사업회	4,000	독감 유행 및 예산 부족으로 행사 취소
12		해보면청년회	5,000	만세운동재현행사에 학생들의 참여가 불가하여 국비 없이 지방비 등으로 행사 축소 진행
13		(사)김춘배의사	2,000	e나라도움 사업신청 불가하여

연번	행사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천원)	행사 축소 및 취소 사유
		기념사업회		국비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행사 진행
14		광복회전라북도지부	3,000	광복음악회 지원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 취소
15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3,000	보조금 미신청 및 정산능력 부족으로 행사 취소
16		익산4.4만세운동기념사업회	2,000	보조금 부족하여 국비 없이 지방비만으로 행사 축소 진행
17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200,000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미지급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동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한 사유를 보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실히 하였더라면 일부사업의 경우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안내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집행이 부진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없게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 또한, 2023년도에 실시한 국가보훈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자체점검[28] 결과('22년 지원 보조사업 대상)에 따르면 회계부적정 및 목적외 사용이 47건(45,224,000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국내 독립기념행사지원 단체인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29]는 기부금 리베이트, 23시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등 15건을 적발하였고 이중 인건비, 사업대금(앱개발 등)을 지급 후 일정액을 기부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기부금 리베이트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10건, 39,910,000원)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였는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28) `22.12.28. 대통령실 「비영리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29) 설립목적은 항일여성독립운동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선양, 문화활동을 통하여 항일여성독립운동 역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발굴 및 홍보 활동(항일여성독립운동 815광복절 기념 추모문화제 행사 등)임.
회원수는 69명(임원 8명)으로 국고보조금은 `21년도 2억 5,000만원, `22년도 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3년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미지급함.

< 국가보훈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자체점검 현황 >

□ **점검 개요**
○ 기간 및 점검반 : ’23.1.3.~3.31. / 특정감사팀 3명(5급 1, 6급 1, 7급 1)
○ 대 상 : 57개 2,517백만원 보조사업(’22년 기준)
- (점검대상) 최근 3년간(’20~’22)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 (점검범위) 1천만원 이상 민간단체 보조금(보훈단체 보조금 제외)
  * 보훈단체는 매년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

□ **주요 점검사항** * ’22.12.29.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결과
○ 민간단체 보조금의 불법적 집행 및 낭비요소 등 전면적 실태점검
○ 선정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외 사용 등 집중점검

□ **점검 결과 (적발사항)** * 현장방문 조사 등 실시
○ 선정과정의 적법성 : 특이사항 없음
○ 회계부적정 및 목적외 사용 : **47건 45,224천원**
- 4·19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 32건 3,969천원(국고보조 : ’20년 3.9억, ’21년 2.5억, ’22년 2.3억)
  * (적발유형) 간담회 명목 커피상품권 구매, 식비 과다집행, 23시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등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15건 41,255천원(국고보조 : ’20년 5.5억, ’21년 2.5억, ’22년 2억)**
  * (적발유형) 기부금 리베이트, 23시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식비 과다집행 등
  * (수사의뢰, ‘23.3.8.) **‘21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행사비용을** 기부금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급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10건 39,910천원)
  : 인건비, 사업대금(앱개발 등)을 지급후 일정액 기부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

자료: 국가보훈부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보조사업의 리베이트로 추정한 기부 세부내역 >

(2021년도, 단위 : 만원)

지급 대상	지급사유	지급액	기부액
ㄱ업체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온라인 전시회 어플리케이션 제작 / 홈페이지 유지보수	5,302	500
ㄴ업체	제7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공모전 영상 제작 / 항일여성독립운동가 학술심포지엄 영상 제작	1,436	600
ㄷ업체	항일여성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영상	4,486	2,000
심사위원(전OO)	문화예술 공모전 심사비 공공조형물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50	48
심사위원(이OO)	문화예술 공모전 심사비 공공조형물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50	50
심사위원(노OO)	문화예술 공모전 심사비 공공조형물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50	30
심사위원(김OO)	문화예술 공모전 심사비 공공조형물디자인 공모전 심사위원	50	40
직원(정OO)	급여(8～12월)	1,050	401
직원(김OO)	급여(8～12월)	1,050	122
ㄹ업체	제8회 추모문화제 항일독립운동여성상 동상 제작	('22년 4,000 계약)	('21년 200 기부)
계		17,524	3,991

* 수사의뢰 당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내역으로, 경찰 수사로 기소 결정된 내용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효율적인 ‘국내 독립기념행사지원사업’을 위해 당초 행사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거나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10)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예산 편성 목적과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운용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사업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검증, 사료수집 및 DB구축,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30] 2023년도 예산현액은 40억 5,800만원으로 이 중 38억 6,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	4,004	4,004	-	54	4,058	3,869	-	189	1,747
전문사료발굴 분석단 운영	833	833	-	△1	832	768	-	64	857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694	694	-	11	705	704	-	1	708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41	141	-	-	141	141	-	-	182
공적전수조사 연구원 운영	1,197	1,197	-	-	1,197	1,094	-	103	(1,231)
공적검증위원회 운영	129	129	-	16	146	146	-	-	(130)
독립운동사료수집	194	194	-	28	222	222	-	-	(194)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148	148	-	△48	100	100	-	-	(143)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홍보	342	342	-	53	395	375	-	20	(402)
데이터베이스 구축	326	326	-	△5	321	319	-	2	(326)

* 2024년 괄호로 표기한 공적전수조사 연구원 운영 등 6개 내역사업은 ‘독립유공자 등 자료수집 관리’ 세부사업(3248-346)으로 이관됨

자료: 국가보훈부

30) 세부사업: 독립유공자 등 발굴·포상 및 홍보(3248-345)

(2) 검토의견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증액 요구 사업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증액된 다른 내역사업의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방식이므로, 향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증액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내역사업은 영주귀국자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및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후손 심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후손확인위원회 증회 수당을 반영하여 2022년 예산 5,200만원에서 9,600만원이 증액된 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2023년 국가보훈부 결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편성 예산 1억 4,800만원 중 1억원(67.5%)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됨.

< 2023년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내역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 집행 내역	예산액	집행액
1	후손확인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비품 및 유전자분석 시료 구입 등	53	19
2	미전수 훈장 전시회, 기념품 구입, 후손찾기 안내서 제작·배포 등	81	65
3	국외 후손찾기 현지 출장	14	16
계		148	10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같은 세부사업 내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4,5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사용하였고, 여비 지급기준 인상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300만원) 충당을 위하여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등 후손찾기 강화' 내역사업 증액예산 총액(9,600만원)의 50%에 가까운 4,500만원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내역사업('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홍보') 집행을 위하여 활용하였는바, 이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하는 예산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31)]

□ 국가보훈부는 2023년 동 세부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외 영주귀국 후손 확인뿐만 아니라 국내 후손 찾기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후손 여부를 확인하는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내 후손 찾기 사업 홍보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음.

○ 그러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후손 찾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로 미전수 훈장 전시와 관련한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횟수 및 심사인원의 경우 2022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여 예산 증액 편성을 통해 후손확인위

31)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각 비목별로 규정하는 것은 비목에 따른 예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비목별 지침에 맞추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예산안 및 결산 심사의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음.

원회 역할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후손 찾기 사업 홍보 관련 집행 내역 >

연번	세부 집행 내역	집행액 (천원)
1	전시용 훈장 구입	4,559
2	후손찾기 안내서 제작	11,063
3	전시 영상 콘텐츠 제작	9,500
4	미전수 훈장 전시 관련 용역	31,491
5	훈장 전수 및 국적취득 후손 기념품 구입	9,172
계		65,785

자료: 국가보훈부

< 연도별 후손확인위원회 심사횟수 및 심사인원 >

(단위: 건, 명)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심사횟수	1	1	2	9	7
심사인원	29	35	29	183	85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가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했던 금액조차 1,0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예산 추계 또한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관련 예산 요구 내역 >

구분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대비
제작	25천부×3,150원	77백만원	+10백만원
배송	25천부×800원	20백만원	
계		97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달력 제작 예산이 연례적으로 부족하여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달력 제작 관련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았고, 2023년 관련 예산이 2022년 대비 1,000만원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달력 제작을 위한 예산이 연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가보훈부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32)]

< 최근 5년 달력 제작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부)

구분	예산액	집행액	달력 제작부수	비고
2019년	87	73	32,000	
2020년	87	75	34,000	
2021년	87	77	30,000	
2022년	87	66	24,000	
2023년	77	90	29,000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3년 결산 설명자료에서 미전수 훈장전시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 3,2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부족분이 아니라 당초 전시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잘못 편성한 것으로 확인이 됨.[33)]

32) 2023년의 경우도 2022년 대비 발간부수를 늘리지 않았다면 편성 예산액(77백만원)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임.
(동일 단가 3,109원 * 24,000부 = 74.6백만원)

33)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당초 지자체와 행사물품 구입 등을 통해 훈장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일반수용비로 편

< 미전수 훈장전시회 개최 관련 예산 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12.15.)	독립유공자등 발굴포상및홍보 (3248-345)	210-01	32	독립유공자등 발굴포상및홍보 (3248-345)	210-14	미전수 훈장전시회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12.15.)	독립유공자발굴 포상및홍보 (3248-345)	210-14	1	독립유공자발굴 포상및홍보 (3248-345)	210-01	훈장전시회 훈장 복제본 구입 등 일반수용비 소요 발생

자료: 2023년도 국가보훈부 결산 설명자료 재구성

□ 국가보훈부는 편성 목적과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액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예산 부족분을 위하여 활용되거나 비목이 잘못 설정되는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방식은 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비목별로 구분되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해명으로 보임.

11) 국립영천호국원 등 확충사업: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지연에 따른 적기 안장 문제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호국원’은 전몰군경·순직군경,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대상으로 하고 있음. 현재 6개[34] 국립호국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35] 2023년도 예산현액은 804억 3,900만원으로 이중 614억 6,200만원이 집행되고 153억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6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립호국원 사업 결산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국립영천호국원	8,948	9,898	125	18,971	11,393	5,053	2,524	10,402
국립임실호국원	10,013	6,798	-	16,674	13,915	2,494	265	11,560
국립이천호국원	15,817	11,540	84	27,441	20,623	6,169	649	13,541
국립산청호국원	2,799	-	61	2,840	2,766	1	73	9,334
국립괴산호국원	9,732	1,583	77	11,392	9,723	1,590	80	7,604
국립제주호국원	3,332	-	△211	3,121	3,042	-	79	3,810
계	50,641	29,819	136	80,439	61,462	15,307	3,670	56,251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34)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 산청호국원, 괴산호국원, 제주호국원

35) 세부사업: 3250-358, 3250-359, 3250-360, 3250-361, 3250-363, 3250-367

가)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지연에 따른 적기 안장 문제

영천·임실·이천·괴산 호국원 등 4개 확충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바, 보훈대상자들이 적기에 안장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안장하여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를 조성·관리하고 있는바, 부족한 안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립영천호국원 등 5개의 국립호국원을 확충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자 및 잔여 기수를 살펴보면 2024년 5월 말 기준 전체 안장대상 생존자 170,678명 중 90세 이상 안장대상자는 26,956명이고 잔여 기수는 4,836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90세 이상 고령의 생존 안장대상자의 수가 잔여 기수를 22,120명 초과하고 있어 안장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봉안시설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생존자 현황 >

(단위: 명, 2024년 5월말 기준)

구분	계	80세 미만	80~89세	90세 이상
안장 대상 생존자	170,678	115,870	27,852	26,956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호국원 만장예상 시기 및 완공 변경 현황 >

(단위: 기, 2024.5.말 기준)

구분	봉안시설	현재 인장능력	확충 안장규모	잔여 기수	만장 예상시기	당초 사업기간	사업기간 변경
영천호국원	봉안당	53,673	25,000	259	2024년	2021～2023	2021～2025
임실호국원	봉안당	36,912	20,000	2,113	2024년	2021~2024	2021 ~ 2025
이천호국원	봉안당	50,000	50,000	-	만장	2018~2023	2018 ~ 2025
괴산호국원	봉안담등	23,000	23,000	2,464	2024년	2021.5.~2024.5.	2021.5.~.2024.6.
산청호국원	봉안담	10,000	11,000	-	2024년	2023.3.~2024.10.	2023.3.~2024.10.
계		**173,585**	**129,000**	**4,836**	**-**		**-**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2023년도에 추진 중인 영천·임실·이천·괴산 호국원 등 4개 확충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공사가 지연되었는바, 지연 사유를 보면 조달청 설계심의 및 총사업비 확정 기간 소요에 따른 계약 지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시공사 및 관리업체 선정 지연 및 자재 수급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영천 호국원 등 4개 국립호국원 공사 지연 사유 >

구 분	공사 지연 사유	사업 공정률 (`24.6. 기준)
국립영천 호국원	조달청 설계심의 및 총사업비 확정 기간 소요에 따른 계약 지연 등	40.4%
국립임실 호국원	기관협의 지연 및 입찰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 지연 등	70.8%
국립이천 호국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기간 소요(7개월)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 및 기재부 “총사업비 적정성 재검토(‘23.4.~‘24.1.)”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	87.3%
국립괴산 호국원	시공사 및 관리업체 선정 지연 및 자재 수급 지연 등	1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관협의 및 지역 주민 의견 조율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절차를 적기에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모든 호국원의 확충 공사를 2025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만장 예상시기가 국립이천호국원은 이미 만장이 되었고 영천·임실·괴산의 경우도 2024년에 만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천·임실·이천호국원의 완공시기를 보면 2025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사망한 보훈대상자들이 적기에 안장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국가보훈부는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예산의 연례적 이월 및 불용 문제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지역 주민 의사 조율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최근 3년간 국립영천호국원 등 4개 호국원의 이월 및 불용 현황을 보면 이월은 2021년 113억 4,200만원, 2022년 298억 1,900만원, 2023년 153억 6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은 2021년 5억 2,400만원, 2022년 36억 3,200만원, 2023년 35억 1,800만원 불용되었는바, 매년 과다한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주요 국립호국원 확충사업 예산 이월 및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이월	불용	이월	불용	이월	불용
국립영천호국원	659	138	9,898	1,148	5,053	2,524
국립임실호국원	419	141	6,798	546	2,494	265
국립이천호국원	10,264	46	11,540	569	6,169	649
국립괴산호국원	-	199	1,583	1,369	1,590	80
계	**11,342**	**524**	**29,819**	**3,632**	**15,306**	**3,518**

자료: 국가보훈부

○ 이월 및 불용의 주된 이유는 기관협의 지연, 우수 건축물 신축과 창의성 및 예술성 등을 고려한 보다 나은 설계를 위해 설계용역 방식을 일반경쟁에서 설계공모 방식으로 변경 등 입찰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지연, 주민여론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해 주민 반대에 따른 착공 지연 등에 기인한 것임.

< 이월 및 불용 과다 발생 사유 >

구분	이월 및 불용 발생 구체적 사유
국립영천호국원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외기관 협의 지연,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와 재정당국 총사업비 협의과정으로 인해 공사 계약 체결 순연
국립임실호국원	제3충령당 건립사업 계약 기관협의 지연 및 입찰방법 변경(일반경쟁→제안공모)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이월액 발생
국립이천호국원	기관 협의 지연 및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설계단계 다소 지연되었으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기간 소요(7개월)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으로 이월액 발생
국립괴산호국원	시공사 선정 및 건설사업 관리단 지연, 묘역공사 시 암발생 및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초기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액 발생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기관과의 협의 지연, 입찰방법 변경에 따른 지연, 지역주민 여론 조율 등은 사전에 국가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더라면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의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 지연으로 과다한 예산이 연례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된 것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12)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제복의 영웅사업 적극적 홍보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은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36] 2023년도 예산현액은 131억 5,900만원으로 이중 119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12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13,764	-	38	△643	13,159	11,910	-	1,249	-
사업추진단 운영	1,252	-	38	-	1,290	1,139	-	151	-
정전 70주년 계기사업	7,257	-	-	△643	6,614	6,299	-	315	-
제복의 영웅들	5,255	-	-	-	5,255	4,472	-	783	-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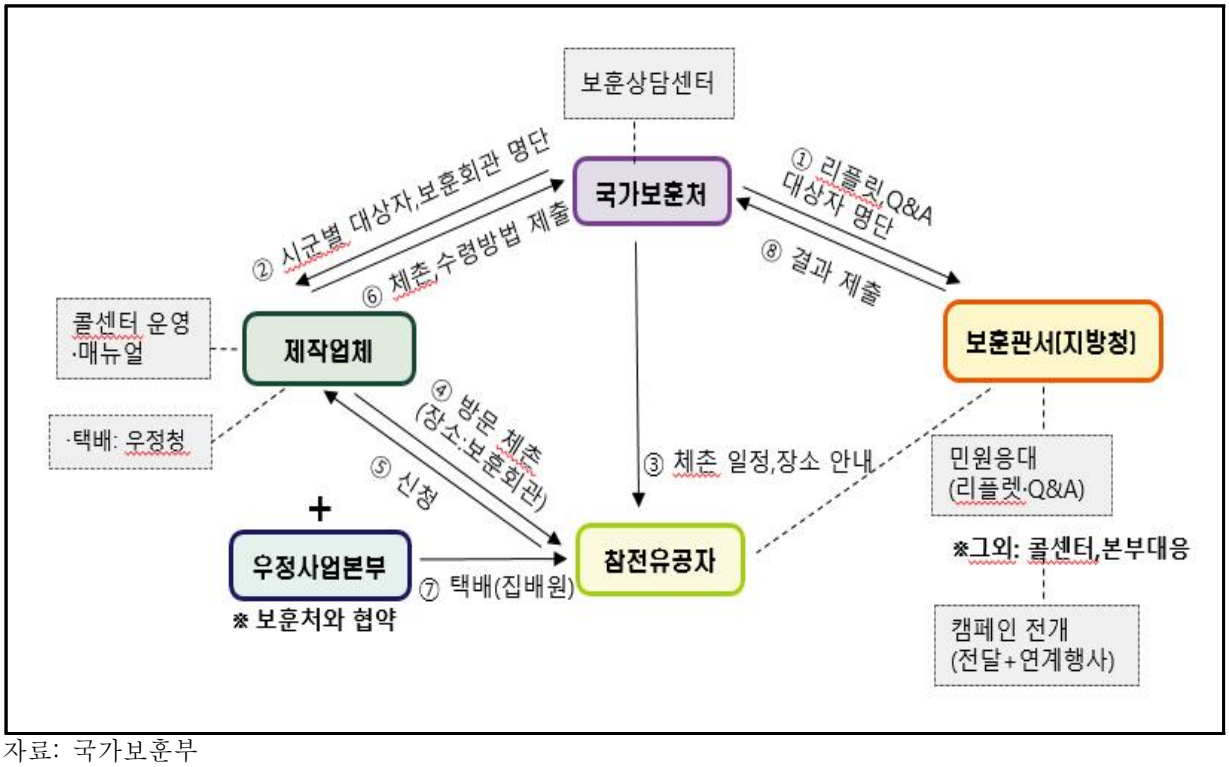
제복의 영웅들 사업의 신청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보훈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6) 세부사업: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사업(4161-417)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복의 영웅들사업’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의복형 기념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 예산현액은 52억 5,500만원으로 이중 44억 7,2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제복 지급대상은 2023년 1월1일 기준 살아계신 모든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자켓 및 바지, 넥타이 등의 품목을 우정사업본부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제복의 영웅들사업 추진체계 >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도 ‘제복의 영웅들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제복 상하의 및 넥타이 단가 산정은 국군장병 피복단가 12만원을 적용하였고, 지급

대상인원은 '22년 6월 기준 6·25참전유공자 인원 5만 8,626명 중 최근 3년간 사망률(△25.3%)을 적용하여 4만 3,794명을 기준으로 예산은 5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제복의 영웅들사업 세부산출내역 >

구분	세부산출내역	세부집행내역
예산안	52억 5,500만원	44억 7,200만원
1인당 단가 (품목)	12만원 (상하의 및 넥타이)	118,800원 (상하의 및 넥타이)
대상인원	43,794명	36,176명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제복지급 대상인원 4만 3,794명 중 신청인원은 3만 6,176명(4만 3,794명→ 3만 6,176명, 82.6%)으로 82.6%에 불과한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 대상자의 특성상 초고령(평균연령 92세)에 따른 사망 및 입원,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1차 신청기간에는 2만 2,290명, 2차 신청기간은 6,192명, 3차 신청기간은 5,314명, 4차 신청기간은 1,540명 등으로 차수가 거듭될수록 신청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바, 이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이 주요원인일 수도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시에 이미 최근 3년간 사망

률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부재로 인한 연락두절, 요양원입소, 병원 장기 입원,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 제복의 영웅사업 사업추진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신청기간	신청인원	수령인원	집행액
1차	'23.4.10~4.29.	22,290	22,290	2,626
2차	'23.5.1~7.5.	6,192	6,192	768
3차	'23.7.6~10.31.	5,314	5,314	741
4차	'23.11.1.~12.20.	1,540	1,540	184
기타 (해외거주 등)	'23.8.10~12.31.	840	840	153
합 계		36,176	36,176	4,472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60주년 계기) 사업'[37]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 월남참전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관서, 유관단체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미신청자에 대한 신청 안내를 독려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음.

37) 월남전참전 60주년 기념유공자에 대한 예우 표시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제복(상하의 및 넥타이, 모자) 증정

Ⅱ. 기금

1. 보훈기금

1)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2160-430) :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분할 수의 계약 부적정

(1) 사업 및 계획안 개요

□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는 호국보훈의 달, 명절, 연말 등의 시기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문하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대상을 시상하는 사업으로,[38] 2023년도 계획현액 13억 7,300만원 중 13억 6,400만원(99.3%)이 집행되고, 9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1,320	1,373	-	-	1,373	1,364	-	9	1,320

자료: 국가보훈부

38) 세부사업: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2160-430)

(2) 검토의견

수의계약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나누어 위문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쟁입찰을 통해 위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위문’ 내역사업은 호국보훈의 달, 추석, 연말 등의 시기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통령, 장관 위문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동 내역사업에는 9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국가보훈부는 동 내역사업의 위문품을 일괄 구매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의 위문품 구매 계약을 살펴보면, 위문품 구매를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였음.

□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서 일괄하여 구매하지 않고, 소속기관별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국가보훈부는 해당 구매건의 수의계약 사유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구매계약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해당 장관 위문품 계약은 총 금액이 각각 4,592만원, 3억 8,396만원이므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에 해당하지 않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수의계약을 위하여 소속

기관별로 나누어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 구매 계약 내역 >

건 명	위문품 또는 사용내역	계약 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 구매 (보훈복지시설)	정관장 홍삼 진본	수의	상훈유통	45,92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39)] *8개 소속기관별 계약 진행
호국보훈의 달 장관 위문품 구매 (생계곤란 및 1급 중상이자 등)	우리고향 장맛3종세트	수의	뚝배기식품	383,96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7개 소속기관별 계약 진행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품목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위문품이 선정된 후 장관명의 위문품이 결정되고 있는데, 경쟁 입찰을 추진할 경우 호국보훈의 달 기간 내에 위문품 납품이 어려워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임.

□ 결국, 국가보훈부는 납품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계약 상대자를 반드시 분리해야 할 사유 없이 동일 품목을 나누어 계약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임.

---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소액수의견적)[40]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추석 장관 위문품 및 연말 장관 위문품 두 건의 계약 건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이 각각 9,322만원, 7,200만원으로,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소액수의견적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추석 및 연말 장관 위문품 구매 계약 내역 >

건 명	위문품 또는 사용내역	계약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추석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 (보훈병원 및 보훈복지시설)	곱창 생 돌김세트	수의	세종B&P	93,223	여성기업과 체결[41]
연말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 (보훈병원)	양갱선물세트	수의	세종B&P	72,075	〃

자료: 국가보훈부

40)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함. 사실상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음.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국가보훈부는 해당 계약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농수산물 음식물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액수의견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고 답변함.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그러나, 곱창 생 돌김세트, 양갱선물세트 등은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업체는(세종B&P)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기념품 등 도소매 업체라는 점에서 소액수의견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문품의 경우 호국보훈의 달, 추석, 연말 등 매년 그 지급 시기가 동일하므로, 경쟁입찰을 통해 위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42)]

42) 국가보훈부는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위문품은 지역안배 및 사회적 이슈(감염병 및 자연 재해 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므로 일반적 구매절차와 달리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사전 진행이 가능한 장관명의의 위문품 중 추석 위문품에

2)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160-441)

(1) 사업 및 계획안 개요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은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에게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활동지원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43] 2023년도 계획현액 479억 6,600만원 중 406억 2,700만원(84.7%)이 집행되고 73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47,966	47,966	-	-	47,966	40,627	-	7,339	43,047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가) 연간 반복적 구매 물품에 대한 경쟁입찰 필요

> 동일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노인생활용품 구매건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분할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간 구매 수량 전체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한해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조달입찰로 시범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한 후 단계별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임.

43) 세부사업: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160-441)

□ ‘노인생활지원용품’ 내역사업은 보훈대상자에게 노인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노인생활지원용품을 일괄 구매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동 내역사업에는 8억 7,600만원이 편성, 전액 집행되었음.

□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체결한 노인생활지원용품 구매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연간 1억 3,30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서 소액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업체와 매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분할 수의계약 체결 사례 1 >

(단위: 원)

계약건명	계약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사유
1월 노인생활지원용품(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영000	218,500	2023.01.01~2023.01.3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44]
2월 노인생활지원용품(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19,273,080	2023.02.01~2023.02.28	〃
3월 노인생활지원용품(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12,299,700	2023.03.01~2023.03.31	〃
4월 노인생활지원용품(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18,965,900	2023.04.01~2023.04.30.	〃
5월 노인생활지원용품(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15,766,600	2023.05.01~2023.05.31	〃
6월 노인생활지원용품(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10,500,500	2023.06.01~2023.06.30.	〃
7월 노인생활지원용품(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9,806,500	2023.07.01~2023.07.31	〃
8월 노인생활지원용품(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8,454,500	2023.08.01~2023.08.30	〃

계약건명	계약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사유
9월 노인생활지원용품(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8,534,800	2023.09.01~2023.09.31	〃
10월 노인생활지원용품(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8,412,900	2023.10.01~2023.10.30	〃
11월 노인생활지원용품(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7,584,900	2023.11.01~2023.11.31	〃
12월 노인생활지원용품(허리보호대 외) 구입	수의계약	〃	14,071,300	2023.12.01~2023.12.31	〃
합계			**133,889,18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부는 동일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해당 물품 구매건을 분할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국가보훈부는 연간 2억 90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서 여성기업과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업체와 매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역시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분할 수의계약 체결 사례 2 >

(단위: 원)

계약명	계약방식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 사유
3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찜질기 외) 구입	수의계약	시00000	12,106,000	2023.03.01~ 2023.03.31	여성기업과 체결[45]
4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찜질기 외) 구입	〃	〃	47,704,000	2023.04.01~ 2023.04.30.	〃
5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찜질기 외) 구입	〃	〃	34,173,000	2023.05.01~ 2023.05.31	〃
6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찜질기 외) 구입	〃	〃	22,262,000	2023.06.01~ 2023.06.30.	〃
7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찜질기 외) 구입	〃	〃	15,722,000	2023.07.01~ 2023.07.31	〃
8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찜질기 외) 구입	〃	〃	14,305,000	2023.08.01~ 2023.08.30	〃
9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찜질기 외) 구입	〃	〃	13,469,000	2023.09.01~ 2023.09.31	〃
10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찜질기 외) 구입	〃	〃	13,290,000	2023.10.01~ 2023.10.30	〃
11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찜질기 외) 구입	〃	〃	14,891,000	2023.11.01~ 2023.11.31	〃
12월 노인생활지원용품 (전기찜질기 외) 구입	〃	〃	21,897,000	2023.12.01~ 2023.12.31	〃
합계			**209,819,000**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노인생활지원용품 구입 계약은 2021년까지 5개 지방보훈청에서 각각 구입하였으나,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역간

4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품질격차가 발생하여 2022년에 본부 일괄계약방식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이를 반려함에 따라 해당 물품 구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조달청의 반려사유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46]을 통해 구입하거나 자체입찰을 하라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반려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정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입찰을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47]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쟁이 가능한 한 건의 입찰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집행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연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간 구매 수량 전체[48]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분할 수의계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4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이용(수요)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수요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48) 물량 예측 곤란 시에는 단가계약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는 과도한 국외출장 경비 집행 부적정

‘복지사업운영’ 사업에 편성된 국외출장을 수행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였는데, 이는「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되는 집행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은 보훈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활동지원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가복지지원’ 내역사업과 ‘노인생활지원용품’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등 12개의 비목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에는 국외업무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국가보훈부는 ‘복지사업운영’[49] 사업에 편성된 국외출장인 ‘선진 요양시설 견학 및 재택개호(지원)서비스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50] 을 2023년 12월 수행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추가로 사용하였음.

○ 국가보훈부는 출장자 4인의 일본 출장 시, ‘복지사업운영’ 사업의

---

49) 세부사업 : 복지사업운영(7179-200)

50) ▪ 출장목적
- 일본의 다양한 요양시설 및 재택개호(지원)서비스 기관 등을 방문하여 고령 대상자 관리 체계, 특화서비스 제공 실태 등 현장 답사 및 자료 수집
- 우수 요양시설의 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를 벤치마킹하여 보훈요양원 건립 및 노후화된 보훈복지시설 리모델링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출장일정 : 2023.12.19.(화) ~ 12.22.(금)(3박 4일)
▪ 출장지 : 일본 도쿄
▪ 출장자 : 4인

국외여비 710만원을 지급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차량 임차, 현지가이드 및 통역비, 방문비를 별도로 집행함.

< 2023년도 일본 국외출장 경비 집행내역 >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비목	내용	금액	비고
복지사업운영 (7179-200)	국외여비 (220-02)	항공운임	2,586,620	
		여행자보험료	75,960	
		체재비	4,485,810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2160-441)	일반수용비 (210-01)	차량임차료	900,000	3일분
		현지가이드비	1,200,000	3일분
		방문비	1,500,000	시설견학 및 상담비 (방문기관 당 50만원)
총계			**10,748,390**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 자료 재구성

□ 이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된 사업비를 당초 편성되지 않은 국외출장에 집행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51]에 위배됨.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복지사업운영’ 사업에 편성된 국외여비 가 부족하여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5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재가복지지원’ 사업에서 행정적 목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일반수용비(210-01)’ 비목에서 집행하게 되었으나, 예산 회계 운영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임.

□ 한편, 상기 ‘선진 요양시설 견학 및 재택개호(지원)서비스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에서는 차량임차 비용을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국외여비는 필요 시 열차비, 승용차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출장의 경우 국외여비가 아닌 일반수용비에서 차량 임차료를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더불어, 차량 임차료를 별도 집행한다 하더라도 ‘일반수용비’(210-01)가 아닌 ‘임차료’(210-07)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집행이라 할 수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의 일반수용비·임차료 관련 규정 >

구 분	내 용
일반수용비 (210-01)	**210-01 일반수용비** (1.~6. 생략)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구 분	내 용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화물 운송료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에, 기업특별회계에서 물자처리관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운영비(210-16)목에 계상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
임차료 (210-07)	**210-07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자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도심지역이 아닌 시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차량 임차가 필요했으며, 차량의 단순 임차가 아닌 출장 일정 전반 과업(차량, 운전, 통역, 가이드 등)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로 보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는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차량 임차는 업무대행이 아닌 단순 시설에 대한 임차이므로 업무대행 수수료로 볼 수 없으며, 동 출장은 국외 현지정부·재외공관 인사 접견, 기념행사 참석 및 대외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출장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시설 견학으로, 운전원을 포함한 차량 임차와 가이드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출장이라 보기 어려움.

□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국외출장 시 국외업무여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일반사업비를 활용하여 과도한 출장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의 비목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3) 보훈요양원 건립(2161-443) :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1) 사업 및 계획안 개요

□ ‘보훈요양원 건립’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요양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복권기금 재원을 전입해 보훈대상자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52] 2023년도 계획현액 68억 3,9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보훈요양원 건립	6,839	6,839	-	-	6,839	6,839	-	-	3,365
수원보훈 요양원 증축	2,339	2,339	-	-	2,339	2,339	-	-	3,018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4,500	4,500	-	-	4,500	4,500	-	-	347

자료: 국가보훈부

52) 세부사업: 보훈요양원 건립(2161-443)

(2) 검토의견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국가보훈부는 집행 실적과 관계없이 편성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는데,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의 계획액 편성을 통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중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내역사업은 수도권(수원, 남양주)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수원요양원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내역사업은 현재 보훈요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충청북도 지역에 보훈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런데, 동 사업의 2023년 결산내역에 따르면,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예산 23억 3,900만원과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계획액 45억원이 전액 집행(보조금 교부)되었지만, 2023년 교부액에 대한 수원보훈요양원 사업의 보조금 실집행액은 5억 8,300만원(4%)에 그쳤으며, 특히 충북권 보훈요양원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액 전액이 연내 실집행되지 못했음.

< 2023년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 계획액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2,339	2,339	583	4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4,500	4,500	-	0

주) 실집행액은 2023년 교부액에 대한 실집행 금액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실집행 실적 부진에 대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 수립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각각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수원보훈요양원 증축사업의 실집행 부진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 확보 및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재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전체 일정이 지연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의 경우에는 건립 부지를 충청북도 내 지자체 중 영동군으로 결정하였으나, 영동군에서 추천한 후보지 답사 결과 적정 부지 선정에 차질이 있었으며, 최종 선정된 부지가 민간 소유로 계약 과정에서 부지 가격에 대한 협상으로 인해 실집행이 불가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는 당초 국가보훈부의 사업계획이 미흡하게 수립되었으며,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의 경우 2022년 1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건립 및 운영방침 조정 요청이 있었고, 이에 사업규모 재검토 및 사업비 증액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3년 계획액을 설계비 3억 2,400백만원 외에 공사비 20억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까지 포함하여 편성하였음.[53]

○ 충북보훈요양원 건립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 및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건립 보상비 23억 7,200만원, 설계비 20억 8,400만원, 시설부대비 4,400만원을 반영하여 계획액을 편성하였으며, 결국 부지선정 과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획액 전액이 집행되지 못했음.

□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54]은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53) 설계공모 보상비 7,800만원, 설계용역 선금 4억 9,000만원 등 설계관련 비용 총 5억 8,300만원만 실집행됨.

5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에서는 연내에 설계(계약기간 : '23.8.30.~'24.7.24.)가 완료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20억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충북요양원 사업의 경우에는 부지선정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3년 12월 22일에 건립 보상비, 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반영된 보조금 전액을 한번에 교부함으로써 보조금 전액이 이월되었는바,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위배되는 보조금 교부임.

< 2023년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 예산 교부 및 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획액	①집행(교부)액	②전년도 이월액	③=①+② 예산 현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수원보훈요양원	2022	495	495	-	495	5	490
	2023	2,339	2,339	490	2,829	583	2,246
충북요양원	2023	4,500	4,500	-	4,500	-	4,500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관계기관 간 협의, 설계 및 공사 등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연내 실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것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조세심판원[55]: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구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으로,[56]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2023회계연도 조세심판원 관련 세부사업은 4개로, 예산현액 163억 800만원 중 155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조세심판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11,750	11,750		△48	11,702	11,120	-	582	11,610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665	665		56 △15	706	689	-	18	715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3,595	3,595	15	126 △119	3,617	3,477	-	140	1,342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283	283		-	283	278	-	5	433
합계	16,293	16,293	15	182 △182	16,308	15,564	-	745	1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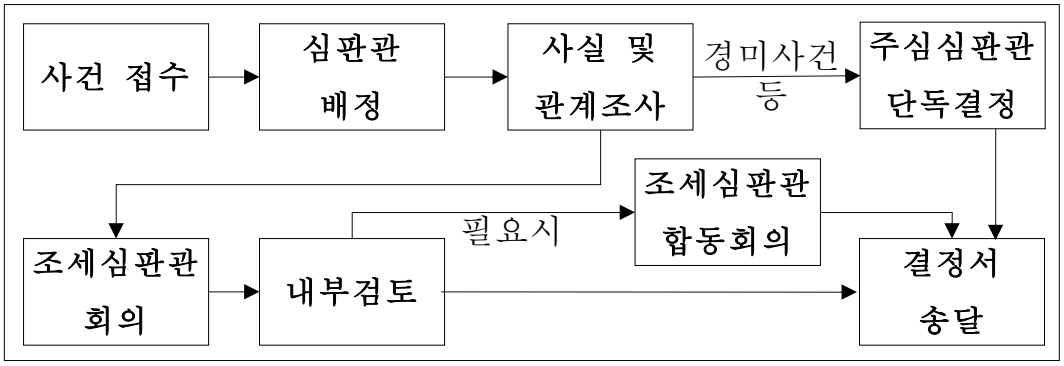
(자료: 조세심판원)

55)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7001-10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7011-20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7036-307)

56)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하 생략)

□ 조세심판원은 ① 납세자가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② 이를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으로 구성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되[57] ③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등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결정함.[58]

<조세심판청구사건의 접수, 심리 및 결정절차>



57)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5천만원(지방세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단서).

58)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②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2.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검토의견

(1)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2023년도 조세심판의 평균 사건처리일수는 172일로, 법정처리기한 90일을 크게 넘어서고 있어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 권리구제 지연을 야기하므로, 조세심판원은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9)]

□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최근 5년간의 평균 사건처리일수를 살펴보면, 2021년도 196일, 2022년도 234일, 2023년도 172일 등으로 법정처리기한 90일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처리 일수>

(단위: 일, %)

처리 연도	60일 이내		61~90일		91~180일		180일 초과		총 건수	평균 처리일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9년	498	5.8	2,182	25.2	3,516	40.6	2,457	28.4	8,653	160
2020년	76	0.6	972	7.9	7,452	60.7	3,782	30.8	12,282	178
2021년	279	2.3	3,870	31.9	2,445	20.1	5,553	45.7	12,147	196
2022년	62	0.5	594	5.1	5,156	44.6	5,753	49.7	11,565	234
2023년	997	6.0	7,247	44.0	2,857	17.3	5,384	32.7	16,485	172

(자료: 조세심판원 제출자료 재구성)

59)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조세심판원은 심판 청구 사건이 최근 급증하였고,[60] 사건의 난이도 또한 전문·복잡화된 반면, 조직·인력은 적절히 강화되지 않아 신속한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임. 또한, 사법절차를 준용하는 조세심판의 특성상 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법정처리기한 90일 중 상당기간[61]이 경과하여, 법정기한에 맞추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함.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62]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63]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다만,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후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64]

---

60) 사건 접수 건수: 2019년 8,658건 → 2021년 13,025건 → 2023년 16,781건

61) 심판청구 및 배정 7일 + 처분청 답변서 제출 10일 + 청구인 항변서 제출 14일 + (답변•항변 추가시마다 10일) + 회의통지 및 개최 14일 + 결정서 작성 및 조정검토 등 30일 + 우편 송달 소요일 = 80 ~ 90일

62)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62조제1항),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64)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조세심판의 경우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사건처리 지연은 국민의 권리구제 지연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을 마련하여 청구사건의 처리 일수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세심판 정보화[65]: 전자심판제도 운영 부진

조세심판원은 부진한 전자심판 운영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조세심판원은 2019년 7월부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를 통해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심판제도를 시행하였으며,[66]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2억 7,800만원을 집행함.

<조세심판 정보화(7036-307)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현액	283	283	283	433
집행액	277	277	278	-

(자료: 조세심판원 제출 자료 재구성)

□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전자심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총 접수건수 대비 전자심판 접수 비율이 22.9%이며, 다른 연도에도 비슷한 실적을 나타냄.

---

65) 세부사업: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7036-307)

66)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자심판 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수)

연도	총 접수건수	전자심판 접수건수	전자심판 비율	증감
2020	12,795	3,037	23.7%	-
2021	13,025	3,214	24.7%	1%p
2022	10,373	3,235	31.2%	6.5%p
2023	16,781	3,842	22.9%	△8.3%p

(자료: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 내용 재구성)

□ 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67]의 온라인 청구 비율을 확인해 보면, 2023년도에 68.7%에 이르고,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74개기관) 이용률 현황 >

(단위: 건수)

연도	총 접수건수	온라인 청구	온라인 비율	증감
2020년	76,332	30,296	39.7%	2.6%p
2021년	71,619	34,251	47.8%	8.1%p
2022년	77,259	46,077	59.6%	11.8%p
2023년	102,562	70,471	68.7%	9.1%p

(자료: 「2022 국민권익백서」 p. 300, ,「2023 국민권익백서」 p.285 내용 재구성)

□ 전자심판제도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전자심

67) 국민이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사건 진행상황 및 재결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2년 기준 총 74개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판 접수비율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조세심판원 기본경비[68]: 본사업 시행 가능성이 낮은 ISP 수립 사업 실시로 인한 예산 낭비

조세심판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세전자심판시스템 개발사업의 단독 실시 가능성이 낮음에도 2023년에 별도로 '조세전자심판시스템 ISP 수립'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 본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ISP 수립 집행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조세심판원은 2023년도에 일반연구비(260-01) 1억 4,450만원을 들여 조세전자심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실시하였음.

○ 이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청사이전[69] 예산과 함께 반영되었음.

□ 조세심판원은 2023년도에 수립한 ISP(정보화전략계획)를 반영해 2024년도에 본사업인 조세전자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여야 했지만, 관련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시스템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세전자심판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반영

68)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69) 조세심판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에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국회 심의단계에서 이전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23년 6월에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 4동으로 이전함.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함.

□ 그런데, 이번 정부는 2022년 7월에 이미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70]을 통합하는 '원스톱 행정심판'을 국정과제[71]로 채택했음.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8월에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 중앙노동위 등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행정 비효율 및 국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기관의 온라인시스템 통합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음.[72]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에 3억 5,800만원을 들여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구현 BPR[73]/ISP 수립' 사업을 집행하였음.[74]

□ 행정심판시스템의 통합은 이번 정부 초부터 논의되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현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조세전자심판시스템의 단독 개발 가능성이 낮음에도 조세심판원이 무리하게 ISP 수립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음.

□ 향후, 조세심판원은 다른 기관과의 사업 중복 가능성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와 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70) 특별행정심판이란 특정분야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따로 정한 특례 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특별행정심판으로 특허심판, 조세심판, 해양안전심판 등이 있음.

71)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년 7월, p.37

72)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8.23.

73)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74) 2023년 결산,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Ⅱ-1, p.94

(4)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5]: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

조세심판원은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집행 시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연구결과물 평가 및 공개 등을 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정책 개발 및 현안에 관한 연구는 정책연구비(260-02)로 집행하여 관련 법령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260-01)는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에 활용할 수 있는 경비인 반면, 정책연구비(260-02)는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학술연구 포함) 및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는 경비임.

○ 또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란 정책개발이나 정책현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조사·연구로서, 정책대안을 결과물로 제시하는 조사·연구는 물론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도 포함됨.[76]

□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 과제를 살펴보면, 3건 모두 조세심판원의 정책 개발 및 현안에 관한 사항임에도 정책연구비(260-02)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였음.

---

75)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76)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24.1. p.2

< 일반연구비(260-01)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과제명	집행액	계약기간
2021	포스트코로나 조세심판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20,000	2021.12.8. - 2021.12.31.
2022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한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연구	45,455	2022.12.1. - 2023.3.31.
2023	심판결정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	20,000	2023.10.6. - 2023.12.22.

(자료: 조세심판원 제출 자료 재구성)

□ 일반연구비(260-01) 집행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반면, 정책연구비(260-02)의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77]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정책연구결과물 및 그 평가결과 등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절차를 둔 것은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체결한 계약 내용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등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취지일 것임.

7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 조세심판원은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함으로써 정책연구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연구결과물의 평가 및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조세심판원은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만 할 뿐 직접 정책을 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연구는 정책연구가 아니라 일반연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정책 개발이나 정책 현안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조사·연구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연구용역은 정책 담당부처 해당 여부가 아니라 그 연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조세심판원은 정책 개발 및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과 평가결과 등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2. 대테러센터 운영[78]: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의 방향성 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억 8,600만원 중 8억 3,200만원(93.9%)이 집행되고 5,400만원(6.1%)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테러센터 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본예산	추경							
대테러센터 운영	886	886	-	4 △4	886	832	-	54	674

(자료: 국무조정실)

□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79]에

78) 세부사업: 대테러센터 운영(7032-303)

7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해 설치됨.

2) 검토의견: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의 방향성 검토 필요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사업은 테러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23년도 사업 계획상 대국민 홍보 측면의 고려가 부족하므로, 국무조정실은 사업 방향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대테러센터는 테러 현장대응능력 강화와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매년 1회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일반용역비(210-14) 1억 6,500만원을 들여 훈련을 실시하였음.

<국가대테러종합훈련 관련 일반용역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용역비(210-14)	155	154	165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2023년도 국가대테러종합훈련에는 대테러센터·국가정보원·군(軍)·경찰·소방·해경 등 12개 기관에서 300여명의 인력이 참여하였고, 국가테러대책위원, 초청인사[80] 등 250여명이 훈련 현장을 참관하였음.

□ 2023년도 훈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테러 장비전시, 드론 시범, 화학테러 대응, 항공기 피랍 진압작전, 공항시설 테러범 진압작전 등으로 구성되며, 훈련의 총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임.

<2023년도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세부내용>

구 분	훈련 내용
대테러 장비전시	o 테러유형별 장비 및 차량
대테러 종합훈련 (29-34분)	o 사회자 소개 및 훈련진행 순서 보고
	o 훈련 준비영상 시청
	o 드론시범: 드론기술⇨드론위력⇨불법드론 탐지·차단 (7-10분)
	o 화학테러 대응 : 구조·구급, 탐지·제독 (6분)
	o 항공기 피랍 시 특공대 진압작전 : 실제항공기 운용 (8-10분)
	o 공항시설 테러범 난입 시 특공대 진압작전 (8분)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동 훈련의 용역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 모니터 및 스피커 등 영상·음향장비 설치, 테러 관련 동영상 제작, 전문 아나운서 섭외, 항공기 등 훈련기자재 임차, 훈련구역 안전 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테러 상황을 참관인 앞에서 시연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나타남.

80) 훈련장소 관할 지자체장·기관장·부대장·주한 외국군무관단·테러대책실무위원 등

<2023년도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용역사업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영상 및 음향장비 등 설치·운영	o 영상장비:: 대형 LED모니터, ENG 카메라, 항공촬영장비, 중계장비 o 음향장비: 고출력 스피커, 마이크 세트, 통제본부용 무전기 지원 o 동영상 제작: 인트로 영상, 테러관련 영상, 훈련 中 상영할 기관별 조치 사전녹화 등 o 영상, 음향장비, 중계장비 등을 훈련현장에서 조정·운영할 전문 인력 포함
훈련 관련 홍보 및 진행	o 홍보 : 훈련장 주변 대형·소형 현수막, 훈련일정 리플릿, 초청장 등 홍보물 디자인·제작 o 유튜브 홍보 : 훈련영상 풀버전 및 하일라이트 영상 편집 후 탑재, SNS 홍보방안 강구 o 진행(총 3명) : 사회자는 대테러센터 홍보대사(남 1, 여1) 외 전문 아나운서 1명 섭외
모의훈련장 조성 및 참관석 등 제작·설치	o 모의훈련장, 참관석, 운영텐트, 사회자 무대, 장비전시장 제작·설치
훈련기자재 구입·임차	o 항공기, 드론기술 시범용 드론 및 운영인력, 훈련용 드론·차량·마네킹 등
기 타	o 훈련대원 중식제공, 훈련구역 안전확보, 훈련 관련 문서 및 영상제작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그러나 2023년도 훈련 시에 일반 시민의 참여는 없었으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음.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테러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려 했던 당초 훈련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다 보기 어려움.

□ 대테러센터는 일반 시민의 참관은 훈련장소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2019년도 훈련은 부산 벡스코광장, 2022년도 훈련은 일산 킨텍스 광장에서 실시하여 일반 국민도 현장에서 참관할 수 있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훈련 장소가 보안 구역이기 때문에 관계기관 인원만 참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함.

○ 또한, 현장 참관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송·보도 매체 및 대테러센터 유튜브 채널 등의 생중계·녹화 중계를 통해 훈련 전 과정을 국민

들이 온라인 참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전체영상(약 50여분 분량) 시청 주요사례 〉

훈련연도	장소	조회수(회) ('24.6.4 기준)
2019년	부산 BEXCO	KTV 6천, 연합뉴스 3.2만
2020년	인천공항(보안구역)	KTV 5만, 국방TV 5.6만
2021년	경인항	KTV 12만
2022년	일산 킨텍스	KBS 7.1만, SBS 10만
2023년	**인천공항(보안구역)**	**대테러센터 유튜브 5.7만**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러나,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은 많은 훈련 인력과 장비 및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대국민 홍보'라는 당초의 사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테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테러 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동 훈련의 목표로 한다면 더 많은 일반 시민이 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내용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만약 안전 등의 문제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테러 현장대응능력 강화' 목적에 집중하여 범정부적으로 준비해 온 대테러 관계기관들의 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81]: 규제심판제도 예산 집행 실적 부진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 억제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5억 3,100만원 중 13억 1,300만원(85.8%)이 집행되고, 2억 1,800만원(14.2%)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531	-	-	1,531	1,313	-	218	1,759

(자료: 국무조정실)

2) 검토의견

2023회계연도에 신규로 편성된 규제심판제도 운영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규제심판부의 현실적인 회의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불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81) 세부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 규제심판제도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발굴하고, 중립적인 규제심판부가 과제를 심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임.

○ 2022년 8월 제정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국무총리 훈령)은 국무조정실장은 전문성과 활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심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82)]

- 국무조정실은 이에 근거하여 2022년 8월 대학교수, 전문직 종사자(변호사·의사·약사 등),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 100여명을 규제심판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규제심판부는 규제개선과제[83)]에서 선정된 규제심판부 심의과제[84)]

---

82)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성과 활동경력 및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2조(명칭)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명칭은 '규제심판부'로 한다.

83)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2.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규제혁신추진단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3.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관한 규제개선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개선과제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84)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제5조(심의과제의 선정)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의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의 심의과제로 선정한다.
1.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2. 시장진입이나 공정한 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3.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판부의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심의할 수 있음.[85]

<규제심판제도 절차>

과제 접수·발굴	◦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개선과제 접수·발굴 * 규제혁신추진단 요청, 경제협·단체 등 현장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등
⬇	
소관부처 검토	◦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검토,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 중 답변하고, 건의자 등에 회신 * 수용개선과제에 대해 부처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부처 자체적으로 규제개선안 마련·추진
⬇	
규제심판부 심의	◦ 부처가 불수용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으로 회신한 개선과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에 회부 * 국제적 기준 대비 과도·불합리, 경쟁 제한, 이해관계인간 이견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 과제별로 전문성을 갖춘 5인내외 심판부 구성, 피규제자·규제자·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필요시 대국민 온라인토론 실시)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 심의 * 규제개선 권고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확정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 심판부 권고에 대한 부처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통해 재권고
⬇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 규개위 권고에도 불구,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필요 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및 개선방안 확정

(자료: 국무조정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규제

② 규제총괄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분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5)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규제개선과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심의 안건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지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3년도 예산에 일반수용비(210-01목) 2억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구체적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5명의 규제심판위원이 140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였음.

□ 그런데, 2023년도 규제심판부의 회의 개최실적은 예산안 편성기준의 12.1% 수준인 17건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포함하여 일반수용비 총 3,65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7.4%로 나타났음.

<규제심판제도 운영 예산 일반수용비 집행실적>

(단위: 건, 천원)

구분	편성기준		결산	
	회의건수	예산액	회의건수	집행액
규제심판회의	140	210,000	17	21,050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등			19	15,450
합계	140	210,000	36	36,500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향후 현실적인 규제심판부의 회의개최 예상건수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예산의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86]: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등 집행실적 부진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전직공무원, 연구기관, 민간)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여 덩어리 규제[87]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8억 5,000만원 중 49억 6,000만원(84.8%)이 집행되고, 4,500만원이 이월(0.8%)되었으며, 8억 4,400만원(14.4%)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5,630	-	-	5,850	4,960	45	844	5,154
-추진단 운영	4,486	-	23 △23	4,486	3,952	-	534	4,282
-덩어리 규제발굴	402	171	-	573	410	45	117	402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385	-	-	385	196	-	189	312
-추진단 홍보	358	49	-	407	402	-	5	158

(자료: 국무조정실)

86) 세부사업: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87)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

2) 검토의견

(1)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 및 발굴규제 검토·개선·조정 사업 집행 실적 부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덩어리 규제발굴,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중복·복합 규제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덩어리 규제의 집중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2022.8.1.)하였음.[88]

○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된 한시조직(최초 3년 + 연장 2년)으로, 2024년 8월 기준 경제·사회분과 등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공무원 등 90명, 경제단체·연구기관 등 33명)과 지원국(부처 파견 인력 등 20명 내외) 등 총 14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됨.[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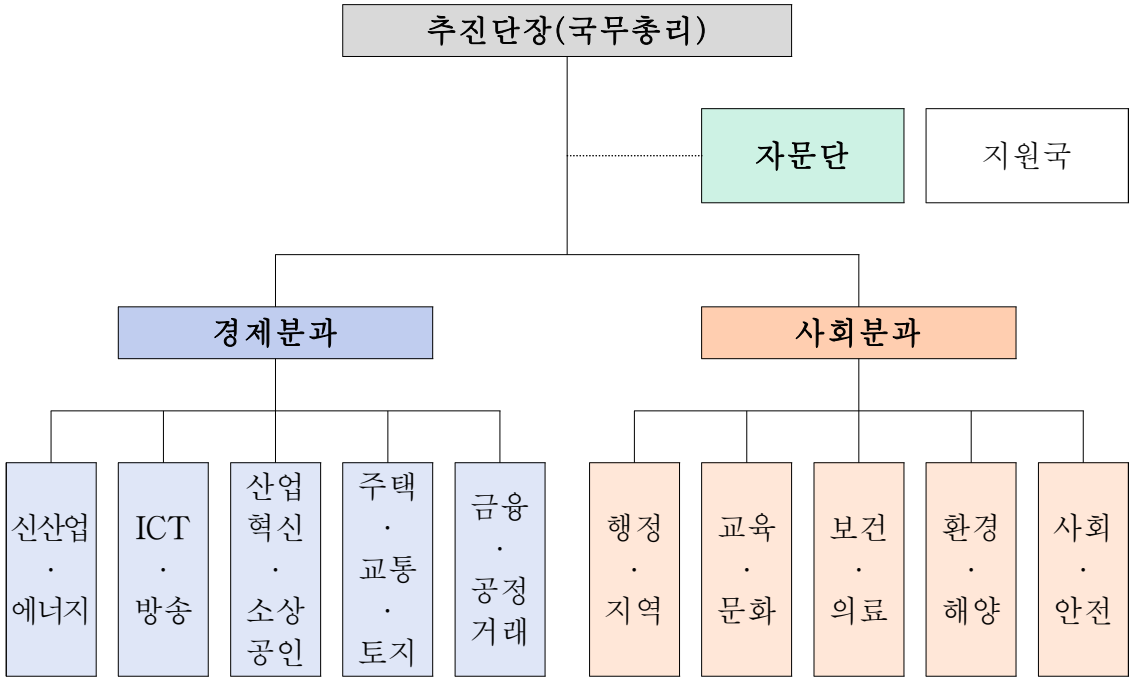
88) 경제·사회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공무원 75명, 경제단체·연구기관 34명)과 지원국(부처 파견 인력 등 20명 내외) 등 총 130여 명으로 구성됨.

89)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발굴·검토·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규제
2.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3.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분야의 규제
4.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

<규제혁신추진단 조직도>



(자료: 국무조정실)

□ 규제혁신추진단의 업무는 ①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덩어리과제 제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덩어리과제 발굴, ② 추진단장(국무총리) 주재 회의 등을 통한 개선안 논의, ③ 개선방안 발표, ④ 필요 시 집행 상황 점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짐.

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원으로 채용된 사람

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

나. 규제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국무총리가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된 사람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다.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

라. 그 밖에 추진단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규제혁신추진단 업무절차>

①덩어리과제 발굴	②개선안 논의	③개선방안 발표	④집행상황 점검 (필요시)
◦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덩어리 과제 제시 ◦ 외부 건의 (현장 간담회 등) ◦ 부처 요청 등	◦ 단장(국무총리) 주재 회의 ◦ 소관부처 협의 ◦ (필요시)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등	◦ 부처 협의 완료시 발표 (관계부처 합동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소관부처 집행 ◦ 추진단 점검·보완

(자료: 국무조정실)

□ 한편,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8월 출범에 따른 신규인력, 운영경비 및 홍보사업 추진 등을 위해 예비비 36억 3,200만원을 배정받아 28억 6,100만원을 집행(78.8%)했으며, 2023년도에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이 사업은 ①추진단 운영, ②덩어리 규제발굴, ③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④추진단 홍보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과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사업의 2023회계연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은 덩어리 규제의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비 2억원, 회의참석 수당·자문료 및 회의자료 제작·배부를 위한 일반 수용비 1억 3,000만원, 전문가간담회를 위한 사업추진비 7,200만원

등 총 4억 2백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고 2억 4,100만원(60.0%)이 집행되었으며,

- ‘발굴 규제 검토·개선’ 사업은 회의참석 수당·자문료 및 회의자료 제작·배부를 위한 일반수용비 2억 2,600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억 3,400만원, 관계기관 회의 목적의 사업추진비 2,500만원 등 총 3억 8,500만원 중 1억 9,600만원(50.9%)이 집행됨.

<2023회계연도 집행실적 부진 내역사업 현황(전년도 이월액 제외)>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덩어리 규제발굴	**402**	**241**	**45**	**117**	**60.0**	**402**
- 일반수용비(210-01)	130	30	-	100	23.1	130
- 사업추진비(240-01)	72	72	-	-	100.0	72
- 정책연구비(260-02)	200	139	45	17	69.5	200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385**	**196**	**-**	**189**	**50.9**	**312**
- 일반수용비(210-01)	226	124	-	102	54.9	190
- 국내여비(220-01)	134	47	-	87	35.1	97
- 사업추진비(240-01)	25	25	-	-	100.0	25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2023년 5월 말까지 코로나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회의 및 현장방문이 축소되어 회의수당 및 여비 미집행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나, 코로나 상황이 해소된 2024년에도 두 내역사업 집행실적은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2024년 상반기 집행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예산액이 실제 소요에 비하여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23~2024회계연도 집행실적 비교(상반기 기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덩어리 규제발굴	**402**	**38**	**9.5**	**402**	**33**	**8.3**
- 일반수용비(210-01)	130	15	11.5	130	13	9.7
- 사업추진비(240-01)	72	23	32.1	72	21	29.0
- 정책연구비(260-02)	200	-	-	200	-	-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385**	**80**	**20.7**	**312**	**71**	**22.6**
- 일반수용비(210-01)	226	50	15.5	190	32	16.8
- 국내여비(220-01)	134	21	33.7	97	31	32.1
- 사업추진비(240-01)	25	8	20.7	25	8	30.1

(자료: 국무조정실)

□ 따라서, 향후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을 통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덩어리 규제발굴 정책연구비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국무조정실은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의 정책연구용역을 지연 발주하여 정책연구비를 연례적으로 이월하고 있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계약 과정에서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은 2023년도에 덩어리 규제발굴 내역사업 예산 2억원으로 총 6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5건의 용역이 완료되어 1억 3,900만원(69.5%)을 집행하고, 완료되지 못한 1건의 용역에 대한 미집행액 4,5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덩어리 규제발굴 정책연구비 이월 현황>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시작	종료		
소방안전분야 화재보험제도의 현실화 방안	2023.04.03	2023.06.30	20,000	-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2023.05.19	2023.08.31	27,273	-
인구감소지역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검토	2023.05.19	2023.08.31	27,000	-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2023.05.25	2023.07.31	23,750	-
법정 인증규제 범위 정립 및 관리체계 연구	2023.06.09	2023.12.15	40,909	-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방안	**2023.10.27**	**2024.04.30**	-	**45,455**
합 계			138,932	45,455

(자료: 국무조정실)

□ 정책연구비 이월 사유는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연내에 미집행되었기 때문임.

○ 국무조정실은 공급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시장 중심의 의사결정이 반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하에 해당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개요>

◦ 계약명: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 계약기간: (당초) 2023년 10월 27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23년 10월 27일 ~ 2024년 4월 30일 (2023년 12월 27일 변경계약)
◦ 계약금액: 4,500만원
◦ 주요 용역내용:
-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업 분야별 제도 현황 및 실태 조사
- 우리나라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 분야별 이해관계자 갈등 원인 및 현황 파악
- 해외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업 제도개선 사례 연구
- 디지털 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례
-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 분야에 경쟁 요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사례 검토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이 사업에 대한 최초의 용역입찰공고를 2023년 9월에 개시하여 10월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음.

- 최초 계약 완수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이었으나, 12월 19일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연장을 통하여 연구범위 확장 필요성 및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청취 등을 이유로 용역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승인하여 2023년 12월 27일에 용역 기간을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연구용역 추진경과>

시기	추진 경과
2023.09.15.	◦ 국무조정실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2023.09.18.~2023.10.10.	◦ 연구용역 1차 입찰공고: 유찰
2023.10.12.~2023.10.23.	◦ 연구용역 2차 입찰공고: 단독응찰
2023.10.24.~2023.10.25.	◦ 제안서 기술평가 및 기술부문 추가협상
2023.10.27.	◦ 계약체결
2023.12.19.	◦ 연구용역 수행기관 용역기간 연장요청
2023.12.22.	◦ 용역기간 연장 및 예산이월 요청
2023.12.27.	◦ 변경계약 체결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정책연구사업의 집행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첫째,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발주 등 정책연구사업의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9월에서야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후속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해당 연구용역은 법정 입찰공고 기간, 협상 등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뿐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2023년에 추진한 다른 덩어리 규제발굴 정책연구용역에 비해 더 큰 예산이 책정된 용역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충분한 연구 수행기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과제 선정 등의 절차를 조기에 착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국무조정실은 2022년에도 4건의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지연으로 1억 7,100만원의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은 향후 관행적인 이월의 방지를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2회계연도 덩어리 규제발굴 정책연구비 이월 현황>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액	다음연도 이월액
	시작	종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 연구	’22.11.29	’23.3.31	45,454	45,454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연구	’22.11.28	’23.2.28	36,000	36,000
국민의 바다 접근·이용 제한 규제혁신	’22.11.25	’23.3.27	39,500	39,500
기업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22.12.6	’23.2.28	50,000	50,000
합 계				170,954

(자료: 국무조정실)

○ 둘째, 국무조정실이 12월말 연구 수행기관의 요청으로 연구기간의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내도록 규정[90]하고 있으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는 불가항력의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91]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

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9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을 계약기간 내에 완수하도록 하여 국가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상대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연구수행기관은 ① 과제 수행과정에서 당초 대상(법률·의료·세무·부동산중개) 외에 더 많은 분야(안경·미용) 등 더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②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의 여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사유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은 연구수행기관이 직접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이미 기재된 사항[92]이라는 점에서 계약기간의 연장

---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2) 산업연구원,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방안 사업계획서」, 2023. 10.

3. 수행전략 및 추진방향

<수행전략>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함께 관련 협회 및 단체, 그리고 기업 대상의 인터뷰,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함.

① 문헌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추가업무 수행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93]하면서,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 법령분석, 문헌 연구 등을 통해 각 서비스 관련 직간접적인 규제 및 제도 현황을 파악함.
- 각 서비스 시장마다 적용되는 제도와 규제를 중심으로 현황 파악이 필요함.
- 특히, 본 과제에서 규제나 제도 파악을 위한 법제도 관련 문헌조사는 여타 과제와 비교하여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큼.

② 관련 기업이나 전문가 대상의 심층 인터뷰

○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중개서비스 시장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이해관계자 갈등의 원인과 양태와 애로 요인 등을 파악함.

③ 자문회의 등 외부전문가 활용

○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중개서비스 시장 전문가 의견 청취
- 특히, 많은 분야의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의 효과성을 연구진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함.

④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중개서비스 시장 등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문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별 시장 현황 파악

9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

추가 요구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예산 산출 내역서상 인건비 2개월분은 전체 집행액 약 4,500만원의 72.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변경계약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3. (생 략)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⑥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생활밀착형 온라인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방안 예산 산출 내역서>

(단위: 원, %)

구분	금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 건 비	32,959,000	72.5	천단위이하 절사
- 책임연구원	9,790,000		6,993,408원× 2개월× 1명× 70% = 9,790,000원
- 연구원	15,014,000		5,362,452원× 2개월× 2명× 70% =15,014,000원
- 연구보조원	4,660,000		3,584,618원× 2개월× 1명× 65% = 4,660,000원
- 보조원	3,495,000		2,688,554원× 2개월× 1명× 65% = 3,495,000원
2. 경 비	10,248,000	22.5	비목별 경비 집행 세부내역 및 산출내역
- 국내여비	948,000		- (세종-서울 기준) ・100,000원× 2명× 3회 = 600,000원 ・ 87,000원× 2명× 2회 = 348,000원
- 수용비	1,000,000		- 인쇄,복사,제본 25,000원×20부×2회=1,000,000원
- 업무회의비	1,500,000		- 업무회의비 30,000원×10명×5회 = 1,500,000원
- 전문가 활용비	6,000,000		- 외부 전문가비 300,000원×5명×4회 = 6,000,000원
- 임차료	800,000		- 외부회의장 임차료 200,000원×4회=800,000원
3. 일반관리비	2,247,540	4.9	(인건비+경비)의 6% 이내
소 계(1+2+3)	45,454,540	100.0	
4. 부가가치세	-	-	- 면세법인사업자로 해당사항 없음
총 계	45,454,540	10030	

주 인건비 단가는 2023년도 기재부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작성

(자료: 국무조정실)

- 결과적으로, ① 지체상급 납부에 대한 고려 없이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가사 추가업무 수행이 발주기관인 국가에 유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③ 정책연구과제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할 때 당초 사업 수행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선정한 점(2개월)에서 집행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향후 정책연구사업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의 발주 지연을 지양하고,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현안과제 추진 지원[94]: 임시조직의 존속기한 설정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현안과제 추진 지원”사업은 ①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사업 관련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을 위한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및 ②「세월호피해지원법」상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사무 처리 등을 위한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 예산현액 2억 8,400만원 중 2억 1,500만원(75.7%)이 집행되고, 6,900만원(24.3%)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현안과제 추진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안과제 추진 지원	284	284	-	2 △2	284	215	-	69	213[95]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운영	121	121	-	2 △2	121	116	-	5	105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163	163	-	-	163	100	-	63	108

(자료: 국무조정실)

□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8.9.)을 근거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94) 세부사업: 현안과제 추진 지원(7035-301)

95) 동 사업은 2024년도에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었고, ‘주한미군기기지원단 운영’(7035-304) 사업에 1억 5백만원,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7035-310) 사업에 1억 8백만원이 각각 편성됨.

정책협의회와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공여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세월호피해지원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7항[96] 및 시행령 제37조[97]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해 설치되었음.

2) 검토의견: 임시조직의 존속기한 설정 필요

국무조정실은 주한미군기지지원단과 세월호피해지원단의 업무 추진 실적,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직제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임.

□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및 세월호피해지원단을 별도정원과 비별도파견[98]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음.

---

9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9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지원·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추모위원회에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및 세월호피해지원단 현황>

구 분	인원	직제 반영	별도정원	비별도파견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11명 (2팀)	×	3명 - 국무조정실 2 - 행안부 1	8명 - 국조실 1, 국방부 2, LH 1, 평택 1, 동두천 1, 의정부 1, 경기도 1
세월호피해 지원단	8명 (2팀)	×	5명 - 국무조정실 2 - 행안부 1, 복지부 1, 해수부 1	3명 - 안산 2, 진도 1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임시조직은 일시적 과제나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직접 근거하지 않더라도 기관운영의 자율권 내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설치 근거에 명시하고, 존속기한 경과 시에는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기능을 종료시키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2년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국무총리 훈령 이상의 법령으로 2020년 이전에 설치된 임시조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음.[99]

○ 또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지속적

98)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원소속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없는 파견 인력

99)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중 「임시조직 설치·운영지침」

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및 세월호피해지원단의 설치연도 및 존속기한>

구 분	설치근거	설치연도	존속기한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8.9.)	2008년	없음
세월호피해 지원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7항 및 시행령 제37조	2015년	없음

□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2008년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을 설치할 당시부터 설치 근거 법령 등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임시조직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2022년 1월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의 설치 근거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개정해, 종전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를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조정대상을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반환·공여사업'까지 확대하였음에도 동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을 훈령에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주한미군기지지원단과 세월호피해지원단의 업무 추진실적,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직제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임.

6.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100]: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 처리 부적정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 체계적·실효적인 ODA 전략·정책 마련 및 사업 심사·조정, 유·무상 및 양·다자 사업 연계, 평가 등을 통해 ODA 통합·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8억 9,100만원 중 27억 4,100만원(94.8%)이 집행되고, 1억 5,000만원(5.1%)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870	2,870	21	22 △22	2,891	2,741	-	150	2,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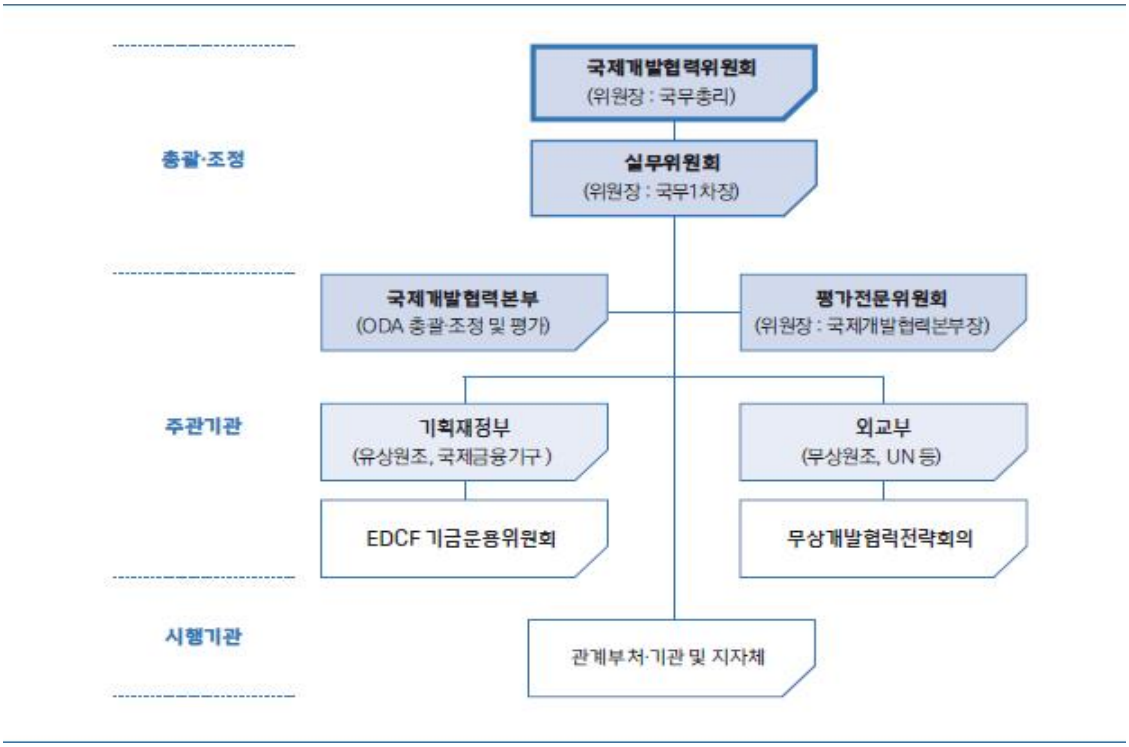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100) 세부사업: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7035-306)

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정책기구임. 또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사업 발굴, 추진, 평가를 위한 심사·점검을 실시하고, 분야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함.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101]>



○ ODA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은 '시행기관'이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 45개 시행기관이 1,840개의 ODA 사업을 수행하였음. 주요 시행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과 관리를 위탁받아 유상원조를 수행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은

101) 「2021-2023 ODA 백서」, p.51

외교부장관의 감독 아래에 무상협력 사업을 시행함.[102]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전체 사업의 유형·대상지역·대상분야 간 비중을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함.

□ 우리나라의 2024년도 확정 예산기준 총 ODA 규모는 6조 2,629억원으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103]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의 목표치 6조 4,000억원[104]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5년도 ODA 사업을 위해 총 6조 7,972억원[105]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임.

<연도별 ODA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요구액)
총ODA(십억원)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6,797.2
양자간원조	2,493.8	2,775.0	2,926.1	3,115.7	3,673.9	5,128.2	5,725.4
비중(%)	(77.9)	(81.0)	(77.9)	(79.1)	(76.9)	(81.9)	(84.2)
유상원조	1,141.2	1,184.9	1,258.2	1,230.5	1,503.0	2,032.0	2,211.1
비중(%)	(45.8)	(42.7)	(43.0)	(39.5)	(40.9)	(39.6)	(38.6)
무상원조	1,352.6	1,590.1	1,667.9	1,885.2	2,170.9	3,096.2	3,514.3
비중(%)	(54.2)	(57.3)	(57.0)	(60.5)	(59.1)	(60.4)	(61.4)
다자간원조	706.5	651.9	828.2	822.6	1,103.2	1,134.7	1,071.8
비중(%)	(22.1)	(19.0)	(22.1)	(20.9)	(23.1)	(18.1)	(15.8)

(자료: 국무조정실)

102) 「2021-2023 ODA 백서」, p.52

103)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1. 1. 20) 의결안건(제36-1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021-2025)」

104) 2019년 총 ODA규모 3.2조 대비 2배인 6.4조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움

105)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4. 6. 26.) 의결안건(제50-1호),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 검토의견

(1) 연간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 처리 부적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는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국회의 적시성 있는 검토가 어려우므로 국무조정실은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민간전문가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임.[106]

□ 위원회는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한 1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107]하고, 필

---

10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현재,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107)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은 각각의 ODA 사업에 대해 ODA 적격성, 수원국과의 협의 여부, 대외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① 주관기관의 분야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함으로써 다음

요한 경우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가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해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이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108]

○ 종합시행계획에는 대·내외 사업추진 여건,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당해연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 개요 등이 반영됨. 당해연도에 추진되는 사업목록은 붙임자료의 형태로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며, 시행기관, 사업명, 사업대상국, 총사업 예산 및 기간, 해당연도 확정예산 등이 명시됨.

□ 그런데, 종합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의결 예산을 반영한 확정 종합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1~2월경 국회에 보고되었지만, 이 종합시행계획의 수정과 관련된 보고는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연도 ODA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②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 연도에 시행이 가능한 ODA 사업목록이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침. ③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ODA 사업은 확정예산 기준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되며, ④ 정부는 다음 연도 ODA 사업목록을 연도별 ODA 종합시행계획에 첨부하여 공개하고 있음.(「2021-2023 ODA 백서」, p.56-57)

10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종합시행계획 국회 보고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종합시행계획 (확정)	○	○	○
종합시행계획 (수정)	×	×	×

□ 개정 전「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만 국회 보고의무를 부과한 반면, 2020년에 전부개정된 법률에서는 위원회에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고, 연도 중 변화를 반영한 '수정' 종합시행계획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신·구 조문대비표 >

개정 전	2020. 5. 26., 전부개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이하 생략)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수정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은 ① 중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이 있는 경우 각 시행기관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ODA사업과 관련된 위원회의 통합·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② 대규모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시행기관이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음에도 종합시행계획의 수정없이 시행기관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사업을 변경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위원회는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추진된 ODA 사업 현황을 2021년 1월 점검하고[109], 이 미의결 사업들의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110]을 실시한 바 있음. 또한, 2021년도 11월에는 해당 연도의 신규사업 수요 및 중요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ODA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차년도 종합시행계획(2022.1.의결)에 반영하였음.[111]

109) 2020년도 미의결 사업 현황: 총 3개 기관에서 20개 사업, 3,922억원 집행

1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미의결 사업 관리 강화방안 연구', 2021년도 연구용역, 국무조정실

111) <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 보도자료(2022.1.27.) 중 발췌 >

※ '21년 종합시행계획 수립('21.1.20, 제36차 국개위) 이후 ▲중요한 신규 사업수요 ▲연내 집행곤란 사업의 전용 필요성(미얀마 쿠데타) 등 일부 사업계획 변경사항 발생

⇒ 시행기관별 사업계획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ODA 사업계획 수정('21.11월, 제3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1년 최종 확정액 = 3조 7,101억원(당초 확정액) + 442억원(예산전용 및 예비비 순증)

○ 한편, 2023년 8월 감사원은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기관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는 한편,[112] ODA사업의 중대사항 변경 시에 적정한 심의·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음.[113]

□ 이에 2023년 2월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또는 종합시행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사업대상국이나 사업예산을 크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변경[114]이 있는 경우,

○ ① 각 사업시행기관이 주관기관[115]에 검토를 요청하여 ② 주관기관의 승인 후 그 변경사항을 국무조정실과 공유하고, ③ 해당 연도 3/4분기에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되, ④ 그 변경사항은 '다음 연도' 초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 지침」(위원회 내부기준)을 마련하였음.[116]

---

112) 감사원 감사보고서(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실태), 2023.8.: 2022년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3년도 종합시행계획 의결 시에 사업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산업진흥원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ODA사업목록에서 제외했음에도, 산업진흥원은 해당 사업을 2023년도에 그대로 추진하였음. 산업부는 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에 2023년도 종합시행계획 수정을 요청했으며, 2023년 2월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에 해당 사업을 반영함.

113) 감사원 감사보고서(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실태), 2023.8. P.22

11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 지침」에 따른 중대한 변경의 예시
- (무상사업) 사업대상국 변경, 사업지 변경, 사업 철회, 총사업비 20% 초과 변경
- (유상사업) 대륙별 지출 변경 등 기존 사업 수행의 연장선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

115) 유상사업의 주관기관은 기획재정부이며, 무상사업의 주관기관은 외교부임.

11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 지침」/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4-1호), 2023.2.9.

□ 종합시행계획은 1년 단위 사업계획이므로 해당 연도 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연내에 이를 반영하여 의결한 후 국회에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 국무조정실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ODA사업 변경사항을 '차년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 수정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률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실제로, 2023년도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중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사업의 경우, 2023년도 확정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6개의 신설사업[117]을 시행했는데, 이렇게 계획되지 아니한 신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내용을 2023년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수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118]

□ 이와 같이, 해당 연도 종합시행계획의 수정사항을 차년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보고하는 경우, 국회는 해당 연도의 총괄적인 ODA 사업

117) 기획재정부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사업 중 종합시행계획 반영 없이 시행된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당초계획	수정	결산
방글라데시 기후탄력적 통합개발 프로그램차관	-	**121,500**	**117,558**
인도 복합운송 및 통합물류 개선 프로그램 I	-	**135,000**	**130,080**
인도네시아 산업현대화 및 무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77,508**	**77,508**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 분야 개선 프로그램III	-	**78,474**	**78,474**
라오스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	**2,027**	**2,012**
에콰도르 에너지전환·투자촉진 지원 프로그램	-	**66,840**	**66,840**
합 계	-	**481,349**	**472,472**

118)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p.225

수정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적시성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음.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예산 전용이나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실시 등 '사업 변경'을 이유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필요는 없어,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그러나, 5년 단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종합시행계획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유형·대상지역·대상분야 간 비중을 고려해 결정되고, 예산 전용 등을 통한 신규사업 실시 등 사업 변경은 종합시행계획이 당초 설정한 사업 유형, 대상지역 등의 변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내용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임.

□ 정부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119]하여 2024년도 확정 예산기준 총 6조 2,62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ODA사업의 특성상 국회가 그 사업의 적절성 등을 적기에 평가할 수 없으므로 ODA 규모 확대에 걸맞은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도 높아짐.

□ 국무조정실은 '위원회의 ODA 총괄·조정기관으로서의 지위 강화' 및 'ODA사업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같은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신규사업 추진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119) ODA 예산(증가율) : ('22년) 3.94조원 → ('23년) 4.78조원(21.3%) → ('24년) 6.26조원(31.1%)

거쳐 연도 내에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이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2)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미흡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평가 결과를 국민 접근성이 높은 홈페이지 화면에 배치하고, 공개 시에는 사업시행기관 명칭 및 사업내용과 그 평가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120]는 ODA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평가의 종류에는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는 상위평가에 해당하는 '위원회평가'가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위원회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121](국무조정실예규)을 마련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정

1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1)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국무조정실예규) 제6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실시기관 중 시행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체평가"라 하고, 평가전문위가 정책·전략·국별·분야별·주제별·형태별·프로젝트·프로그램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위원회평가"라 한다.

책 및 전략평가, 국별 평가, 기관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는「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122] 추진과제로서 ‘성과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방침을 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위원회의 직접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ODA 정책·사업 관련 정보(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명시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사업시행기관의 ODA 성과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에 해당하는 기관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2021년도에는 진단기준 마련 등 제도 설계를 하고, 2022년부터 기관역량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관리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② 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정책 및 전략평가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
나. 국별 평가 :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분야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
라. 주제별 평가 : 양성평등, 인권, 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마. 형태별 평가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
바.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사. 기관평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사업, 평가체계 등에 대한 진단 평가
아. 다자협력사업평가: 성과관리가 가능한 다자성양자사업에 대한 평가
자. 평가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122)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1. 1. 20) 의결안건(제36-1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관역량진단 및 컨설팅을 위해 집행한 용역비는 4억 3,700만원임.

<기관역량진단 관련 용역경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구용역 주제	계약금액
2021	2021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연구용역 - ODA시행기관에 대한 역량진단 모델 개발 - 시행기관 성과관리 역량 강화 지원	178,181
2022	2022년 ODA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124,727
2023	2023년 ODA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133,636
합 계		**436,544**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그런데, ODA KOREA 홈페이지[123]에서 ODA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사업시행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위원회평가 결과는 위원회 의결사항 파일에서 별도로 검색해야만 확인이 가능하여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또한, 기관역량진단의 경우, 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 A등급 기관 ○개, B등급 기관 ○개 등 전체 평가결과를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개별 사업시행기관의 명칭은 ○○○으로 처리하여, 어떤 기관이 어떤 평가결과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음.

123) www.odakorea.go.kr

□ 이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성과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 방침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124]의 취지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 부합될 수 있도록, ODA사업과 관련된 위원회평가 결과를 국민 접근성이 높은 홈페이지 화면에 배치하고, 공개 시에는 사업시행기관 명칭 및 사업내용과 그 평가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12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125]: 중단 예정인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사업비 편성 후 전액 불용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은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90억 1,800만원 중 73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2%)되고, 16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8,843	175	±30	9,018	7,323	-	1,694	8,984

(자료: 국무조정실)

125) 세부사업: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

2) 검토의견

(1) 중단 예정인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기능개선 사업비 편성 후 전액 불용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2024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2023년도 예산에 기능개선 사업비가 반영된 후 전액 불용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산편성 시 추진 필요성, 사업 간 연계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2022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되었으나, 정책·공간·상담과 관련된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로 사업을 이관하였음.

○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이던 온라인 청년센터는 일자리 정책 중심의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반면, 국무조정실에서는 일자리 정보에 더하여 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하나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은 전액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었는데, 2023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37억 7,500만원 중 25억 2,500만원이 집행(집행률 66.9%)되고, 12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국무조정실			출연기관(한국고용정보원)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3,775	2,525	**1,250**	2,525	2,493	32	-

(자료: 국무조정실)

○ 불용액 12억 5,000만원은 전액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사업비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온라인 청년센터가 2024년까지만 운영된 후 2025년부터는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으로 대체될 예정임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음.

□ 그러나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은 2022년 5월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2022년 11월에 수립되어 2022년부터 국무조정실 내부적으로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2023년도 예산으로 동 플랫폼과 유사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후 전액을 불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통합 예정인 온라인 청년센터의 기능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함.

○ 구체적으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사업은 한국고용정보원과 중앙부처·지자체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청년정책의 변동(신규 등록·변경·폐지 등)이 온라인 청년센터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임.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5[126]에 근거하여 청

년의 관심분야 및 여건(소득, 거주지역 등)에 부합하는 청년 정책을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청년정책 신청까지 가능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정책 데이터를 수집 및 축적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사업과 중복되므로 당초부터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산편성 시 추진 필요성, 사업 간 연계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청년DB 가입 및 활용 실적 저조

당초 계획 대비 청년DB의 가입 및 활용 실적이 부진하므로, 국무조정실은 청년DB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DB”는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이 프로필을 등록하면 정책 담당자가 정책에 필요한 청년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청

126) **「청년기본법」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년과 정책 담당자를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으로,「청년기본법」 제15조의2[127]에 근거하여 2022년 구축예산 2억 8,9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23년 1월 30일에 개시하였음. 2023년도 청년DB 관련 예산으로는 운영비로 1억 1,800만원이 편성되고, 전액 집행되었음.

<청년DB 개요>

구 분	내 용
근거	·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 국정과제 92 :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역할	·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과 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청년 참여 플랫폼”
대상	· 우수한 경력을 쌓은 청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개선 활동에 참여한 경험 등이 있는 만19세~39세의 청년* * ① 국내외 주요 대회에 참여 혹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청년 ② 지역·국가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청년 ③ 관심분야 교과를 1년 이상 이수한 청년, ④ 관심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청년 등
구축기간	· 2022.4.~12.
구성	· 대민망(2030db.go.kr): 청년들이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 · 업무망(info.2030db.go.kr): 중앙·지자체 담당자가 접속권한 승인 후, 청년을 직접 검색
현황	· 구축기간: 2022.4.~12. ·시범운영: 2023.1.1.~1.10. · 정식 오픈: 2023.1.30

(자료: 국무조정실)

127)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2023년 청년DB의 가입 및 활용실적을 보면, 5년간 10만명의 청년 패널을 확보하여 정책점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당초 계획[128]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비해 청년DB의 가입대상을 확대(만 19세 이상, 39세 이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기준 청년DB 회원가입 인원은 17,399명이고, 그 중 정책담당자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필 등록 회원 수는 9,711명에 불과함.

<청년DB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현황>

(단위: 명)

구분		성 별			연 령 (만나이)				
		합계	남	여	합계	19~24	25~29	30~34	35~39
'23.12월말 기준	회원가입 현황	17,399		-	17,399				-
	프로필 등록현황	9,711	5,125	4,586	9,711	1,983	3,139	2,995	1,594
'24.4월말 기준	회원가입 현황	21,471		-	21,471				-
	프로필 등록현황	11,761	6,011	5,750	11,761	2,206	3,768	3,716	2,071

(자료: 국무조정실)

○ 또한, 프로필 등록 청년은 청년DB를 통해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선정되어 활동할 수 있는데, 2023년에 청년DB를 통해 공공기관 · 지자체 등과 연결되어 활동한 건수가 총 385건으로 프로필 등록 회원(9,711명) 중 3.9% 수준임.

1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제4차 정례브리핑(2022.4.27.), "10만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부처·지자체 청년 패널로 활용"

<2023년 청년DB를 통한 활동 내역>

(단위: 명)

기관	활동 구분	인원
기재부 등 24개부처	청년보좌역	29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3
	청년정책조정실무위원회	5
	2023년 청년정책 평가단	7
	새만금위원위원회	2
기획재정부	적극행정위원회	1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2
	2030자문단	20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2
	2030자문단	21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3
	2030자문단	19
환경부	2030자문단	20
농림식품축산부	2030자문단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자문단	20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20
법무부	2030자문단	20
외교부	2030자문단	23
산업통상자원부	2030자문단	20
보건복지부	2030자문단	5
개인정보위원회	2030자문단	20
방송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13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20
국민권익위원회	2030 국민참여 모니터단	5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포럼 청년마당	3
부산광역시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	2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식재산위원회	1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	1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	1
경상남도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1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1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제3기 청년참여기구	54
합 계		385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2023년은 청년DB 운영 첫 해로 청년층의 청년DB에 대한 인식 및 효용감 등이 부족했고, 자료 축적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함.

□ 다만, 청년DB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운영비로 매년 약 1억 1,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국무조정실은 청년DB가 청년층의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129]: 예비비 배정 및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포털을 운영하여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억 2,360만원 중 2억 4,520만원(57.9%)이 집행되고, 1억 7,84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	-	424	424	245	-	178	729

(자료: 국무조정실)

□ 2022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7월에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net)[1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를 두

129) 세부사업: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7035-321)

13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도록 규정하고 있음.[131]

○ 국가위원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UN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원회 설치 권고('92년 리우회의)와 국내 시민사회·언론·학계·경제계 등의 요구에 따라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132]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후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그 명칭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133]되었음.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음.

- 동 법률체계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134]이 되었고, 종전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음.[135]

---

13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132)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13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8612호, 2007. 8. 3., 제정)

제15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134) 「녹색성장법」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후변화대응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135)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이후, 경제·환경·사회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하여 포괄적인 상위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136]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위원회는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었음.

-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부칙에서는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 종전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정된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보도록 하였음.[137]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추진 연혁>

근거	소속 (소관)	기수	인원	기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대통령 (환경부)	1기	33명	2000.09. ~ 2002.09.
		2기	34명	2002.10. ~ 2003.06.
		3기	76명	2003.12. ~ 2005.12.
		4기	32명	2006.05. ~ 2008.0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대통령 (환경부)	5기	30명	2008.05. ~ 2009.04
지속가능발전법	환경부장관 (환경부)	6기	24명	2010.09. ~ 2012.09.
		7기	34명	2012.11. ~ 2014.11.
		8기	32명	2015.09. ~ 2017.08.
		9기	33명	2018.08. ~ 2020.08.
		10기	32명	2020.12 ~ 2022.1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대통령 (국무조정실)**	**11기**	**-**	**미구성**

(자료: 국무조정실)

136)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2021.12., 의안번호 2113765) 제안이유

13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부칙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2) 검토의견

(1) 국가위원회 구성 사전준비 미흡에 따른 예비비 집행실적 부진

국무조정실은 지출이 미리 예측되었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예산 과다추계 및 국가위원회 구성 지연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불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민간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전략, 지속가능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두며,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138)]

13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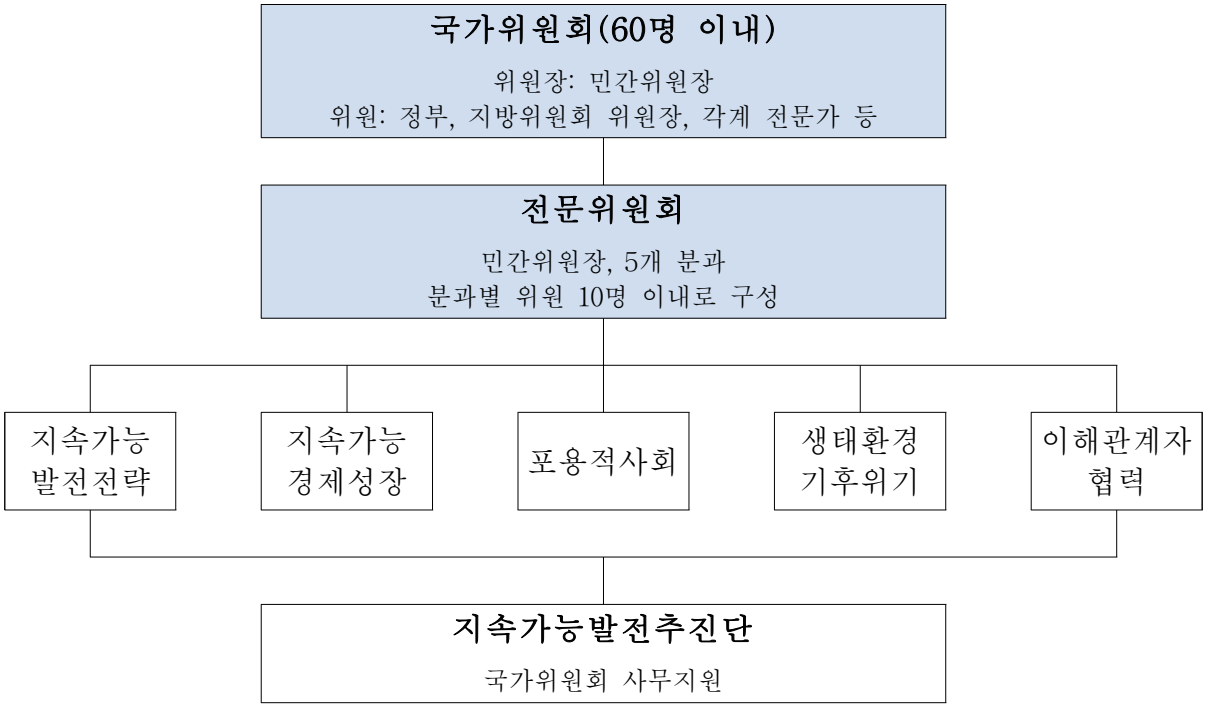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구성>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하였으며, 2023년 3월에 ① 회의수당, 인쇄비, 회의장·장비 임차료 등 국가위원회 운영 9,360만원, ②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비 8,000만원, ③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를 위한 일반연구비 5,000만원, ④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연구 포럼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2억원 등 예비비 총 4억 2,36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였음.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사업 예비비 배정내역>

(단위: 천원)

내역	세목	산출근거	배정액(천원)	
① 국가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210-01)	◦ **국가위원회 운영** - 본회의 수당(대면): 200천원×30명×1회 - 본회의 수당(서면): 150천원×30명×1회 - 행정계획 검토: 150천원×10명×20회 - 회의자료 인쇄: 20천원×50부×1회 ◦ **전원위원회 운영** - 본회의 안건 검토(서면): 150천원×10명×5분과×2회 - 행정계획 검토: 150천원×10명×20회	86,500	93,600
	임차료 (210-07)	◦ **회의장 및 장비 임차**: 5,000천원×1회	5,000	
	사업추진비 (240-01)	◦ 30천원×70명×1회	2,100	
②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관리용역비 (210-15)	◦ 80,000천원×1식		80,000
③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일반연구비 (260-01)	◦ 50,000천원×1식		50,000
④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연구 포럼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200,000천원×1식		200,000
합 계				**423,600**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을 2023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국가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139]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140]

○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2022년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조직 신설을 협의하였으나, 정부의 인력 감축 기조[141]에 따라 협의가 중단되어 국가위원회의 조직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가위원회의 설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제정된 법률의 시행 준비를 위한 사전준비기간이 부칙 시행일 규정에 공포 후 6개월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정부의 예산안 확정까지는 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

139)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40)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42.)

141) 부처별 매년 정원 1% 감축 및 인력재배치 방안 발표(2022.7.14.),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2년 9월 전 정부위원회 정비(2022.9.7.)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한편, 예비비 배정을 통하여 집행된 동 사업은 국가위원회의 미구성, 예비비 과다요구·배정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동 사업은 예비비 4억 2,360만원 중 2억 4,52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7.9%에 불과하였으며, 1억 7,84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별로는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7.8%, 18.4%로 부진하였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

내역	예비비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비 고
① 국가위원회 운영	93,600	7,340	86,260	7.8	
- 일반수용비(210-01)	86,500	4,550[1)]	81,950	5.3	◦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회의 미개최 및 참석수당 등 미집행
- 임차료(210-07)	5,000	690[2)]	4,310	13.8	
- 사업추진비(240-01)	2,100	2,100	-	100.0	
②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80,000	14,700	65,300	18.4	◦ 지속가능발전포털 과업기간 축소 및 위탁방식 변경
③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50,000	45,454	4,546	90.9	-
④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연구 포럼	200,000	179,763	20,237	89.9	-
합계	423,600	245,157	178,443	57.9	

주 1)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조사 및 정책연구포럼 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수당 등

2)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관련 전문가 간담회 회의장 임차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2023년 3월 예비비 요구 시 국가위원회 구성과 무관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내역사업[142]뿐만 아니라 국가위원회 구성의 사전준비적 성격을 갖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사업[143],국가위원회 구성 이후 집행이 가능한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에 대한 예비비를 일괄적으로 요구하였음.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은 2023년 8월 계약이 체결되어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국무조정실은 11월말 부처 및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가위원회 구성은 연내에 구성되지 못했으며, 이에 국가위원회 운영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구성 추진 경과(2024년 6월말 기준)>

시기	추진 경과
2022.01.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2022.07.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09.	◦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 확정 및 발표(행정안전부)
2022.12.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0기 임기 종료
2023.03.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비비 배정
2023.08. ~ 2023.12.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
2023.11.	◦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2024.2. ~ 2024.6. 현재	◦ 민간 위원 후보자(안) 검증 중

(자료: 국무조정실)

142)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연구 포럼

143) 국무조정실은 2022년 1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위가 격상된 국가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연구비용 예비비를 요청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사업의 경우 10개월분의 예비비를 산정였으나, 실제 계약은 8월에 체결되어 사업기간이 약 4개월로 크게 줄었음.[144)]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사업 추진 경과>

시기	추진 경과
2023.03.	◦ 예비비 배정(10개월분)
2023.07.	◦ 지속가능발전포털 운영 입찰공고
2023.08.	◦ 지속가능발전포털 운영 계약 체결
2023.08.~ 2023.12.	◦ 지속가능발전포털 운영사업 추진

(자료: 국무조정실)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비비 요구시 집행가능성을 감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과거에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의 예비비 불용 문제를 지적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3년에도 국무조정실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예비비를 배정·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참고로, 최근 5년 국무조정실의 예비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이 예비비로 집행한 11개 사업 중 5개 사업의 집행률이 80% 미만 수준에 불과하여 예비비의 비효율적인 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44)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그 밖에 포털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유지·보수 등 운용비용을 절감하였다는 입장임.
(종전) 환경부 → 환경연구원 → 업체 / (변경) 국무조정실 → 업체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예비비 집행부진 관련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019	◦ 국무조정실은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국회 의결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추진단 구성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시정	○ 향후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 집행 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예산을 '20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음 * '19년 예비비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19.7)에 따른 추진단 신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편성	조치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9~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예비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세부사업	예비비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9	**생활SOC추진단 운영**	**1,711**	**1,223**	**20**	**468**	**71.4**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674	609	-	65	90.4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1,025	864	-	161	84.3
2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운영	3,416	3,384	8	23	99.1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7,778**	**5,464**	**1,886**	**428**	**70.2**
202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509	484	-	25	95.1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708	694	-	14	98.0
2022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336	325	-	10	96.9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3,632**	**2,861**	**220**	**551**	**78.8**
2023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424**	**245**	**-**	**178**	**57.9**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 위원회 운영	**658**	**499**	**-**	**158**	**75.9**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면밀한 예산 추계 등을 통하여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국가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공백 발생

2024년 6월말 현재까지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국가위원회의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국가위원회의 업무로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심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점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및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와 그 결과의 관계 기관 통보,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음.[145]

---

14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종전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임기가 종료된 2022년 12월 이후부터 2024년 6월 말 현재까지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국가위원회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146] 및 시행령 제9조[147]는 중앙행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14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기관의 장이 국가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제10기 지속가능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2022년 12월 이후에는 국가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그 결과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기본전략 관련 행정계획 수립·변경 통보 및 검토결과 통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수립·변경 통보	6	2	8	5	13[2)]	37[3)]
검토결과 통보	6	2	8	3[1)]	-	-

주: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검토대상 행정계획이 확대(72→189개)

주1) 제10기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2022.12.3.) 이후 접수된 행정계획 2건 검토결과 미통보

주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35건, 국가수도기본계획변경안 1건, 지하수 기본계획 변경안 1건

(자료: 국무조정실)

○ 또한, 2024년은 국가위원회가 2년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

14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능발전보고서 작성·공표 등의 주기가 도래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위원회가 연내 구성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2024년 7월 현재 2024년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작성·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추진계획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주체인 국가위원회가 부재한 가운데 용역이 착수되었다는 점, 내실 있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견 요청 또는 조사·연구 의뢰[148] 등의 제도적

14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장치가 국가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하여 활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정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9.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149]: 예비비 과다배정 후 불용 발생 부적절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미디어발전위원회”라 함)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6억 5,800만원 중 4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9%)되고, 1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 운영	-	-	-	658	658	499	-	158	169

(자료: 국무조정실)

○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150]」에 따라 2023년

149) 세부사업: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7035-322)
150) 국무총리훈령 제842호, 2023.3.17. 제정

4월에 설치되었음.

-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2인 등 정부·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전체회의는 월 1회, 분과위원회는 격주로 개최되었고, 운영규정 제3조의 위원 임기(1년) 종료[151] 시점인 2024년 4월에 운영이 종료되었음.

2) 검토의견

(1) 예비비 과다배정 후 불용 발생 부적절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은 연도 중 지출할 시급성·보충성 및 집행가능성 등이 결여된 예산을 예비비로 과다하게 배정받아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비비 요구 시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 등 예비비 편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23년도 예산

151)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2. 미디어·콘텐츠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요구에 앞서 ①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 불가능성), ②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시급성), ③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보충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출범(2023년 4월)에 따른 운영비·용역비 소요 등을 사유로 2023년 5월에 예비비 6억 5,800만원을 배정받았음.

<2023년 국무조정실 일반예비비 배정 조서>

(단위: 천원)

장(분야)				예비비 지출액	내 역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목		
01 국정운영				657,579	
	7000 국무총리실			657,579	
		7035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657,579	
			110 인건비	18,500	▪ 행정실무원 1명 보수
			210 운영비	262,179	▪ 회의참석수당, 외부회의실 임차료 등
			220 여비	69,100	▪ 위원회 회의지원 및 해외정책사례 조사 등
			240 업무추진비	20,700	▪ 세미나·간담회·자문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50 직무수행경비	18,900	▪ 부서장 등 직책수행경비
			260 연구용역비	220,000	▪ 미디어·콘텐츠 발전방안 관련 정책연구용역
			320 민간이전	1,700	▪ 행정실무원 4대 보험 및 국민연금 지급금
			420 건설비	46,500	▪ 외부회의실 공사비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러나 동 사업 예산액 6억 5,800만원 중 1억 5,800만원이 불용(불용률 24.0%)되었는데, 특히 국외업무여비와 공사비 불용액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먼저, 국외업무여비(220-02목)로 편성된 3,9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국무조정실은 예비비 요구 시에는 선진국(미국) 미디어 규제에 대한 자료수집·심층분석을 위해 국외업무여비를 편성[152]하였으나, 위원회 내부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해외 현장방문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로 제한적으로 배정되어야 함에도, 연도 중 해외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없어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불용된 것은 예산 집행지침 상 시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공사비(420-03목)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서울회의실의 전기·통신·소방·인테리어 등 공사를 위해 4,350만원, 미디어발전위원회 지원단 활동을 위한 세종사무실 공사비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예상보다 서울회의실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었고, 세종사무실 공사는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에서 지출됨에 따라 2,600만원이 불용(불용률 55.3%)되었음.

---

152) <국외업무여비(220-02목) 산출내역>

□ 미국 정책사례 조사 3,930만원
○ 항공료: 833만원 × 3인 + 351만원 × 2인 = 3,201만원
○ 숙박비: ($223 × 3인 + $176 × 2인) × 3인 × 1,290 = 395만원
○ 일식비 : ($142*3인+$111*2인)*4일*1,290 = 334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관련 2023년도 공사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자금이체일자	지출액	지출건명	수령인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250)	2023-07-18	2,959	세종사무실 네트워크 공사	삼광전기통신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7035-322)	2023-08-10	2,354	서울회의실 전기 공사	(주)이레이앤씨
	2023-08-10	1,254	서울회의실 통신 공사	삼광전기통신
	2023-08-10	14,520	서울회의실 OA 공사	준오피스
	2023-08-10	2,634	서울회의실 소방 공사	주식회사 피스코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러나 세종사무실 공사의 경우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함에도 미디어발전위원회 추진단 운영을 위한 공사비를 예비비로 배정한 점은 예산 집행지침 상 보충성 요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153] 서울회의실 공사비 또한 예비비 요구 시 실소요액에 비해 과다계상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예비비 요구 시 연도 중 지출할 시급성·보충성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153) 더구나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 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64억 1,100만원 중 57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9,2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10.8%에 달함.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6,489	-	△78	6,411	5,719	-	692	6,365

(자료: 국무조정실)

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19회계연도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시 국무조정실에 대하여 예비비의 집행가능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된 바 있음.[154)]

(2) 임시조직의 서울회의실 별도 조성을 위한 예산지출 과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서울회의실 조성·원상복구 및 임차를 위해 약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서울회의실의 사용기간(9개월)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임시조직의 회의장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2023년도 임차료(210-07목)와 공사비(430-03목) 배정액 중 대부분은 세종시의 미디어발전위원회 지원단 사무실과 별도로 서울에 회의실을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 및 회의장 공사비임.

---

154) ○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국무조정실은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국회 의결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추진단 구성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시정)

○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국무조정실은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출할 때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사업 임차료 및 공사비 산출내역>

임차료(210-07목)	공사비(430-03목)
8,580만원	4,650만원
○ 공청회 등 장소 임차료 750만원(150만원×5회) ○ 서울회의실 임차료 6,000만원(750만원×8월) ○ PC등 전산장비 임대(서울회의실) 330만원 ○ 가전제품 임대(서울회의실) 385만원 ○ 사무용가구 임대 1,115만원(139만원×8월)	○ 서울회의실 공사 4,347만원 ○ 세종사무실 공사 303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서울 회의실 개요 및 전경>

○ (서울 회의장) ㈜동원 리소스와 임대차 계약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15, 동원빌딩 6층 - 면적 : 전용 44평(147㎡), 공용 37평, 합계 88평 - 용도 : 회의 준비공간, 소회의실 겸 위원 대기실, 회의장 1개소 (분리) - 월임대료 : 임대료 5,346천원, 관리비(약 2,228천원) 등 총 7,574천원 - 계약기간 : '23.7.1. ~ '24.4.30.
서울 회의실 전경
 

(자료: 국무조정실)

○ 미디어발전위원회에 서울회의실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민간위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전체회의 및 분과위

원회의 잦은 회의 빈도를 고려한 민간위원의 접근성 및 대규모 인원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상설회의장을 서울에 임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1년간 운영된 한시조직의 회의장 조성을 위해 2023년에 2,08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였고, 2024년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회의장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비 1,562만원을 집행[155]하였으며, 10개월분의 임차료로 7,574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억 1,216만원가량이 소요되었는데, 서울회의실의 실제 사용기간(9개월; 2023년 7월~2024년 3월)을 고려할 때 별도 회의장 조성 후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 등을 투입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음.

- 실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서울회의장 조성(2023.7.12.) 전에는 서울청사 회의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 한국콘텐츠진흥원 CKL 기업지원센터 회의실 등에서 임차료 집행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 별도 회의장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155) 서울회의장 원상복구 예산은 2024년 동 사업 공사비(430-03목)로 다음과 같이 집행되었음.

<서울회의장 원상복구 관련 2023년도 공사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자금이체일자	지출액	지출건명	수령인명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 운영 (7035-322)	2024-04-09	12,760	미디어TF 서울 회의장 건축 원복 공사	준오피스
	2024-04-09	880	미디어TF 서울 회의장 전기 원복 공사	㈜이레이앤씨
	2024-04-09	1,980	미디어TF 서울 회의장 소방 원복 공사	주식회사 피스코

(자료: 국무조정실)

<서울회의장 조성 전 미디어발전위원회 전체회의·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참석자	개최장소	임차료 집행액
전체회의	’23.4.17 (1차)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	서울청사 대회의실 (9층)	-
	’23.5.18 (2차)		정부위원 4명, (이하 대참 포함) 민간위원 14명	서울중앙 우체국 스카이홀(21층)	897.6
	’23.6.15 (3차)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3명	메이필드 호텔 이원홀	4,618.5
분과위원회	’23.4.25 (1차)	법제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서울청사 회의실(10층)	-
		산업	민간위원 6명, 부처 국·과장 4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13층)	-
	’23.5.9 (2차)	법제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13층)	-
		산업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17층)	-
	’23.5.23 (3차)	법제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17층)	-
		산업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17층)	-
	’23.6.13 (4차)	법제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콘진원 CKL 기업지원센터 회의실(11층)	-
		산업	민간위원 7명, 부처 국·과장 4명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17층)	-
	’23.7.4 (5차)	통합	민간위원 12명 (법제 5, 산업 6), 부처 국·과장 4명	콘진원 CKL 기업지원센터 회의실(11층)	-

(자료: 국무조정실)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향후 임시조직의 별도 회의실 조성 예산 편성 시 청사·유관기관 회의실을 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0.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의 운영 장기화 부적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은 기존 반부패 조직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소홀하거나 점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정부패 소지 분야에 대하여 시정·예방과, 부패·부조리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관점의 제도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7억 4,000만원 중 7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6%)되고,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40	-	±48	740	715	-	25	709

(자료: 국무조정실)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함)은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관련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다부처·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됨.

○ 추진단 단장은 국무1차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파견검사로 하며,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경찰청과 LH·

금융감독원 등 파견인력이 부패예방 업무를 담당함. 추진단은 2023년에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점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점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 점검, 지방교육재정 분야 점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확대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검토의견

국무조정실은 훈령을 일곱 차례 개정하여 부패예방추진단을 설치 이후 약 10년간 운영하는 등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부조직관리지침」·감사원 감사 결과 및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조직관리지침」(행정안전부 지침)[156]에 따르면,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설치 근거에 명시하고, 존속기한 경과 시에는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기능을 종료시키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2년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국무총리 훈령 이상의 법령으로 2020년 이전에 설치된 임시조직은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음.[157]

○ 또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은 기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사실상 상설

156) 정부조직관리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행정안전부 지침

157) 부패예방추진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이나, 「정부조직관리지침」이 임시조직 연장 시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2020년에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의 사례와 같이 횟수 제한 없이 임시조직을 계속 연장하여 사실상 상설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됨.

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 설치 당시 1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도 7회나 추가 연장하여 약 10년간 운영하는 등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추진단의 추진연혁을 보면, 국무조정실은 2014년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 관련 대책의 기획·분석·시행 및 공직부패 점검·관리를 추진하고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1호, 2014.8.13. 제정)」에 기반하여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한시 운영조직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신설함.

- 국무조정실은 부패근절 노력의 지속 필요성을 감안하여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말까지 1차 연장하고, 2016년 12월에는 2017년 12월 말까지로 2차 연장하였음.

○ 이후 2017년 8월 명칭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에 부패의 예방 및 감시를 추가하였으며, 활동기한을 2019년 12월 말로 3차 연장하였음.

- 2019년 말에는 정규직제화 논의를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2020년 3월에는 활동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하면서 명칭을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 변경하였음. 이후 2022년 1월에는 부패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대상 부정부패 관련 자문 제공기능을 신설[158]하고, 활동기한을

2024년 12월 말로 6차 연장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활동기한을 2027년 12월 말로 7차 연장하였음.

<부패예방추진단 활동기한 관련 연혁>

구분	제·개정시기	활동기한	개정사항	명칭
제정	2014.8.13.	2015.7.31.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1차 연장	2015.7.23.	2016.12.31.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2차 연장	2016.12.7.	2017.12.31.	활동기한 연장 및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3차 연장	2017.8.4.	2019.12.31.	활동기한 연장, 명칭 변경 및 부패의 예방·감시기능 추가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4차 연장	2019.12.31.	2020.3.31.	정규직제화 논의를 위해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5차 연장	2020.3.9.	2022.6.30.	활동기한 연장 및 명칭 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6차 연장	2022.1.21.	2024.12.31.	부패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자문기능 신설 및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7차 연장	2024.7.2.	2027.12.31.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자료: 국무조정실)

□ 추진단은 활동기한이 단기성으로 재차 연장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예비비(2017~2019년, 2022년)로 편성되었고, 정규직제화되지 않은 채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현원 39명 중 파견기관에서 공석 충원이 불가능한 비별도 파견인력이 41.0%(16명)에 달함.

158)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조(부정부패 관련 제도개선 자문의 제공)** ① 추진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관련 대책을 수립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려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추진단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 7년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7년	-	-	±5	674	674	612	90.8	-	62
2018년	-	-	±18	611	611	572	93.5	-	39
2019년	-	-	±15	674	674	609	90.3	-	65
2020년	733	-	±50	-	733	677	92.4	-	56
2021년	813	-	±3	-	813	752	92.5	-	61
2022년	416	-	±24	336	752	687	91.4	-	64
2023년	740	-	±48	-	740	715	96.6	-	25

(자료: 국무조정실)

<2023년 부패예방추진단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파견(직제 미반영)			
			별도	비별도		민간
			중앙	중앙	지자체	
총괄기획국	-	23	4	8	2	9
사회경제국	-	16	6	5	1	4
계	-	39	10	13	3	13

(자료: 국무조정실)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국무조정실 기관 정기감사(2022년 6월)[159] 시 설치 당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도 이를 2회 이상 연장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운영 중인 임시조직을 폐지하도록 통

159)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① 설치 당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3년 이상 운영 중이거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도 이를 2회 이상 연장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운영 중인 임시조직은 폐지하고(통보), ② 앞으로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거나 직제상 상시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직제에 규정되지 않은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존속기한을 설치 근거에 명시하고, 존속기한 경과 시 해당 임시조직을 폐지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라도 연장 횟수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1회로 한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보하였으며, 매년 국회 결산 심사 시 훈령 개정을 통한 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직제 반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160]을 의결한 바 있음.

○ 그럼에도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 활동의 지속성 및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부패예방추진단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안전부에 부패예방추진단의 정규직제화를 여러 차례 요청[161]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매년 정규직제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훈령 개정을 통한 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조직관리지침」·감사원 감사결과 및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므로, 국무조정실은 상시조직화 등 추진단 운영 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160) <최근 3년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구분	시정요구사항
2020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연장된 운영 기한(2022년 6월) 도래 전까지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패예방추진단의 직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주의)
2021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추진단 연장 운영을 지양하고 직제 반영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2022회계연도 결산	○ 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부패예방 추진단이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시정)

161) 최근 3년간 행정안전부로의 정규직제화 요청: 2022년 9월, 2023년 3월, 2023년 9월, 2024년 3월

11.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162]: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경비 편성 지양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는 국무총리의 국회·정당과의 소통 활동을 보좌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2억 7,000만원 중 11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3%)되고, 7,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1,270	-	±30	1,270	1,198	-	72	984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143	-	-	143	84	-	59	143
대국민 및 시민사회 소통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108	-	-	108	108	-	-	108

(자료: 국무조정실)

162) 세부사업: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7037-302)

2) 검토의견

(1) 설치 근거가 없는 시민사회위원회의 운영 경비 편성 지양 필요

시민사회위원회는 2022년 10월 폐지 이후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매년 운영경비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와 관련성이 낮은 간담회 등에 예산액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법령상 설치근거가 없고 미구성된 위원회의 운영경비 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시민사회위원회 운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임.

○ 시민사회위원회는 2013년부터 설치되었고, 1기~4기 위원회가 2년씩 운영[163]되었음. 1~3기 위원회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고, 4기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였으며 정부위원 9명과 민간위원 27명으로 구성되었음.

□ 그런데 2023년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의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억 4,300만원 중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58.7%)되고, 5,900만원이 불용되었음.

163) 1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13.6.20.~2015.6.19., 2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15.8.26 ~2017.8.25., 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17.11.20.~2019.11.19., 4기 시민사회위원회: 2020.7.3.~2022.7.2.

<2023년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 세부 산출내역>

□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 1억 4,300만원
○ 회의 참석수당 및 자문사례금 7,100만원
* 전체위원회 3,600만원, 분과위원회 2,600만원, 기타 900만원
○ 소모품 구입 및 자료 인쇄 1,150만원(40회×28.7만원)
○ 위원회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임차료 650만원(4회×162.5만원)
○ 시민사회위원회 관련 업무협의 2,500만원(7회×30만원×12월)
○ 위원회 운영, 시민사회 소통 등 국내여비 2,930만원(10명×8.1만원×36회)

(자료: 국무조정실)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시민사회위원회가 2022년 10월 폐지된 이후 2024년 7월 현재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먼저,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새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나, 이는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위원회 폐지를 권고[164]한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 경과를 보면, 시민사회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민사회위원회의 운영 성과 및 정부위원 참여 저조 등의 사유로 폐지의견이 제시('22.9.7.)된 후,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 법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폐지('22.10.4.)되었음.

---

16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통합」, 2022.9.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경과>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5월 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
- 現정부 국정과제(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등) 및 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시민사회위원회*'가 정비 대상에 포함
* 「정부위원회 민관합동진단반(행안부)」 조사 결과 등을 반영, 同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22.9.7)
-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근거법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22.10.4)
※ 관계기관 협의('22.9.1~16) → 입법예고(9.7~16)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9.27) → 폐지령 공포(10.4)

(자료: 국무조정실)

○ 이후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다시 운영할 계획으로 매년 1억 4,300만 원의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4기 시민사회위원회와 차별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점에서 시민사회위원회 신규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시민사회위원회는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음에도 매년 운영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165]는 행정

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 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를 필요로 함.

○ 이에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를 다시 구성·운영하기 위해 당초 2023년 중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 간 협의과정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무총리훈령 제정 및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국무총리비서실은 2024년 7월 초 기준으로도 「(가칭)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안을 내부 검토 중인 단계로, 위원 위촉은 국무총리훈령 제정 후 '위촉계획 수립 → 후보자 추천(각 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등) → 국무총리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절차에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사회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불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실제로 1기~4기 시민사회위원회는 각각 위원회 구성까지 2개월~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2024년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은 5월 말 기준 예산현액 1억 4,300만원 중 2,300만원만이 집행

16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집행률 16.1%)되었음.

<2023년 및 2024년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2023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5월말)
회의 수당 및 자문사례금	일반수용비(210-01)	70	15	55	70	3
소모품 구입 및 자료 인쇄 등	일반수용비(210-01)	12	23	△11	12	7
시민위 관련 회의 개최	임차료(210-07)	7	6	1	7	1
시민위 관련 업무협의	업무추진비(240-01)	25	11	14	25	4
시민사회 소통활동	국내여비(220-01)	29	29		29	8
계		143	84	59	143	23

(자료: 국무조정실)

□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 편성된 사업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있음.

○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2023년도 집행액은 대부분 새로운 시민사회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 소통활동 및 시민사회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시민사회비서관실의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음.

- 그러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경청간담회, 노동개혁 관련 MZ세대 경청간담회, 교권 정상화 등 의견수렴 관련 교육개혁 경청간담회, 소셜플랫폼 종사자 경청간담회 등 시민사회

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간담회 개최에 예산액 중 상당액이 집행된 점, 시민사회 등과의 간담회·업무협의, 소통협의체 운영 등을 위해서는 다른 내역사업인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예산액이 매년 편성[166]되고 있다는 점 및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일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무총리비서실은 기존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 사유를 고려하여 신규 설치의 타당성을 재점검하는 한편, 향후 법령상 설치근거가 없고 미구성된 위원회의 운영경비 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 민정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의 적정성 검토 필요

민정실 직원이 예산안 편성지침 상 특정업무에 해당하는 조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특정업무경비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무총리비서실은 민정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대국민 및 시민사회 소통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및 정무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250-03목)를 편성한 것으로, 개인별로 월정액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 1억 8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

166) 내역사업 “시민사회 소통 및 국정현안 의견수렴” 예산액: (’22년) 2억 5,700만원, (’23년) 2억 5,700만원, (’24년) 3억 4,700만원

<2023년도 특정업무경비 산출근거>

(단위: 명, 천원)

구분		실장	비서관	과장급	4.5급이하	계
민정실	인원 수	1	2	6	32	41
	지급단가	300	240	220	190	130
정무실	인원 수	1	2	5	1	9
	지급단가	300	150	100	100	190

(자료: 국무조정실)

<2023년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명)

구분	집행방식	2023년 예산 및 결산					
		지급단가	인원	예산액		집행액	
민정실	현금지급(정액)	190	41	108,000	93,600	108,000	93,600
정무실		130	9		14,400		14,400

(자료: 국무조정실)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250-03)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예산 편성 및 지급이 금지됨.

○ 특정업무경비의 편성·집행 대상인 '특정업무'의 범위에 대해 관련 지침은 "수사·감사·예산·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230-00)와 함께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현금

성 경비라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 관련 지침>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26 · 적용대상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 세부지침 :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예산 편성 금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p.183~185 · 적용범위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 세부지침 :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그런데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및 정무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는 국정현안 관련 조사·청문 및 시민사회 소통 활동을 사유로 편성된 것으로, 민정실 직원이 조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특정업무경비가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무총리비서실은 특정업무경비 사용 용도에 대해 국회·정당 및 일

반 국민·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정현안 및 민생 관련 현장의 목소리 청문, 정책설명, 의견수렴, 정보 파악 등 업무 수행에 사용 중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특히 민정실의 경우, 민정실의 주요업무 중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등 특정업무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업무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실 직원 현원 42명 중 41명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민정실 주요 업무>

민정민원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 국내 주요 정보 및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 ○ 치안·재난 등 관련 주요 사건사고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보 및 상황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 직능·종교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관련 기타 사항

(자료: 국무조정실)

○ 또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정업무경비로 계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비

서실은 민정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결산심사 시 법무부, 국방부 등에 대하여 수사·감사·조사·예산 등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의결된 바 있음.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 대상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대상연도	대상부처	지적요지	시정요구사항
2019결산	법무부	○ 법무부는 2019년도에 12개 공증사무대행청에 매월 94,000원씩 총 1,128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였으나,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조사·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한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대행청 직원은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 법무부는 공증사무대행청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시정)
2020결산	국방부	○ 군법무관 중 법무참모(법무실장·법제과장)는 직제 상 각군의 법률서비스 충족을 위해 법무실에서 법무 업무를 총괄하며 지휘부의 법률보좌역할을 수행하는바, 군사법제도에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군검사와 구분되므로, 수사업무에 상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법무참모가 특정업무경비에 해당하는 수사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음	○ 국방부는 수사관련 업무를 직접적·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검찰수사활동비의 지급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지 않았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제도개선)

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1. 공통: 제도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필요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167]은 연구개발적립금을 제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함으로써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발생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24.2.29. 개정 전)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은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또는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부족한 퇴직급여충담금에 우선 적립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연구개발·교육훈련·기관발전 및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168][169]

---

167) 세부사업: 국토연구원(1533-301), 에너지경제연구원(1536-3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1537-301),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168)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제4조(적립금의 사용)**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자체연구개발사업
2. (삭제)
3. 교육훈련사업
4. 기관발전사업(경직성 경상비 성격 사업 제외)
5.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

② ~ ③ (생 략)

④ 사용계획 수립 시에는 제1항제1호의 자체연구개발사업 비중을 당해 연도 적립금 총 사용금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169) 2024.2.29. 개정전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구분

<결산잉여금의 집행 구조>

퇴직충당금	연구개발적립금		능률성과금
	자체연구개발	교육훈련·기관발전·기타	
부족분 우선 사용	결산잉여금의 50% 이상		결산잉여금의 50% 이내
	연구개발적립금의 60% 이상	연구개발적립금의 40% 이내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다음의 9개 기관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체 청사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

(단위: 천원)

기관	연도	납부액			예산액		
		합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출연금	자체수입	연구개발적립금
국토연구원	'19	57,910	57,910	-	30,000	27,910	-
	'20	58,130	58,130	-	30,000	28,130	-
	'21	82,484	82,484	-	43,000	39,484	
	'22	94,957	94,957	-	48,000	-	46,957
	'23	86,820	86,820	-	48,000	-	**38,820**
에너지경제연구원	'19	57,403	57,403	-	19,000	38,403	-
	'20	110,999	91,932	19,067	25,000	85,999	-
	'21	331,160	108,546	222,614	62,000	241,553	27,607
	'22	408,320	133,066	275,254	314,000	80,672	13,648
	'23	586,896	115,497	471,399	318,000	47,233	**221,663**
정보통신	'19	72,393	72,393	-	-	72,393	-
	'20	60,541	60,541	-	-	60,541	-

기관	연도	납부액			예산액		
		합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출연금	자체수입	연구개발적립금
정책연구원	'21	61,048	61,048	-	-	61,048	-
	'22	78,280	77,904	375	-	78,280	-
	'23	82,002	82,002	-	-	63,233	18,769
한국개발연구원	'19	140,763	122,661	18,102	106,000	34,763	-
	'20	223,785	175,483	48,302	106,000	117,785	-
	'21	274,546	202,708	71,838	138,000	136,546	-
	'22	361,992	251,593	110,399	138,000	-	223,992
	'23	334,609	233,900	100,709	138,000	-	196,609
한국교육개발원	'19	581,386	309,743	271,642	145,000	436,386	-
	'20	650,584	351,503	299,081	145,000	344,584	161,000
	'21	764,138	394,926	369,212	153,000	451,138	160,000
	'22	864,648	435,325	429,323	560,000	216,148	88,500
	'23	679,479	355,814	323,665	560,000	119,479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	6,146	6,146	-	-	6,146	-
	'20	38,541	38,541	-	-	38,541	-
	'21	55,961	55,961	-	-	55,961	-
	'22	68,221	68,221	-	-	68,221	-
	'23	72,275	72,275	-	6,000	45,275	21,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126,109	126,109	-	60,000	66,109	-
	'20	190,907	138,073	52,834	118,000	72,907	-
	'21	451,936	166,826	30,000	134,000	317,936	-
	'22	1,321,815	275,134	1,046,681	188,000	638,124	495,691
	'23	1,195,640	266,762	928,878	405,000	790,640	-
한국법제연구원	'19	22,442	22,442	-	10,000	12,442	-
	'20	22,972	22,972	-	10,000	12,972	-
	'21	24,767	24,767	-	10,000	14,767	-
	'22	38,876	38,876	-	16,000	22,876	-
	'23	35,555	35,555	-	16,000	19,55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	54,981	54,981	-	-	54,981	-
	'20	64,202	64,202	-	-	64,202	-
	'21	69,516	69,516	-	42,000	27,516	-
	'22	106,565	94,509	12,056	51,000	55,565	-
	'23	107,391	97,079	10,312	70,000	37,391	-

(자료: 각 연구기관 제출자료 취합)

○ 그런데 이들 기관이 납부하고 있는 제세공과금의 재원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9개 연구기관 중 5개의 기관[170]이 정부출연금 및 자체수입 외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해 집행하고 있음.

특히,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과거 자체수입으로 집행한 부분 전액을 연구개발적립금에서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 경상운영비 출연금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경상비 총액	출연금	출연금 비중	경상비 총액	출연금	출연금 비중	경상비 총액	출연금	출연금 비중	경상비 총액	출연금	출연금 비중	경상비 총액	출연금	출연금 비중
국토	1,408	1,052	74.7	1,432	1,076	75.1	1,598	1,122	70.2	1,598	1,058	66.2	1,550	1,025	66.1
에너지	1,384	445	32.2	1,545	549	35.5	1,610	602	37.4	1,832	824	45.0	1,777	814	45.8
정보	2,119	971	45.8	2,350	1,095	46.6	2,336	1,104	47.3	1,529	306	20.0	1,518	295	19.5
KDI	3,879	2,749	70.9	3,490	2,360	67.6	3,527	2,398	68.0	3,458	2,329	67.4	3,653	2,550	69.8
교육	2,733	649	23.7	3,081	944	30.6	3,281	920	28.0	3,586	1,291	36.0	3,514	1,274	36.3
평가원	3,383	2,182	64.5	2,891	1,543	53.4	2,886	1,538	53.3	2,781	1,433	51.5	2,738	1,390	50.8
농촌	1,126	690	61.3	1,405	925	65.8	1,495	933	62.4	1,726	947	54.9	1,912	1,145	59.9

주: 12월 이사회 승인 기준

(자료: 각 연구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70)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제세공과금은 청사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매년 부과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구분	내용
자체연구개발사업	○ 연구기관 설비목적에 부합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연구기획 및 정책연구, KDI대학원 교육사업 포함)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사업, 번역사업 등 연구지원성격 사업 ○ 연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고도화(지식정보시스템, 행정(인사·채용, 전자증빙시스템 등)) ○ 연구몰입도 제고를 위한 연구(업무)환경 개선(단, 연례적 추진 경상비적 성격 제외)
교육훈련사업	○ 연구기관 소속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등 사업
기관발전사업	○ 기타 연구기관장이 기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 경제인문사회계 청년인턴사업 수행 ○ 지방이전경비 ■ 건물 원상복구비용 ■ 장기차입금 상환 ■ 출퇴근 버스 구입 및 운영경비 ■ 종전부동산 매각 감정평가비 ■ 연구·행정공간, 시설·장비 등 이전 ■ 연면적 증가 등에 따른 아웃소싱 경비, 공공요금 및 자산관리유지비 등 증가 비용 ■ 지방이전 이사비용 부족분 ■ 기관장 관사 구입, 직원사택 임차 ○ 기관발전을 위한 조직진단 컨설팅 등

○ 즉, 연구개발적립금의 설치 목적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사업 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본래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171] 이를 경상비적 성격인 제세공과금 납부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적립금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국토연구원 등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한 경상비적 성격의 재산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의 납부를 지양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적정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171) 「연구기관 회계처리 및 결산지침」 제21조(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하며,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8. 연구개발적립금

연구개발적립금은 연구기관이 향후 연구기관의 자체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 연구재투자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립금으로 하며, 기중 변동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2. 공통: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물품 및 용역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172]

---

17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1%를 준수하지 못하였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이 중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단위: 천원, %)

기관	총 구매액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구매비율	준수여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42,204	12,564	1.2	준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07,736	35,330	3.5	준수
국토연구원	4,230,262	55,522	1.3	준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74,249	25,185	2.1	준수
산업연구원	2,855,366	45,080	1.6	준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599,033	240,041	9.2	준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538,859	59,328	2.3	준수
통일연구원	319,000	32,455	10.2	준수
한국개발연구원	3,708,536	230,324	6.2	준수
KDI국제정책대학원	3,769,345	64,645	1.7	준수
한국교육개발원	29,283,949	575,435	2.0	준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6,388,129	368,492	1.0	준수
한국교통연구원	**19,105,832**	**48,554**	**0.3**	**미준수**
한국노동연구원	570,941	18,053	3.2	준수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기관	총 구매액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구매비율	준수여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182,936	102,034	1.0	준수
한국법제연구원	3,517,283	67,192	1.9	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345,559	176,114	4.1	준수
육아정책연구소	719,780	11,891	1.7	준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80,238	130,702	7.8	준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494,456	112,579	2.0	준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0,633,491	312,497	2.9	준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002,958**	**35,570**	**0.6**	**미준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342,396**	**11,933**	**0.2**	**미준수**
한국행정연구원	3,854,711	40,677	1.1	준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62,569	39,833	1.7	준수
한국환경연구원	1,897,052	112,964	6.0	준수
건축공간연구원	251,237	13,227	5.3	준수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은 5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2023년도 의무구매 비율은 0.25%에 불과함.

<한국교통연구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구매비율	준수여부
2019년	16,950	33	0.20	미준수
2020년	16,625	42	0.25	미준수
2021년	19,216	82	0.43	미준수
2022년	29,779	45	0.15	미준수
2023년	19,106	49	0.25	미준수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여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공통: 논문게재료 관리 강화 및 관련 지침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연구결과의 성과확산을 위하여 연구정보활동비를 통해 기관 연구원 연구 성과물의 학술지 게재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연구정보활동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상 해당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연수, 정보수집 또는 활동경비로서 국내·외 교육훈련, 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및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 등 문헌, 학술정보 DB 사용료 등 자료 구입 및 특근 직원에 대한 식비로 지출하도록 편성된 예산 비목임.

2) 검토의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논문게재료와 관련한 공통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게재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의 학술지 게재 비용 지원은 통상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작성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료, 심사료, 번역·교정료 등(이하 “논문게재료”)을 신청에 따라 연구원 또는 대상 학술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논문게재료 지급 현황>

(단위: 만원)

기관명	1인당 최고 지급액	편당 최고 지급액	2023년도 총 지급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3	63	419
국토연구원	90	120	9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산업연구원	50	50	207
에너지경제연구원	38	38	1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0	50	117
통일연구원	150	150	1,470
한국개발연구원	-	-	-
KDI국제정책대학원	389	389	1,491
한국교육개발원	40	40	1,45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	100	2,751
한국교통연구원	384	500	3,053
한국노동연구원	30	30	2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7	47	317
한국법제연구원	20	20	16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0	420	731
육아정책연구소	400	400	6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0	40	14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70	70	1,33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1	71	5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76	374	2,933
한국행정연구원	30	30	17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0	100	1,411
한국환경연구원	357	537	5,877
건축공간연구원	200	200	1,10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별 논문게재료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각 출연연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논문게재료 지급지침 또는 세부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금액의 상한 역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은 논문게재료 지급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급금액의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논문게재료의 지급방식 및 지급액에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며,

○ 통상 논문게재료 지급이 게재료, 심사료 또는 번역료의 실비 지원인 것과 달리 우수연구논문 장려금, 인센티브, 기여지원금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논문게재료에 관한 규정 현황>

기관명	지급기준	상한액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없음**	**없음**
국토연구원	지침	연간 300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산업연구원	기준	편당 50만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침	편당 200만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준	편당 50만원
통일연구원	지침	편당 10만원
한국개발연구원	-	-
KDI국제정책대학원	기준	연간 600만원
한국교육개발원	지침	편당 45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침	편당 100만원

기관명	지급기준	상한액
한국교통연구원	**없음**	**없음**
한국노동연구원	지침	편당 30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업무보고	**없음**
한국법제연구원	지침	편당 30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준	**없음**
육아정책연구소	**없음**	**없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없음**	**없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침	**없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침	편당 1,0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침	**없음**
한국행정연구원	지침	편당 50만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침	편당 200만원
한국환경연구원	**없음**	**없음**
건축공간연구원	계획	편당 200만원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재구성)

□ 지침 등 지급기준 없이 논문게재료를 지급할 경우 기관별 자의적 집행의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긴 연구기관 간 지급상한의 편차는 유사한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논문게재료와 관련한 공통 규정 마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게재료가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출연연구기관은 논문게재료 지급대상 학술지 기준, 지급방식 등을 정하여 논문게재료 지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173]: 공동채용 확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12억 4,100만원 중 365억 4,300만원이 출연되고, 36억 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 9,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7,366	37,366	3,875	-	-	41,241	36,543	3,601	1,097	18,777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규직원 채용을 공동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채용 사업은 행정비용 절감, 채용정보 접근가능성 제고, 우수인재 유치 효과가 기대되므로 참여기관과 채용인원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173) 세부사업: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1531-301)

□ 연구회의 일반사업인 ‘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 효율화 추진’은 채용, 법무자문, 법정의무교육 등의 공동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목적의 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2억 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600만원 중 7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효율화 추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700	700	206	-	-	906	779	127	-	368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당해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출연연 공동채용 위탁운영’은 개별 연구기관별로 실시하던 신규직원 채용을 공동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채용플랫폼 공동 운영 및 공동채용 대금의 명목으로 총 3억 2,535만원이 집행되었음.

<출연연 공동채용 관련 집행내역>

(단위: 만원)

주요내용	비목	집행액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채용플랫폼 공동 운영 계약 체결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19,700
2023년도 출연연 공동채용(통합필기·면접) 대행 관련 제1차 공동채용 대금		6,057

주요내용	비목	집행액
2023년도 출연연 공동채용(통합필기·면접) 대행 관련 제2차 공동채용 대금		2,232
2023년 출연연 공동채용(통합필기·면접) 대행 (제3차 공동채용) 대금		4,546
합 계		32,535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공동채용 사업의 성과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수와 채용 인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2022년도에는 총 27개[174] 연구기관 중 16개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여 총 117명을 채용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6개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여 총 68명을 채용하여 공동채용 사업의 확산과 성과 창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공동채용사업 성과>

구분	참여기관 수	채용인원
2021년	4개	11명
2022년	16개	117명
2023년	16개	68명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또한 공동채용 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기관은 기관별 채용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채용한 총 1,317명 중 68명(5.2%)만이 공동채용을 통해 채용되었다는 점[175]에서 당해 사업

174) 24개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의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관별 채용 현황(2023년)>

(단위: 명)

구분	공동채용[1]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청년인턴	자체채용[2]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청년인턴
합계	68	12	4	19	33	1,249	214	69	742	2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2	-	-	-	10	-	-	8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	-	3	-	41	19	-	15	7
국토연구원	-	-	-	-	-	66	7	2	49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	-	29	13	-	11	5
산업연구원	2	-	-	-	2	33	7	-	12	14
에너지경제연구원	-	-	-	-	-	36	6	4	22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	-	40	7	2	19	12
통일연구원	6	3	-	1	2	7	3	-	4	-
한국개발연구원	5	-	-	5	-	105	36	11	43	15
KDI국제정책대학원	1	-	-	-	1	57	5	15	23	14
한국교육개발원	-	-	-	-	-	60	8	3	33	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	132	11	9	102	10
한국교통연구원	4	3	1	-	-	63	-	1	47	15
한국노동연구원	-	-	-	-	-	28	11	-	11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	69	10	3	41	15
한국법제연구원	1	-	-	1	-	31	8	3	6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	-	3	2	48	3	4	37	4
육아정책연구소	6	-	-	4	2	11	-	1	9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	-	-	-	11	13	2	-	9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	-	-	1	70	29	3	38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3	2	1	-	10	24	4	2	13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1	-	2	-	39	2	-	27	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	-	-	2	23	5	2	16	-
한국행정연구원	-	-	-	-	-	46	5	2	29	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	-	37	3	-	18	16
한국환경연구원	3	1	2	-	-	87	9	1	59	18
건축공간연구원	-	-	-	-	-	44	1	1	41	1

주1) 공동채용인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채용을 통해 채용한 인원
주2) 자체채용인원 : 공동채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채용한 인원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75) 2022년도에는 총 1,539명의 채용인원 중 127명(8.3%)을, 2021년도에는 총 1,459명의 채용인원 중 19명(1.3%)을 공동채용으로 채용하였음.

□ 공동채용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에 더해 구직자에게는 대규모의 정기·동시 채용에 따른 채용정보에의 접근 가능성 확대 및 예측가능성 확대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각 연구기관의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공동채용 사업의 확산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176]: 재정정보시스템 확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12억 4,100만원 중 365억 4,300만원이 출연되고, 36억 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 9,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2회계연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7,366	37,366	3,875	-	-	41,241	36,543	3,601	1,097	18,777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사업은 10여년간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시스템 보급·활용에 미흡함이 있으므로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176) 세부사업: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1531-301)

□ 연구회의 일반사업인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예·결산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템 이용기관의 관련 업무 적시 수행을 위한 효율적·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억 6,800만원 중 23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464	2,464	4	-	-	2,468	2,343	125	-	1,25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177] 등을 통한 출연연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표준화된 예산·결산 관리시스템 개발사업으로서 추진되었으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4억 2,4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24년 예산도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177) 감사원은 201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연구사업비에서 인건비성 급여 등 편법집행, 경상운영비 등 용도로 부당집행, 개인연금 지원 등 용도로 부당집행, 결산잉여금 처분 부적정,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의 사항을 지적하였음.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구분	예산 (백만원)	주요 성과	
		배포 성과	주요 기능 개선 성과
2014년	7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예산, 회계, 인사, 복무 시스템 시범 구축
2015년	300	-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예산·회계·인사·복무 기능 개선
2016년	600	육아정책연구소	전자결재시스템, 법인카드 모니터링, 연구개발적립금 관리, 계정 원장 조회
2017년	2,400	통일연구원	급여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2018년	2,400	-	망분리 연구기관 망연계솔루션 도입 및 연계
2019년	2,4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자증빙 시스템 구축, 통계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연계, 신규 참여기관 업무시스템 컨설팅
2020년	2,212	-	경영자정보시스템(EIS) 개발, 지출결의·전자증빙 기능 개선
2021년	1,974	-	재정업무포털 구축, 이슈추적시스템(ITS) 개발
2022년	1,974	건축공간연구원	사업별/사용자별 예산 사용 제어 기능 구축, 법인카드 오·남용 반납처리 등 법인카드 관리기능 개선
2023년	2,46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자산관리, 계약관리 등 구축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당해 사업의 성과를 살피면, 10여년간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개 연구기관 중 8개 기관만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1개 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만 당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한편, 연구회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각 연구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을 당초 수립하였으나, 시스템 활용 편의성 부족, 연구기관 데이터에 대한 연구회의 모니터링 가능성에 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점검 TF'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희망기관에 한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을 배포하되 나머지 기관은 기관별로 사용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은 연구용역 등 계약관리, 대외활동 등 복무관리, 재물조사 등 자산관리 등에 활용되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인 확산·활용이 필요함.

○ 감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적립금 관리 부적정(2015년)[178],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2019년)[179], 출연연구기관의 과도한 복지성 인사제도 운영(2023년)[180], 능률성과급

178)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소관 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적립금을 경상경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함

179) 소속 연구기관이 아닌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를 개인 자격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76명(98건)이 소속기관 모르게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를 수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

180) 소관 연구기관이 연구연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보고서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지급기준 관리 강화 필요(2023년)[181] 등의 문제점들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표준운영절차 보급을 통해 근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NFIS) 제공 기능 현황(2023년말 기준)>

구분	항목수	주요 기능
예산관리	55개	예산기준관리, 예산편성관리, 예산변경관리, 예산배정관리, 예산현황, 연구개발적립금 관리, 소요예산 추정관리, 수탁간접비 관리 등
회계관리	69개	예산집행관리, 결의서관리, 전표관리, 장부관리, 법인카드 관리, 세무관리, 예산실적현황, 자금관리, 결산관리, 부채관리, 회계기준관리, 수탁사업관리 등
계약관리	16개	연구용역, 일반계약, 단가계약관리, 구매계약관리, 검수관리, 원고검수확인서 관리, 계약현황 등
인사관리	38개	인사정보관리, 발령관리, 조직관리, 위원회관리, 평가관리, 인사기준관리 등
복무관리	39개	휴가관리, 유연근무관리, 출장관리, 추가근무관리, 대외활동관리, 근태현황관리, 교육관리, 외부겸직관리, 복무기준관리 등
급여관리	73개	급여기준관리, 기준정보관리, 4대보험, 급여관리, 급여세무관리, 급여현황, 퇴직금관리, 연말정산, 신청관리 등
사업관리	39개	현황관리, 사업발굴/공모/선정, 사업수행, 사업성과, 기본정보관리 등
자산관리	29개	고정자산관리, 자산변동관리, 재물조사, 자산결산관리, 자산코드관리 등
감사관리	23개	법인카드관리, 법인카드불출관리, 카드현황, 감사기준관리, 법인카드 모니터링 등

결과보고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연구연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환수하는 등 연구연가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을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

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영개선 성과와 무관하게 수입목표액을 과소하게 설정하여 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 결산 실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예상금액을 수입목표액에 반영하는 등 기관의 실질적 경영개선 성과를 능률성과급 지급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구분	항목수	주요 기능
경영자 정보시스템	20개	예·결산 현황, 출연금 추이, 결산현황, 인사·급여·복무 현황, 경상운영비 집행 현황 등
업무포털	23개	공지사항, 자원관리, 자원예약, 조직도 관리, 설문조사, 동호회 관리 등
총계	424개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관리, 이슈추적시스템(ITS) 항목은 제외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투입 예산에 걸맞는 참여기관 확보, 출연연구기관 예·결산 투명성 제고 등 성과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한국개발연구원[182]: 수시연구사업비 사업·예산 관리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개발연구원” 사업은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정책교육 관련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692억 4,800만원 중 631억 3,500만원이 출연되고, 39억 7,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1억 3,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개발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개발연구원	66,770	66,770	2,478	-	-	69,248	63,135	3,976	2,137	68,54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국개발연구원은 2023년 수시연구사업비 예산현액 9,2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시의 사업계획을 준수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하였음.

182) 세부사업: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 부설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포함

□ ‘수시연구사업비’는 한국개발연구원 기본사업비 중 기관고유사업의 일종으로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을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임.[183]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2,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2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개발연구원 수시연구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71	71	21	-	-	92	20	72	-	89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2023년 수시연구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피면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험과 시사점 연구, 지역 혁신 클러스터 확충방안 연구, 산업단지 특성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연구 등 4개 연구과제가 실시[184]되었는데, 이는 2020년의 8개 과제, 2021년의 12개 과제, 2022년의 11개 과제에 비해 수시연구과제 수행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183)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23

184)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2023년 11월 과제선정되었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함.

<수시연구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연구과제명
2020년	19,100	663	부동산조세, 주택시장 그리고 거시경제간의 상호관계 분석
		1,576	공천제도와 입법행위
		2,325	교육혁신과 인적역량에 관한 연구: 유치원을 중심으로
		2,150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과제
		200	온디맨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입점업체 매출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 배달앱 시장을 중심으로
		485	교통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299	경쟁적 병목 시장 플랫폼의 전략과 정부 정책
		1,239	코로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 연구
		8,937	**합 계**
2021년	25,904	284	온디맨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입점업체 매출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 배달앱 시장을 중심으로
		476	교통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5,522	코로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 연구
		269	공공갈등·공론화·시민참여 국민인식조사 분석
		987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214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160	서울시 정비사업의 가격효과 : 재건축 프리미엄 추정을 중심으로
		237	경제특구 효과성 분석과 시사점
		369	개인사업자의 신용위험 분석 : 비용구조와 비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30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연구
		3,908	ESG 평가의 실효성 연구

구분	예산액	집행액	연구과제명
		22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12,478	**합 계**
2022년	20,460	234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337	서울시 정비사업의 가격효과 : 재건축 프리미엄 추정을 중심으로
		239	경제특구 효과성 분석과 시사점
		721	개인사업자 대상 경영교육·컨설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과 시사점
		717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연구
		1,752	ESG 평가의 실효성 연구
		1,164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4,215	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969	디지털 지급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1,274	대학 취업성과에 관한 연구
		3,934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험과 시사점 연구
		15,556	**합 계**
2023년	7,100	973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25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험과 시사점 연구
		839	지역 혁신 클러스터 확충방안 연구
		131	산업단지 특성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연구
		0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
		1,968	**합 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수시연구사업비의 최근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예산액-집행액)를 살피더라도, 2020년은 1억 163만원(예산액 대비 53%), 2021년은 1억 3,425만원(52%), 2022년은 4,904만원(24%), 2023년은 5,132만원(72%)으로 수시연구사업을 위한 예산의 상당부분(2020년~2023년 평균

46%)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시연구의 적정한 사업·예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전연구 사업비 집행잔액(이월금)은 당해연도 동일항목의 사업[185](기본연구 → 기본연구 / 연구지원 → 연구지원 / 일반사업 → 일반사업)에 편성함을 원칙[186]으로 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시연구사업비의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이월금)를 차년도 기본연구사업에 편성하고 있어 지침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187],

○ 수시연구사업비에 편성된 예산의 상당부분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

18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 구조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23)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186) 직전연도 사업비 집행잔액(이월금)은 당해연도 동일항목의 사업(기본연구 → 기본연구 / 연구지원 → 연구지원 / 일반사업 → 일반사업)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기타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25)

187) 수시연구사업은 기본연구사업의 일종에 해당함.

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예산편성시의 사업계획을 준수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2023년도에 수시연구사업의 과제시작일과 종료일을 살피면 2023년도 연내에 과제가 시작되어 종료된 연구과제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건의 연구과제는 2개의 회계연도에 걸쳐 사업이 수행되어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함.

<2023회계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산 내역>

연구과제명	과제시작일	과제종료일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2022. 9. 1.	2023. 2. 28.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험과 시사점 연구	2022. 11. 16.	2023. 5. 15.
지역 혁신 클러스터 확충방안 연구	2023. 7. 1.	2023. 12. 31.
산업단지 특성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연구	2023. 9. 15.	2024. 2. 29.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	2023. 11. 1.	2024. 1. 31.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또한, 대학 구조개혁·경제개발 5개년 계획·지역 혁신 클러스터·외국인 직접투자·개인연금에 관한 연구는 교육·거시경제·산업·금융 정책의 수립과 그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적 연구과제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시연구사업보다는 기관의 설립목적[188]을 달성하

188) 「한국개발연구원 정관」 제2조(목적) 한국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국내외 경제사회 현상

기 위한 기본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구원의 정관상의 목표, 기관의 특성 정책 및 환경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시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연구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수시연구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에 관한 종합적 연구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189]: 기본연구사업 외부용역비 집행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01억 2,500만원 중 350억 7,300만원이 출연되고, 27억 7,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2억 7,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7,982	37,982	2,143	-	-	40,125	35,073	2,774	2,279	37,81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기관의 고유 연구사업인 기본연구사업은 연구책임성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내부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함이 바람직하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개 기본연구과제를 외부용역의 형식으로 수행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189) 세부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1548-301)

□ ‘기본연구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사업비[190] 중 기본연구사업비로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3억 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억 7,600만원 중 13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469	1,469	307	-	-	1,776	1,313	463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으로 20개 연구과제 및 수시연구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중 3개 연구과제의 외부용역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외부용역비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과제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지급하는 용역비로 정의되며, 외부기관에 위탁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일반적인 원고 위탁 및 외부용역 등은 지양하도록 하고, 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대규모 설문조사, 행사 대행과 외부용역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용역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정하고 있음.

190) 기본사업비는 기본연구사업비와 연구지원사업비로 구분됨.

○ 위 지침을 기준으로 기본연구사업의 외부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면, 노무제공자 경비 설문조사(990만원)[19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관련 그룹인터뷰(990만원)[192] 등과 같이 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 수집을 위한 외부용역비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연구과제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경우 특정 학회에 연구과제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당해 연구과제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193]에서 관련 외부용역비 집행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본연구사업 외부용역비 집행 부적정>

연구과제명	용역 최종보고서 제목	용역 상대방	외부용역비 집행액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부가가치세 장기세원분포 분석	한국재정학회	1,200만원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구조모형을 통한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한국재정학회	1,0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재정학회	1,000만원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1) 연구과제명: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192) 연구과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193)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연구과제 연구보고서의 내용 및 참고문헌의 유사성 또는 동일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됨.

□ 당해 연구과제들이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연구사업인 기본연구사업의 연구과제인 동시에 1년 이내로 수행되는 단기과제인 점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원 내부의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외부용역을 통한 연구과제 수행은 연구사업 중 직접 수행이 매우 곤란한 과제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경우 당초 연구책임자의 이직에 따라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외부용역계약을 통해 당초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설명이나,

○ 기본연구과제는 연구원의 고유 직무로서 연구책임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담당한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연구원이 연구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직한 연구책임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행태가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단기의 기본연구사업은 연구의 책임성 및 기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수행하고. 외부용역비 집행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194]: 기본연구사업 임차료 등 과다집행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업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01억 2,500만원 중 350억 7,300만원이 출연되고, 27억 7,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2억 7,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7,982	37,982	2,143	-	-	40,125	35,073	2,774	2,279	37,81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의 중간보고심의회를 원격지인 서울에서 개최하여 임차료, 국내여비, 수용비, 회의비 등 예산을 불필요하게 과다 집행하였음.

194) 세부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1548-301)

□ ‘기본연구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사업비[195] 중 기본연구사업비로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3억 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억 7,600만원 중 13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3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469	1,469	307	-	-	1,776	1,313	463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으로 20개 연구과제 및 수시연구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중 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18개 연구과제[196]의 중간보고심의회[197] 개최 관련 예산집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가

195) 기본사업비는 기본연구사업비와 연구지원사업비로 구분됨.

18개 연구과제명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코로나19가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전망 및 정책 시사점	이민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사업과 지역발전: 자본지출과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	지역노동수요충격이 지역경제 및 재정에 끼친 영향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활용한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체계 변화의 효과 분석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연구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방안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196)

197) 연구사업의 수행관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규정은 연구과제의 계획 및 세부추진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착수보고심의회, 연구진도 및 방향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중간보고심의회,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최종보고심의회를 예정하고 있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개 연구과제의 중간보고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센터(코엑스)에서 동시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 임차료 1,593만원 및 우등버스 임차료 176만원을 집행하였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임차료에 대하여 회의실 임차는 정부·공공기관 보유 시설을 최대한 우선 활용하고, 호화로운 호텔 임차 등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임차료 집행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사업 수행관리 관련 예산집행 내역>

구분		착수보고심의회	중간보고심의회	최종보고심의회
위원 수		외부 48명 내부 36명	외부 46명 내부 36명	외부 55명 내부 41명
집행 예산[198]	전문가활용비	720만원	835만원	2,117만원
	임차료	250만원[199]	1,769만원	-
	외부용역비	38만원	-	-
	국내여비	-	716만원	46만원
	수용비	4만원	117만원	7만원
	회의비	613만원	1,015만원	787만원

198) 예산적요 '2023년도기본연구과제착수보고심의회개최비', '2023년도기본연구과제중간보고심의회개최비', '2023년도기본연구과제최종보고심의회개최비'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중간보고심의회의 원격지(서울) 개최에 따라 연구원 직원 출장 등에 따른 국내여비 716만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수용비 117만원, 회의비 1,015만원 등도 집행하였는데,

○ 경내에서 개최된 착수보고심의회의 경우 수용비 4만원, 회의비 613만원이 집행되었고, 최종보고심의회의 경우 국내여비 46만원, 수용비 7만원, 회의비 787만원이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사업 수행관리를 위한 각종 심의회 개최시 정부·공공기관 보유 시설을 최대한 우선 활용하여 과도한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99) 예산적요: 2023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심의회용 태블릿 단말기 단기 임차료 지급

9. 통일연구원[200]: 연구기획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통일연구원”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통일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39억 1,100만원 중 109억 6,100만원이 출연되고, 26억 3,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1,4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통일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일연구원	10,298	10,298	3,613	-	-	13,911	10,961	2,636	314	10,92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통일연구원은 연구기획사업비 중 수용비, 전문가활용비를 기관의 기초적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적 성격의 사안에 집행하여 사업별 예산 구분을 저해하였음.

200) 세부사업: 통일연구원(1538-301)

□ ‘연구기획사업’은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연구지원사업’의 일종으로, 통일연구원은 통일·북한·평화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및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연구사업 기획, 연구사업 관리체계 강화, 성과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기획사업’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2,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 9,700만원 중 1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통일연구원 연구기획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74	174	23	-	-	197	182	15	-

(자료: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의 연구기획사업비의 비중이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음.

○ 연구기획사업은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기획·관리하는 사업으로 연구기획사업의 성과는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됨. 따라서 그 예산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인 기본연구사업의 규모와 연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통일연구원의 연구기획사업비는 1억 7,400만원으로, 6억 4,000만원인 기본연구사업비의 27.19%의 규모이

며, 13억 5,900만원인 기관고유사업비(=기본연구사업비+연구지원사업비)의 12.80%의 규모임. 이를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하면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연구기획사업비 비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의 24개 연구기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관고유사업비 대비 연구기획사업비 비율은 가장 높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획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구기획 사업비(A)	기본연구 사업비(B)	기관고유 사업비(C)	A/B*100	A/C*1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5	0	3,168	-	8.36%
한국개발연구원	30	692	4,919	4.34%	0.6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2	1,469	2,483	4.22%	2.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1	1,415	5,074	10.67%	2.98%
통일연구원	174	640	1,359	27.19%	12.8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95	736	1,039	12.91%	9.14%
한국행정연구원	197	962	1,796	20.48%	10.9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9	2,385	2,852	1.64%	1.37%
산업연구원	78	2,006	3,551	3.89%	2.20%
에너지경제연구원	120	1,044	2,004	11.49%	5.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4	288	984	39.58%	11.5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4	1,222	2,357	12.60%	6.53%
한국노동연구원	3	919	2,365	0.33%	0.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1	1,569	2,967	8.99%	4.7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	803	1,299	4.98%	3.08%
한국법제연구원	206	901	2,362	22.86%	8.7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5	820	1,736	12.80%	6.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4	686	995	9.33%	6.43%
한국교통연구원	66	487	752	13.55%	8.78%
한국환경연구원	113	1,621	2,189	6.97%	5.16%
한국교육개발원	103	1,659	2,235	6.21%	4.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2	1,476	3,106	6.23%	2.96%
국토연구원	182	1,241	2,210	14.67%	8.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1	1,055	2,202	16.21%	7.77%
건축공간연구원	35	658	1,100	5.32%	3.18%
평균(경인사제외)	106	1,115	2,247	9.48%	4.70%

(각 연구기관 결산 설명자료(Ⅲ-3)를 토대로 작성)

□ 한편, 통일연구원의 연구기획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살피면 비목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연구기관 운영에 있어 기초적 토대가 되는 성격의 활동에 편성·집행되는 경상운영비로 집행되어야 할 사안을 연구기획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 첫째, 연구기획사업비 내 수용비 집행 중 '물품구입비 지급' 명목으로 집행한 273만원은 마트, 카페, 식당 등이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연구 또는 행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료·음료비 등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회의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구기획사업비 내 전문가활용비 550만원을 '연구위원 스냅사진 촬영비 지급'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기관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대금은 연구기획 또는 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관의 일반적인 활동에 해당하므로 경상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함.

○ 셋째, 연구기획사업비 내 전문가활용비 110만원을 '2023년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명목으로 외부위원에게 지급(사례금)한 사실이 있는데, 통일연구원의 「인권경영 이행지침」에 따르면 인권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치되는 것[201]으로 기관 일반 운영과 관련되므로 경상운영비에서 사례금을

집행하여야 함. 참고로, 통일연구원은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한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사례비 60만원은 경상운영비에서 집행하였음.

○ 넷째, 연구기획사업비 내 수용비 집행 중 명함제작(42만원), 연하장 제작(55만원). 자료(신문[202])구독료 지급(56만원) 등의 경우도 연구기획사업비가 아닌 경상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사업구분상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통일연구원은 연구기획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기획사업의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예산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1) 제22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4.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02)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3]: 경상경비 집행 효율성 검토 필요(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업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고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31억 4,100만원 중 125억 2,200만원이 출연되고, 3억 1,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814	12,814	327	-	-	13,141	12,522	319	300	13,379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ESG 경영 확대를 위해 iPad 79대를 7,167만원에 구매하였으나 인력규모·지급방식 등을 고려할 때 자산구매에 과도함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3) 세부사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553-301)

□ ‘연구기관 인센티브’는 연구기관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매년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경상경비 인센티브를 배정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고유사업으로 202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총 11개 연구기관에 대하여 8억 8,199만원을 배부(집행)하였음.

<2023년 연구기관 인센티브 지급내역>

(단위: 천원)

기관명	평가등급	기준액	최종 산출금액[1)]
국토연구원	A	100,000	107,45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	50,000	57,454
한국교통연구원	A	100,000	107,4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	50,000	57,454
한국법제연구원	B	50,000	57,4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	50,000	57,4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	100,000	107,45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B	50,000	57,45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B	50,000	57,454
한국환경연구원	A	100,000	107,454
건축공간연구원	A	100,000	107,454
합계		800,000	881,994

주1) 평가등급별 기준금액에 따라 배분 후 잔액은 배정 기관의 수로 균등 배분(기관별 7,454천원)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경상경비 인센티브로 5,745만원을 지급받아 2023년 11월 21일 ‘하이브리드 근무환경(태블릿PC) 구축 관련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통해 총액 7,167만원[204)]에 Apple社의 iPad Air(5세대) 79대를 구매하여 공급받았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204) 경상경비 인센티브 5,745만원에 경상운영비 1,422만원을 더하여 집행

은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연구기관별 인센티브는 경상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운영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되, 전직원 포상금 또는 성과급 등으로의 집행을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동 지침은 경상운영비는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야 하며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도록 정함.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해당 기기의 원외 반출이 불가하며, 실제 각종 회의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친환경 업무 수행환경을 조성(ESG 경영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 2024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103명이 근무하는 연구기관에서 79대의 iPad 구매는 기관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경상경비를 활용하여 구매한 iPad 79대를 모두 연구위원·행정원 등 직원 개인에게 지급(대여)하였다는 점, 친환경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량의 태블릿PC 등 정보기기를 구매하고 각 부서에 보급한 후 회의를 수행하는 개인(직원)이 대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해당함.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경상경비 및 경상경비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구입행위의 적정성 및 수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행정연구원[205]: 규제사후영향평가센터(세종연구실) 운영 내실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행정연구원” 사업은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50억 9,200만원 중 143억 6,900만원이 출연되고, 6억 5,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행정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행정연구원	14,556	14,556	536	-	-	15,092	14,369	656	67	13,90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국행정연구원은 규제사후영향평가센터를 세종시에 개소하였으나, 관련 조직과 인력의 획득에 미흡함이 있으므로 「직제규정」 개정 및 내부인력 활용 등의 검토가 요구됨

205) 세부사업: 한국행정연구원(1552-301)

□ 한국행정연구원은 2023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에 규제사후영향평가센터(세종연구실)를 개소하였음. 세종연구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규제영향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정부부처의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정부 밀착형 규제연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었음.[206]

○ 세종연구실 개소 및 운영 관련 2023년 집행된 예산은 총 1억 3,939만원(인건비 제외) 등으로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료 4,865만원, 사무실 시설관리 등 유지보수비 5,320만원을 포함함.

□ 사후규제영향평가는 대통령 소속의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추진에 의해 형성된 제도로,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중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분석하여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도입·추진을 발표하면서, 재검토 기한 도래 또는 쟁점 규제 중 심층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규제연구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에서 분석·검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 심사 시 그 분석·검증결과를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힘.

○ 이에 대한 조치로 한국행정연구원은 2023년 1월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규제정책연구실 내 규제정책연구센터와 규제연구센터를 폐지하고, 사후영향평가팀과 비용분석평가팀을 신설하며, 2023년 9월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사후영향평가팀의 분장사항으로 '한국행정

206) 한국행정연구원 보도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세종연구실' 설립하여 정부 밀착형 사후규제영향평가 연구 본격화」(2023.512)

연구원 세종연구실 사업관리 및 지원’을 명시하였음.

□ 다만 한국행정연구원은 세종연구실을 개소하면서 세종연구실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사후영향평가팀 소관의 연구실(연구장소)로 활용하여, 사후영향평가팀 직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행정연구원 본원에서 근무하되, 2명씩 2개월마다 세종연구실에 순환하여 단기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후영향평가팀 팀원(석사급 연구원) 전원(6명)을 계약직(비정규직) 연구인력으로 충원하였는데 직원 채용공고[207]에 세종특별시 근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당해 인원들을 세종연구실에 상주하게 하지 못하고 단기의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사후영향평가팀 업무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우려가 큼.

□ 사후규제영향평가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탁월한 성과의 창출이 요구되며 한국행정연구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원과 별도의 사무실을 개소하였으나, 조직·인력의 획득 성과 및 운영행태는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시행을 위해 세종연구실을 포함한 사후영향평가팀 충원 및 운영에 있어 외부의

207)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도 제4차 직원 채용공고

단기 인력을 활용하기보다는 연구원 내부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직·정원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8]: 계약관련 법령준수노력 미흡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63억 5,500만원 중 251억 3,300만원이 출연되고, 4억 8,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 3,6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809	25,809	546	-	-	26,355	25,133	486	736	25,32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워크숍 장소 및 채점본부 합숙 시설 임차를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사업의 시기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은 수의계약 사유로서 적정하지 아니함

208) 세부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공공기관에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209]하며, 동법 제1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공공기관의 공시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를 통해 경영공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공시 내용에는 수의계약체결 내역과 사유가 포함되어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시한 2023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살피면, 평가원은 자체규정인 「회계규정시행규칙」 제217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사유로 총 6건, 총 5억 2,875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209)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정관·사채원부,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 평가원의「회계규정시행규칙」제217조제1항제1호 가목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함.

<회계규칙 제21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현황>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금액(만원)
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컴퓨터 기반 평가 시행 운영 위탁 용역 연장	퓨처누리	5,280
②	학업청취도 컴퓨터 기반 평가시스템 구축사업(3차연도) 감리 용역	테크원	2,400
③	수업연구회 컴퓨터 기반 자율평가 출제 역량 강화 연수(워크숍)	코리아나호텔	17,757
④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등학교 5학년 및 중학교 2학년 성취수준 설정 워크숍	코리아나호텔	15,982
⑤	채점본부 격리 합숙 시설 임차(3월)	건설경영연수원	5,728
⑥	채점본부 격리 합숙 시설 임차(6월)	건설경영연수원	5,728
합 계			52,875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업성취도 컴퓨터 기반 평가 시행 운영 위탁 용역 연장(①) 및 감리 용역(②)의 경우 2023년 3월 2일 교육부의「20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기본 계획」변경으로 사업이 긴급하게 진행되어 수의계

약을 진행했다는 의견임.

□ 이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워크숍 행사(③, ④), 합숙 시설 임차(⑤, ⑥)에 대하여는 감염병(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려움.[210]

○ 국가계약법령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수의계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사유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편의를 위해 법령의 수의계약사유를 확대해석하여 수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211]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경우에 따라 5

---

2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함.

211)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회계규정시행규칙」제224조[212]는 관련규정이 미비한 등의 문제도 발견됨.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2조[213]는 예산규모가 25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하 생략)

212) 제224조(견적서의 제출요구) ①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17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사목·아목, 제218조 및 제219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17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계약

213)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의 기준·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회계규정시행규칙」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별도의 계약 기준·절차를 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되었으나 「회계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관련 기준·절차의 지체현상이 발생하여 법령이 정한 절차에서 벗어나 자의적 예산집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계규정시행규칙」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준용규정을 도입하거나 「회계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국가계약법령상의 각종 기준·절차를 기관 운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14]: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63억 5,500만원 중 251억 3,300만원이 출연되고, 4억 8,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 3,6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809	25,809	546	-	-	26,355	25,133	486	736	25,32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의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장기근속자 및 정년(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총 1,4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214) 세부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 경상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목으로 포상금을 총 1,460만원을 집행하였음. 당해 포상금은 근속포상 및 정년(명예)퇴임포상 지급에 해당하며, 10년 근속자 22명에게 30만원씩 총 660만원, 20년 근속자 5명에게 40만원씩 총 200만원, 정년(명예)퇴임자 6명에게 100만원씩 총 600만원이 지급되었음.

○ 장기근속자 및 정년(명예)퇴임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포상규칙」〔별표 3〕[215]에 따른 것임.

<최근 5년 근속포상 및 정년(명예)퇴임포상 지급액>

구분	근속포상			정년(명예)퇴임포상 (100만원)	지급총액
	10년 (30만원)	20년 (40만원)	30년 (50만원)		
2023년	660만원	200만원	-	600만원	1,460만원
2022년	690만원	400만원	-	800만원	1,890만원
2021년	330만원	80만원	-	-	410만원
2020년	180만원	40만원	-	800만원	1,020만원
2019년	270만원	400만원	-	200만원	870만원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5) [별표 3] <신설 2008.7.22., 2014.6.30> 부상 수여 기준표

포상 구분	부상 내역	비고
근속포상	- 10년 근속포상 : 온누리상품권 30만원 - 20년 근속포상 : 온누리상품권 40만원 - 30년 근속포상 :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정년(명예)퇴임포상	-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공적포상 및 우수포상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경상운영비는 최대한 절감 집행하도록 하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포상금품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퇴직예정자 등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등 과도한 수준의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1조제3항도 동일하게 '공공기관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하여 장기근속자 및 정년(명예)퇴임자에 대한 포상금을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 산업연구원[216]: 일반사업 구조 조정 검토 필요(제도개선)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연구원” 사업은 국내외의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는 산업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48억 1,300만원 중 228억 3,200만원이 출연되고, 17억 7,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업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산업연구원	22,408	22,408	2,405	-	-	24,813	22,832	1,775	207	24,965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산업연구원은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중국종합연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의 폐지·통합 등 구조조정이 요구됨.

□ 2023년 산업연구원은 총 11개 24억원 규모의 일반사업을 수행하였음.

216) 세부사업: 산업연구원(1535-301)

2023년 산업연구원의 일반사업 중 '산업경기 모니터링 및 예측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운용' 등 3개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3년 7억 7,100만원이던 예산이 2024년 19억 2,700만원으로 증액되어 사업규모가 증가하였음.

○ 한편,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중국종합연구' 등 6개 사업은 사업예산이 감소하였음.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은 2023년 1억 3,500만원이던 예산이 2024년 6,2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중국종합연구'는 2023년 1억 7,900만원이던 예산이 5,8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산업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 감	
			(B-A)	%
○ 일반사업비	2,439	3,556	1,117	45.8
산업경기 모니터링 및 예측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운용	253	-	△253	△100.0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연구	62	-	△62	△100.0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발전전략 연구	48	-	△48	△100.0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135	62	△73	△54.1
·한국 경제의 산업 각 분야별 미래-경쟁력에 관한 연구	93	79	△14	△15.1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구축 사업	771	1,927	1,156	149.9
·동아시아 진출기업을 통한 공급사슬 분석	238	155	△83	△34.9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종합연구	300	270	△30	△10.0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 운영	-	745	745	순증
·중국종합연구	179	58	△121	△67.6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360	260	△100	△27.8
·한-인도네시아 산업혁신연구협력사업	-	1,525	1,525	순증

(자료: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은 산업연구원 「직제규정」[217]에 따라 본원 연구지원 업무, 대중국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중국 현지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북경지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북경지원에는 산업연구원 직원 1인(연구위원·북경지원장) 및 현지채용 인원 1인이 근무하고 있음.

○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예산은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2024년에는 북경지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고정비 1억 4,100만원[218]에도 미치지 못하는 6,200만원 수준의 예산만이 편성되었음.

○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2023년도 결산시 발생된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승인 후 임차료·수용비·전문가활용비 등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바, 2024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7개월을 연구기간으로 정하여 총 1억 3,000만원(임차료 6,600만원, 수용비 4,031만원, 전문가활용비 910만원 등)을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기

217) 「직제규정」 <별표 2>

부서명 (하위부서)	영문명	업무분장
(북경지원)	Beijing Office	1. 본원 연구지원 업무 2 대중국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MOU 체결기관과의 협력, 중국경제 모니터링 실시, BSI 업무지원) 3. 중국 현지 연구업무 수행

218) 사무실 임차료(6,900만원), 비정규직 인건비(3,192만원), 공공요금(108만원), 사무실·차량 관리비 등 수용비(3,916만원)

간이 2024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2025년 8월까지로 설정되는 구조는 향후 적정한 예산 확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적립금을 통한 재원 충당 관행의 반복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최근 5년간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운영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예산액	62	135	135	153	153
전년도 이월액	2	15	39	45	51
예산현액	64	150	174	198	204
결산액	-	148	159	159	159

(자료: 산업연구원)

○ 한편 조직과 성과의 측면에서 당해사업을 검토하면, 북경지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1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국산업경제브리프 발간, 연구교류 행사 개최 등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 및 확대가능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219]

○ 조직 내 역할의 측면에서도 북경지원이 별도의 조직 및 일반사업으로 지속하기 위하여는 북경지사 고유의 목적과 역할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직제규정」에 따르면 북경지원의 업무분장 중 첫 번째 업무가 '본원 연구지원 업무'라는 점에서 일반사업으로서의 고유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북경지원의 「직제규정」 상의 두 번째 업무분장사항은 '대중국

2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보고서 작성 등 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줄어드는 예산과 조직 축소 상태에서 선택과 집중의 노력과 같은 창의적 활동이 부족하며, 본원과 지원의 체계를 제도화하고 연구기획에 기여한 바 있으나 기존과 차별화되는 내용이나 새롭게 발굴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가 불분명함.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인데 북경지원의 조직과 사업의 주요 목적이 연구업무의 직접 수행이 아닌 본원의 연구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유지 등의 연구지원사업이라면, 산업연구원은 관련 예산을 기관고유사업 내의 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5년간 의무유지기간이 적용[220]되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중국종합연구’ 예산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2024년 예산인 5,800만원은 2023년 예산 1억 7,900만원에 비해 32% 수준이며 2020년 예산 3억 5,000만원에 비해 17% 수준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중국종합연구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예산액	58	179	222	277	350
전년도 이월액	74	200	197	251	427
예산현액	132	379	419	528	777
결산액	-	305	220	331	526

(자료: 산업연구원)

○ 2023년 ‘중국종합연구’ 예산의 세부집행내역을 살피면, ‘중국 서부3성 지역과의 한중 산업협력 연구’ 등 3개 연구과제[221]에 총 1억 7,000만원이 집행되어 연구과제 1개당 평균 5,700만원의 예산이 소

220) 일반사업이 기관고유사업을 전환된 경우, 사업계획 임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 후 5년간 의무유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p.25))

221) 비연구과제인 ‘중국 산업 연구 DB 구축’과 ‘중국종합연구일반’은 제외

요되었음. 이를 고려하면 2024년 5,800만원의 예산은 1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창출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됨.

<2023년도 중국종합연구 실적>

세부연구과제명	결산액(백만원)
중국 서부3성 지역과의 한중 산업협력 연구	50
주요 산업의 한중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68
중국 진출 기업 경기 조사	52
중국 산업 연구 DB구축(비연구)	22
중국종합연구일반(비연구)	113
합계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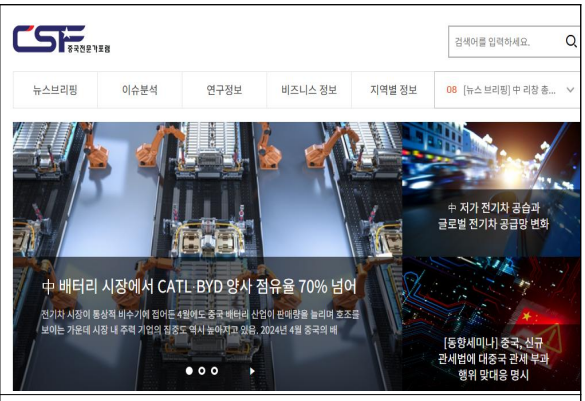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 또한, 산업연구원의 '중국종합연구' 세부과제인 '중국 산업 연구 DB 구축'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운영' 세부과제인 '중국전문가포럼(CSF) 컨텐츠 제공'은 중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제공하여 연구 및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으로 통합운영을 통해 상승효과(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포털사이트 비교>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정보포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 나아가, 산업연구원의 ‘중국종합연구’ 2024년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67.6%(1억 2,100만원) 감액되었다는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종합연구’ 2024년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3.6%(4억 7,100만원) 감액되었다는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운영’ 2024년 사업예산은 50%(1억 6,100만원) 감액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관련 연구사업의 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산업연구원은 출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을 위해 일반사업 중 지속가능성 및 성과창출가능성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의 폐지·통합 등 구조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222]: 일괄적인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지급 부적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3년 출연금 예산현액 149억 원 중 130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14,597	14,597	303	-	14,900	13,050	214	1,636	15,217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검토의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일괄적인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지급은 부적절하므로, 출장 여부 및 빈도 등 관련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원

222) 세부사업: 정보통신정책연구원(1537-301)

차량유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자가차량 보유 및 운행자에 대하여 연구원 내 「자가운전차량유지비관리요령」[223] 에 따라 자가운전차량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 자가운전차량유지비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연구원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연구원 소속 부연구위원 이상 및 책임행정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액(월 20만원~30만원)[224] 지급하고 있으며[225], 2023년도에는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2억 4,035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도 월별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지급 대상 인원 및 지급액>

(단위: 원, 명)

지급년월		지급액	대상인원
2023년	1월	18,973,390	79
	2월	19,670,020	81
	3월	19,710,030	81
	4월	19,456,720	83
	5월	19,836,720	83
	6월	18,840,040	83
	7월	19,453,390	82
	8월	19,916,740	84

223) 제2조(지급대상) 차량을 구입하여 연구원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부연구위원 이상 및 책임행정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224)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 월 30만원, 부연구위원 및 책임행정원: 월 20만원

225) 연구원은 본인 명의 차량 보유자 중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월 중 7일을 초과한 휴가·출장기간에 대한 자가운전차량유지비는 환수 조치한다고 설명함.

「자가운전차량유지비관리요령」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자가운전차량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표 제2호>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신청서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차량유지비의 계산 및 지급방법

가. 차량유지비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월 단위로 지급하되 자가운전 운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8일이상의 휴가자 및 8일이상의 출장자(해외출장자 포함)에 대하여는 월 중 7일을 초과하는 휴가, 출장기간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년월		지급액	대상인원
	9월	20,310,040	85
	10월	22,033,340	87
	11월	21,276,720	88
	12월	20,873,400	87
총합계		240,350,550	1,003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원은 동 유지비 지급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위치(충북 진천), 다수의 정부 수탁과제 수행으로 인한 수도권 소재 유관기관으로의 출장 및 광역 교통 시설까지 이동 등으로 인해 자가 차량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모든 출장에 연구원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연구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차량 유지 경비 절감을 위하여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원의 지리적·업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자가운전차량유지비는 출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성격임을 고려하면 일괄적인 지급 방식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자가운전차량유지비의 지급은 업무와 관련한 출장의 수행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바, 업무관련 출장수행 여부 또는 빈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출장 이력이 없거나 그 횟수가 극히 적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동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3년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수령자 국내출장 현황[226]>

국내출장 횟수	인원	근거리출장[227] 횟수[228]	인원
0회	8명	0회	19명
1~10회 이하	38명	1~10회 이하	26명
11회~20회 이하	17명	11회~20회 이하	3명
21회~30회 이하	12명	21회~30회 이하	6명
30회 이상	18명	30회 이상	39명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출 자료 재구성)

○ 참고로, 연구원은 전체 임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교통보조비(월 10만원)를 편성·지급하고 있음[229].

□ 한편, 자가운전차량유지비의 수령자는 출장 시 업무용 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원의 「여비지급요령」에 따라 여비 지급 시 일비는 2분의 1 감액하여 지급하고 교통수단의 운임은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230],

---

226) 국내출장 횟수가 적거나 0회인 경우에도 근거리출장을 다수 수행한 사례도 있으나, A의 경우 2023년 국내출장 수행 이력이 4건, 근거리출장 수행이력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출장 빈도가 극히 적은 경우가 일부 확인되고 있음.

227) 「여비지급요령」

제15조(근거리출장) ① 근거리출장이란 동일생활권역(광역시를 포함한 시·군 단위)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하며, 다른 시·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당일 귀임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근거리출장으로 본다.

② 근거리출장의 경우 별도 여비의 구분없이 출장시간을 기준으로 정액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제4호>와 같다.

228) 연구원에 따르면, 근거리출장자의 경우 대부분 교통비 일부를 감액(50%)한 여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근거리출장시 자가차량 이용 여부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229) 다만, 자가운전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직원은 교통보조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수당지급요령」

제15조(교통보조비) 직원에게는 월 100,000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연구원에서 지원받거나, 자가운전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직원은 제외한다.

230) 제4조(일비 등 계산) ①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차량 또는 업무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연구원은 일비를 전액 지급하고 교통비를 대중교통(버스) 운임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여비지급요령」를 위반하여 여비를 중복지급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출장수행 여부 또는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등 보다 면밀한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가운전차량유지비의 일괄적인 지급을 지양하고, 동 유지비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왜곡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제12조(지급기준) ① 국내출장여비는 <별표 제4호>의 기준에 의거 해당 교통 수단의 운임, 일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한다.

② 업무용차량 또는 업무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해당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통행료 등은 계산하여 전도한 후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및 관련 영수증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6. 한국노동연구원[231]: 이월을 통한 자체수입 초과분 직접사용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분석하고, 고용·노동·사회정책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7억 4,100만원 중 162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노동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노동연구원	16,286	16,286	455	-	16,741	16,268	152	322	15,84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 검토의견

한국노동연구원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수입을 임의적으로 동일사업 예산으로 이월하는 등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집행이 발생함.

□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사업(일반사업)은 고용노사관

231) 세부사업: 한국노동연구원(1543-301)

계 혁신리더십 교육연수과정 운영 등을 통해 고용노사관계 혁신을 이끌 각계 리더를 육성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7,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72	72	-	-	72	72	-	-	7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은 동 사업을 통해 'KLI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참가자들에게 일정액의 연수과정등록금[232]을 납부받고 있으며, 이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체수입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자체수입을 포함한 편성·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예산)			집행액 (=결산)			초과 수입	비고
	출연금	자체수입		출연금	자체 수입	집행 잔액		
		당초 예산	전기 이월금					
2021년	80	147	22	80	126	43	-	집행잔액을 '22년 동사업으로 이월

232) 2024년의 경우 개인당 530만원의 등록금이 책정됨(수업료: 430만원, 동문회비 및 기타: 100만원, 해외연수비 별도)

구분	편성액 (=예산)			집행액 (=결산)			초과수입	비고
	출연금	자체수입		출연금	자체수입	집행잔액		
		당초 예산	전기 이월금					
2022년	80	138	43	80	172	9	38	집행잔액과 초과수입을 '23년 동사업으로 이월
2023년	72	105	47	72	152	-	40	초과수입을 '24년 동사업으로 이월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은 이에 대해 「경인사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상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수과정등록금 초과수입은 타 기타수입 항목과 달리 수입이 해당사업의 특수성(예컨대 전체 등록생 수, 인당 등록금 액수 등)에 기반하여 발생하므로 직접경비[233]로 이월하여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원의 설명과 같이 동 연구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서는 자체수입 초과달성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의 사용처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234] 자체수입 초과분

233) 「예산총칙」 제5조(초과수입금의 사용 및 수입대응지출) 연구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능률제고를 위하여 자체수입이 당초 수입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수입금 범위내에서 필요한 직접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직접경비는 수입금액과의 연관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집행할 수 있으며, 인건비성 경비 및 경직성 경상비 목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234)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선적립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 후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208),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

전액의 동일사업 직접 이월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총칙」 제7조[235]에서는 지출예산 중 '집행잔액으로 인한 잉여금'에 한정하여 이월을 통한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면 이를 연구개발적립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동 교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입 전액을 동일사업의 수입예산으로 직접 이월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은 동 교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입분을 예산집행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적립금 적립 등 자체수입 초과분 사용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운용지침」(경제·인문사회연구회, p60))

235) 제7조(예산의 이월) 지출예산 중 집행잔액으로 인한 잉여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것으로 부득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17. 한국직업능력연구원[236]: 일반연구사업과 연구지원사업 통합 발주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 교육훈련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2023년 출연금 예산현액 236억 3,700만원 중 230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3,445	23,445	192	-	23,637	23,096	182	359	22,543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 검토의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정보화사업 운영시 연구지원사업과 일반사업의 구분 없이 일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사업별 구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36) 세부사업: 한국직업능력연구원(1549-305)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정보화 관련 사업으로 'HRD웹정보서비스 생성·운영사업',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화사업',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사업' 및 '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 및 기간계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등 총 4개의 연구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023년 정보화 관련 예산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예산총액	집행액			잔액
		출연금	자체수입	합계	출연금	자체수입	합계		출연금	자체수입	합계	
연구지원	HRD웹정보서비스 생성·운영사업	40	-	40	16	-	16	56	55	-	55	1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화사업	525	44	569	31	44	75	644	556	69	625	19
일반사업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90	-	90	-	-	-	90	90	-	90	-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및 기간계시스템 운영지원	144	-	144	1	-	1	145	144	-	144	1
합계		799	44	843	48	44	92	935	845	69	914	21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동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 사업 중 아래의 3개(연

구지원사업 2건, 일반사업 1건) 사업은 통합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정보화 관련 사업 통합 발주 내용>

구분	사업명	용역(사업) 내용
연구지원	HRD웹정보서비스 생성·운영사업	기관 대표 홈페이지 Hardware, System Software, 개발부문 (국·영문 홈페이지, 홈페이지 관리지 시스템)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화사업	통합정보시스템 Hardware, Network, System Software, 개발부문 (포털, MIS, 연구관리)
일반사업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전사적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Hardware, Network, System Software 부문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와 같은 사업의 통합발주를 통한 운영은 사업자와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관리 및 발주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유지보수의 안정성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일반사업'의 경우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사업인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사업을 연구지원사업과 같이 통합 발주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사업 정의>

구 분	내 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전체로 심의를 받는 '기관고유사업'과는 달리 '일반사업'은 매년 개별 연구과제마다 그 타당성을 심의받아 특정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인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시스템 운영비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집행하는 경우 동 연구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업 성과와 그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렵게 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수준의 적정성 또한 판단하기 어려워지게 됨.

□ 따라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통합발주 시 일반사업을 제외하여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237]: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수립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3억 9,000만원 중 160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039	16,039	351	-	16,390	16,078	312	-	16,087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검토의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여러 연구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결과보고서에 행사의 논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아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237) 세부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1547-301)

□ 일반사업인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은 기존 양성평등 정책 평가 및 혁신 전략 모색, 양성평등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 의제 개발, 다양한 국가기관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3억원이 편성되어 2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도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300	300	-	-	300	293	7	-	98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동 연구사업의 세부과제로 개원 4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성평등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는 ‘개원 40주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음.

<개원 4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20일 오후 2시
◦ 장소 :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제: 변화하는 환경과 성평등 정책의 미래
◦ 주요 내용
- 연구원 개원 4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성평등 동향과 전략 공유 및 향후
해결 과제와 방안 모색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당초 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238만원을 초과한 6,238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사 관련 비용을 일반연구사업인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외에도 연구지원사업(국제협력활성화 사업) 등의 연구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음.

<개원 40주년 국제학술회의 행사 관련 편성·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편성액[238]	집행액	비고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50,000	49,500	행사용역비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	2,500	답례품(2,200)
			대기실 추가 임대(220)
			행사 관련 직원 출장(80)
국제협력활성화 사업	-	8,964	자료번역, 통역 및 녹화 업로드(4,388)
			자료집 인쇄(1,089)
			답례품(3,487)
기타운영비 외 28개 사업	-	1,420	행사 관련 직원 출장(1,420)
합 계	**50,000**	**62,384**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정부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출연연구기관은 예산집행에 있어 국가회계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또한 「국

238) 2023년도 각목명세서상 편성된 내역

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국가재정법」 제45조[239]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사업을 위한 경비를 별개의 연구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그 재원이 된 연구사업의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고,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동 연구사업의 목적이나 관련된 예산의 전체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한편, 동 국제 학술회의의 결과보고서는 ① 개요(행사 개요, 연사 소개), ② 분야별 세부운영(연사케어, 웰컴디너, 셋팅, 참가결과, 세션 운영, 기타), ③ 디자인 및 홍보(디자인, 영상, 언론보도), ④ 기타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 학술회의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제문과 토론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도 작성되어 있지 않아 학술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성과들을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음.

○ 또한, 국제 학술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발제자 1명을 제외하면 발제자 및 토론자 모두 국내연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학술

23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회의와의 차별점도 찾기 어려움.

□ 따라서, 향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별 연구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연구사업의 예산을 활용한 연구사업 수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성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240]: 통신비 지급 부적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사업은 과학기술 및 관련 혁신에 대한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77억 5,300만원 중 168억 2,100만원이 집행되고, 38억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17,472	17,472	281	-	17,753	16,821	552	380	16,914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검토의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 수행상 필요를 검증하지 않고 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신비를 지급하였음.

240) 세부사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1532-301)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3년도 경상운영비의 공공요금 목에 전신전화료 이동전화사용료로 2,16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부서장 휴대전화 및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집행됨.

<2023년도 기관운영비 중 공공요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목	산출근거		산출액
공공요금	우편 및 통신요금	1. 우편료 문서발송 5,000원*350부*2회	35
		2. 전신전화료 이동전화사용료 60,000원*30대*12월	21,600
		3. 단체문자발송료 이동전화사용료 100원*165명*20회	330
	기타 공공서비스 요금	150,000원*12월	1,800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동전화사용료를 연구원의 '공무사용 휴대전화 지원 및 관리기준'에 따라 ①기관장, ②보직자인 부서장 및 파견연구관, ③기관장 차량 운전·수행을 업무로 하는 자에 대한 통신비로 지급하였다고 설명함.[241]

241) '공무사용 휴대전화 지원 및 관리기준'
제2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무사용 휴대전화 및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관장
2. 보직자"(부서장, 파견연구관)
3. 기관장 차량 운전·수행을 업무로 하는자
제3조(지원기준) 공무사용 휴대전화 및 통신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공무사용 휴대전화 및 통신비 지원기준

<통신비 지급내역>

(단위: 원)

연도	통신비 지급대상 인원수	지급금액
2019	29	16,503,860
2020	28	16,283,307
2021	34	17,822,445
2022	34	20,158,593
2023	34	20,979,408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통신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상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통신비 외의 요금(단말기할부금, 소액결제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임원인 원장에 대해서는 단말기와 휴대전화 사용료 실비를 상한 없이 지급하였고, 부서장, 파견연구관에 대해서는 보직의 성격 및 업무 수행상 필요를 검증하지 않고 매월 통신비 5만원를 지급하여 통신비를 집행하였음.

□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사용료 실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신비를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지원대상	지원범위
기관장	○ 통신비: 전액 지급 ○ 단말기 지원: 대상
보직자 (부서장, 파견연구관)	○ 통신비: 5만원/월 ○단말기 지원: 비대상
기관장 차량 운전·수행 직원	○통신비: 5만원/월 ○단말기 지원: 비대상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지출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외에 보직자 등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통신비 지급 대상 업무 형태, 실제 업무용 전화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통신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통신비 지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 한국환경연구원[242]: 계약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기관 평가 인센티브 사용 지양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2023년 출연금 예산현액 236억 8,800만원 중 226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으며, 7억 6,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환경연구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2022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3,380	23,380	308	-	23,688	22,626	293	269	21,745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2) 검토의견

한국환경연구원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금액을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운용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 한국환경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2년 연구기관 평가결과

242) 세부사업: 한국환경연구원(1554-301)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금액(1억 745만원)을 활용하여 2023년도에 세 차례 단체 플로티룩(Floaty Look) 구매 관련 예산을 집행하였음.[243]

<2023년도 플로티룩 구매 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적요	지출일자	지출금액
경상운영비 수용비	단체 플로티룩 구매	7월 20일	22,080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플로티룩 구입 대금 지급	8월 1일	10,000
	플로티룩 구매	8월 24일	57,968
	합계		90,048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7월 20일에는 A업체에 2,208만원을 지급하였고 8월 1일에는 B, C 두개의 업체에 500만원씩을, 8월 24일에는 B, C 업체에 최종 정산금액 31,471,480원과 26,496,100원을 지급하여 해당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243) 얇고 시원한 옷차림이라는 뜻으로 시원하고 가벼운 쿨맵시 근무복을 제공함으로써 체감온도를 낮춰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냉방 및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하여다고 설명함.

<2023년도 플로티룩 업체별 지급내역>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1차(7월 20일) 집행액	22,080,000원		
2차(8월 1일) 집행액		5,000,000원	5,000,000원
3차(8월 24일) 집행액		31,471,480원	26,496,100원
합계	22,080,000원	36,471,000원	31,496,100원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한국환경연구원은 플로티룩 구매를 위하여 A업체(22,080,000원), B업체(36,471,000원), C업체(31,496,100원)와 3건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3건 모두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임에도 일반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 사항을 두어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44] 및 동법 시행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245]을 위반한 집행으로 보임.

---

244)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245) 제5조 (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또한, 1차에는 A업체와 견적서를 기준으로 400장의 근무복 상의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이후에는 B,C업체와 '물품구매협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2차에는 선금 각 500만원씩을, 3차에는 실제 직원이 방문하여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대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음.

○ 한국환경연구원이 B, C업체와 체결한 협약서는 협약기간, 물품의 할인율, 지급대상 직원, 대금지급 방법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등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하도록 규정[246]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로 보기 어려움.

246)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2차 및 3차 플로티룩 협약 및 집행내용>

구분	B업체	C업체
협약기간	7월 14일~8월 15일	7월 14일~8월 15일
협약조건	정가의 20~40% 할인금액으로 판매	정가의 10~20% 할인금액으로 판매
1인당 배정금액	250,000원 *근무기간별 상이	250,000원 *근무기간별 상이
구매인원	154명	131명
미사용금액	28,520원	3,900원
최종 집행금액	36,471,480원	31,496,100원

(자료: 한국환경연구원)

□ 그리고 2차, 3차 집행 내역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통상적인 물품 구매계약에 따라 특정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지급한 방식이 아니라, 협약기간 동안 한국환경연구원이 교부한 인수증을 직원이 업체에 제시하고 물품을 구매하면 배정금액 범위 내 금액을 한국환경연구원이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연구기관 인센티브는 경상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지침에서 경상운영비는 '기념품 지급시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을 지급하여 사실상 급여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일정 금액 내에서 협약 업체의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 가능하도록 한 인수증은 일종의 상품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동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인센티브 사용에 있어서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법령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정 절차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1. 예산 집행절차 적절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도 세출예산은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각 개별 사업비, 지역사무소 운영비 등 총 5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 1,596억 300만원 중 1,583억 2,000만원(99.2%)이 집행되고, 16억 7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159,603	159,603	158,320	99.2	158,429
정책연구개발사업 (1231-310)	363	363	359	98.9	349
대외활동강화 (1231-311)	457	457	444	97.2	394
개도국기술지원 (1231-312)	72	72	63	87.5	78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1231-503)	1,366	1,366	1,336	97.8	969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366	366	357	97.5	391
독과점시장감시체계운영 (1251-330)	3,670	3,670	3,695	100.7	3,320
사익편취행태개선 (1251-331)	370	370	360	97.3	370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1251-332)	1,643	1,643	1,622	98.7	1,641
규제개선및경제분석 (1261-340)	1,016	1,016	930	91.5	99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출연 (1271-350)	11,657	11,657	11,657	100.0	11,742

구분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대중소기업거래행태개선 및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1,479	1,479	1,461	98.8	2,326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331-401)	987	987	974	98.7	987
선진소비자정책추진 (1431-600)	1,171	1,171	1,159	99.0	1,389
소비자권익증진지원 (1441-610)	3,018	3,018	2,748	91.1	1,234
소비자상담센터운영(정보화) (1451-620)	3,888	3,888	3,561	91.6	3,628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운영 (정보화) (1451-621)	1,820	1,820	1,766	97.1	1,418
한국소비자원출연 (1461-630)	50,853	50,853	50,853	100.0	52,842
총액인건비성인건비 (7001-100)	51,817	51,817	51,419	99.2	53,650
기관운영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0)	3,194	3,194	3,082	96.5	3,207
심판관리관실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01)	71	71	66	93.0	72
기획조정관실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2)	36	36	34	94.4	66
경쟁정책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3)	20	20	19	95.0	26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총액 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4)	16	16	10	62.5	17
소비자정책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5)	27	27	18	66.7	20
시장감시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6)	20	20	26	130.0	20
카르텔조사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7)	78	78	72	92.3	83
기업거래정책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8)	23	23	20	87.0	23
서울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9)	269	269	268	99.6	280
부산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0)	84	84	111	132.1	90
광주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1)	70	70	74	105.7	70
대전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2)	59	59	66	111.9	59
대구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3)	56	56	65	116.1	56

구분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기업집단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4)	62	62	62	100.0	58
유통정책관실총액인건비 성기본경비(7011-215)	16	16	27	168.8	27
기관운영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0)	1,541	1,541	1,827	118.6	1,552
심판관리관실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1)	425	425	438	103.1	514
기획조정관실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2)	604	604	541	89.6	730
경쟁정책국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467	467	408	87.4	371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비총액 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4)	69	69	70	101.4	175
소비자정책국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5)	181	181	143	79.0	145
시장감시국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6)	62	62	84	135.5	119
카르텔조사국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7)	117	117	102	87.2	132
기업거래정책국비총액인건비성기 본경비(7011-258)	64	64	98	153.1	80
서울사무소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9)	696	696	686	98.6	199
부산사무소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0)	519	519	484	93.3	218
광주사무소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1)	73	73	71	97.3	95
대전사무소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2)	78	78	77	98.7	87
대구사무소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3)	76	76	75	98.7	85
기업집단국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4)	136	136	117	86.0	134
유통정책관실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5)	82	82	101	123.2	111
공정거래지원(7031-300)	819	819	811	99.0	1,389
행정소송수행(7031-301)	3,279	3,279	3,278	100.0	3,286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031-302)	2,315	2,315	2,291	99.0	2,154
정보화기반확충(정보화) (7032-501)	2,663	2,663	2,658	99.8	3,472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정보화) (7032-502)	5,223	5,223	5,175	99.1	1,48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선집행 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예산을 운용하였음.

□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세부사업에서 세부사업내 비목의 집행금액이 부족함에도 다른 세부사업(또는 다른 비목)으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전용절차를 통해 해당 예산을 확보한 후 지출과목을 정정하는 방식의 예산 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사업 별 예산 집행시 과목정정 현황>

(단위: 원)

과목정정 전 지출 재원*			과목정정 후 지출 재원		
세부사업	목-세목	지출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지출액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일반수용비	2,691,000	유통 정책관실 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2,691,000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275,000	유통정책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1,275,000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국내여비	3,745,690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국내여비	3,745,690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일반수용비	4,007,700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관서업무 추진비	4,007,700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국내여비	285,332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국내여비	285,332

과목정정 전 지출 재원*			과목정정 후 지출 재원		
세부사업	목-세목	지출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지출액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인건비성 기본경비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64,330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제세	164,330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692,000	유통정책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692,000
기업집단국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90,168	사익편취 행태개선	국내여비	2,190,168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3,460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제세	213,460
행정소송 수행	일반수용비	152,000	행정소송 수행	관서업무 추진비	152,000
행정소송 수행	일반수용비	165,000	행정소송 수행	관서업무 추진비	165,000
카르텔 환경개선	일반수용비	11,632,336	비총액 기본경비	국내여비	11,632,336
카르텔 환경개선	국외여비	8,839,500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국외여비	8,839,500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일반용역비	20,000,000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일반수용비	20,000,000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일반수용비	2,637,800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임차료	2,637,800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제세	988,140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988,140

* 과목정정 전 지출 재원: 지급재원 부족시 부족분을 집행한 재원(예: 국내여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여비를 우선 집행한 경우 그 금액)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하자 시급히 지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운용방식은 예산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방법으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현행 「국고금 관리법」 제20조[247]에서는 '지출원인행위'의 경우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급원인행위'는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서 교부받은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필요한 재원을 먼저 확보한 후 지출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6조[248]에 따라 예산 전용 등을 통해 먼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 후 지출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을 신청한 후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과목정정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방식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 지출행위를 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국고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목적

247)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48)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으로 하는 「국고금 관리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방식이라 할 것임.

○ 더욱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 과목정정은 시스템상 실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출과목에 명백한 오류 또는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할 것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목정정을 통한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주의한 집행관리로 잘못된 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후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됨.

○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사업[249]의 경우 과목정정을 통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정정 누락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출장 관련 여비(220-01)가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되었음.

<과목정정 누락 사례>

지급일자	세부사업	건명	금액
2023.9.25.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국내여비)	카르텔조사국 국내여비 대금 지급(7~9월)	1,104,400원
2023.9.27.		지급과목 음수발생에 따른 과목정정	△1,104,400원
	카르텔환경개선 (일반수용비)	지급과목 음수발생에 따른 과목정정	1,104,400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

249) 세부사업 :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7)

전에 확보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과목정정을 활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미흡한 집행관리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결산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항목별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 조정 등 해당 항목의 예산확보 절차를 선행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카르텔환경개선” 사업은 카르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 등을 상시 감시하여 카르텔을 예방·적발·시정하고, 급증하고 있는 입찰 담합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250] 2023년도 예산액은 3억 6,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 3억 6,800만원 중 3억 5,7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카르텔환경개선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카르텔환경개선	366	366	-	2	368	357	-	11	391
카르텔 행태개선	215	215	-	2	217	209	-	8	240
-일반수용비	125	125	-	△40	85	79	-	6	125
-임차료	3	3	-	-	3	1	-	2	3
-국내여비	40	40	-	45	85	85	-	-	65
-국외업무여비	40	40	-	△3	37	37	-	-	40
-사업추진비	7	7	-	-	7	7	-	-	7
입찰질서 공정화	151	151	-	-	151	148	-	3	151
-일반수용비	89	89	-	△30	59	56	-	3	89
-국내여비	25	25	-	30	55	55	-	-	25
-관리용역비	33	33	-	-	33	33	-	-	33
-사업추진비	4	4	-	-	4	4	-	-	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50) 세부사업 : 카르텔환경개선(1241-320)

□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251] 2023년도 예산액은 8,2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3년도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82	82	-	17	99	99	-	-	111
-일반수용비	44	44	-	△9	35	35	-	-	50
-공공요금및제세	10	10	-	△3	7	7	-	-	14
-국내여비	19	19	-	20	39	39	-	-	30
-국외업무여비	-	-	-	5	5	5	-	-	-
-관서업무추진비	8	8	-	4	12	12	-	-	15
-자산취득비	1	1	-	-	1	1	-	-	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년도 지급 필요 경비를 해당연도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음.

251) 세부사업: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2)

(1) 카르텔환경개선 사업(1241-320)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카르텔 감시 강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카르텔 직권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세부사업에서 조사업무 수행 등을 위한 2023년도 국내여비(220-01) 예산액은 6,5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 1억 4,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3년도 카르텔환경개선사업 국내여비 결산 내역>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카르텔행태개선	215	215	-	2	217	209	-	8	240
국내여비	40	40	-	45	85	85	-	-	65
입찰질서공정화	151	151	-	-	151	148	-	3	151
국내여비	25	25	-	30	55	55	-	-	2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동 세부사업의 2023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출장 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22.12월에 수행한 국내출장 26건과 관련한 여비 2,301,560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가 나타남.

<2023년 예산으로 집행한 2022년 국내출장여비 내역>

출장시기	집행액	건수	지급일
’22.12월	2,301,560원	26건	’23.1.2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와 같이 2022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할 지출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조[252]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집행 사례임.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체전용 등을 통해 국내여비 재원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카르텔 조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규모 직권조사가 급증[253]함에 따른 것임.

<동 세부사업 국내여비 이·전용 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3.6.26.)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일반수용비 (210-01)	20백만원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국내여비 (220-01)

25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53) 2023년 상반기 금융분야(은행, 증권, 보험) 담합조사(3건)에 소요된 국내여비는 약 4,589만원으로 동 세부사업 국내여비 편성액 6,413만원의 71.5%에 해당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3.6.27.)	시장감시국 독과점시장 감시체계운영 (1251-330)	국내여비 (220-01)	5백만원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국내여비 (220-01)
자체전용 (‘23.9.19)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일반수용비 (210-01)	20백만원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국내여비 (220-01)
자체전용 (‘23.12.18)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일반수용비 (210-01)	30백만원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국내여비 (220-0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국가재정법」을 준수하지 않고 전년도 여비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불필요한 예산 전용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저해된 측면이 있음.

(2)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5)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동 세부사업 내 자료발송 등을 위한 공공요금(210-02)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0만원을 감액 전용하여 예산현액 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3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82	82	-	17	99	99	-	-	111
공공요금 및 제세	10	10	-	△3	7	7	-	-	1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자료발송 등을 위한 우편요금(210-02)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2.12월에 발생한 우편요금(846,500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지출('23.1.16.)하였음.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연도 12월에 발송한 우편요금의 경우 다음연도 1월 초에 그 대금이 청구되므로 해당연도 예산으로는 지급이 어려워 매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 집행시 관행적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활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방법은 부적절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각 중앙관서 기본경비의 경우 현행 국가재정 관련 법령 등에서는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이월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254]을 두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연말 우편요금의 경우 그 소요금액를 사전에 파악한 후 '기본경비 이월 제도'를 활용한다면 「국가재정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 집행시 보다 면밀히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집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54)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9

(1) 기본경비 이월범위(「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9)

○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목을 제외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경비의 이월범위에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복리후생비

나. 직책수행경비

3.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255]: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은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하도급분야의 거래행태 개선을 위하여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14억 7,900만원으로 4백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 14억 8,300만원 중 14억 6,100만원이 집행되고,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1,479	1,479	-	4	-	1,483	1,461	-	22	2,326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1,317	1,317	-	3	-	1,320	1,299	-	21	1,65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62	62	-	1	-	63	62	-	1	574
공시위탁운영	100	100	-	-	-	100	100	-	-	1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55) 세부사업: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이 다른 거래(가맹·대리점·유통)분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정위에서 실시 중인 '공정거래협약[256]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정위는 내역사업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을 통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2023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을 살펴보면, 협약체결 실적 대비 협약이행평가 실적이 52.1%로,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가맹·유통·대리점거래 분야의 협약이행 평가 실적이 각각 62.5%, 96.2%, 90.9%인 점과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평가 실적>

(단위: 개, '23.12월 기준)

구분	협약체결 실적					협약평가 실적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하도급분야	280	292	306	359	380	157	168	182	197	198
가맹분야	16	17	17	17	16	11	12	13	11	10
유통분야	25	27	25	25	26	23	24	24	25	25
대리점분야	-	9	11	11	11	-	-	8	10	10

※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제도는 2019.7월 도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56)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이행하고, 공정위와 조정원이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 기업 중 협약이행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닌 비지수기업이 다수이고, 이들 중 평가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이 많아 협약체결기업 수와 평가기업 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하고 있음.[257]

<최근 3년간 하도급 분야 협약체결기업 중 비지수기업 현황 및 협약평가신청 현황>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협약체결기업	306	359	380
협약체결기업 중 비지수기업	135	178	200
비지수기업 중 협약평가 신청 기업	11	16	18
비지수기업 중 협약평가 미신청 기업	124	162	18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후 공정위가 그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주요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을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이행평가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 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 평

257) 협약이행평가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협약이행 평가를 받아야 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지수기업)과 달리, 평가대상기업이 아닌 기업(비지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님.
*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임.

가 체계 보완,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개발 등 이행평가 참여 기업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하도급분야 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 기준>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하도급 벌점 3점 경감
우수	90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하도급 벌점 2점 경감
양호	85점 이상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하도급 벌점 1점 경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기업의 평가 참여 저조는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이행실적자료 작성, 평가 준비의 부담 및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지수기업의 참여 저조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258]

258) 참고로, 대리점분야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협약을 체결한 기업 모두 비지수기업임에도 이행평가 참여율이 90.9%에 달하고 있음.

4. 소비자권익증진 지원[259]: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도와 소비문화 및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 지원, 상품비교정보 생산,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소비자 교육, 청년소비자 역량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0억 1,800만원 중 27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3,018	3,018	-	-	3,018	2,784	-	270	1,234
소비환경개선	539	539	-	-	539	539	-	-	243
상품비교정보 생산 지원	550	550	-	-	550	521	-	29	380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210	210	-	-	210	210	-	-	189
소비자교육 실행	402	402	-	-	402	360	-	42	402
청년소비자 역량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847	847	-	-	847	649	-	198	-
지역소비자행정 협력체계 구축	470	470	-	-	470	469	-	1	2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59) 세부사업: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자율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역사업인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사업을 통해 '특수판매, 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 예산액은 2억 1,000만원이며 실집행액은 2억 1,000만원임.

<2023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내역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210	210	-	-	210	210 [210]	210	210 [210]	-	-
- 민간경상보조 (320-01)	210	210	-	-	210	210 [210]	210	210 [210]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3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하면서 동법 시행령[260]에서는 소비자,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가 자율적 분쟁조정을

26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6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62]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63]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개별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시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 전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64]

○ 이러한 각 개별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기구로는 '① 한국소비자원, ② 시·도지사가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③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가 해당함.

소비자분쟁조정기구 중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인 (사)한국소

지 아니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협의체를 말하며, 이하 "소비자단체협의체"라 한다)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단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61)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행정청**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으면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특수판매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262) 제4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으면 제3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63)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264) 참고로,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외부연계형 조정제도를 통해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고 있음.

비자단체협의회[265]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기구로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율분쟁조정위원 40명, 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국(4명[266])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보고서를 살펴보면,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처리건수 등 그 실적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내역>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개최 횟수	23회	24회	24회	22회	
접수건수	675	844	454	368	
처리건수	(803)	(945)	(548)	(407)	이월접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그 주된 원인으로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의뢰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보조금의 지급·관리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2021년 이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의뢰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임.

265)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로 현재 12개의 회원단체가 소속되어 있음.
266)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간사 2명

<분쟁조정 의뢰기관별 분류>

구분	공정거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등)	소비자단체	서울중앙 지방법원	기타 (직접, 온라인)	계
2020년	89건	45건	178건	14건	349건	**675건**
2021년	-	48건	163건	26건	607건	**844건**
2022년	-	24건	91건	24건	315건	**454건**
2023년	-	57건	82건	39건	190건	**368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지원을 통하여 시간·비용·정보 등의 부족으로 소송을 제기할 처지가 어려운 소액의 다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경우 민사분쟁인 소비자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보조금 지급·관리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특히 소비자단체 및 당사자 등의 의뢰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자율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 감소와 더불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성립건수 또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분쟁조정 처리결과별 현황>

구분	종결사건 (진행중 사건 제외)	조정성립	법원 외부 조정성립	조정전 당사자 합의	합의율
2020년	712	46	5	231	39.6%
2021년	851	58	5	207	31.7%
2022년	511	35	8	145	36.7%
2023년	387	29	10	84	31.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러한 분쟁조정 성립 건수 감소는 소비자분쟁 해결에 대한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제공한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 감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분쟁조정 의뢰 및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자율분쟁 조정의 실적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267]: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사 제도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2억 5,600만원 중 30억 8,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7,5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3,194	3,194	-	62	3,256	3,082	-	175	3,20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여 법집행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전문직위 운용 활성화, 대외명칭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67) 세부사업: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0)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및 각 지방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250-03)를 통해 ‘조사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집행하고 있음.

○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며,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계좌이체를 통해 정액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집행지침에 따라 조사(A등급), 징수(B등급), 상담·심결·소송·사건처리시스템 운용(C등급) 등 사건업무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하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건처리 업무와 무관한 정책·인사·감사·홍보·비서·운전 등 업무 직원은 조사활동비 월정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23.4.14)에 따라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조사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조사활동비 월정액 지급 인원을 조정(512명 → 431명)하는 동시에 등급별 기준단가를 각 3만원씩 인상하여 조사활동에 따른 경상적 소요 경비가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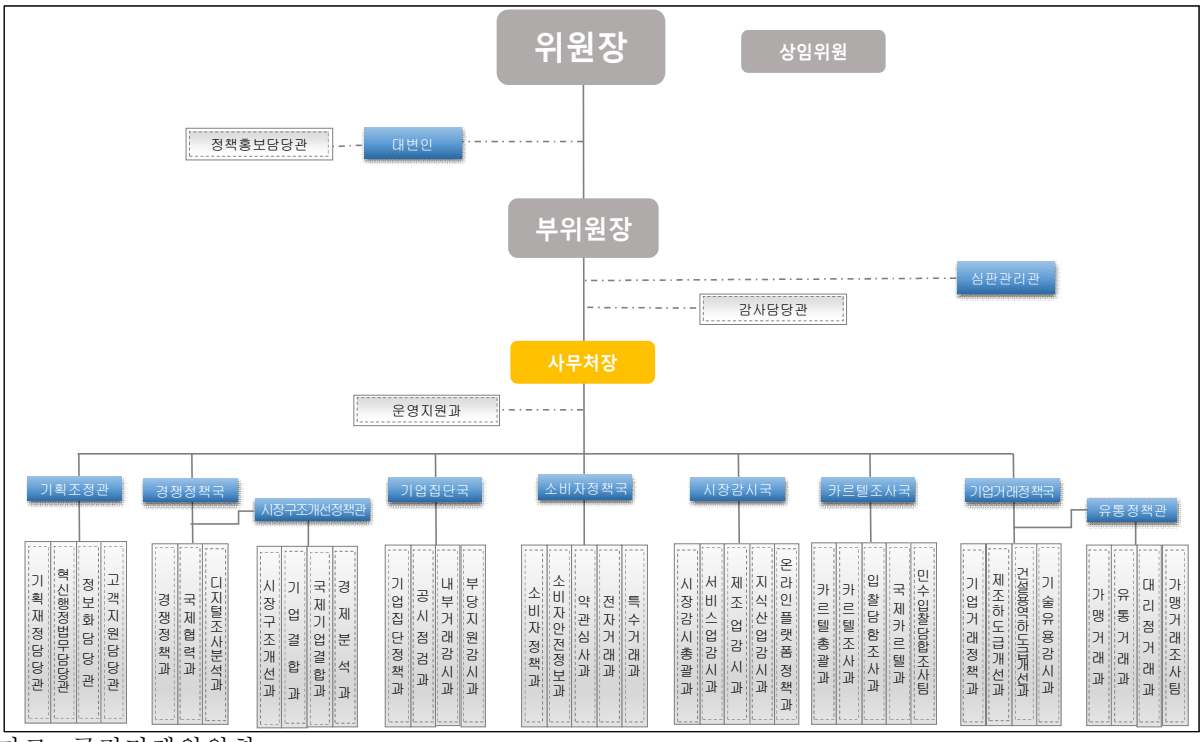
<`23년 조사활동비 개인별 월정액 집행 현황>

구분	대상자(①)	등급	월 단가(②)	기간(③)	총액(④=①X②x③)
조직개편 전 (1/1-4/13)	조사(385)	A	210	3.5	282,975
	징수 등(49)	B	170	3.5	29,155
	기타(78)	C	100	3.5	27,300
	ⓐ소계(512)	-	-	-	339,430
조직개편 후 (4/14-12/31)	조사(361)	A	240	8.5	736,440
	징수(9)	B	200	8.5	15,300
	기타(61)	C	130	8.5	67,405
	ⓑ소계(431)	-	-	-	819,145
ⓒ인사변동에 따른 조정*					(40,177)
ⓓ실제 총 집행액(ⓐ+ⓑ-ⓒ)					1,118,398

* 월 중 휴직, 교육파견, 복직 등에 따른 실 근무기간(월별 일할계산 등)을 반영한 12개월 집행액과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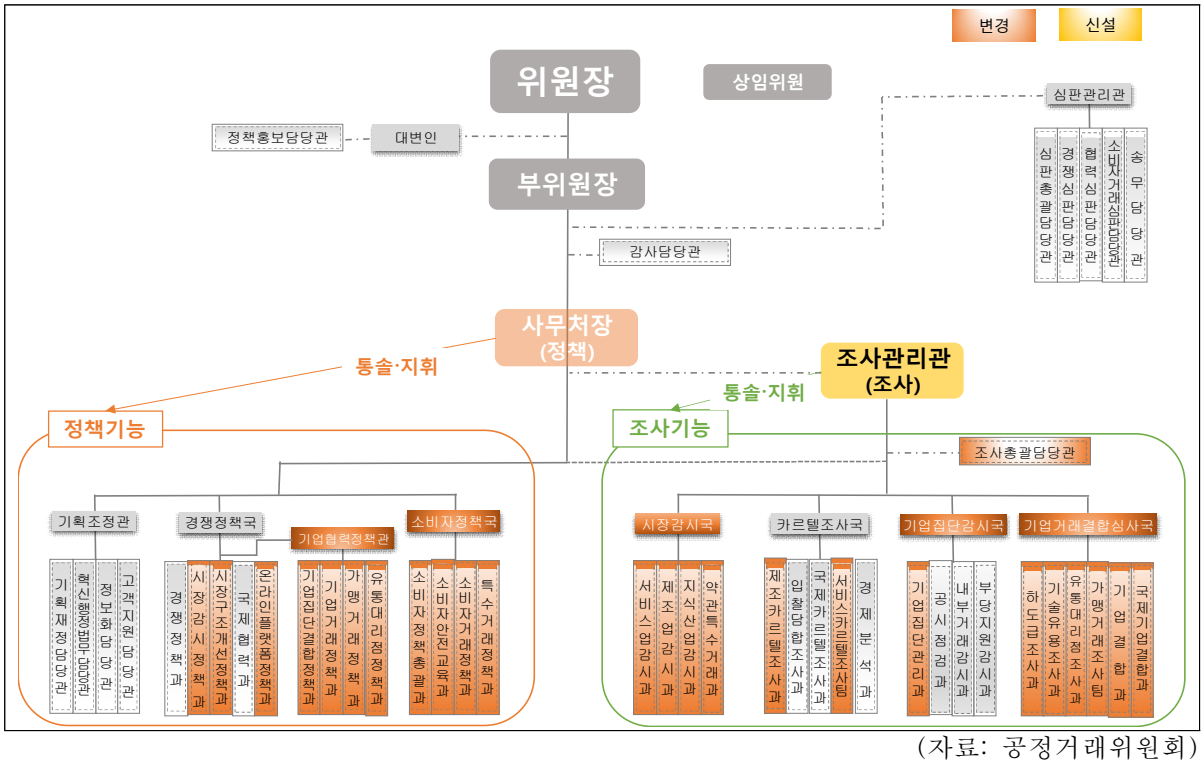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월 실시된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조사관리관(신설)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도록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였으며 그 목적을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여 법집행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개편 이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개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다만, 실질적인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위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함.

○ 전문직위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268]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설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4년(과장급 3년)간 전보가 금지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72개 전문직위를 지정[269]하고 있는데 이 중 49개 직위에만 전문관을 보임하고 있으며, 과장급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전문관을 보임하지 아니하였음.

○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조사 기능의 분리를 기준으로 전문직위 운용 현황을 살피면 정책기능(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

---

268)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⑤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69) 전문직위 지정 현황 : (2022년)76개 → (2023년)71개 → (2024년)72개

에서는 12개 전문직위 중 6개 직위에 전문관을 임용하였고, 조사기능(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는 42개 전문직위 중 28개 직위에 전문관을 임용하였으며, 심판·행정 등의 기능에는 18개 전문직위 중 15개 직위에 전문관을 임용하였음.

<전문직위 운용 및 전문관 보직 현황(기능별 분류)>

(2024. 8. 기준)

구분(기능)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전문관 미선발
정책	12	6(50%)	6(50%)
조사	42	28(67%)	14(33%)
심판·행정 등	18	15(83%)	3(17%)
합 계	72	49(68%)	23(32%)

<전문직위 운용 및 전문관 보직 현황(직급별 분류)>

(2024. 8. 기준)

구분(기능)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전문관 미선발
과장급	4	0(-)	4(100%)
4급~5급	15	12(80%)	3(20%)
5급	31	23(74%)	8(26%)
5급~6급	1	1(100%)	0(-)
6급이하	21	13(62·%)	8(38%)
합 계	72	49(68%)	23(8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2020년[270] 및 2022년[271] 공정거래위원회에

270)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관 선발비율이 낮고, 전문직위 취지에 맞지 않는 자를 보직하는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직위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하였음.

○ 전문직위 제도는 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오랜기간 근무하며 경험과 식견을 축적하고 직무전문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개편 또한 기관의 전문성·책임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직위 지정 확대·전문관 선발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외명칭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6급이하 직원의 대외명칭을 '조사관'으로 통일[272]하고 있는데 정책과 조사로 기능을 구분한 조직개편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사기능 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조사관' 명칭은 타 부처와 동일하게 '주무관' 등 명칭[273]으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등 제도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오니,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관련 보직인사 등 전문직위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7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문직위 운영을 하면서, 전문관 선발 비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문관 직위에 전문관 보임 의사가 없는 자를 보직하게 하는 등 전문관 인사관리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오니, 직위 지정 및 선발 등 전문직위제도 운영 전반을 제도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7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8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공정위 6급(상당)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조사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73)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 개편의 취지에 적합하게 전문직위 운영 활성화, 대외명칭 개편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274]: 계약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3년도 예산현액 19억 700만원 중 18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8,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541	1,541	-	96	270	1,907	1,827	-	80	1,55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경쟁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단년도 계약으로 다년간 예산을 지출하였음.

274) 세부사업: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0)

□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는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이 되는 경비를 제외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관서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됨.

□ 2023년도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집행액은 18억 2,700만원으로, 이 중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임차 청사 관리비, 전화통신 유지보수료, 물품관리 유지보수료 등의 용도로 1억 4,700만원을 집행함.

<2023년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세부 집행내역	집행액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임차 청사 관리비	80,863
	임차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3,575
	전화통신 유지보수료	19,920
	통신선로 유지보수비	3,718
	물품관리 유지보수료	36,893
	시설장비 수리비 등	1,632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이 중 물품관리 유지보수는 위원회 물품 유지보수 및 재물조사, 위원회 대회의실 방송장비 운영 관리, 지방사무소 물품마감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함.

<물품관리 유지보수 계약 세부내역>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과업내용
수의계약	월 3,074,400원 총 36,892,800원	2021.11.1.~ 2022.10.31. ※ 1년 자동연장	- 위원회 물품 유지 보수 및 재물조사 - 물품 결산(마감) 및 물품감사 대비 - 지방사무소 물품마감 지원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물품관리 유지보수 계약은 추정가격[275]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1월에 2022년 10월 종료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고용주’의 서면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계약 된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2023년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2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 동 조항 및 이를 근거로 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도록 한 「국고금 관리법」[276]과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277]

□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은 계약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연도에 따라 계약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하겠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관련 규정 숙지를 위한 교육 등 집행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76)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77) 2023년도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년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체결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음.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7.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278]: 영상회의 장비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심판관리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공공요금·임차료·여비·관서업무비·자산취득비)로, 2023년도 예산현액 4억 3,900만원 중 4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425	425	-	14	439	438	-	1	51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심판정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활용 성과가 없고 영상장비를 활용한 심의에 관한 규정정비도 미흡하므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278) 세부사업: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1)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보좌기관으로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보좌·관리하고 과징금·시정조치·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정 집행수단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279].

○ 심판관리관실은 위원회의 심리·의결이 이루어지는 심판정 유지·보수도 담당하고 있으며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심판정과 서울(과천)에 위치한 서울심판정 모두 심판관리관실 소관임.

□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심판정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사비 997만원, 자산취득비 8,999만원 등 약 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예산 집행 내역>

구분	주요내용	합계
공사비	자재비: 4,994,000원, 노무비: 4,076,490원, 부가가치세 907,049원	9,970,000원
자산취득비	영상회의 방송설비: 76,411,800원, 화면공유시스템: 13,576,700원	89,988,500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79)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유지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통지
3. 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4. 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5.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6. 그 밖에 위원회 심리·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해외 거주 중인 참고인 또는 피심인,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피심인 등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피심인의 방어권을 수월하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분야 법률전문가 대상 간담회에서 원격영상심의시스템 사용 안내를 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어 향후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나 2023년 9월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2024년 5월까지 영상회의를 실시한 실적이 없으며, 2024년 6월 및 7월 각 1건의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음.

□ 한편, 통계청(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 중 47% 가량의 기업이 경기도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심판정을 총 94회의 회의 중 24회에만 활용하여 그 이용 실적이 많지 않으므로, 서울심판정에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종심판정과 서울심판정을 화상으로 연결한 위원회 심리절차 진행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심리·의결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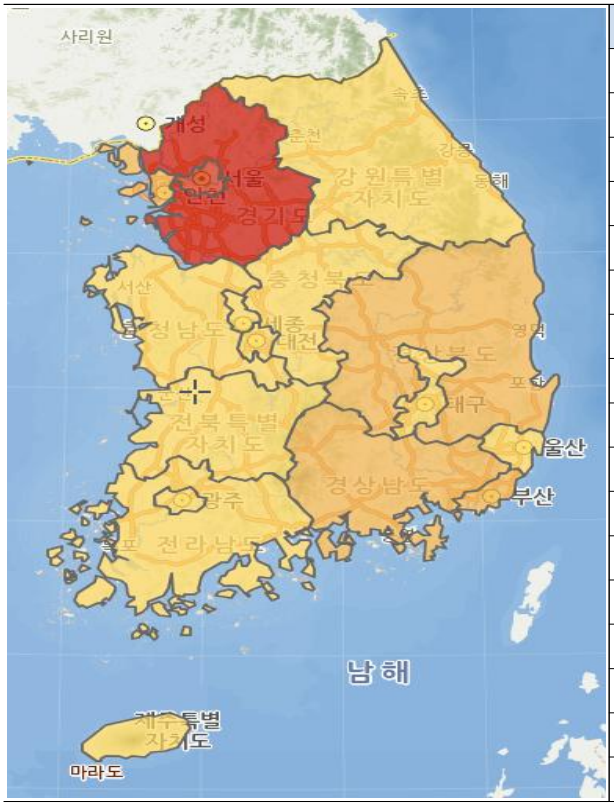
<서울심판정 및 세종심판정 회의 실적>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합 계
2023년	서울심판정	3회	24회	27회(30%)
	세종심판정	27회	36회	63회(70%)
	합 계	30회	60회	90회(100%)
2022년	서울심판정	2회	20회	22회(29%)
	세종심판정	22회	33회	55회(71%)
	합 계	24회	53회	77회(100%)
2021년	서울심판정	5회	16회	21회(23%)
	세종심판정	22회	49회	71회(77%)
	합 계	27회	65회	92회(100%)

* 안건구분에 관계없이 회의차수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전국 기업* 분포 현황(2022년>



지역	기업수(개)	분포
경기도	2,921.077	26.67%
서울특별시	2,281,195	20.83%
부산광역시	655,231	5.98%
경상남도	640,938	5.85%
인천광역시	604,741	5.52%
경상북도	522,430	4.77%
충청남도	452,919	4.14%
대구광역시	451,531	4.12%
전라남도	395,294	3.61%
전라북도	380,490	3.47%
강원특별자치도	334,943	3.06%
충청북도	324,718	2.97%
대전광역시	279,368	2.55%
광주광역시	278,898	2.55%
울산광역시	189,315	1.73%
제주특별자치도	177,469	1.62%
세종특별자치시	60,949	0.56%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타기업을 모두 포함함

자료: 통계청(통계지리정보서비스-기업생태분석지도)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280], 피심인은 위원회(의장)로부터 심의개최의 일시·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도록 하며[281], 각 심의기일에는 피심인이 출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282], 영상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피심인의 출석 장소를 어디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피심인이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한 장소를 '심판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규정이 미비한 바,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심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283].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심판정과 서울심판정을 연결할 수 있는 원격심의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피심인은 서울심판정에 출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은 세종심판정에 위치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등의 심판절차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피심인의 원격출석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80) 제35조(심의부의) ②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심판정에서 심의한다.

281) 제37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①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당사자·이해관계인 등과의 기일 조정에 있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2) 제40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또한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직원(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 제외)은 심사관을 보조하여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83) 참고로, 사건절차로서 심의 외 의견청취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한 의견청취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동 규칙을 개정한 바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30조(의견청취절차의 일시 지정 등) ③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8.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284]: 예산 집행 절차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6,7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 4억 3,700만원 중 4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467	467	-	△30	437	408	-	29	37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사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 시 사후계약 체결로 국가계약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음.

284) 세부사업: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 2023년도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210-14)의 경우 예산액 5,000만원 중 2,200만원이 집행되고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일반용역비 집행액(2,200만원)은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행사 대행 용역’에 대한 지급 용도로 사용되었는데,[285] 동 금액은 업무보고 행사 준비 업체가 산정한 행사용역 비용인 1억 6,000만원을 주관 부처인 법무부가 1/n(8개 부처) 비용인 2,200만원을 제안하여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금액임.

<2023년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중 일반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집행내역	계약 기간[286]	집행액	업무보고 개요
2023년 업무보고 행사 대행 용역	’23.1.13.~ 2.12.	22 (부가세 포함 금액)	◦ 일시 : 2023년 1월 26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청와대 영빈관 ◦ 주요 내용 - 부처별(법무부, 공정위, 법제처) 핵심과제 정책방향 발표 및 학계·전문가 토론 * 공정위의 경우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주제로 발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28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23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공정경제전략회의는 명칭만 상이할 뿐, 행사의 목적·성격, 논의 주제, 참석자 등이 동일·유사하여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 명목의 예산 중 일부를 대통령 업무보고에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286) 용역계약서 상 계약기간임.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행사 개최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계약 절차 과정에서 예산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남.

○ 「국고금 관리법」 제19조[287]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출원인행위는 정부가 지출할 원인이 생겨 그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로서,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이나 재화의 주문 등의 행위를 의미함.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용역계약서상 계약기간('23.1.13.~2.12.)과 달리 '계약일과 지출원인행위일'이 '23.2.27.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동 행사용역의 경우 실제 행사를 실시하는 시점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행사종료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등에 따른 행사용역 계약 기간>

구분	계약기간(또는 계약일)	비고
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3	2023.2.~3.	
2023년 수의계약현황	2023.2.27.	공정위 정보공개 자료
지출원인행위[288]	2023.2.2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287) 「국고금 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88)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행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3.2.12.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2주 이상이 지난 2월 27일에 시스템(D-Brain) 상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음.

□ 용역의 과업 내용 및 그에 대한 반대 급부의 지급을 상호간에 확정하는 계약의 선행이 예산집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사후계약 체결은 법령상 허용되기 어려운 부적정한 집행방식임.[289]

○ 특히,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어 용역대금 2,200만원(부가세 포함)의 적정성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예산 낭비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보고 등 행사 진행시 행사가 진행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2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9. 공정거래지원[290]: 지출원인행위 관련 행정절차 지연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정거래지원’은 공정거래정책 홍보, 조직문화 활성화·직원역량 제고, 모의공정위경연대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억 1,900만원 중 8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공정거래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정거래지원	819	819	-	0	819	811	-	8	77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체결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사실을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함으로써 국고금관리법령 상의 행정절차를 위반하였음.

290) 세부사업: 공정거래지원(7031-300)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부사업 ‘공정거래지원’에 포함된 내역사업 ‘공정거래정책알리기’를 통해 온·오프라인상의 각종 기관·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음.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지 못한 자」라는 제목의 웹드라마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하여 신고·조사·심의·제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당해 드라마·영화에 직원들이 연출, 제작, 편집, 단역출연, 감수 등에 참여함으로써 조직소속감 및 사명감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부 내에서도 국정홍보점검회의에서 우수사례로 공유되기도 하였음.



아시아경제

2024년 01월 29일 월요일 025면 PEOPLE

공정위가 스릴러 영화 만든 까닭

사건 처리 과정 등 홍보
자체제작 웹드라마 영화화
직원들, 제작과정 직접 참여



공정위가 자체 제작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포스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를 29일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개봉했다.

이번 영화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유튜브 채널에 연재했던 자체제작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를 토대로 영화화한 것이다. 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 직원들도 단역 출연과 연출 등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영화는 담합을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자와 이를 막아내고 단죄하려는 공정위 직원 간의 쫓고 쫓기는 스릴러를 이다. 조사 현장의 긴박한 상황과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직원 간 갈등 등 일반 상업영화와 같은 극적 요소를 담고 있다.

사건처리과정을 현실감 있게 담기 위해 사건 담당자 인터뷰와 시건 부서의 감수를 거쳐 시나리오를완성했고, 실제 사무실과심의장 등 업무 공간을 촬영 장소로 활용했다.

영화는 LG유플러스TV, SK브로드밴드, KT 지니TV 등 IPTV 3개사와 네이버 시리즈온, 왓챠, 웨이브, 티빙 등 OTT 4개사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배급은 KT알파가 맡았다.

공정위는 "이번 영화는 공정위 사건의 처리 과정과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홍보를 재미있는 소재와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 다만, 당해 사업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의 측면에서 절차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웹드라마 및 영화 원고 작성 및 제작 등을 위해 총 2건(2,847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중 'IPTV 및 OTT 탑재용 위원회 홍보 콘텐츠 원고 작성 및 후반작업' 계약은 2024년 1월 29일에 개봉한 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의 제작과 관련한 계약임.

<공정거래위원회 홍보 드라마·영화 관련 계약 체결 내역>

계약명	계약금액
2023년 위원회 홍보 웹드라마 원고 작성 및 제작 진행	1,340만원
IPTV 및 OTT 탑재용 위원회 홍보 콘텐츠 원고 작성 및 후반작업	1,507만원

○ 「국고금 관리법」 제19조[291]는 지출원인행위를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292]는 지출원인행위를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체결은 곧 지출원인행위의 실시에 해당함.

---

291) 「국고금 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9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1조[293]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실시에 관한 권한을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인 “재무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294]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실시할 때에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함.

○ 위 규정을 토대로 사안을 검토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계약을 9월 4일 체결하였으나 지출원인행위부에는 이를 2023년 11월 29일[295]에 기재하였음. 이는 지출원인행위 실시와 동시에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위반에 해당함.

○ 이와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업무용 수첩 제작과 관련한 지출[296](집행액 2,541만원)에 대한 계약을 2023년 12월 22일에 체결하고 12월 28일을 기한으로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12월 29일에 이르러서 지출원인행위부 기재 및 대금 지급을 실시하였음.

---

293)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94)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95) 실제 자금이체일은 2023년 12월 29일

296)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0)

○ 지출원인행위부 기재는 단순히 지출원인행위의 발생 사실을 장부에 기록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액을 확정하고 그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짐. 지출원인행위의 기재가 지연되는 경우 정해진 세출예산에 비해 지출원인행위가 과도하게 실시되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297]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부 기재를 곧바로 실시하여 국고금관리법령 등에 따른 지출절차를 준수하고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액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97)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0. 행정소송수행[298]: 과징금 환급업무 조기 완료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행정소송수행’은 위원회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 경제·법률 분석 등의 대응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2억 7,9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음.

<2023년도 행정소송수행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행정소송수행	3,279	3,279	-	-	3,279	3,279	-	-	3,28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8 근무일 이내에 과징금 환급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나 2023년 과징금 환급업무가 시작된 18건 중 12건(66%)은 판결문 등이 접수된 날부터 8근무일을 초과하여 환급업무를 완료하였음.

298) 세부사업: 행정소송수행(7031-301)

□ 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때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로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299]

○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과징금과 환급가산금[300]을 지급하게 되며,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35'임. 과징금 및 환급가산금은 국고금관리법령[301]에 의거하여 반환 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수입금에서 지급됨.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소송상대방(기업 등)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연 3.5%의 이율로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

299)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의 일부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도 과징금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함.

30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301)「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

급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수입감소(지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예규)을 통해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始期) 및 환급 업무 처리 기간을 마련하여 과징금 환급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당해 예규는 판결문이 접수된 날 등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정하고, 판결문이 접수된 날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송무담당관이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며,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4 근무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업무지원팀장에게 환급 조치 요청을 완료하고, 업무지원팀장은 환급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 근무일 이내에 환급조치를 완료하도록 정함. 요약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판결문이 접수된 날부터 최대 8 근무일 이내에 과징금 환급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302]

302)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5. 환급 업무의 처리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는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가 도래하면 담당업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환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별 업무내용 및 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송무담당관

송무담당관은 소송패소의 판결문이 접수되거나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문이 접수된 날 또는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날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심판담당관

심판담당관은 직권취소 또는 추가감면의 의결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서가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일 또는 재결일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과징금 환급업무가 시작된 18건의 과징금 환급조치 완료까지 평균 13.8일을 소요하였고, 그 중 12건(66%)은 판결문 등이 접수된 날부터 8근무일을 초과하여 환급업무를 완료하였음.

□ 한편, 과징금부과처분이 일부취소된 9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재산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금만을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은 2023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환급가산금은 과징금 납부일부터 과징금 환급일까지 산정되며,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판결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사업자에 환급하기 때문에 과징금 재산정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증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가산금을 조속히 환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재산정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

다.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은 송무담당관으로부터 소송패소의 판결문 송달사실이나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직권취소 또는 추가감면의 의결서나 이의신청 인용 재결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보받은 날부터 4 근무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업무지원팀장에게 환급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환급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받은 날부터 2 근무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023년도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 현황>

* 2023. 12. 31. 기준

사건명	과징금 환급사유	처리기간	환급가산금 지급액
올라이트라이프(주)	소송패소	14근무일	미확정[주1]
㈜한진		11근무일	미확정
㈜삼일		11근무일	미확정
디엘이앤씨		15근무일	미확정
가즈트랑스포르 애떼끄니가즈		27근무일	미확정
한국제강(주)		4근무일	9억 22만원[주2]
㈜엘엑스하우시스		8근무일	미확정
한온시스템(주)		13근무일	미확정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35근무일	794만원
㈜현대엘앤씨		7근무일	미확정
삼성에스디아이(주)		5근무일	미확정
하이트진로	과징금 재산정에 따른 가산금 지급	13근무일	5,925만원
두산인프라코어		13근무일	372만원
유경제어		5근무일	339만원
디엘이앤씨		11근무일	120만원
***	추가감면 의결*	17근무일	_[주3]
***		8근무일	-
***		31근무일	-

*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여 익명처리

주 1) 미확정 :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부패소한 경우라도 판결의 형태는 과징금부과처분의 전부를 취소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낸 과징금 원금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며, 이후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당초의 과징금과 재산정한 과징금 차액에 관하여 과징금 납부일로부터 과징금 원금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주 1) 환급업무 처리기간이 짧은 경우(한국제강)라 하더라도 당초 부과한 과징금의 액수가 크거나(한국제강 : 313억원)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소송 절차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액이 증가함.

주 2) 추가감면 의결에 따른 과징금 환급은 자진신고로 인한 과징금 감경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환급가산금 지급액 등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환급가산금 지급액	총 20건 11억 4,045만원	총 10건 91억 830만원*	총 6건 9억 7,572만원
평균 처리기간	43.4일	13.1일	13.8일

* 2015년 사료가격 담합을 이유로 사료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2022년에 직권취소하여 발생한 환급가산금(5개사, 총 66억 629만원) 포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한 기업등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산금 지급에 따른 국세수입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환급업무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소비자원 출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소비자원 출연'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03]'으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의 연구, 소비자교육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출연하는 사업임.

□ 2023년도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액(수입실적)은 출연금 508억 5,300만원 등 534억원 9,900만원이고, 지출액(집행액)은 인건비 372억 3,600만원, 사업비 103억 8,400만원, 운영비 52억 7,200만원 등 총 528억 9,200만원(집행률 95.3%)임.

<2023년도 한국소비자원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50,853	50,853	50,853	-	100.0
2. 자체수입	3,378	3,378	2,267	△1,111	67.1
- 전년도이월금	952	952	506	△446	53.2
- 수탁용역수입	1,660	1,660	1,365	△295	82.2
- 교육연수수입	40	40	4	△36	10
- 이자수입	125	125	248	123	198.4
- 임대·기타수입	601	601	144	△457	24.0
3. 임차보증금 반환금	1,558	1,558	379	△1,179	24.3
수 입 합 계	**55,789**	**55,789**	**53,499**	**△2,290**	**95.9**

(자료: 한국소비자원)

303) 직원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미만인 공공기관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2023년도 한국소비자원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1.인건비	36,661	37,561	37,236	325	99.1
2.사업비	11,462	11,462	10,384	1,078	90.6
(항)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1,299	1,299	1,129	170	86.9
(세항) 정책연구	540	540	496	44	91.9
(세항) 거래조사	500	500	472	28	94.4
(세항) 대외협력	259	259	161	98	62.2
(항)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2,720	2,720	2,480	240	91.2
(세항) 소비자 정보제공	383	393	379	14	96.4
(세항) 소비자 역량강화	135	125	112	13	89.6
(세항) 소비자원 정보화	2,083	2,083	1,884	199	90.4
(세항) 소비자홍보	119	119	105	14	88.2
(항)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4,384	4,384	3,978	406	90.7
(세항) 소비자안전	1,344	1,344	1,211	133	90.1
(세항) 시험검사	3,040	3,040	2,767	273	91.0
(항)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565	1,565	1,455	110	93.0
(세항) 피해구제	804	804	761	43	94.7
(세항) 분쟁조정위원회	417	417	401	16	96.2
(세항) 지방소비자	344	344	293	51	85.2
(항) 수탁용역	1,494	1,494	1,342	152	89.8
(세항) 수탁용역	1,494	1,494	1,342	152	89.8
3. 운영비	6,304	6,304	5,272	1,032	83.6
(세항) 경영기획	5,750	5,750	4,748	1,002	82.6
(세항) 부서운영비	554	554	524	30	94.6
4. 예비비	1,362	462	-	462	0.0
지 출 합 계	**55,789**	**55,789**	**52,892**	**2,897**	**94.8**

(자료: 한국소비자원)

2) 출연금을 통한 수탁용역 사업 추진 부적정

한국소비자원은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편성된 출연금 일부를 수탁용역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사업에 집행하였음.

□ 한국소비자원은 고유사업으로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 등의 수탁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사업은 「소비자기본법」 제35조[304]에 규정된 업무 중 정책연구, 거래조사, 대외협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정책연구에 5억 4천만원, 거래조사에 5억, 대외협력에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음.

304) 제35조(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②~⑤ 생략

<2023년도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
	본예산	수정예산(A)			
▪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1,299	1,299	1,129	86.9%	1,299
- 정책연구	540	540	496	91.9%	500
- 거래조사	500	500	472	94.4%	540
- 대외협력	259	259	161	62.2%	259

(자료: 한국소비자원)

□ 수탁용역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305]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2007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인증기업에게는 우수기업 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의 경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매년 인증기업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19년 182개→′23년 225개)

305)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2007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증기업 수*	182	185	211	219	225
신규인증 기업 수	28	22	39	27	19
재인증 기업 수	63	72	78	78	101

(자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는 매년 상반기(3월~6월)와 하반기(7월~12월) 두 번으로 나누어 인증 신청→한국소비자원 사전 검토→현장심사→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인증서 교부 등의 절차를 거치며, 신청기업은 인증 신청에 필요한 심사비용을 납부(대기업 600만원, 중소기업 20만원)함.

<CCM 인증 심사 절차>

심사 접수 (3월/6월)*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신청
심사 일정 협의 (3월/7월)	• 심사 신청기업, 심사위원간의 일정 조율
사전 검토 및 서면 질의 (4월/7~9월)	• 기업 심사자료 및 홈페이지, 관련 기사 등을 사전 검토
현장심사 (4월/7~9월)	• 심사팀 : 신규평가 2~3명, 재평가 2명 • 현장심사 : 4h('21년 사전질의 도입으로 시간 축소)
인증심의위원회 (5월/10월)	• 심사 신청기업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심의 • 심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인증통보 및 인증서 교부 (5~6월/11~12월)(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인증서 교부

*(상반기 일정/하반기 일정)

(자료: 한국소비자원)

〈CCM 인증 심사항목 및 심사비용〉

구분		신규인증	재인증
평가항목	대기업	45개	47개
	중소기업	36개	43개
	공공기관	44개	46개
심사비용	대기업·공공기관	6백만원	4백만원
	중소기업	20만원	15만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용역비 및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의 심사비용을 수입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수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준비기업 교육 위탁용역비·중소기업평가 위탁용역비 4,600만원과 사업자의 심사비용 4억 2,800만원을 포함한 4억 7,400만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음.

○ 위탁용역비는 소비자중심경영과 관련한 교육 및 중소기업평가 위탁운영에 집행되었으며, 사업자가 납부한 심사비용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수여식 운영 등 인증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 수행을 위해 집행되었음.

□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은 고유사업비로서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등에 투입되어야 할 대외협력비를 공정거래위원회 수탁사업인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활동 지원' 사업에 집행해오고 있음.

<2023년도 대외협력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산출액
대외협력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122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활동 지원	39
	합계	161

(자료: 한국소비자원)

○ 고유사업비로 지출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활동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동반성장협의체를 운영해 CCM인증기업인 대기업과 CCM미인증기업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간 멘토링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금인 대외협력 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 동반성장협의체 운영을 통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전진단 업무는 동 사업의 수탁용역인 인증준비교육, 중소기업평가 및 인증심사과정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고유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사전진단은 인증심사 절차 개시 전에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증기준 적합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의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비용

을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출연금 산정 시 계획했던 한국소비자원 고유사업의 수행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임.

□ 그러므로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위한 추가사업은 수탁용역비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고유사업과 수탁사업간 설정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 사업비와 수탁운영비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집단분쟁조정 활성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2건에 불과하므로 집단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사업'은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겪는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합의·조정하여 신속한 피해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15억 6,500만원 대비 93.0%인 14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
	본예산	수정예산(A)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565	1,565	1,455	93.0	1,706
- 피해구제[306]	804	804	761	94.7	812
- 분쟁조정[307]	417	417	401	96.2	550
- 지방소비자[308]	344	344	293	85.2	344

(자료: 한국소비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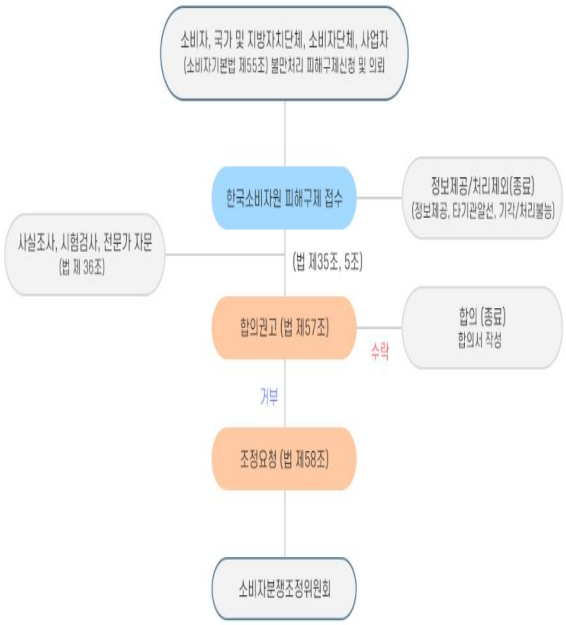
306)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307)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합의 미성립 사건, 지자체·소비자단체의 요청 사건을 심의·조정하는 준사법적 효력의 대안적인 분쟁 해결책 기능 수행

308)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권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 품목 발굴 및 집중 처리 등 지역 밀착형 피해구제 활성화 업무 수행

□ 분쟁조정 사업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309]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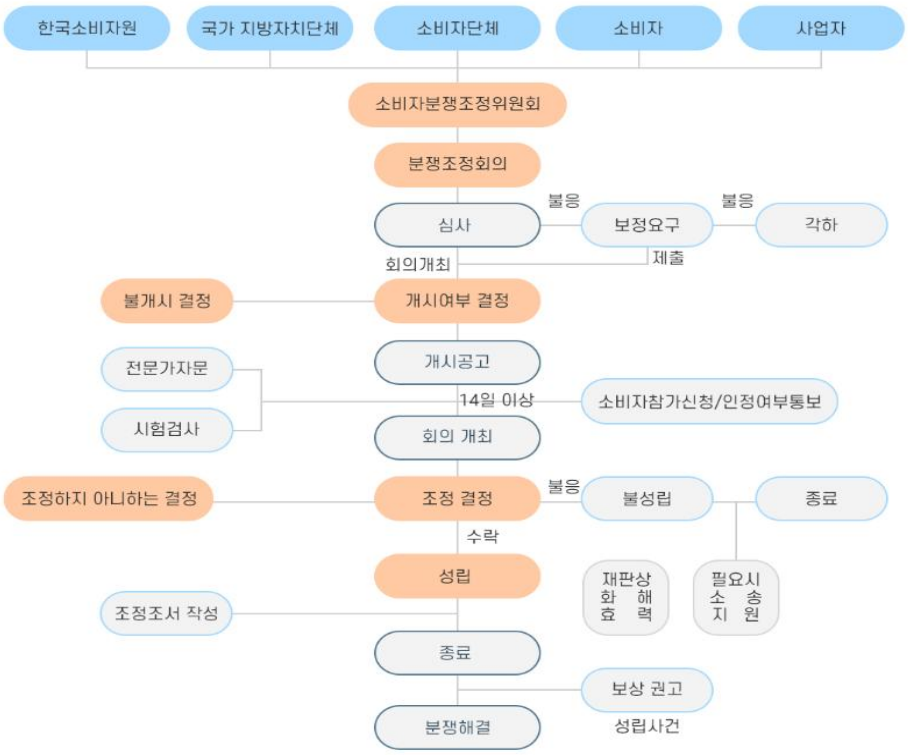
○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소비자나 사업자 또는 국가·지방자체단체·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 의뢰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함.

피해구제 절차도	분쟁조정 절차도
	

309)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쟁조정 중 집단분쟁조정은 유사·동일한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310] 및 동법시행령 제56조[311]에 따라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결정할 수 있음.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310)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311)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그러나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2020년 12건, 2021년 11건이던 접수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2022년 1건, 2023년 2건에 불과하므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집단분쟁조정 접수 실적>

(단위: 건,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접수 건수	12	11	1	2
소비자 수	1,061	12,991	682	102

(자료: 한국소비자원)

<최근 4년간 집단분쟁조정 접수내역>

구분	사건명
2020년	2020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옵션 미포함으로 인한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요구
	호텔 수분양자 혜택사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자기관리 멤버십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타운하우스 발코니 확장 계약 중도금 반환 요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과 다른 무상 옵션 설치 요구
	광고 내용과 다른 아파트 방충망 설치 계약 해제 요구
	아파트 현관 중문 하자에 따른 계약 해제 요구
	항공운송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아파트 주방 가스렌지 후드 하자 보수 요구
	계약 내용과 다른 에어컨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항공권 구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농산물 포장상자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21년	물빠짐 아기욕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아파트 주방타일 미시공에 따른 타일시공 요구
	젖병세정제 금속 이물 검출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아파트 레인지후드 소음 과다 발생 등에 따른 교체 요구
	물빠짐 아기욕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아파트 난방배관 오염수 및 불량에 따른 이물질 제거 요구
	머지플러스 잔여포인트대금 환급 요구(위메프 등)
	머지플러스 잔여포인트대금 환급 요구(이베이코리아 등)
	머지플러스 잔여포인트대금 환급 요구(티몬 등)
	머지플러스 잔여포인트대금 환급 요구(11번가 등)
	머지플러스 잔여포인트대금 환급 요구(롯데쇼핑 등)
2022년	임대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환급 요구
2023년	아파트 외벽 장식물 낙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GX프로그램 및 필라테스 폐지로 인한 강습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 요구

(자료: 한국소비자원)

□ 집단분쟁조정은 대량 생산·소비 체제 심화로 인한 물품·서비스 거래과정에서 대규모 집단사건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 집단분쟁절차가 개시될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신청을 통해 분쟁조정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으며,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사업자로 하여금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312].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의 직접 의뢰권자로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집단분쟁조정 건수가 2건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집단 소비자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12)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③ 생략
④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⑧ 생략

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 연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의 조정, 가맹·대리점종합지원, 공정위 수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출연하는 사업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3년도 수입액(수입실적)은 공정위 출연금 116억 5,700만원 등 126억 3,100만원이고, 지출액(집행액)은 인건비 70억 3,200만원, 사업비 21억 4,600만원, 운영비 25억 3,100만원 등 총 124억 7,900만원(집행률 97.2%)임.

<2023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11,657	11,657	11,657	-	100.0
2. 기타수입	316	316	189	△127	59.8
3. 수탁사업비	863	863	785	△78	91.0
수 입 합 계	12,836	12,836	12,631	△205	98.4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1. 인건비	7,171	7,171	7,032	139	98.1
2. 운영비	2,571	2,571	2,531	40	98.4
3. 사업비	2,231	2,231	2,146	85	96.2
- 분쟁조정	532	532	505	27	94.9
- 공정거래연구	483	483	459	24	95.0
- 공정거래전문교육	131	131	128	3	97.7
- 협약이행평가	323	323	315	8	97.5
- 가맹종합지원	253	253	238	15	94.1
- 동의의결이행관리	17	17	17	-	100.0
- 대리점종합지원사업	325	325	317	8	97.5
- 전자결재시스템교체	167	167	167	-	100.0
4. 수탁사업비	863	863	770	93	89.2
- 가맹본부정보공개등록	304	304	294	10	96.7
- CP등급평가[313]	186	186	186	-	100.0
- 중소기업기술자료비밀 보호컨설팅	53	53	39	14	73.6
- 경쟁영향평가연구	320	320	251	69	78.4
지 출 합 계	**12,836**	**12,836**	**12,479**	**357**	**97.2**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1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성립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3년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성립률은 80%를 하회하며,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비율도 3.3%에 불과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사업은 6개 분야에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314]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5억 3,200만원 대비 94.9%인 5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분쟁조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분쟁조정사업	532	532	505	27	94.9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5]등 6개 법률[316]의 분쟁조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불공정약관, 대리점거래의 6개 분야에서 발생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314)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송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315)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⑩ 생략

3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6개 법률 현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개분야 분쟁조정협의회 현황>

구분	근거법률	조정대상	분쟁유형
공정거래 분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72조 제1항 위반 관련 사업자 분쟁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
가맹사업 거래 분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분쟁 예)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	허위과장정보제공, 정보공개서미제공, 가맹금반환청구, 계약이행청구, 부당한 계약해지/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하도급 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 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분쟁 예)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납품업자 또는 입점업체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수령거부/지체, 부당한 반품, 판촉비 부담전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등
약관분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및 이와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 예) 대리점 및 프랜차이즈약관 등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약관,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권 제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위험을 전가시키는 약관 등
대리점 분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예)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등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런데 2023년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종결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건 대비 조정성립률은 40.5%이며, 종결사건을 제외한 처리건 대비 성립률은 79%로서 성립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317].

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조정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또한 조사과정을 거쳐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협의회의 조정안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임.

<최근 3년간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

구 분		처리현황 및 유형					성립률 [A/(A+B)]	전체 처리건 대비 성립률 [A/(A+B+C)]
		계 [A+B+C]	증가율	성립[318] [A]	불성립[319] [B]	종결[320] [C]		
2021년	소계	2,936	△1	1,156	392	1,388	75	39
	공정	1,054	13	337	129	588	72	32
	가맹	483	△3	165	62	256	73	34
	하도급	863	△10	386	128	349	75	45
	유통	25	△32	9	3	13	75	36
	약관	427	△11	225	60	142	79	53
	대리점	84	20	34	10	40	77	40
2022년	소계	2,868	△2	1,202	339	1,327	78	42
	공정	1,119	6	423	148	548	74	38
	가맹	513	6	230	54	229	81	45
	하도급	853	△1	361	95	397	79	42
	유통	34	36	21	1	12	95	62
	약관	271	△37	141	27	103	84	52
	대리점	78	△7	26	14	38	65	33
2023년	소계	3,151	10	1,278	350	1,523	79	41
	공정	1,267	13	475	135	657	78	37
	가맹	575	12	263	62	250	81	46
	하도급	929	9	354	100	475	78	38
	유통	26	△24	13	1	12	93	50
	약관	278	3	137	48	93	74	49
	대리점	76	△3	36	4	36	90	47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18) 당사자가 협의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거나, 스스로 합의하여 조정절차 종료를 원하는 경우
319) 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320) 각하, 신청취하,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조정절차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성립 및 불성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편 최근 5년간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처리된 사건 중에 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한 비율은 3.3%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보임.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조정안 관련 현황>

(단위: 건)

년도	처리건	조정안 수락 및 불수락 현황					
		합 계 (처리건 대비 조정안 제시 비율)		양당사자 수락	신청인 수락	피신청인 수락	양당사자 불수락
2019년	3,014	149	(4.9%)	76	52	13	8
2020년	2,972	139	(4.7%)	72	40	7	20
2021년	2,936	141	(4.8%)	70	51	12	8
2022년	2,868	149	(5.2%)	75	53	10	11
2023년	3,151	104	(3.3%)	53	34	10	7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스스로 합의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조정절차를 거부하여 불성립되는 경우 등은 조정안 제시 없이 처리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 제시에 앞서 사전 단계인 분쟁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에서 면밀한 조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안 제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이 불성립하는 주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쟁조정 성립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3) 수탁연구용역 확대 필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5년간 수탁연구용역 실적은 7건에 불과하므로 수탁연구용역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3회계연도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기타수입, 수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수입은 전년 이월금, 법원연계조정, 이자수입 및 잡수입, 수탁연구용역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금액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11,657	11,657	11,657	-	100.0
2. 기타수입	316	316	189	△127	59.8
3. 수탁사업비	863	863	785	△78	91.0
수 입 합 계	12,836	12,836	12,631	**△205**	98.4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기타수입 중 수탁연구용역 항목을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예산 편성액 2,300만원 대비 900만원의 수입실적을 달성하였음.

<2019년~2023년 수탁연구용역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2019	107	107	67	△40	62.6
2020	40	40	36	△4	90.0
2021	40	40	23	△17	57.5
2022	54	54	11	△43	20.4
2023	23	23	9	△14	39.1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러나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수탁연구용역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탁연구용역 수행과제는 연간 1,2건에 불과하므로 수탁연구용역의 추가수행을 통해 예산 수납률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019년~2023년 수탁연구용역 수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위탁기관	수탁과제명	수입결산
2019	한국법제연구원	베트남 공정경쟁 역량강화 사업	67
2020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매뉴얼 개발 연구	18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산업 분야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18
2021	공정위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마련	23
2022	공정위	2022년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행사 용역 위탁	11
2023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관련 위반금액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6
		OOO 시장 분석*	3

* 해당 과제는 보안과제로 일정 수준의 비공개가 필요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이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구 인력 결원 등에 따른 연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탁연구용역을 연간 1건 내지 2건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주제 발굴을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도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 등의 조사 및 분석,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등 고유업무 수행으로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추가 연구용역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용역 수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탁연구용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소관 】

Ⅰ. 일반회계

1. 핀테크 지원 사업[32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출시 실적 저조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하여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39억 5,000만원 중 138억 2,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1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핀테크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핀테크 지원 사업	13,950	-	-	13,950	13,821	-	129	12,330

(자료: 금융위원회)

321) 세부사업: 핀테크 지원 사업(1134-301)

2) 검토의견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출시 실적 저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기산일이 기존 '지정일'에서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됨에 따라 2023년도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건수가 저조하므로,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점에 비해 서비스 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322] 금융위원회에 의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323] 동안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규제특례)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게 됨.

○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 이후에 실제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가 그 효용을 누리지 못하므로, 제도의 효과성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실제 서비스로 출시되는 정도로 측정될 수 있음.

---

32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23) 2년의 범위 내 지정, 2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법 §4①, §10①)

○ 그러나 2023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출시 현황을 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56건으로 전년(52건) 대비 증가한 반면, 출시 건수는 15건으로 전년(46건)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출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7월말	계
지정 건수	77	58	50	52	56	62	355
출시 건수	24	47	39	46	15	22	193

(자료: 금융위원회)

□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건수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의 권고(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회의, '21.10.14.)에 따라 2022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기산일을 기존 '지정일'에서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이 지정기간(2년+2년)의 기산점이 되므로 사업자가 서비스 개발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를 사전에 진행한 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했으나, 기산일 변경 이후부터는 일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한 후 서비스 개발 등을 시작하여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임.[324]

□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점으로부터 서비스 출시 시점이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지정 시에는 심사

324) 이는 서비스 개발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해당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에 未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면서도 규제특례를 누릴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서비스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

기준에 부합했더라도 지정기간 개시일(서비스 출시일)에는 혁신성 등이 떨어질 수 있고,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서비스 출시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미출시 사유를 재점검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에 비해 서비스 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0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시 동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실제 서비스 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이 의결된 바 있음.

(2) D-테스트베드 사업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 필요

D-테스트베드 사업은 정보화 사업임에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서 누락되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D-테스트베드” 사업은 핀테크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핀테크 관련 초기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효과성을 테스트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를 연계해 지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억 1,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시범사업, 2022년도 정규사업(예산액 4억 2,900만원) 편성에 이어 2023년도(예산액 10억 1,000만원)부터 D-테스트베드 사업의 상시운영을 목표로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것을 상·하반기 2회로 늘리고, 오프라인 상시 분석환경을 제공하며, 금융데이터 이외에도 비금융업권(공공·유통) 데이터를 추가하는 등 D-테스트베드 사업을 확대하였음.

□ D-테스트베드 사업 예산액 대부분은 매년 'D-테스트베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해당 용역은 ① D-테스트베드 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② 전문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③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325]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정보

325) <'2023년도 D-테스트베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 일부>

1. **D-테스트베드 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요구사항 일부

요구사항 분류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유지보수 관련 일반사항, 웹사이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사항, 웹사이트의 컨텐츠 추가 및 수정 사항, 그 외 유지보수 관련 기타사항 등
성능 요구사항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시스템(하드웨어)의 성능을 고려한 운영방안 제시),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신뢰성 보장 관련 요구사항 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플랫폼 종속성 관련 요구사항(신규 개발 시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 IE(9·10·11), 엣지, 사파리, 크롬 등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표준화 적용 등), 이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관련 요구사항 등
보안 요구사항	보안 대책 제시 및 개발 보안 등

2. 전문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운영

2-1. 참여팀 개인화 원격분석환경 구축: 본 제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참여자들이 편리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SSL VPN 및 DaaS(Desktop as a Service) 등을 활용한 원격분석시스템 제공

2-2. 원격분석환경 운영

화 사업을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일반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D-테스트베드 사업은 정보화 사업에 해당함.

3.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요구 내역

구분	상세명세				수량
	항목	CPU(Core)	Memory(GB)	Disk(GB)	(식)
서버	(운영) WEB	2	4	300	2
	(운영) WAS	2	8	300	2
	(운영) 포털 DB	2	4	100	2
	(운영) DaaS	4	8	100	40
	(운영) GPU 서버	8 1vGPU	40 16(vGPU)	500	40
	(운영) 관리 서버	8	16	500	3
	(개발) WEB/WAS	2	4	50	1
	(개발) DB	2	4	50	1
	합계				91
시스템 S/W	OS linux	상용 S/W일 경우 라이선스 비용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 (기술지원 포함)			28
	OS window				20
	MS Office(365)				20
	WEB				3
	DBMS				3
보안 시스템	방화벽(F/W), DB Secure Zone(DB 접근제어, 암호화)				1
	웹 방화벽(F/W), 침입방지시스템(IPS)				1
	보안관제 등 관리서비스 제공				제공
	SSL VPN				25
네트워크	공인 고정 IP				제공
	대용량 트래픽 부하분산 제공 (외부/내부)				제공
	트래픽 3TB 이상 무료 제공 보장				제공
스토리지	Object Storage	무제한			1
	NAS	1TB 이상			1

(자료: 2023년도 D-테스트베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정보화 사업 적용대상>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

*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비 등으로 구성

○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 정보화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전파 관리, ICT산업 기반조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

(중 략)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다만, 일반사업 및 R&D사업(非정보화 유형)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도 본 지침을 준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에서 누락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326]에

32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함.

○ 이는 정보화 사업이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지침 및 가이드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D-테스트베드 사업은 정보화 사업에 해당함에도 2023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없이 편성·운영되는 등 정보화 사업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사업은 핀테크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의 아이디어 테스트 및 사업성 검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보화 사업과 관련성이 낮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미반영했다는 입장임.[327]

- 그러나 동 사업은 D-테스트베드 포털 및 전문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안 편성지침은 일반사업 내에 포함된 정보화사업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타 부처의 경우 일반사업의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7)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사업은 연중 한정된 테스트기간 내에 아이디어의 테스트 및 검증을 지원하는 것이고, 범용 플랫폼이 아닌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사업이며, 공공정보가 아닌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등 민간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정보화 사업과 관련성이 낮다는 입장이나, 동 사업은 모집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운영기간이 연중 약 7개월인 단년도 계속사업이고, 정보화 사업의 요건으로 범용 플랫폼인지 여부, 공공정보만을 활용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내역·내내역 사업의 경우에도 정보화사업으로 분류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는 점[328]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D-테스트베드는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다른 내역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연도 중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을 신설한 사업으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신설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보화 사업임에도 ISP를 수립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보다 엄격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 사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정보화 사업 관리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28) <2023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상 정보화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2022예산	2023예산안
산업부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중소기업FTA활용지원 (전주기 FTA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2,540 (400)	11,761 (100)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 고도화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 고도화)	1,370 (613)	1,026 (19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보화시스템	-	70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340	34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10	410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112,810	94,400
	마케팅지원	유통망진출지원 (우수제품 상세페이지 구축)	14,778 (800)	12,568 (1,200)
		공동A/S지원 (공동A/S운영)	6,230 (1,263)	6,230 (1,505)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인프라지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운영)	2,624 (2,200)	2,224 (1,8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2.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329]: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주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46억 4,100만원 중 46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FIU 전산망 구축·운영 (정보화)	4,641	-	-	4,641	4,640	-	1	4,635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FIU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의 운영비 집행 시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29) 세부사업: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1332-501)

□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국고금 관리법」제24조제1항은 그 성격상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30]

○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단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무관·지출관 간의 서류 송부, 계좌 이체 등 지출 절차를 간소화한 경비이며 일반적인 지출원칙의 예외이므로, 정부는 관서운영경비의 금액과 범위를 제한하여 과다 집행을 방지하고 있음.

-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 가능한 예산과목은 인건비(110목) 중 현역병사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건당 500만원 이하의 운영비(210목, 단 복리수행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시험연구비 중 연구용역비는 제외), 여비(220목), 직무수행경비(250목) 등임.

330)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인건비(110)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제외
여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직무수행경비(250)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안보비(27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정보보안비(28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호 및 교정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자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별지 제1호])

○ 그중 운영비(210목)와 관련하여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제1항에서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건당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331] 이는 지출관의 승인 없는 지출을 최소화하여 관서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운영비(일반수용비, 210-01목)로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 조달수수료 2,133만원, 정보보호필름 구입비용 585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여 관련 규정상 관서운영

---

331)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경비 지출한도를 초과하였음.

○ 특히 정보보호필름의 경우, 자금 부족을 사유로 10월 25일에 총 827만원의 구입비용 중 242만원은 “FIU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목)로, 585만원은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의 국외업무여비(220-02목)로 분할 집행한 후, 11월 9일에 국외업무여비로 집행한 585만원을 “FIU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정정하였음.

<2023년 운영비(210목)의 관서운영경비 지출한도(500만원) 초과 집행 사례>

(단위: 원)

세부사업명	비목	지급일	지급액	지급용도
FIU 전산망 구축·운영	일반수용비 (210-01)	2023.11.24.	21,332,340	22-24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장기계속 3차) 조달수수료
	일반수용비 (210-01)	2023.10.25.	2,416,800	전산소모품(정보보호필름) 구입
	일반수용비 (210-01)	2023.11.9.	5,853,000	FIU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 내 수용비로 비목 정정
자금세탁 방지추진	국외업무여비 (220-02)	2023.10.25.	5,853,000	전산소모품(정보보호필름) 구입
	국외업무여비 (220-02)	2023.11.9.	-5,853,000	FIU 전산망 구축운영 사업 내 수용비로 비목 정정

(자료: 금융위원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국고금 관리법」 등의 지출한도를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332]: 기여금 예산 과다 편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하여 본인납입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비례한 기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3,678억 100만원 중 3,677억 9,400만원(100.0%)이 집행되고, 7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7,801	-	-	367,801	367,794	-	7	368,211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①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② 취급은행 중 한 곳에서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본인납입금을 납입하면 ③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가입자의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3.0%~6.0%의 기여금을 지급하

332)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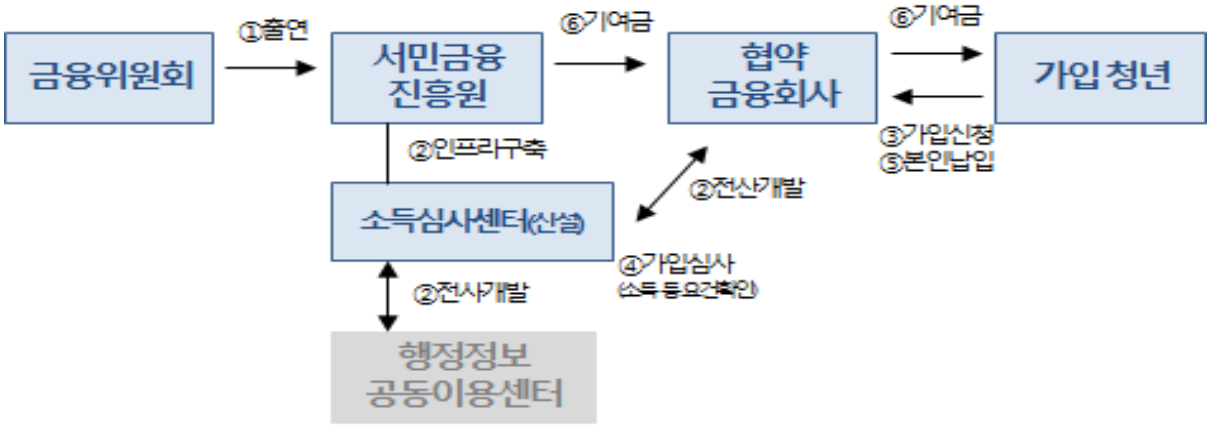
고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임.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총급여	종합소득	매칭비율	지급한도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3.7%	22,200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3.0%	21,000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만 제공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사업시행주체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인프라 구축비용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비용을 출연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은행을 통하여 매월 가입자에게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청년도약계좌 사업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출연금 외에 금융위원회 예산에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국내여

비, 사업추진비, 정책연구비 등 청년도약계좌 운영비용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출시 준비와 출시 후 관리 등을 수행함.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기여금 예산의 약 90%가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수요를 보다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하여 2023년도 예산에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신설해 예산 3,67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하였음.

○ 구체적 예산편성내역은 ①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 3,440억 3,700만원 ② 소득심사센터 설립 등 서민금융진흥원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출연금 236억 1,000만원과 ③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비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1억 5,400만원임.

□ 금융위원회는 예산 3,678억 100만원 중 운영비용 700만원(전액 정책연구비)을 제외한 3,677억 9,400만원(100.0%)을 집행하였으나, 이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예산을 출연하였음을 의미할 뿐, 서민금융진흥원이 실제 집행한 금액은 출연금 3,676억 4,700만원 중 642억 8,000만원(17.5%)에 그침.

○ 특히, 내역사업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 지급은 출연금 3,440억 3,700만원 중 432억 2,100만원(12.6%)만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87.4%에 달하였음.

-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은 출연금 236억 1,000만원 중 210억 5,900만원(89.2%)을 집행하고 25억 5,100만원(10.8%)을 이월하였음.

<청년도약계좌 사업 내역사업별 실집행>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	결산	실집행
기여금 지원	344,037 (100%)	344,037	43,221 (12.6%)
인프라 구축	23,610 (100%)	23,610	21,059 (89.2%)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154 (100%)	147	147 (95.5%)
합계	367,801 (100%)	367,794	64,427 (17.5%)

(자료: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는 예산편성 시 306만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었으나, 16.7%인 51.1만명에 그쳤고, 가입자의 납입액도 기존 예상치에 비해 낮았기 때문으로 보임.

○ 정부는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약 470만 명 중 306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한도의 약 80%를 납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인당 월평균 1.87만원의 기여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2023년 말까지 51.1만명이 가입하였고 인당 월평균 1.46만원의 기여금이 지급되었음.[333)]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실집행 비교>

구분	예산(예측치)	실집행
가입자 수	306만명 (100%)	51.1만명 (16.7%)
총 기여금 지급액	3,440억 3,700만원 (100%)	432억 2,100만원 (12.6%)

(자료: 금융위원회)

○ 이같이 가입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을 통하여 고용한 민원상담인력 역시, 예산편성 당시 하루에 가입신청자 300만명 중 1%인 3만명이 문의한다고 가정하여 민원상담인력 1인당 일 응대가능건수(150건)을 기준으로 200명 고용에 필요한 용역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담건수가 일평균 1,900건, 민원상담인력 1인당 일 10건에 그쳤음.[334]

□ 이처럼, 예산편성 시 가입자 규모 등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하여 출연금이 과도하게 계상됨에 따라,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여금 예산이 불용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이월되었고, 이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구축한 인프라의 활용도도 낮게 나타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내역사업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335]이 있었으며, 국회는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4,890

333) 국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청년도약계좌의 대상범위, 만기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가입자 및 납입액이 목표치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

334) 국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예상 문의건수를 고려할 때 필요한 민원상담인력의 규모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335) 제41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 제6차(2023.11.21.) 회의록

억 4,300만원 중 1,300억원을 감액하였음.

□ 한편, 정부는 ‘2024년도 예산 부대의견’[336]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2024.3.12.)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①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기존 중위소득 180% → 250% 이하)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②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급하는 등 상품구조를 일부 조정하는 것임.

○ 정부의 발표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기여금 지급규모도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되었으나, 2024년 6월말 기준 가입자 규모는 약 133만명[337]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추산한 규모[338]에도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 증가 추이를 고려해 수요를 보다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336)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정 예산 하에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337) 2024년 상반기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한 청년은 약 52만명 포함

338)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217만명 중 140만명 가량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해 총 200만명이 가입할 것을 예상함.(제4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 제6차회의 회의록)

4.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339]: 매칭방식 도입에 따른 문제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은 신산업·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재정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3,000억원은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300,000	-	-	300,000	300,000	-	-	240,000

(자료: 금융위원회)

□ ‘혁신성장펀드’는 매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재정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의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의 매칭 출자를 통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여 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업으로[340]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산업펀드’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성장지원펀드’로 구성됨.

---

339)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

340) 2021년과 2022년 수행되었던 뉴딜펀드를 2023년부터 개편한 것으로, 혁신성장펀드는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뉴딜펀드와 기본적인 성격은 유사하나, 투자대상 선정방식이나 운영방식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 혁신성장펀드의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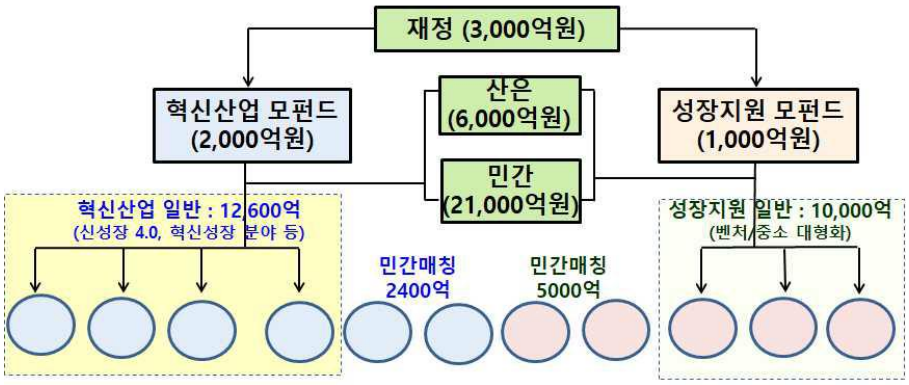
구 분	목적 및 투자대상
혁신산업펀드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및 신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분야에 투자하여 성장동력 창출 *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선정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력산업·신산업 품목군 분야(9개 테마284개 품목)
성장지원펀드	민간자본 조성이 부진한 성장 중·후기 단계* 투자에 집중하여 글로벌 유니콘기업 창출 촉진 * 창업(최초 투자)-성장단계(후속투자)를 넘어 대규모 추가 후속투자가 필요한 단계

주: 2023년도 기준

(자료: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 2023년에는 ① 혁신산업 분야에 재정 2,000억원, 정책자금 3,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출자 1조원을 매칭하여 1조 5,000억원 규모의 혁신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② 성장지원 분야에 재정 1,000억원, 정책자금 3,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출자 1조 1,000억원을 매칭하여 1조 5,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총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결성할 계획이었음.

<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3조원) 세부 구조 >



(자료: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 2023년도「혁신성장펀드」조성계획, 2023.2.22.)

○ 2024년 5월말 현재 혁신산업펀드에 2조 827억원, 성장지원펀드에 1조 8,600억원 등 총 3조 9,427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어 당초 계획을 초과달성하였음.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출자 분야별 출자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분야		출자 계획				실제 출자내역			
		정책자금 출자			총 조성목표	정책자금 출자			총 조성금액
		재정	산은	계		재정	산은	계	
혁신 산업	일반	1,536	3,000	4,536	12,600	1,536	3,000	4,536	18,557
	매칭	464	-	464	2,400	464	-	464	2,270
소 계		2,000	3,000	5,000	**15,000**	2,000	3,000	5,000	**20,827**
성장 지원	일반	300	2,900	3,200	10,000	300	2,900	3,200	13,600
	매칭	700	100	800	5,000	700	100	800	5,000
소 계		1,000	3,000	4,000	**15,000**	1,000	3,000	4,000	**18,600**
합 계		3,000	6,000	9,000	**30,000**	3,000	6,000	9,000	**39,427**

주: 2024.5월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 한편, 2023년에는 주목적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는 기존의 출자방식(이하 '일반방식')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여 이미 결성되었거나 결성 직전인 펀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재정과 정책자금을 매칭 출자하여 민간의 투자대상 선정 자율성을 높인 매칭출자 방식(이하 '매칭방식')[341]을 새롭게 도입해 병행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혁신산업펀드에 재정 464억원, 성장지원펀드에 재정 700억원과 정책자금 100억원을 배정하여 매칭방식으로 추진하였음.

341) 일반방식과 매칭방식 모두 재정, 정책자금과 민간 투자액을 매칭하여 자펀드를 조성하므로 새롭게 도입된 방식을 매칭방식으로 지칭하는 것이 용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정부가 기존의 방식을 일반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된 방식을 매칭방식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름.

2) 검토의견

(1) 사업추진방식 일부 변경(매칭방식 도입)

2023년에만 도입했던 매칭방식은 기(旣)결성된 펀드[342]나 결성이 거의 완료된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모험자본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방식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산 확정 후 사업 추진방식을 일부 변경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 확정 후인 2023년 2월,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서 주목적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는 기존의 일반방식 외에 202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2023년 혁신성장펀드 조성방안」(2022년 10월)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였음.[343]

○ 매칭방식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펀드가 혁신산업펀드 또는 성장지원펀드의 출자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모펀드 및 한국산업은행에서 매칭 출자하는 방식임.

○ 금융위원회는 기존 정책펀드가 주목적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여 출자분야를 공고하고 이에 응모한 운용사에만 출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 운용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다양한 투자대상 발굴 기

342) 투자미집행 한정

343) 기존의 출자방식도 민간과 매칭하여 출자하나, 해당 계획에서는 기존의 방식은 “일반출자방식”으로, 출자확약되거나 기결성된 펀드에 모펀드가 출자하는 경우를 “매칭출자방식”으로 명명함.

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매칭방식을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정부의 출자공고 내용에 제약받지 않고 운용사가 투자대상 및 운용전략을 폭넓게 정할 수 있어 민간의 창의성 발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344]

○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으로 2,270억원 규모의 혁신산업펀드(매칭)와 5,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매칭) 등 총 7,270억원의 매칭펀드가 결성되었고, 2024년 5월말 현재 각각 486억원(투자집행률 21%)과 665억원(투자집행률 13%)의 투자를 집행하여, 대체로 양호한 초기 투자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매칭펀드 결성 및 투자 실적(2023년도) >

(단위: 억원)

구 분	자펀드 결성액				투자 집행액 (B)	투자 집행률 (B/A)	미투자액 (A-B)
	재정	정책자금	민간	계(A)			
혁신산업펀드 (매칭)	464	-	1,806	2,270	486	21%	1,784
성장지원펀드 (매칭)	700	100	4,200	5,000	665	13%	4,335
계	1,164	100	6,006	7,270	1,151	16%	6,119

주: 2024.5월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 첫째, 혁신성장펀드는 대규모 정책마중물 자금 공급을 통해 민간자금의 매칭 출자를 유도하여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것인데, 신규로 도입된 매칭방식은 기(旣)결성된 펀드나 결성

344)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2023.2.22.,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 계획

이 거의 완료된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모험자본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타 출자자 출자확약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할 것[345]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매칭방식은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였으나 일부 자금 부족으로 아직 결성이 완료되지 않은 펀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분야 펀드 결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모험자본 공급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펀드로 인한 민간펀드의 구축효과를 감쇄하는 효과도 있으며, 펀드가 막 결성된 시기(1년차)에 민간출자자금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성장지원펀드(매칭)의 경우, 출자확약 금액이 정책 출자금액(건당 400억원)의 400% 이상인 경우 선정우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출자확약 금액이 1,600억원 이상인 중대형 운용사가 대상이 되며, 실제로 선정 지원한 3개 운용사 중 2개 운용사가 확보한 출자확약 금액이 이미 목표결성금액인 2,5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자금 부족으로 미결성된 펀드의 결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컸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매칭방식 펀드 운용사 선정시 경쟁률이 높지 않아[346] 시장의 수요가 큰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先)출자 확약한 민간출자자 및 추가 펀딩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매칭방식의 경우

---

345) 혁신산업펀드: 제안서 접수일 현재 타 출자자 출자확약액 360억원 이상 또는 기 결성된 펀드의 약정 총액 600억원 이상

성장지원펀드: 제안서 접수일 현재 타 출자자 출자확약 750억원 이상 보유(출자확약 금액이 정책 출자금액의 400% 이상인 경우 우대 기준 적용)

346) 혁신산업펀드(매칭)와 성장지원펀드(매칭) 각각 2개사를 선정하는데, 3개사씩 지원하여 경쟁률은 1:1.5임.

주목적 투자비율 등 일부 조건을 완화[347]하고 있어서 매칭방식이 혁신성장펀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주목적 투자분야 실적에 따라 운용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목적 달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임.[348]

□ 둘째, 매칭방식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이 예산 확정 후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업 추진방식 등을 고려하여 예산 사업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하므로 주요한 사업 내용 및 추진방식 등은 예산안 심사시 미리 제시되어야 함.

○ 예산안 심사 후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을 일부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이나, 동 사업은 예산 확정 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주요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었는 바, 금융위원회

---

347) 일반 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은 대체로 정책출자비율의 2배 수준인 60%로 설정되어 있고, 매칭 펀드도 정책출자금의 2배를 주목적투자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비례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출자비율이 (32.0%~37.5%) 수준 에서 (19.3%, 16%)로 낮아졌기 때문에 약정총액 대비 주목적투자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최소결성액 기준)은 낮게 나타남(38.6%, 32%).

348) 이와 관련하여 운용사 인센티브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후술함.

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매칭방식 운용보수 변경

성장지원펀드(매칭)은 지원한 운용사가 당초 운용보수 조건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타당한 사유 없이 자펀드운용사에게 지급하는 운용보수 조건을 관리보수율은 0.15%p 이상 더 높게 설정하고, 성과보수는 초과수익 전액을 우선적으로 자펀드운용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다른 자펀드운용사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여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향후 회수될 재정·정책자금의 누수 우려가 있음.

□ 혁신성장펀드 자펀드 운용사에게는 ① 운용보수와 ②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① 운용보수는 ⅰ) 관리보수와 ⅱ) 성과보수로 구성됨.

< 자펀드 운용사 보수 >

자펀드 운용사 보수		내 용
운용보수	관리보수	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일반적으로 총 자산가치 또는 약정된 자본의 일정 비율로 계산 (대체로 연 1.5%에서 2.5% 수준)
	성과보수	펀드의 성과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받는 보수. 일반적으로 특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로 계산 (예: 8%의 기준수익률 초과시 초과분의 20%)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펀드가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된 경우 추가로 받는 보수 (예: 특정 분야 투자비율 초과달성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5% 이내에서 달성률에 따라 지급)

○ 일반방식의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ⅰ) 관리보수는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 운용기간 등에 따라 연 0.5%~1.6% 범위의 관리보수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ⅱ)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349]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로 지급하거나 운용사 제안하는 방식 중 협의를 거쳐 확정함.

□ 매칭방식의 혁신성장펀드의 운용보수를 살펴보면, 혁신산업펀드(매칭)은 자펀드 운용사에게 일반방식의 혁신성장펀드와 동일한 운용보수 기준을 적용하였고, 성장지원펀드(매칭)도 당초에는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용보수 기준을 변경하였음.

○ 성장지원펀드(매칭)의 모펀드 운용사(신한자산운용)는 자펀드 운용

349) 혁신산업펀드는 내부수익률 7% 이상, 성장지원펀드는 내부수익률 8% 이상

사 선정에 지원한 모든 운용사(3개사)가 최초 공고문[350]에서 제시한 당초 운용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격 지원자 미달로 정상적인 운용사 선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산업은행에 운용보수 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고, 이후 한국산업은행과 모펀드 운용사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운용보수 조건으로 변경하고[351] 재공고 및 추가 접수기간[352]을 부여하여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함.[353]

- 운용사가 “기모집된 출자확약서(LOC) 등 대비 운용보수가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연금기금 등 국내 연기금[354], 공제회 등에서 매칭 방식의 출자사업을 진행할 때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 변경[355]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이에 따라 성장지원펀드(매칭)에 지원한 모든 운용사(3개사)가 변경된 공고문상의 운용보수 조건을 충족하여[356] 그 중 2개 운용사를 선정하였음.

---

350)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펀드) 2023년 2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 공고일: 2023년 9월 12일, 접수일: 2023년 9월 25일

351) 혁신성장펀드운영위원회(2023년 제3차, 2023.10.16.)의 승인을 거쳐 성장지원사업(매칭)의 운용보수를 변경하였음.

352) 운용보수 조건 변경에 따라 최초 공고문상의 보수 조건에서 지원하지 않은 잠재 운용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공고함.

353) 참고로, 혁신사업펀드(매칭)은 공고문상 보수조건을 충족하여 재공고 없었음.

354)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355) 일반방식의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동일 펀드 내 출자자가 운용사에게 지급하는 운용보수 조건은 통상 동일함. 다만, 원활한 펀드조성의 지원을 위해 최다출자자에 한해서 운용보수 등 일부 출자조건의 우대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

356) 기모집된 출자확약서에 따른 운용보수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운용보수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성장지원펀드(매칭) 운용보수 변경 내역 >

변경전

○ **관리보수** : ① 또는 ② 중 택일

-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아래 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이내에서 협의 가능

① 2년간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 기준, 이후 투자잔액 기준

구 분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3,000억원<
투자잔액	연1.6% 이내	연1.1% 이내	연0.6% 이내	연0.5%이내
(약정총액-투자잔액)	연1.4% 이내	연0.9% 이내		

* 성립일~2년 : 투자잔액 및 (약정총액-투자잔액) 기준, 2년~만기 : 투자잔액 기준

② 2년간 약정총액, 이후 투자잔액 기준

구 분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3,000억원<
성립일~2년	연1.5% 이내	연1.0% 이내	연0.6% 이내	연0.5%이내
2년~만기				

* 성립일~2년 : 약정총액 기준, 2년~만기 : 투자잔액 기준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이내

○ 기준수익률 : 내부수익률(IRR) 8% 이상

* 정책출자금액(산업은행, 정부재정 합산) 우대조치 제안 가능

○ 상기 보수 체계를 기본으로 성과 중심의 관리·성과보수를 연계 구성하여 제안 가능(사전 협의 요망)하며, 펀드별 보수체계는 선정시 개별 협의를 거쳐 확정

변경후

기모집된 출자확약서(LOC) 등 대비 운용보수가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제안

(자료: 각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문)

□ 적격지원자 미달로 인해 운용보수를 변경함에 따라 성장지원펀드(매칭)의 운용보수는 결과적으로 일반방식이나 혁신산업펀드(매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음.

○ 성장지원펀드(매칭) 관리보수 산정에 실제 적용되는 관리보수율(1.0%~1.75%)은 일반방식의 혁신성장펀드의 관리보수율(0.5%~

1.6%)보다 0.15%p에서 0.5%p 더 높게 설정되었음.

○ 성장지원펀드(매칭)의 성과보수를 살펴보면, B펀드의 경우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누적적으로 총수익의 20%에 이를 때까지는 자펀드 운용사에게 초과수익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초과수익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방식에 비해 자펀드 운용사에게 유리한 구조로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출자자에게 배분될 수익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향후 펀드 청산 등으로 회수될 재정·정책 자금의 누수 우려가 있음.

<혁신성장펀드 자펀드 운용보수>

운용보수	일반방식의 혁신성장펀드, 혁신산업펀드(매칭)	성장지원펀드(매칭)
관리보수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 기간 등에 따라 연 0.5%~1.6% 범위의 관리보수율 적용	사원별 출자금, 기간, 투자잔액 등에 따라 1.0%~1.75% 범위의 관리보수율 적용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초과시> 초과수익의 20% *예외적으로, 1개 펀드만 초과수익의 40% (누적적으로 총수익의 20% 한도)	<기준수익률 초과시> A펀드: 초과수익의 40% (누적적으로 총수익의 20% 한도) B펀드: 초과수익의 100% (누적적으로 총수익의 20% 한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이상을 종합하면, 동 사업은 2023년도에 신규로 매칭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세부 사업조건을 운용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에는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책펀드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매칭방식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357]

혁신산업펀드(매칭)와 성장지원펀드(매칭) 간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조건의 차이가 지나치게 클 뿐 아니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운용사)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인센티브 조건 설정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정책펀드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성과보수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펀드의 정책목적 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성장펀드도 자펀드 위탁운용사에게 운용보수의 일환인 성과보수 외에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혁신성장펀드(일반)의 자펀드 운용사에게는 중소기업 신주 투자실적 또는 민간 모험자본 및 해외자본 모집 실적에 따라 정책출자자 앞에 배분될 초과수익의 5% 이내에서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혁신성장펀드(매칭)의 자펀드 운용사에게는 기존의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변경하여 주목적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실적에 따라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매칭방식 펀드 운용사의 운용 자율성을 활용하면서도 정책목적의 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구조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함.

---

357)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2024년도에는 내용 일부 변경되었음.

<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

<table>
<tr><th>구 분</th><th>운용사 추가 인센티브</th></tr>
<tr><td>혁신성장펀드
(일반)</td><td>○ 인센티브 조건 충족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5% 이내에서 달성률에 따라 운용사 앞 지급 (①, ② 중 택일, 미선택 가능)
① 중소기업 신주 투자실적(중소기업 신규발행주식 투자금액 합계/약정총액)
<table>
<tr><td>중소기업 신주투자 비율</td><td>60% 이상</td><td>70% 이상</td><td>80% 이상</td></tr>
<tr><td>인센티브 지급비율</td><td>2% 이상</td><td>3% 이상</td><td></td></tr>
</table>
② 민간 모험자본 및 해외자본 모집실적
(민간 모험자본(해외자본 포함) 약정액/약정총액)
<table>
<tr><td>민간모험자본 모집비율</td><td>30% 이상</td><td>40% 이상</td><td>50% 이상</td></tr>
<tr><td>인센티브 지급비율</td><td>2% 이상</td><td>3% 이상</td><td>5%</td></tr>
</table></td></tr>
<tr><td>혁신성장펀드
(매칭)</td><td>○ 인센티브 조건 충족 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5% 이내에서 기준에 따라 운용사 앞 지급 (미선택 가능)
- 주목적투자분야 의무투자금액 초과 달성 실적
<혁신산업>
<table>
<tr><td>주목적투자실적</td><td>580억 이상</td><td>696억 이상</td><td>812억 이상</td></tr>
<tr><td>인센티브 지급 비율</td><td>2% 이상</td><td>3% 이상</td><td>5%</td></tr>
</table><성장지원>
<table>
<tr><td>의무투자금액 초과 투자실적*</td><td>250% 이상 ~ 300% 미만</td><td>300% 이상 ~ 350% 미만</td><td>350% 이상</td></tr>
<tr><td>인센티브 지급비율</td><td>2% 이상</td><td>3% 이상</td><td>5%</td></tr>
</table>* 주목적투자분야에 대한 투자금액/의무투자금액</td></tr>
</table>

○ 매칭방식은 일반방식과 달리 일정 규모의 출자확약이나 기결성을 전제로 하므로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른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성이 적고, 주목적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 조건을 일반방식에 비해 다소 완화[358]하고 있어서, 주목적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 실적에 따라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목적 달성을 도모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358) 일반 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은 대체로 정책출자비율의 2배 수준인 60%로 설정되어 있고, 매칭 펀드도 정책출자금의 2배를 주목적투자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비례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정책출자비율이 (32.0%~37.5%) 수준에서 (19.3%, 16%)로 낮아졌기 때문에 약정총액 대비 주목적투자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최소결성액 기준)은 낮게 나타남(38.6%, 32%).

< 주목적 투자분야 의무 투자 비율 >

	주목적 투자분야	의무 투자 비율	
		일반	매칭
혁신산업	▸다음에 모두 해당 ①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해당 기업에 투자 ② '新성장 4.0',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 ③ 중소·중견기업	-약정총액의 60% -정책출자금 -약정총액의 60% (정책출자비율은 규모에 따라 33.8% ~ 37.5%)	정책출자금 2배 (정책출자비율: 19.3%)
성장지원	▸다음에 모두 해당 ①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중소·중견기업 ② 투자 전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약정총액의 60% (정책출자비율 32%)	정책출자금 2배 (정책출자비율: 16%)

(자료: 각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문)

□ 매칭방식 펀드의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보면, 혁신산업펀드(매칭)와 성장지원펀드(매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의 표는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약정총액(최소결성액 기준) 대비 주목적 투자분야 비율로 나타낸 것임.

<주목적 투자 분야 비율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비율(매칭)>

인센티브 지급비율	인센티브 지급 조건	
	혁신산업(매칭)	성장지원(매칭)
2% 이상	최소결성액의 48.3%	최소결성액의 80.0%
3% 이상	최소결성액의 58.0%	최소결성액의 96.0%
5%	최소결성액의 67.7%	최소결성액의 112.0%
※ 의무비율 (최소결성액 대비)	최소결성액의 38.6%	최소결성액의 32.0%

주1) 인센티브 지급비율: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5% 이내에서 운용사 앞 지급

주2)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최소결성액(약정총액)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나타냄

주3) 약정총액=최소결성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결성액이 최소결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조건 비율이 하락할 수 있음.

(자료: 각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문을 토대로 작성)

○ 혁신산업펀드(매칭)과 성장지원펀드(매칭)을 비교해보면, 혁신산업펀드(매칭)의 주목적 분야 투자 의무비율은 최소결성액 대비 38.6%이고, 약 10%p씩 추가 달성할 때마다 운용사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 성장지원펀드(매칭)은 주목적 분야 투자 의무비율이 최소결정액 대비 32.0%로 혁신산업펀드에 비해 더 낮은데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결성액의 80.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5%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정총액이 반드시 최소결성액을 초과해야 하는 구조임.

○ 이를 혁신성장펀드(일반)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약정 총액의 60%)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성장지원펀드(매칭)의 인센티브는 성장지원펀드(일반)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약정 총액의 60%) 보다 20%p 높은 수준에서 지급하는 반면, 혁신산업펀드(매칭)는 혁신산업(일반)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약정 총액의 60%) 보다 낮은 수준에서도 3%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임.

□ 펀드별 특성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는 있으나, 펀드간 주목적 투자 분야 및 지원비율의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두 펀드의 인센티브 지급 조건 차이가 과대함.

○ 또한, 각 펀드의 인센티브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적정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방식과 비교할 때 혁신산업펀드(매칭)은 인센티브 지급조건의 달성이 다소 수월하고 성장지원펀드(매칭)은 상당히 어려워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자펀드 운용사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혁신성장펀드 운용사 인센티브 조건 설정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359]: 정책 수요와 소요 재원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부실(우려)차주[360] 관련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8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80,000	280,000	-	-	280,000	280,000	-	-	330,000

(자료: 금융위원회)

□ ‘채무조정’이란 채무의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의 연장 및 분할상환 등을 통하여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동 프로그램은

359)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

360) 부실차주: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대상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1개 이상의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채무자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채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상 ‘요주의’이하로 평가하는 채권의 채무자 등 장기연체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대상차주 중 부실차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협약 가입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채권 중 ②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하였거나 곧 발생할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최대 30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③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순부채의 60~80%(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를 감면하고,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및 장기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임.

□ 또한, 채무자 및 대출 유형에 따라, ①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권은 '매입형'(한국자산관리공사) 방식으로, ② 부실차주의 담보채권 및 부실우려차주는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방식으로 지원함. 매입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치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새출발기금'이 이를 매입하여 채권자로 참여하게 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

□ (개요)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출범('22.10.4일)**

□ (지원대상) **'20.4월~'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24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지원요건 완화) 등에 따라 기존 코로나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20.4월~'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24.2시행)

□ (방식)

매입형(한국자산관리공사)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부실차주(담보채권), 부실우려차주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비동의 시 기금 매입)

□ 2024년 6월 기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매입형의 경우 원금은 약 70%, 이자는 100% 감면되며, 중개형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약 5%p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입형 및 중개형 지원현황 >

(2024년 6월 기준)

구 분		매입형			중개형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부실차주(담보채권)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율	이자 감면율	평균 분할 년수	이자율 인하 (%p)	평균 분할 년수	이자율 인하 (%p)	평균 분할 년수
2022년 4/4분기		69.8%	100%	8.7	5.3%	15.3	5.2%	9.8
2023년	1/4분기	70.0%	100%	9.1	5.8%	13.8	4.3%	10.2
	2/4분기	69.9%	100%	9.4	6.2%	15.9	4.7%	10.2
	3/4분기	70.2%	100%	9.4	6.4%	15.8	4.5%	10.3
	4/4분기	71.3%	100%	9.5	5.6%	15.3	4.4%	10.3
2024년	1/4분기	70.4%	100%	9.5	5.2%	16.9	4.2%	10.2
	2/4분기	70.6%	100%	9.6	5.9%	15.4	5.0%	10.2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정책 수요와 소요 재원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

금융위원회는 정부 재정 출자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 수요와 재원 산정 기준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새출발기금을 위해 정부 재정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권매입 실적 및 매입가율, 공사채 발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자 규모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 등의 업무를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새출발기금'을 2022년 10월 신설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2022년 10월부터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총 30조원의 채권매입을 계획하고, 채권 매입가율 60%를 적용하여 18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 총 소요재원 18조원 중 14조 4,000억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예상 부도발생률 20%를 적용하여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3조 6,000억원은 정부가 자본금 출자를 통해 보충한다는 계획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산출 내역 >

■ **정부의 자본금 출자규모 3조 6,000억원** = ① **30조원**(채권매입규모) × ② **60%**(예상채권매입가율)× ③ **20%**(예상부도율)	
세부 산출 근거	① 채권 매입규모는 한국은행 추정 잠재부실 규모(72조원)의 약 40%로 정함
	② 담보·보증부 채권액은 채권원금의 약 85%, 신용대출(무담보)은 채권원금의 35%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개인사업자 보유 대출채권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균 매입가율을 채권원금의 60%로 설정
	③ 통상적으로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폐업기업에 대한 보증배수 5배를 원용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해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 6,000억원과 현물출자 5,000억원 등 1조 1,000억원을 출자하였고, 2023년도 예산 2,800억원, 2024년도 예산 3,3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2024년 6월 기준 동 사업을 위한 정부의 자본금 출자규모는 총 1조 7,100억원임.

○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공사채 발행을 통해 2023년도에 3,600억원, 2024년도에 4,900억원을 확보하였는데, 2024년 6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사업 운용을 위해 투입된 자본금 출자 및 공사채 발행의 총 규모는 2조 5,600억원임.

< 새출발기금을 위한 자본금 출자 및 공사채 발행 규모>

(단위: 억원, 2024년 6월 기준)

	총계획	'22년	'23년	'24년	투입 합계	계획 대비 투입
자본금출자(예산)	36,000	11,000*	2,800	3,300	17,100	47.5%
공사채발행	144,000	-	3,600	4,900	8,500	5.9%
합 계	180,000	11,000	6,400	8,200	25,600	14.2%

주: 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 재구성)

□ 또한, 2023년 1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종전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정의 주된 이유는 정부가 공사에 새출발기금 운용을 위해 3조 6,0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하는데, 법정자본금이 3조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음.[361]

□ 그러나 새출발기금의 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6월말 기준 채권 매입규모는 4조 7,932억원으로, 총 계획규모 30조원의 15.9%를, 채권매입 소요금액은 2조 687억원으로, 총 계획규모 18조원의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361) 종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고, 2022년 11월 초 기준 공사의 납입 자본금은 2조 7,119억원이었음.

<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 >

(단위: 억원, 2024년 6월 기준)

구분	총 계획규모	실적	계획 대비 실적
채권매입 규모	300,000	47,932	15.9%
채권매입 소요금액	180,000	20,687	11.5%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총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었는데, 총 사업기간 3년 중 1년 9개월(2024.6.기준)이 경과한 시점의 계획 대비 실적이 20% 이하라는 현 추세를 고려한다면 사업기간 내에 당초 계획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또한, 채권매입 규모와 그 매입 소요금액을 살펴보면, 평균 채권 매입가율이 43.2%로 나타나, 정부가 소요금액 산정 시 적용한 평균 매입가율 60%와는 큰 차이가 나타남.

<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세부 현황 >

(단위: 억원, 2024년 6월 기준)

구 분	채권매입 규모	매입 소요금액	평균 매입가율	계획상 매입가율
매입형(원리금 감면)	33,506	9,715	29.0%	35%
중계형(이자율인하 등)	14,426	10,972	76.1%	85%
합 계	47,932	20,687	43.2%	60%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 재구성)

○ 2024년 6월 기준의 평균 채권 매입가율 43.2%를 소요재원 산정 시에 적용했다면,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에도 채권매입에 소요되는 총 금액은 12조 9,600억원으로 계획상 금액 18조원 보다 5조 400억원이 적고, 정부 재원으로 부담하는 자본금 출자 금액도 계획상 금액 3조 6,000억원 보다 1조 80억원 적은 2조 5,920억원이 됨.

< 채권 매입가율에 따른 소요재원 추정 >

(단위: 억원)

구 분	계획상 매입가율 60% 적용	평균 매입가율 43.2% 적용	차이
채권매입 규모	300,000	300,000	-
채권매입 소요금액	180,000	129,600	50,400
- 정부 자본금 출자 (20%)	36,000	25,920	10,080
- 공사채 발행(80%)	144,000	103,680	40,320

□ 새출발기금의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책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재정 지원 등 소요재원 산정 시에 채권 매입가율 등 산정 기준값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임.

□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 대상의 수요 및 재정 지원 등 소요재원의 산정이 부정확한 경우, 국회의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 노력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 향후, 금융위원회는 정부 재정 출자 기반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 수요와 재원 산정 기준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새출발기금을 위해 정부 재정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권매입 실적 및 매입가율, 공사채 발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자 규모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6.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362]: 사업 목적에 충실한 정책모기지 운영 및 상품요건 변경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68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66,800	-	-	166,800	166,800	-	-	-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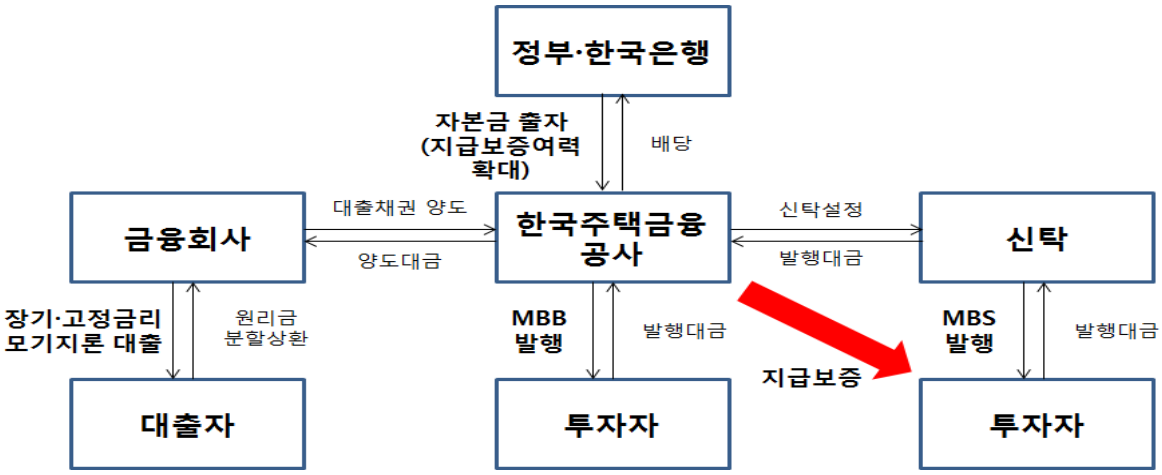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정책모기지 공급 포함),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이 중 정책모기지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대출을 공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

362) 세부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2632-301)

하고, 이를 담보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Mortgage Backed Bond, 커버드본드(Covered Bond, CB)라고도 함)을 직접 발행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을 자기신탁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 발행대금을 받아 금융회사에 주택저당채권 양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MBS 상환의 안정성을 담보함으로써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사업 흐름도>



(자료: 금융위원회)

○ MBS 지급보증잔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지급보증배수”라 하는데, 지급보증배수가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초과하면 투자자가 MBS의 리스크를 크게 인식하여 MBS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발행금리가 상승하여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 상품의 대출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363]를 통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함으로써 지급보증배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364]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을 통하여 2004년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MBS 405조 1,050억원, CB 17조 2,509원 등 422조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2024년 5월말 기준 지급보증배수는 34.9배 수준임.

○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에 따라 한국은행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이후 2004년, 2012년, 2015년, 2022년, 2023년[365]까지 총 5회에 걸쳐 9,950억원을 출자하였음.

2) 검토의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게 그 대상을 고소득자까지 확대하고, 신규주택 구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도록 운영함에 따라 가계부채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36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36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에 따른 법정 지급보증배수는 50배이나, 23년말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38.6배 이내로 재설정하고, 미유동화자산을 고려한 실질 지급보증배수를 도입하여 40.8배 이내로 관리하고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지급보증) ①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365) 2004년 3월 1일(3,100억원), 2012년 7월 31일(1,350억원), 2015년 6월 5일(2,000억원), 2022년 8월 30일(1,200억원), 2023년 6월 23일(2,300억원) 출자가 이루어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출범한 이래 정책모기지 사업을 통하여 2024년 5월말까지 363만건, 443조원의 대출을 공급하여 무주택자 등의 주택구입을 지원하였음.

○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었고, 이러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하여 ①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366] ②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여력 확충을 통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였으며[367] ③ 변동(혼합)금리·원금일시상환 대출로 이루어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초)장기·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368] 대출을 유도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하였음.

□ 반면, 저리의 정책모기지 공급이 주택담보대출 확대 유인을 제공하여 우리사회의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의 심화에 기여하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규모는 2023년말 기준 1,886조 3,647억원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064조 3,391억원으로 56.4%를 차지함.[369]

○ 2023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전년대비 10.1조원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담보대출은 45.1조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

366) 일반적으로 정책모기지 상품의 대출금리는 일반상품의 대출금리보다 낮으며, 상품에 따라 취약계층 등에게는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367)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함으로써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위험가중치가 낮은 MBS를 보유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음.

368)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가계가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을 상환하면 되므로 가계가 적정 수준 이상의 차입을 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기간 동안 실질적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기 시 큰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여 상환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369)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4.4분기 가계신용(잠정)”, 2024.2.20.

대출이 51.6조원 증가하였는데, 은행자체대출은 4.2조원 감소한 반면, 정책모기지가 29.4조원, 주택도시기금이 26.4조원 증가[370]하여 정책금융상품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24년 5월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71조원인데, 그 중 정책모기지는 178조 4,000억원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23년 1월 출시되어 1년간 공급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당초 글로벌 통화긴축[371]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서민·실수요자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1년간 41조 8,000억원이 공급되어[이 중 신규주택 구입목적 대출은 27.1조원(65%)으로, 기존대출 상환조건부 13.7조원, 순수 신규대출 13.4조원으로 구성],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음.[372]

○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모기지와 달리 소득기준을 없애고, 대상주택가격도 기존의 6억원보다 높은 9억원까지 확대하였는데, 2023.9.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상환한 금액비중은 37.3%에 불과한 반면 신규주택 구입비중은 62.7%를 차지하고,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거나 부부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금액비중

37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24.1.11.

371)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8. 기존 0.5%에서 0.75%로 인상한 것을 포함해 총 10차례에 걸쳐 2023.1.까지 3.5%로 인상 / 미국도 2022.3.부터 금리를 인사하여 2023.7.부터 5.5%로 유지 중

372) 한국은행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후인 2023년 2월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대환대출 비중이 높아 전체 가계대출 순증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나[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3년도 제4차)], 2023년 9월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지원 등으로 인하여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이 42.9%를 차지하였음.

○ 이와 같이 신규주택 구입 용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기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기준(6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고가주택에 상당부분의 자금이 공급[373]된 것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3.9.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별/유형별 유효신청 현황>

(단위: 억원)

자금용도별		유형별	
구분	금액(비중)	구분	
기존대출 상환 / 임차보증금 반환	140,303(37.3%)	우대형	214,965(57.1%)
신규주택 구입	236,139(62.7%)	일반형	161,517(42.9%)
합계	376,482(100%)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2023년 2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9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을 축소[374]하였음.

373) 정책모기지 상품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적격대출 상품이 과거에도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의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하여 운영해왔음.

374)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축소한 것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관이 주택금융공사의 한정된 지원 여력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임.

○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계획 발표 당시(2023.1.)에는 우대형·일반형 모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2023년 9월부터 소득기준 제한이 없었던 일반형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대출만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음.

□ 국민의 주거안정은 중요한 정책목표이고, 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식 대출 유도를 통하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식 대출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 2023년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여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며, 기존 발표와 달리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 등 상품요건을 중도에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향후 정책모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기존 발표내용과 다르게 상품요건 등이 변경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7.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375]: 불용 과다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의 운용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비(非)인건비성 기본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3억 5,600만원 중 19억 4,900만원(82.7%)이 집행되고, 4억 600만원(16.8%)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회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416	-	△61	2,356	1,949	-	406	2,935

(자료: 금융위원회)

375) 세부사업: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7111-251)

2) 검토의견

(1) 증액 편성 이후 불용 과다 부적절

금융위원회는 연례적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23년 집행실적이 오히려 예년보다 부진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사업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 부진의 사유를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실의 일반수용비가 연례적으로 부족하여 다른 부서 기본경비의 내역변경[376] 등을 통해 기획조정관실의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회의수당 등으로 집행해왔고, 2022년 추경 당시 금융위원회 각 실국을 대표하여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를 감액했던 점 등을 반영하여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 예산을 2022년(추경) 대비 약 4억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음.[377]

376) 단위사업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377)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5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3년도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 예산 편성 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822백만원 → 1,154백만원(+331백만원, +40.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78백만원 → 79백만원(+1백만원, +1.3%)
○ **임차료(210-07) : 404백만원 → 448백만원(+44백만원, +10.9%)**
○ 유류비(210-08) : 17백만원 → 17백만원(+0.2백만원, +1.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7백만원 → 17백만원(+0.09백만원, +0.6%)
○ 일반용역비(210-14) : 17백만원 → 19백만원(2백만원, +11.8%)
○ 관리용역비(210-15) : 40백만원 → 40백만원(전년동)
○ 국내여비(220-01) : 88백만원 → 88백만원(전년동)
○ 국외업무여비(220-02) : 14백만원 → 14백만원(전년동)
○ **국외교육여비(220-03) : 32백만원 → 48백만원(+16백만원, +50.1%)**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97백만원 → 336백만원(+39백만원, +13.0%)**
○ 배상금(310-02) : 27백만원 → 25백만원(△2백만원, △7.4%)
○ 포상금(310-03) : 2백만원 → 2백만원(전년동)
○ 기타보전금(310-04) : 28백만원 → 33백만원(+5백만원, +18.1%)
○ 공사비(420-03) : 18백만원 → 16백만원(△2백만원, △11.1%)
○ **자산취득비(430-01) : 65백만원 → 81백만원(+16백만원, +24.4%)**

□ 그런데 동 사업은 매년 집행률 95%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여왔던 것과 달리, 2023년에는 실제 집행액이 예년보다 적어 집행률이 예산현액 대비 82.7%에 불과하였으며, 6,100만원을 감액하는 내역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최근 결산 내역 및 2024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0	2,053	2,030	-	224	2,254	2,140	105.4	94.9	-	114
2021	2,043	2,043	-	89	2,132	2,030	99.4	95.2	-	102
2022	2,094	1,966	-	117	2,083	2,031	103.3	97.5	-	52
2023	2,416	2,416	-	△61	2,356	1,949	80.7	82.7	-	406
2024	2,935	2,935	-	-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세부적으로, 2023년 증액편성된 주요 비목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도 집행액이 증액편성되기 전인 2022년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증액 편성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일반수용비(210-01)는 전년도 대비 3억 3,100만원(40.3%)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액 11억 5,400만원 중 1억 1,900만원을 자체전용 또는 내역변경하여 감액하였는데도 1억 9,4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3.0%에 불과하며,

- 임차료(210-07) 또한 전년도 대비 4,400만원(10.9%)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3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액이 증액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증액 비목의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비목	2022 추경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수용비	822	1,154	-	△119	1,036	842	-	194	1,422
임차료	404	448	-	-	448	385	-	63	519
국외교육여비	32	48	-	71	119	111	-	7	48
관서업무추진비	297	336	-	-	336	333	-	3	356
기타보전금	28	33	-	-	29	8	-	25	38
자산취득비	65	81	-	△10	71	67	-	4	163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2023년 주요 증액 비목의 집행실적 부진이 확인되었는 바,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부진의 사유를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관례적인 국외업무여비(220-02) 편성 지양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 중 국외업무여비는 이전의 사업추진 경과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관례적인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 매년 집행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그 중 일부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세부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하여 향후 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에 매년 ① 우수공무원 금융정책 역량강화 해외우수기관 시찰, ② 법제업무담당자 법제역량 강화, ③ 성과관리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조사를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국외업무여비(220-02)를 편성·집행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국외업무여비[378]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예산액 1,400만원 중 약 500만원이 집행되어 약 35.7%의 집행률을 나타내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웠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

---

378) 국외업무여비의 내역(세목)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 체결 등)
 -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참석
 -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외출장여비
3.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더라도 매년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15~2023년 국외업무여비(220-02)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예산액(A)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15	89	△63	26	26	-	29.0
2016	91	△40	51	44	7	48.6
2017	32	-	32	9	23	28.8
2018	32	-	32	9	23	28.1
2019	29	△13	16	13	3	44.8
2020	19	△19	0	0	-	0.0
2021	14	△14	0	0	-	0.0
2022	14	△7	7	4	3	28.6
2023	14	-	14	5	9	35.7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해외연수에 약 500만원을 집행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2022년에도 동일하였음[379].

379)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동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2022년 및 2023년 국외업무여비 편성내역 대비 집행실적 등>

(단위: 천원)

구분	편성내역	예산액	집행실적	집행액
2022년	우수공무원 금융정책 역량강화 해외우수기관 시찰 (싱가폴 4박 5일, 5급 1명, 6.7급 2명)	8,962	-	-
	법제업무담당자 법제역량 강화 (제네바, 6박 8일, 4급 1명)	2,500	2022년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3,811
	성과관리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조사 (런던, 3박5일, 5급 2명)	5,206	-	-
	조정	-2,515		
	2022 소계	**14,153**		**3,811**
2023년	우수공무원 금융정책 역량강화 해외우수기관 시찰 (싱가폴 4박 5일, 5급 1명, 6.7급 2명)	8,996	-	-
	법제업무담당자 법제역량 강화 (제네바, 6박 8일, 4급 1명)	2,500	2023년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5,136
	성과관리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조사 (런던, 3박5일, 5급 2명)	5,223	-	-
	조정	-2,566		
	2023 소계	**14,153**		**5,136**
2024년	우수공무원 금융정책 역량강화 해외우수기관 시찰 (싱가폴 4박 5일, 5급 1명, 6.7급 2명)	8,996		
	법제업무담당자 법제역량 강화 (제네바, 6박 8일, 4급 1명)	2,500		
	성과관리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조사 (런던, 3박5일, 5급 2명)	5,223		
	조정	-2,566		
	2024 소계	**14,153**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17년 및 2018년 결산 심사에서도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국외업무여비가 과도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받았음.[380]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2018년 이후 해외 우수기관 시찰 예정지 변경(미국 워싱턴→싱가폴)에 따라 예산 단가를 감액편성한 것 외에는 매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고, 해외우수기관 시찰, 선진국 사례조사 등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관련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금융위원회의 다른 세부사업인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7135-301)[381]에서 금융혁신 전문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직원의 해외 우수기관 방문[382]이 시행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해외 시찰을 위한 두 사업간에 큰 차이가 없고,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로 실시하는 사업은 최근 진행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도 해당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의 해외우수기관 시찰은 특정 업무와 관련한 타부처 주관 국외출장[383]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음.

□ 향후 금융위원회는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비총액)의 국외업무여비

---

380) 당시 금융위원회는 당초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융정책 수립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기관 시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현안 업무수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불용되었다고 설명하였음.

381) 조직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업무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의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① 직무수행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② 금융혁신 전문역량 강화, ③ 워크숍, ④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⑤ 업무우수부서·직원 포상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382) 2023예산으로 국외업무여비(220-02)가 2,522만원 편성되어 2,200만원 집행되었음.

383)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인사혁신처 인사업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권익위 청렴업무 등

예산 편성시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실현가능한 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국외 업무여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3) 편성 및 집행 지침을 위반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개선

금융위원회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을 위반하여 잘못된 비목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지침에 부합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상용임금(110-03)은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보수로,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는 상용임금(110-03)에 포함될 수 없고 별도 비목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상용임금(110-03) 비목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384]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병역법」 제31조 제5항[385]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기본급, 교통비, 급식비 등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간 상용임금에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를 함께 편성·집행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예산 관련 지침에 맞추어 각각을 별

384)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111-201)

385)「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 ④ (생략)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도의 비목[386]으로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급여의 형태로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침 위반의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387]

○ 또한,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는 총액인건비 비대상인데도, 이를 상용임금 비목에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총액인건비 비대상 항목이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 지출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음.

- 금융위원회는 총액인건비[388] 적용 대상기관으로, 총액인건비(인건비·운영경비)간에는 자체 전용을 허용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대신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과 비대상 사업간 이·전용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389]

-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는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나뉘며[390], 총액인건비 대상이 되는 운영경비에는 1) 비정규직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 각 중앙관서 등의 조직과 인력 규모에 따라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가 있음.

---

386)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피복비는 피복비 세목(210-03목), 급식비는 급식비 세목(210-04목), 교통비는 국내여비 세목(220-01)로 편성해야 함.

387) 인사혁신처 등은 지침에 맞추어 보수,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 등을 별도 비목으로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급여의 형태로 일괄하여 집행하고 있음.

388)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시행기관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임.

389)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은 비대상 사업에 비해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대상과 비대상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큼.

390) 인건비: 공무원 및 개별법령에 채용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타직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
운영경비: 기본경비에 편성된 경비 중 정원 및 인력운영과 관련 있는 일부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중앙행정기관 기준)>

구 분	세 부 내 역
인건비	인건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 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운영경비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 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교수보직경비(250-01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고용부담금(320-09)

- 이에 따라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는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가 아니므로,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총액)의 상용임금(110-03) 비목으로 편성 및 집행되어 총액인건비제도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됨.

8. 정책연구개발[391]: 수의계약 과다 및 수행기관 편중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정책연구과제를 심의·선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위탁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7억 9,000만원 중 7억 2,200만원(91.4%)이 집행되고, 5,500만원(7.0%)은 이월되었으며, 1,300만원(1.6%)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개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정책연구개발	700	90	-	790	722	55	13	665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 및 특정 수행기관 편중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23년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25개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6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을 다음연도

391) 세부사업: 정책연구개발(7135-302)

로 이월(2023년에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4년에 종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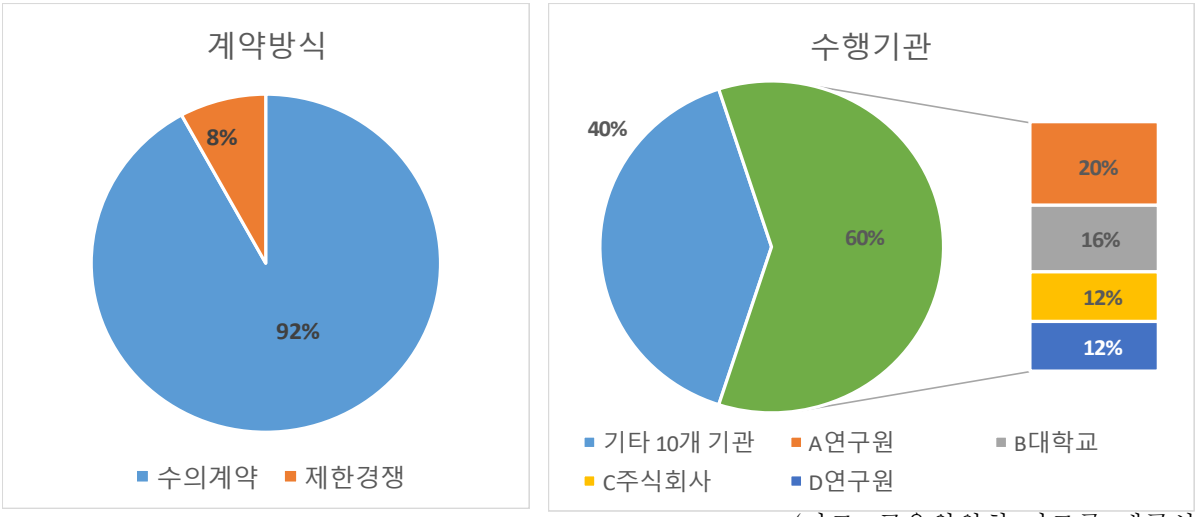
□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5건의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23건(92.0%)은 계약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2건(8.0%)은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392]을 두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총 25건 중 19건에 대해 제안요청서상의 발주금액을 2천만원 내외로 설정하여 이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살펴보면, 25건의 계약 중 특정 4개 수행기관이 전체 계약의 60%인 15건을 수행하였고, 최근 5개년(2019년~2023년)간 수행한 실적[393] 중에서도 위와 동일한 특정 4개 수행기관이 전체의 54.4%를 수행하였음.

3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393)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업의 정책연구비를 사용한 용역 대상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개발 사업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를 재구성)

○ 이와 같은 집행실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특성상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고도의 사전 지식·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수의계약과 수행기관 편중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연구용역은 일반경쟁을 원칙[394][395]으로 하고 있다는 점, 금융위원회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중에는 연례적인 만족도조사, 경영평가, 기초통계분석, 실태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특정 기관이 다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정책연구용역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효과

3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395)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연구용역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 및 특정 수행기관 편중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9. 금융감독원 지도·감독 강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됨.[396]

○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며, 금융감독원은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397][398]

---

39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39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98)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은 2018년 2월 21일 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으며, 이에 따라 매년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는 「금융위원회법」[399]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400]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401],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4,275억으로 예산(3,969억원) 대비 306억원 초과되었으며, 총지출은 3,868억원(97.5%)으로 예산(3,969억원) 대비 101억원 불용되었음.

○ 초과수입은 회사채 등 발행분담금 수입(+277억원)과 이자수익 등 운영외 수입(+29억원)에서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인건비 등 초과지출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17) 및 운영외비용등(△198억원)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음.

○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인 수지차익 407억원은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납부기관별 수납비율에 따라 반환함.

---

39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분담금)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1) (감독분담금)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총부채, 영업수익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분담

(발행분담금) 주식,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

<2023회계연도 금융감독원 수입·지출 결산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a)	결산액(b)	(b-a)	
Ⅰ. 총수입(A)	3,969	4,275	306	4,159
운영수입	3,930	4,207	277	4,097
감독분담금	2,980	2,980	0	3,030
발행분담금	895	1,172	277	1,012
한은출연금	50	50	0	50
기타수입수수료	5	5	0	5
운영외수입	39	68	29	62
Ⅱ. 총지출(B)	3,969	3,868	-101	4,159
일반관리비	3,533	3,630	97	3,766
인건비	2,343	2,433	90	2,467
경비	860	884	24	944
퇴직급여	330	313	-17	354
운영외비용등	436	238	-198	393
Ⅲ. 수지차익(A-B)	0	407	407	0

(자료: 금융감독원)

2) 검토의견

(1) 민간인력 파견 및 타 기관 파견 관리 필요

금융감독원의 민간인력 파견 활용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감독원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타 기관 파견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말 금융감독원의 정원은 2,105명이며, 현원은 2,069명으로 인력 충원률은 93.8%임. 이 중 금융감독원에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파견한 인력은 67명이며, 그 외에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은 36명임.

<금융감독원 인력 운용 현황(2023년말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정원[1] (A)	현원 (B)	충원율 (B/A)	파견	
				금감원→타기관	타기관→금감원
임원	15	15	100.0	-	-
직원	2,190	2,054	93.8	67	36[2),3)]
계	2,205	2,069	93.8		

주1) 임금피크제 별도정원(59명) 포함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에 따라 감소하는 퇴직자 수를 매년 별도정원에 반영)
2) 인사교류 목적 상호파견(한은, 권익위, 검찰 등 6명), 자문관(3명)은 제외
3) 검사대상 기관 및 금융 관련 협회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파견인력 2인(우체국 금융개발원, 신용회복위원회)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의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금융감독원이 업무 공조 등을 위해 민간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 대상 기관에

과도한 인건비 등의 부담을 전가할 수 있고 이해충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인력 활용 규모의 적정성을 상시 점검하고, 민간인력 활용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동안 이에 근거한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다수의 인력이 금융감독원에 파견되어 근무해 왔으며[402], 2024년 1월 현재는 총 36명의 타 기관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에 파견되어 근무 중임.

402) 검사대상 기관 및 금융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누계
인원	57	62	50	44	34	160

주. 인사교류 목적 상호파견, 자문관은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 타 기관 소속 직원 금융감독원 파견 현황 >

(단위: 명)

부 서	담당업무	금융기관	공공·유관기관	합계
보험사기대응단	● 보험사기 공동조사 ● 수사의뢰 사건 관련 수사기관 출석 및 조사자료 설명	16	1	17
민생금융국	● 불법금융 연루 전화번호, 사이트 차단	3	2	5
포용금융실	●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및 은행별 지원제도 안내 등)	4	-	4
금융사기전담대응단	●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 지급 등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업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3	-	3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금융현장소통반 운영 (금융회사·소비자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1	2	3
국제업무국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자료 발간	3	-	3
공매도특별조사단	● 불법공매도 관련 예탁원과 조사협업 지원	-	1	1
합 계		30	6	36

주 1. 2024.1.4. 기준
2. 인사교류 목적의 상호파견(한국은행, 권익위, 검찰 등 6명), 자문관(3명) 등은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 이는 금융감독원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공조가 필요하거나(보험사기 대응),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보이스피싱 피해구제)에는 민간으로부터 전문인

력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임.

○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등에게 인력파견 등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견인력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감독 대상 기관의 직원이 감독기구에 근무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우려와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민간 파견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상시 점검하고, 민간인력 활용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금융감독원의 인력 부족, 민간 인력의 과도한 활용에 따른 문제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타 기관에 파견하는 인력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3.24. 제정),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7.18. 제정[403]) 등 제정으로 인해 업무부담은 늘고 있는 반면, 민간과의 임금 격차 및 승진적체 등을 이유로 퇴직 및 민간으로의 이직이 증가하고[404] 있어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정기검사 등 금융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경력 수시채용을 재개하여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도모하는 한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추

403) 금융감독원 내 가산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등 신설

404) 2021년 퇴직자 25명, 2022년 퇴직자 39명, 2023년 퇴직자 43명(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무기계약직 직원 퇴직을 제외한 의원면직자 기준)

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업무 협조 및 타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타 기관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3년 말 현재 67인에 이름.

< 타기관 파견 현황 ('23년말 기준) >

(단위: 명, 년)

기관	인원	기간[주]	파견사유(담당업무)
대통령비서실	5	0.9~2.9	· 대통령비서실 업무 지원
법무부	2	1.2~1.9	· 인사정보 관련 업무 지원
국무총리실	4	0.9~1.9	· 정책 관련 내용 제언, 청취 등
금융위	8	0.9~1.9	· 주요 부서(과) 업무 지원(민원처리, 법령해석 등)
기재부	1	0.9	· 국제금융 현안(금융규제 등) 관련 업무지원 등
행안부	1	1.5	· 새마을금고 감독, 검사 지원 등
권익위	2	0.9	· 금융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민원상담 등
감사원	2	0.9	· 감사대상 기관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업무 등
검찰	18	0.1~1.9	· 불공정거래 등 금융 범죄, 기타사건 수사지원 등
경찰	2	0.9~1.9	· 금융수사 사건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
국토부	1	0.9	·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수사업무 지원 등
지자체	7	0.8~0.9	· 금융 관련 자문, 금융민원 상담, 대부업 감독 지원 업무 등
한은	1	0.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금융시장 안정화 관련)
예보	1	0.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공동검사, 부실저축은행 업무처리 관련)
한국거래소	1	0.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불

기관	인원	기간주)	파견사유(담당업무)
			공정거래 시장감시, 심리·조사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	1	1.9	·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 및 중소기업대출 불공정행위 접수 등
서민금융진흥원	1	3.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불법사금융 대응 관련)
국제금융센터	1	0.1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관련)
보험개발원	1	0.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보험산업 주요 현안 관련)
숭실대학교	1	2.9	· 금융감독 관련 강의 실시 등
코스닥협회	1	1.9	· 업무 관련 자문(회계 및 공시 관련)
공인회계사회	1	0.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감사인 감리업무 관련)
금융연수원	1	1.9	· 금융감독 업무 관련 자문 및 강의 실시 등
금투협회	1	0.9	· 업무 관련 자문, 금감원 업무협조 지원 등 (자율규제, 위탁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2	0.4~0.5	· 새마을금고 감독, 검사 지원 등
합계	67		

주) 파견 시작일부터 파견종료일(예정일)까지 기간(단위 : 년)

○ 업무협조 및 기관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 일부 인력을 파견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본질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타 기관에 대한 인력파견 필요성[405] 및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05) 특히, 금융감독업무 관련 강의 실시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숭실대학교, 금융연수원 파견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금융기관분담금 반환 관련 규정 정비 필요

금융기관 분담금 반환 규정의 하위법령 형식이 부적절하고,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 근거 및 세부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등으로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분담금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금융기관 분담금의 분담 요율 및 반환 관련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법규성이 없는 금융위원회 공고로 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금융위원회법」 제47조와 「자본시장법」 제442조는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납부 근거를 마련하면서,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 이에 따라 각 시행령은 분담금의 분담요율과 한도 및 반환을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하였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금융위원회 공고의 형식으로 마련하였음.[406]

- 당초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의 위임

406)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매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매년 공고하고 있음.

을 받아 법규성이 있는 금융위원회 고시였으나, 2019년 1월 31일부터 해당 고시를 대신하여 금융위원회 공고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담은 법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행정규칙은 범규범을 보충하기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어 발령하는 고시 형식으로 발령해야 할 것임.[407][408]

○ 따라서 금융기관 분담금의 분담 요율 및 반환 관련 사항을 정하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고의 형식이 아닌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둘째,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 근거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분담금은 「금융위원회법」에 따른 감독분담금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발행분담금으로 구분되며,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분담금(감독+발행)은 금융감독원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서 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용도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총분담금액이 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수입초과액 전액과 지출불용액 중 일부[409]를

---

407)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고시 등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되며, 고시와 유사한 용어로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408)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어떤 사항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규범성을 갖거나 구속적 성격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속적·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규정되는 것이 적절한 반면, 공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내용도 규범성이 없거나 단순 사실을 알리는 비구속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시적 또는 단기간 동안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적절함 (법제처, 고시 및 공고의 구별 기준에 관한 검토, 2014)

409) 지출불용액× 감독분담금/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10]

○ 그러나,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411]에서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

---

410)「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분담금)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검사대상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합계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 총자산금액에 1만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만분의 3으로 한다) 범위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로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 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2. 법 제38조제2호의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3. 법 제38조제3호의 검사대상기관과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관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담금 분담요율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합산하여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7. 29.>

1.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2.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용도의 출연금에 한한다)

3. 법 제46조제5호에 따른 수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제외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총분담금액”이라 한다)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

1. 총분담금액에 제3항제2호·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 -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 제1호의 금액) ÷ (총분담금액 - 제1호의 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와 반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3. 15.>

41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등) ①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후에 발행가액

으나,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달리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납부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초과분담금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감독+발행) 납부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시행령과 차이가 있음.

○ 실제 반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는 수입초과액과 지출불용액을 분담금 납부기관의 납부비율에 따라 반환하였으나, 2023년부터 수입초과액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게만 반환하고 지출불용액은 분담금(감독+발행) 납부기관에게 납부비율에 따라 반환하는 것으로 제도개선하였음.

○ 이와 같이 시행령에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분담금 반환 규정이 없고, 금융위원회 고시와 실제 분담금 반환제도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분담금 반환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2

2. 제1호 외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천분의 1(일괄신고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된 '공공기관 공시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금융위원회 고시)을 개정하여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세부항목을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12]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예산 및 결산 등의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공시사항을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413](금융위원회 고시)을 마련하였음. 금융위원회는 당시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공공기관 공시기준')'에 따라 세부 공시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별표1]의 경영공시 세부항목 및 공시주기도 이에 따른 것임.

○ 이는 금융감독원에게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

41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①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13) [시행 2018. 11.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1호, 2018. 11. 22., 제정]

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공시를 통해 효율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414][415].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항목을 공시하고 있음.

□ 그런데 그 이후 '공공기관 공시기준'은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되었음. 2021년 이후 기획재정부[416]는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항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① 안전 및 환경 항목, ② 사회공헌활동, ③ 상생협력, ④ 일가정양립 등 관련 항목을 대폭 신설·보완하였음[417].

□ 그러나 금융위원회 고시는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아 공시항목이 변화하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과 달리 ESG,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를 하지 않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현행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공시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금융감독원 공시항목을 규정할 당시에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변화된 공공기관 공시항목을 금융감독원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4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영공시를 해야 함(법 제11조)

415) 2021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나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지정을 유보하였음.

41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C(사회, 환경, 지배구조) 대폭 확대한다.」, 2021.3.4.

417) 공시항목은 사회적 요구의 변화를 반영하여 노동조합('09년), 일가정양립('15년), 안전('19년) 등이 추가되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고시를 개정하여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항목을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의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하는 등 금융감독원 경영공시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Ⅱ. 공적자금상환기금

1.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 예수금[418]: 기금 청산 일정에 맞춘 안정적인 전입금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회계전입금”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원금기준)을 일반회계로부터 25년간 지원받아, 공적자금상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계획현액은 2조 1,600억원이었으나, 수납액은 3,039억원에 불과하여 계획현액 대비 수납률은 14.1%에 불과함.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전입금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목명·세목명	2023						2024
	계획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수납률	계획액
	당초	수정(A)					
일반회계 전입금	2,160,000	2,160,000	2,160,000	303,860	303,860	14.1	2,500,000

(자료: 금융위원회)

□ “기금 예수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 원리금 상환재원 중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 재원을 다시 공공자금관

418) 세부사업명: 일반회계전입금(91-911)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94-943)

리기금의 예수금으로 조달하는 사업임.

□ 2023년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조 1,242억원을 조달받음.

<2023회계연도 기금 예수금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목명·세목명	2023					2024
	계획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계획액
	당초	수정(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6,128,204	4,124,204	4,124,204	4,124,204	4,124,204	3,992,611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기금 청산 일정에 맞춘 안정적인 전입금 필요

>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금 상환을 위해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자 등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향후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으로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를 유지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03년 설치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9조원을 예수받아, 공적자금 중 회수가 어려운 정부보증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와 부실채권정리기금채) 69조원 중 정부부담금 49조원을 국채로 전환[419]하여 상환하였고, 이후 일반회계전입

금 등 재정을 통해 매년 2조원씩(2002년 현가 기준)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동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현세대 내에 공적자금의 부채 상환을 완료하기로 계획하였음.

□ 그런데,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2조원대의 금액이 계획현액 대비 100% 수납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3,039억원만 수납되어 계획현액 대비 수납률이 14.1%에 그침.

< 일반회계전입금 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당초	수정(A)				
’19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00.0
’2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00.0
’21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22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23	2,160,000	2,160,000	2,160,000	303,860	303,860	14.1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 원리금 상환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은 최근 5년간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4조 1,242억원을 조달받았음.

---

419) 국채전환 : (‘03년) 13조원, (‘04년) 12조원, (‘05년) 12조원, (‘06년) 1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납 연혁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당초	수정(A)				
'19	6,495,616	6,495,616	6,495,616	6,179,500	6,179,500	95.1
'20	8,197,270	8,197,270	8,197,270	8,019,320	8,019,320	97.8
'21	2,161,062	2,161,062	2,161,062	2,097,252	2,097,252	97.0
'22	-	-	-	-	-	-
'23	6,128,204	4,124,204	4,124,204	4,124,204	4,124,204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결국,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다시 동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는 상황임. 이는 재정활동의 실체 없이 재정 규모만 부풀려 보이는 부작용이 있으며 이자 등 불필요한 거래비용 역시 발생함.

□ 2023년도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약 28조원(원금)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효력 만료일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420] 정부는 이 기한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약 28조원(원금)을 상환 완료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2024년에 10.3조원, 2025년 8.4조원, 2026년 9조원, 2027년 5.4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할 계획이며, ① 보유 자산(한화오션) 매각[421], ② 신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최소화를 통한 신규 부채 및 이자 부담 최소화, ③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027

420)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21) 기금이 보유한 한화오션 주식의 2023년 평가액은 약 584억원임.

년 말까지 안정적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청산하겠다는 입장임.

< 향후 연도별 상환 계획(안)>

(단위 : 조원)

구 분	2024년(예산)	2025년(계획)	2026년(계획)	2027년(계획)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계획	10.3	8.4	9.0	5.4
잔액(원금)	21.9(추정)	13.9	5.2	-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부채 상환을 위한 최근 5년간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수입액이 4조 2,485억으로 나타나, 청산까지 남은 4년 간 채무잔액 약 28조원(연평균 7조원)의 상환 완료를 낙관하기 어려움.

< 부채 상환을 위한 수입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회계전입금	21,000	21,000	26,000	26,000	3,039
세계잉여금	385	-	10,362	19,970	16,843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	961	1,034	1,067	1,075	1,10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출연금 반환	-	-	12,580	24,000	26,000
합 계	22,346	22,034	50,009	71,045	46,989
평균 수입	42,485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상환의 주요 재원[422]은 ① 일반

42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3.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회계전입금 외에 ② 세계잉여금, ③ 우체금 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및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정산하여 돌려받는 자금인데,

○ 세계잉여금은 지방 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우선 사용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423]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므로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424]은 2023년 기준 1,107억원 수준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함.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반환받는 자금은 「예금자보호법」[425]에 따라 해당 기금의 추정 잔여재산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어, 그 규모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동 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반환받은 자금

423)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42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함

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함.

425)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면이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차질없는 부채 상환 및 기금 청산을 위하여 향후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재계산 결과에 따른 주체별 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 재원을 확보할 필요

재계산 결과에 따른 총 상환부담액이 2002년 상환대책 시의 부담액보다 감소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재계산 결과에 따른 주체별 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 중 2002년 말 기준 69조원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고, 총 69조원 중 20조원은 금융회사가, 나머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수립함.

○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2003년~2027년까지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426], 정부 부담분 49조원은 재정에서 매년 2조원씩 출연하여 상환하는 계획임.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2년에 마련한

426)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0.1%

상환대책이 원활히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매 5년마다 정기 재계산을 실시하고, 재계산 시 필요한 경우 주체별 상환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427]

○ 재계산 제도는 2002년 상환대책 수립 이후 재정 및 금융권의 상환 이행실적과 재계산 시점에서의 회수예상금액 등을 감안하여 총 상환부담과 재정 및 금융권의 부담분 등을 다시 추정하는 것을 말함.

○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4차례[428]의 재계산을 실시했지만, 주체별 상환부담을 조정한 사례는 없음.

□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재정과 금융권의 총 상환부담이 2018년 재계산에서는 58.1조원(2002년 현가), 2023년 재계산에서는 58.8조원(2002년 현가)으로 나타나, 두 차례 재계산 결과 모두 당초 상환부담(69조원) 보다 감소한 수치를 나타냄.

○ 상환부담액의 감소는 회수 증가,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 저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감소 등에 기인함.

---

42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으로 조성하는 자금 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8) 재계산 결과 총부담액 : 제1차('08년) 49.9조원, 제2차('13년) 55.7조원, 제3차('18년) 58.1조원, 제4차('23년) 58.8조원

< 재계산에 따른 총 상환부담액 추이 >

(단위: 조원, 02년 현재가)

구분	2002년 상환대책	2008년 재계산	2013년 재계산	2018년 재계산	2023년 재계산
기부담	-	9.2	21.9	31.1	46.2
향후부담	69.0	40.7	33.8	27.0	12.6
총부담	69.0	49.9	55.7	58.1	58.8

(자료: 금융위원회)

□ 재계산 결과에 따른 총 상환부담액(2018년 재계산: 58.1조원, 2023년 재계산: 58.8조원)이 2002년 상환대책 시의 부담액 69조원보다 감소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재계산 결과에 따른 주체별 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자금의 상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Ⅲ.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총괄: 기금 건전성 관리방안 마련 필요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결산 개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2023년도 기본재산은 전년 대비 1,264억원 감소(△10.8%)한 1조 477억원, 보증잔액은 전년 대비 4,568억원이 증가(2.7%)한 17조 6,420억원으로, 이에 따른 운용배수[429]는 전년 14.6배에서 16.8배로 증가하였음.

<2023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22(A)	2023(B)	증감 (B-A)	증감율(%)
기본재산(A)	11,741	10,477	△1,264	△10.8
보증잔액(B)	171,852	176,420	4,568	2.7
운용배수(B/A)	14.6	16.8	2.2	15.1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금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29) 보증 규모 대비 기본재산. 보증기금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배수가 낮을수록 기금이 건전하고 보증 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은 기금의 운용배수 상한을 20배로 규정하고 있으며,[430] 「신용보증규정」은 추가적 보증여력 확보, 기본재산 가치변동 대응 필요성 등[431]에 따라 법정운용배수 외에 적정운용배수를 12.5배로 설정·운용하고 있음.[432]

○ 현행 적정운용배수는 바젤Ⅱ 기준 BIS비율의 규제 수준이 8%임에 착안하여 BIS비율의 역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운용배수를 8%의 역수인 12.5배로 설정한 것임.[433]

○ 현재 보증의 한도를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 각각 15억원, 20억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나,[434] 적정운용배수 내에서는 보증한도를 개인과

---

4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1) 적정운용배수 관리의 필요성(자료: KFR 한국펀드평가, 「적정운용배수 산정 컨설팅 연구용역」, 2020.8.)

구 분	내 용
추가적 보증여력 확보	○ 보증 상품의 다양화, 보증 수요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보증자산규모가 증가될 수 있음 ○ 계획보다 보증 자산의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운용배수를 법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기본재산 가치변동에 대응	○ 기본 재산은 경기 변동,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평가금액이 변동할 수 있음 ○ 극단적으로 기본 재산의 평가금액이 하락하더라도 보증 배수가 법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법정 수준 이하의 보증 배수 유지 * 이러한 필요성은 Basel III에서 자본보전완충자본 2.5%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임
보증자산의 질적변화에 대응	○ 기본 재산은 대위변제의 재원으로서 보증 자산의 사고율 증가, 대위변제 증가시 기본 재산의 유출 및 감소가 불가피함 ○ 운용배수의 분모항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의 감소는 운용배수를 급격히 증가시킴 ○ 이러한 보증 자산의 부실화 상황에서도 법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법정 수준 이하로 관리되어야 함

432) 「신용보증규정」

제12조(보증총한도)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증총액 한도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증총액한도의 적정한 수준은 12.5배로 한다.

433) 농신보가 의뢰하여 KFR 한국펀드평가가 수행한 「적정운용배수 산정 컨설팅 연구용역」(2020.8.)에서는 산정방법과 시나리오에 따라 11.41배~16.81배의 적정운용배수를 소개하고 있음.

법인 각각 30억원, 70억원까지 확대하는 예외보증을 운용하고 있음.

□ 한편, 농신보 운용배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금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1조 6천억원 반환 등에 따른 기본재산[435]의 감소 및 보증사업 활성화에 따른 보증잔액의 증가로 2019년부터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2023년 운용배수는 16.8배, 2024년 6월말 기준 운용배수는 17.3배 수준으로 적정운용배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수입	정부출연금	△3,000	△2,000	△2,000	1,000	1,300	1,300	0	300
	금융기관출연금	1,222	1,240	1,269	1,386	1,833	1,971	2,118	1,069
	보증료,이자수입등	1,114	1,085	1,042	957	810	756	1,610	593
	계	△664	325	311	3,343	3,943	4,027	3,728	1,962
지출	보증보조비용	746	1,585	1,910	1,182	468	571	1,263	116
	구상채권상각비	1,466	2,125	2,668	2,197	1,896	1,849	3,104	1,543
	관리업무비 등	741	666	590	566	633	660	626	292
	계	2,953	4,376	5,168	3,945	2,998	3,078	4,993	1,941
기본재산(A)		19,357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7	10,497
보증잔액(B)		133,968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82,089
운용배수(B/A)		6.9	9.7	15.4	16.7	15.2	14.6	16.8	17.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3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업자등이 개인인 경우: 15억원　　2. 농림수산업자등이 법인인 경우: 20억원

435) 기본재산은 전년도 기본재산과 당기순익금,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됨.

□ 이와 같이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를 초과하여 법정 운용배수에 근접함에 따라 향후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 기능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 확보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증잔액 관리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2024년 5월 전국 농신보 여신 담당을 대상으로 공문[436]을 발송하여 향후 갱신보증 시 모든 법인에 대하여 보증잔액을 10% 이상 해지(감액)한다는 신용보증업무방법 개정사항을 안내[437]하였으나, 7월에 영세한 중소기업의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인지하여 개정된 규정을 다시 당초의 규정으로 환원하는 등 보증업무에 혼선이 있었음.

○ 한편,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 2019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예외보증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금융위원회는 매년「신용보증규정」[438]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외보증 운용기한을 연장

436)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업무방법 개정 알림(법인 갱신보증심사)」, 2024.5.29.)

437)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갱신보증 시점에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잔액의 10% 이상 해지(감액)	○ 갱신보증 시 모든 법인에 대하여 10% 이상 해지(감액) 원칙 (예외: 재해피해)

주: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갱신보증심사 건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 이상 해지(감액)을 유예할 수 있음.

(자료: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업무방법 개정 알림(법인 갱신보증심사)」, 2024.5.29.)

438) 「신용보증규정」

제15조(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피보증인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 이내로 한다.

1.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보증총한도의 적정한 수준이내에서 심의회가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한 보증

② 제1항에 의해 승인된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 중,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

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외보증의 운용기한이 만료되는 2024년 8월 말 이후 이를 재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43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외보증 운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보증비율	2022		2023		2024.6.	
		순신규	잔액	순신규	잔액	순신규	잔액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30	9	105	5	88	-	87
②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30	55	226	26	206	14	179
③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30	86	476	113	404	38	361
④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개인 30 법인 50	178	322	148	205	24	202
⑤ 양식시설현대화 사업자	개인 30 법인 50	20	40	16	54	-	37
⑥ 첨단온실신축지원 사업자	개인 30 법인 70	-	319	-	306	-	302
⑦ 안전복지형 연근해 어선 기반 구축 사업	개인 30 법인 70	-	54	49	42	20	47
⑧ 원양어업경영자금	30	-	-	-	-	-	-
⑨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자	개인 30 법인 50	-	-	-	-	-	-
⑩ 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개인 30 법인 50	27	422	-	353	-	331
⑪ 스마트팜지원사업	개인 30 법인 70	413	1,064	579	1,102	351	1,259
⑫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자	개인 30 법인 70	-	-	-	-	-	-
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자	개인 30 법인 70	-	-	-	-	-	-
⑭ 농수산식품 우수 기술 사업자	30	-	-	-	-	-	-
합 계		**788**	**3,028**	**936**	**2,760**	**448**	**2,80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총액한도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보증총액의 한도 이내로 한다. (이하 생략)

439) 2024년 6월말 기준 예외보증 잔액은 약 2,804억원 수준임.

□ 농신보의 건전성 악화는 운용배수가 낮게 유지되었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농신보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1조 6천억원이 반환됨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에 기인한 측면도 있겠으나, 기본재산 확보방안 및 보증공급 규모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를 확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농신보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출연금 반환에 따라 기본재산이 감소했던 기간(2014년~2019년) 보증잔액 증가율은 그 전후 시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재산과 보증공급 규모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농신보 운용배수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2019년 이후에도 보증대상자 및 한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자금 확대에 있어 농신보의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증잔액	192,241	178,088	151,703	129,241	119,553	105,031	91,446	85,615	86,895	94,275
증가율	0.6	△7.4	△14.8	△14.8	△7.5	△12.1	△12.9	△6.4	1.5	8.5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증잔액	101,471	110,122	121,804	133,968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증가율	7.6	5.0	6.6	10.0	11.1	8.2	2.0	△0.5	5.1	2.7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11년 이후 보증대상자 및 한도 확대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대상자 및 대상자금	천일염제조업자, 어업회사법인 보증대상자 추가	2011.09.
	농기계 임차료 보증제도 도입	2014.02.
	도시지역 가공업자 보증대상자 추가	2014.07.
	조합공동사업법인 보증대상자 추가	2014.11.
	예비농어업인 보증대상자 추가	2015.07.
	중도매인 및 산지중도매인 보증대상자 추가	2018.10.
	농촌융복합센터 사업자 보증대상자 추가	**2019.07.**
예외보증 및 특례·우대 보증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외보증 한도상향(개인30 / 법인50억원)	2012.04.
	농어가특별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 상향(1→2억원)	2013.08.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 확대(1→2억원)	2014.02.
	양식시설현대화, 첨단온실지원 예외보증(개인30 / 법인50억원)	2014.02.
	청장년 귀농어창업 우대보증 도입	2014.03.
	농식품 우수기술사업자 우대보증 도입	2014.03.
	농어업 전문교육이수자 우대보증 도입	2014.03.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예외보증 도입(개인30 / 법인50억원)	2015.03.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예외보증 도입(개인30 / 법인50억원)	2015.08.
	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 예외보증 한도상향(개인30 / 법인50억원)	2015.10.
	스마트팜 사업자 예외보증 한도상향(개인30 / 법인50억원)	2017.02.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예외보증 한도상향(법인50→70억원)	2018.04.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1.5→3억원), 청·장년귀농창업(1→3억원), 후계농림어업인(2→3억원) 우대보증 한도 상향	2018.04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우대보증 신설	2018.04
	무허가축사 적법화, 강원 산불 간접 피해자 특례보증 신설	**2019.04.**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예외보증 한도상향(법인 70억원)	**2019.06.**
	농식품 우수기술사업자 우대보증 한도 상향(30억원)	**2019.09.**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우대보증 신설	**2021.10.**
	사료구매자금특례보증 한도 상향(2→3억원)	**2022.06.**
	재해대책특례보증 한도 상향(3→5억원)	**2022.06.**
	선도농어업인 우대보증 창업5년 이내 후계농림어업인 한도 상향(3→5억원)	**2023.1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2024년도에 정부의 농신보에 대한 출연금 300억원 출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 이하로 회복되기 위해서 장기간 재정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운용배수 진입시기는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음.

○ 농신보의 추계에 따르면, 매년 정부로부터 300억원의 출연을 받을 경우 2041년에 적정운용배수 이하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이후의 경기침체로 부실 채무자가 급증한 가운데, 최근 고금리에 따른 불건전보증[440]과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어 기금의 정상화를 위한 기간이 더욱 길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투입 예산별 농신보 운용배수 시나리오>

(단위: 억원, %)

투입예산액	'25	'26	'27	'28	'29	'30	'31	…	'34	'35	…	'41	…	'74
100억원	18.9	18.7	18.5	18.3	18.1	17.9	17.8	…	17.2	17.1	…	16.2	…	12.5
300억원	18.5	17.9	17.4	16.9	16.5	16.0	15.6	…	14.5	14.1	…	12.4		
500억원	18.1	17.2	16.5	15.7	15.1	14.5	13.9	…	12.5					
1,000억원	17.2	15.7	14.5	13.4	12.5									

주: 2025년 말 기준 농신보 전망 보증잔액(18조 1,480억원), 기본재산(9,498억원) 유지 가정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40) 불건전보증이란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등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보증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보증사고 사유로는 ①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② 채권자가 보증부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③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의한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④ 채무자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⑤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결정, 경매신청 또는 채무자의 폐업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들 수 있음.

<2018~2023년 불건전보증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불건전보증	331	457	807	526	789	1,053
대위변제	2,776	3,265	3,073	3,021	2,904	4,07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기금 건전성 제고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사업부처 및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신보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증공급의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특회계로부터 정부출연금 전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기금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농신보의 운영 구조를 고려할 때, 기금 운용배수 안정화는 부처 간의 면밀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농신보 운용배수가 단기간에 안정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편성 등 기본재산의 확충방안과 보증총량 및 보증관리 강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441]·면허료 및 수수료[442]: 수입계획안의 연례적 과다추계에 따른 징수실적 부진 시정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구상채권 원금 및 손해금 회수, 특수채권 회수, 임차보증금 회수, 소송 및 법적절차 비용 및 공탁금 회수, 선급법인세 회수 등에 따른 수입으로, 2023년 계획현액 1,718억 200만원 중 835억 2,100만원(48.6%)이 수납되었음.

□ “면허료 및 수수료”는 보증서 발급 후 보증기간에 대해서 수취하는 수수료인 신용보증료와 보증료 납입기간 지연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인 연체보증료 수취에 따른 수입으로, 2023년 계획현액 924억 3,700만원 중 636억 4,400만원(68.9%)이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기타경상이전수입	171,802	-	171,802	2,329,797	83,521	2,199,159	47,117	171,802
면허료 및 수수료	92437	-	92,437	63,644	63,644	-	-	92,437

(자료: 금융위원회)

441)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442) 세부사업: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연례적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계획액 산출 시 의지지표와 가중치의 적용으로 인하여 수입계획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으므로, 향후 의지지표와 가중치의 사용을 지양하여 적정 수준의 계획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수입 중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는 연례적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였으며, 2023회계연도 역시 수납률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여 각각 48.6%와 68.9%에 그쳤음.

<2020~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0	127,870	2,147,975	101,367	79.3	4.7	2,002,623	43,985
2021	140,211	2,171,353	119,022	84.9	5.5	2,006,414	45,917
2022	155,205	2,202,301	96,761	62.3	4.4	2,050,350	55,190
2023	171,802	2,329,797	83,521	48.6	3.6	2,199,159	47,117

(자료: 금융위원회)

<2020~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0	77,623	64,340	64,340	82.9	100.0	-	-
2021	83,578	62,975	62,975	75.4	100.0	-	-
2022	87,986	66,400	66,400	75.5	100.0	-	-
2023	92,437	63,644	63,644	68.9	1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은 수납실적 부진은 계획액 과다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계획액 규모(1,718억 200만원)의 경우 구상채권 회수금(1,602억 6,700만원)과 기타 수입(115억 3,50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구상채권 회수금은 구상채권을 구성하는 구상채권 원금, 손해금, 특수채권의 예상 회수액에 회수 실적 제고 노력 반영을 위한 '의지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였음.

<2023년도 구상채권 회수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산출내역
구상채권 원금 회수	○('22말 구상채권 추정잔액 + '23년 대위변제 예상액) × ('23년 예상 회수율*) = (14,729억원 + 3,169억원) × 5.37% = 96,192백만원 * 최근 3년 평균 회수율(4.0%) + **의지지표(1.37%)**
손해금 회수	○'23년 구상채권 원금 회수액 × '23년 구상채권 원금 대비 예상 손해금회수율*) = '23년 구상채권 원금회수(96,192백만원) × 6.76% = 6,500백만원 * 최근 3년 평균 회수율(5.4%) + **의지지표(1.36%)**
특수채권 회수	○('22년말 특수채권 잔액 × '23년 예상 특수채권 회수율*) + 매각이익회수액(예상매각금액 × '23년 예상매각율**) = (8,922억원 × 6.31%) + (1,309억원 × 1%) = 57,575백만원 * 최근 3년 평균 회수율(2.6%) + **의지지표(3.71%)** ** 회수실익이 낮은 법인채권 포함으로 1%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 면허료 및 수수료는 신용보증료(기중 수입보증료)[443]와 연체보증료[444]

443) 보증서 발급 후 보증기간에 대해서 수취하는 수수료

444) 보증료 납입기간 지연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신용보증료 중 순수입보증료[445]는 보증평잔 추정액에 기금 수입제고 가중치(1.4)를 곱한 평균 수입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최근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함에도 이와 같은 가중치를 매년 적용하여 수입 계획액이 과다계상되고 있음.[446]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산출내역
신용보증료	○ 순수입보증료 + 보증료 환급(기중 환출보증료) = 87,319백만원 + 5,053백만원 = 92,372백만원 - 순수입보증료: '23년 보증평잔 추정액 × 예상 수입보증료율* = 168,000억원 × (0.37% × 1.4) = 87,319백만원 * 최근 3년 평균 수입보증료율(0.37%) × 기금 수입제고 가중치(1.4)
연체보증료	○ '23년 수입보증료 × 최근 3년 연체보증료 비율 = 92,372백만원 × 0.07% = 65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 구상채권 회수금과 면허료 및 수수료에서 각각 적용되는 의지지표와 가중치는 기금의 수입을 제고하여 기금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금융위원회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상된 수입계획에 기반한 계획액의 산출은 추후 수입결손으로 귀결되어 오히려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농신보 운용배수가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여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낙관적

445) 신용보증료에서 기중 환출보증료를 제외한 보증료

446) 연도별 가중치: ('19)0.0 → ('20)0.51배 → ('21)0.51배 → ('22)1.2배 → ('23)1.4배 → ('24)1.32배

수입전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구상채권 회수금과 면허료 및 수수료 계획액 산정 시 의지지표와 가중치의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수입 계획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대위변제금[447]: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대위변제금”은 피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계획액 4,096억 400만원 중 4,074억 3,700만원(99.5%)이 집행되고, 21억 6,700만원(0.5%)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위변제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위변제금	319,604	409,604	-	409,604	407,437	-	2,167	330,30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대위변제 소요 증가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 대위변제금 계획액을 변경하여 집행하였는바, 향후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47) 세부사업: 대위변제금(2432-680)

□ 대위변제금의 2023년도 계획액의 편성근거를 살펴보면, 2023년 추정 보증잔액에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대위변제율[448]을 적용함.

<2023년도 대위변제율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2023년도 계획안 산출근거
○ 대위변제금 = '23년 보증잔액 추정 × '23년 대위변제율 = 170,591억 × 1.87% = 319,604백만원

* 보증별 최근 3년('19~21년) 평균 대위변제율(1.93%)에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의지목표 반영하여 1.87% 적용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 및 추정>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추정
보증잔액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64,995
대위변제액	2,776	3,265	3,073	3,021	3,199
대위변제율	1.86	2.03	1.87	1.85	**1.94**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및 유류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불건전보증과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23년도 대위변제액은 4,074억원 수준으로, 대위변제율이 2.31%까지 증가하여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448) 보증잔액 대비 대위변제액

<2018~2023년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증잔액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대위변제액	2,776	3,265	3,073	3,021	2,904	4,074
대위변제율	**1.86**	**2.03**	**1.87**	**1.85**	**1.69**	**2.31**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에 당초 대위변제금 계획액 3,196억원 대비 대위변제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계획액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계획액을 900억원 증액변경(+28.2%)하였음.

□ 한편, 2024년도 대위변제금 계획액은 3,30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6월까지 집행된 대위변제금이 2,044억원으로 상반기에만 이미 계획액 전체의 61.9%가 집행되었으며, 불건전보증 규모가 연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에도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증액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경기침체 및 농어업분야 매출 대비 수익성의 감소로 2023년 불건전보증 규모는 전년 대비 33.5% 증가한 1,053억원, 불건전보증 비율은 전년 대비 0.14%p 증가한 0.6%로 나타났음.[449]

- 2024년에도 불건전보증 규모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여 6월말 현재 각각 1,164억원, 0.6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449) 참고로,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른 불건전비율 성과목표는 0.39%임.

○ 이와 같은 불건전보증[450]의 증가는 추가적인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로 이어져 기금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2018~2024년도 불건전보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보증잔액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8,018	182,089
불건전보증	368	457	807	526	789	1,053	1,164
불건전보증비율	**0.25**	**0.28**	**0.49**	**0.32**	**0.46**	**0.60**	**0.6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따라서, 농신보는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50) 불건전보증이란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등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보증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보증사고 사유로는 ①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② 채권자가 보증부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③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의한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④ 채무자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⑤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결정, 경매신청 또는 채무자의 폐업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들 수 있음.

4. 인건비[451]: 비효율적 인력구조 개선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인건비”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액 477억 7,000만원 중 477억 2,900만원(99.90%)이 집행되고, 4,100만원(0.1%)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인건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인건비	47,770	47,770	-	47,770	47,729	-	41	48,965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고직급·고호봉 위주의 농신보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2019년도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는 2019년 감사원 감사 시 고직급·고호봉 위주 인력구조에 따른 과다한 인건비로 효율적 인력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구체적으로,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비율이 높고 실무자 비율이 적은 인력구성의 불균형 문제, 농협중앙회 대비 높은 농신보 직원 평균

451) 세부사업: 인건비(3277-101)

호봉 등에 따라 제한된 인건비 상황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신보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으로 직급별 인력비율을 맞추고 현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농협중앙회장에게 농신보의 정원 기준에 맞추어 직급별 인력비율 및 현원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음.

□ 그런데, 2023년말 기준 농신보의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실무자급(5급 이하) 이상의 비율은 2019년 37.2% 대비 3.0%p 감소한 34.2%로 나타나는 반면, 중간관리자급 이상(4급 이상)의 비율은 2019년 62.8% 대비 3.0%p 증가한 65.8%로 나타나 인력구성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었음.

<2019년~2023년 농신보 인력 직급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원	비중	현원	비중	현원	비중	현원	비중	현원	비중
관리자급 (M급·3급)	54	17.1	55	18.6	50	16.5	62	21.3	71	23.6
중간관리자급 (4급)	144	45.7	140	47.5	144	47.5	135	46.4	127	42.2
소계 (4급 이상)	198	62.8	195	66.1	194	64.0	197	67.7	198	65.8
실무자급 (5급 이하)	117	37.2	100	33.9	109	36.0	94	32.3	103	34.2
계	315	100.0	295	100.0	303	100.0	291	100.0	301	100.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또한, 농협중앙회 직원과 농신보의 평균호봉을 비교해 보면, 2023년말 기준 농신보가 농협중앙회 대비 0.7호봉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9년과 비교할 때 고호봉 위주의 인력운용이 더욱 심화되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고호봉 위주의 인력운용은 중간관리자급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무자급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 비해 농신보 직원 평균호봉이 0.5호봉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신보 및 농협중앙회 직원 평균 호봉 현황>

(단위: 호봉)

구분	2019년 기준 평균호봉			2023년 12월말 기준 평균호봉		
	농신보 (A)	농협중앙회 (B)	차이 (A-B)	농신보 (C)	농협중앙회 (D)	차이 (C-D)
M급	41.9	42.0	△0.1	43.3	42.2	1.1
3급	40.3	38.0	2.3	40.4	37.6	2.8
4급	34.3	30.5	3.8	33.0	28.5	4.5
5급 이하	15.2	12.1	3.1	15.8	16.3	△0.5
가중평균	29.1	29.0	0.1	29.6	28.9	0.7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고직급·고호봉 구조의 인력으로 2023년 현원은 정원 381명 대비 80명이 부족한 301명 수준임.

□ 한편, 농신보는 2019년 이후 5급 이하 신규직원 채용으로 평균호봉을 하향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만 농협중앙회는 직원 본인의 이동희망에 기초하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어 임의로 저직급·저호봉자

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그러나, 농신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달리 국가의 재정을 재원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신보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이 지속되는 것은 국가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농신보는 인력의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기금관리비[452]: 상용임금 계획액 과다편성에 따른 집행부진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금관리비”는 농신보의 기금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계획액 61억 6,600만원 중 55억 5,000만원(90.0%)이 집행되고, 6억 1,600만원(10.0%)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기금관리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기금관리비	6,166	6,166	-	6,166	5,550	-	616	5,736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농신보 상용임금이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농신보는 향후 기금관리비 상용임금을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는 정규직 인력 대체 등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계약직 및 전문인력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상용임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3년

452) 세부사업: 기금관리비(3277-201)

에는 전문계약직 2명, 일반계약직 29명 등 31명[453]을 기준으로 계획액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농신보는 2023년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63.1% 수준인 5억 8,2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신보는 고직급·고호봉 인력구조 개선을 위하여 2019년부터 5급 이하 신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 2020년~2023년 상용직 인력을 감축운용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454]

○ 실제로, 최근 5년간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운용인력은 편성 기준 3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명 미만(연말 기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상용임금의 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매년 80% 미만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455]

<최근 5년 전문계약직 및 일반계약직 운용현황(연말 기준)>

(단위: 명)

연도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합계
	본부	센터	본부	센터	
2019	1	-	1	12	14
2020	2	-	1	-	3
2021	3	-	1	14	18
2022	2	-	2	15	19
2023	2	-	2	12	16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53) 본부 2명, 센터 27개×1명

454) 5급 이하 신규채용 현황(명): ('19)20 → ('20)6 → ('21)5 → ('22)2 → ('23)30 → ('24 예정)20

455) 이에 대해 농신보는 2023년부터 운영 중인 퇴직자 재채용 제도로 2024년부터 집행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5년 기금관리비 상용임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당초(A)	수정			C/A	C/B
2019	860	861	861	860	100.0	99.9
2020	885	585	585	289	32.7	49.4
2021	893	893	893	501	56.1	56.1
2022	906	906	906	722	79.7	79.7
2023	922	922	922	582	63.1	63.1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와 같이, 농신보는 매년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31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건비에 처우개선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획액을 산출하고 있음.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예산상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행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 기금관리비 사용임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산출근거
2019	860	○ 2018년 상용임금(846백만원) + 처우개선분(1.8%)
2020	885	○ 2019년 상용임금(860백만원) + 처우개선분(2.8%)
2021	893	○ 2020년 상용임금(885백만원) + 처우개선분(0.9%)
2022	906	○ 2021년 상용임금(893백만원) + 처우개선분(1.5%)
2023	922	○ 2022년 상용임금(906백만원) + 처우개선분(1.8%)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따라서, 농신보는 향후 기금관리비 상용임금 편성시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추가인력은 면밀한 계획을 통해 적정한 인력 및 인건비 규모를 계상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Ⅳ.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저축장려금[456]: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저축장려금”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 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541억 3,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2023회계연도 저축장려금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저축장려금	53,082	54,135	-	54,135	54,135	-	-	61,806

(자료: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3년·5년 만기의 정기적금 형태로, 가입한도는 연 240만원임.

○ 저축 가입자는 만기도래 시에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2024년 1월 기준, 연 4.04%) 외에 가입대상 및 저축기간에 따른 저축장려금(연 0.9% ~ 4.8%)을 추가로 지급받게 됨.

456) 세부사업: 저축장려금(1631-30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일반농어민</th><th>저소득농어민</th></tr>
<tr><td>가입대상
(법 시행령 제2조)</td><td colspan="2" rowspan="3">·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24년 기준 월 295,190원 이하)</td><td>·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td></tr>
<tr><td>·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td></tr>
<tr><td>·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24년 기준 월 217,980원이하)</td></tr>
<tr><td>가입제한</td><td colspan="3">타 분야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농어업 외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td></tr>
<tr><td>저축형태</td><td colspan="3">정기적금(3년·5년 만기, 월·분기·반기 적립 방식)</td></tr>
<tr><td>저축기관
지급금리</td><td colspan="3">연 4.04% (2024년 1월기준)</td></tr>
<tr><td rowspan="4">저축장려금</td><td rowspan="2">계약기간</td><td colspan="2">이자율(%)</td></tr>
<tr><td>일반</td><td>저소득</td></tr>
<tr><td>3년 만기</td><td>연 0.9</td><td>연 3.0</td></tr>
<tr><td>5년 만기</td><td>연 1.5</td><td>연 4.8</td></tr>
<tr><td colspan="4">*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td></tr>
<tr><td>장려금재원</td><td colspan="3">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td></tr>
<tr><td>가입한도</td><td colspan="3">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td></tr>
<tr><td>취급기관</td><td colspan="3">단위농협·수협, 산림조합</td></tr>
</table>

(자료: 금융위원회)

□ 2023년 말 기준 총 가입계좌 수는 22만 2천계좌이며, 총 불입액은 1조 2,869억원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 >

(단위 : 계좌,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가입 계좌수	276,621	267,416	253,570	234,776	221,934
불입액(누적)	10,319	11,588	12,949	13,196	12,869
신규가입 계좌수	70,830	56,110	51,968	44,420	45,084
중도해지 계좌수	10,687	8,871	8,204	9,458	10,546

(자료: 금융위원회)

□ 동 기금은 정부 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2023년도에는 총 541억 3,500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정부 출연금 및 한국은행 출연금 각각 270억 3,300만원, 기금운용수익금 6,900만원이 재원으로 활용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457]는 정부가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고, 한국은행이 그 나머지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1의 비율로 출연하고 있음.

< 저축장려금 재원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원	정부 출연금	35,395	33,872	34,112	26,615	27,033
	한국은행 출연금	35,395	33,872	34,112	26,615	27,033
	기금운용 수익	25	13	9	30	69
저축장려금 지급액		70,815	67,757	68,233	53,260	54,135

(자료: 금융위원회)

45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회계 사업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예·결산심사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등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2023년도 수입 총액 중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이 99.8%를 차지하고,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 총액의 99.9%가 2023년도 저축장려금으로 집행되었음. 2022년도 수입·지출 실적 역시 유사한 수치를 나타냄.

○ 즉, 매년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그 재원의 대부분을 해당 연도의 저축장려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결산	비중	결산	비중
수입	이자수입	23	0.04	132	0.2
	한국은행 출연금	26,615	49.97	27,033	49.9
	정부 출연금	26,615	49.97	27,033	49.9
	정부예금회수	7	0.01	-	-
총 계		53,260	100	54,198	100
지출	저축장려금	53,260	100	54,135	99.9
	기금운영비	-	-	-	-
	여유자금운용	-	-	63	0.1

(자료: 금융위원회)

□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의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됨.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한다는 점에서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구분됨. 또한, 기금은 예산과 달리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며, 쓰고 남은 재원을 보유하여 미래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원칙 하의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이러한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예·결산심사 및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22년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자체수입재원(한국은행 출연)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1/2 이상을 정부가 출연하여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재원과 목적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단년도 예산으로 단년도 지출을 하는 기금으로 중기가용자산이 없어 기금으로서의 존치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5조[458]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

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외적 재정제도인 기금이 방만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였음.

□ 따라서, 동 기금과 같이 기금으로서의 존치실익이 부족한 경우 일반예산 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역시 해당 기금을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관계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459]

<2024.1. 제도개편 회의 기관별 의견>

ㅇ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및 금융위 존치 등 현행 유지가 적합하며, 일반회계 이관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및 위탁기관에 대한 검토 필요
ㅇ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전환, 소관부처 이관 등에 기본적으로 동의
ㅇ **(기획재정부)** 소관 이관은 농림부-금융위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ㅇ **(한국은행)** 재정의 화폐화[460] 우려 등 감안 시 한은 출연은 부적절
ㅇ **(국무조정실)** 국회 등은 농림부 이관, 일반회계 전환 등을 오랫동안 언급하였으며 제도개편 관련 전향적인 검토 필요

(자료: 금융위원회)

458)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459) 금융위원회는 2021년 11월, 2022년 9월, 2024년 1월에 농림부, 해수부, 한국은행 등과 제도개편회의를 하였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함.

460) 통화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을 정부의 재정 운영에 동원하는 것을 말함.

□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Ⅴ. 신용보증기금

1. 기타경상이전수입[461]: 팩토링 매출채권의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연례적 과다계상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구상채권 회수금, 선급법인세 환수, 공탁금반환 등 각종 반환금 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3년도 징수결정액 12조 5,591억 5,500만원 중 6,691억 7,000만원이 수납(수납률 5.3%)되고, 불납결손액 1조 6,487억 9,600만원, 미수납액 10조 2,411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기타경상이전수입	637,151	637,151	637,151	12,559,155	669,170	10,241,189	1,648,796	761,325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99,375	99,375	99,375	73,225	73,225	-	-	149,456

(자료: 금융위원회)

461) 수입목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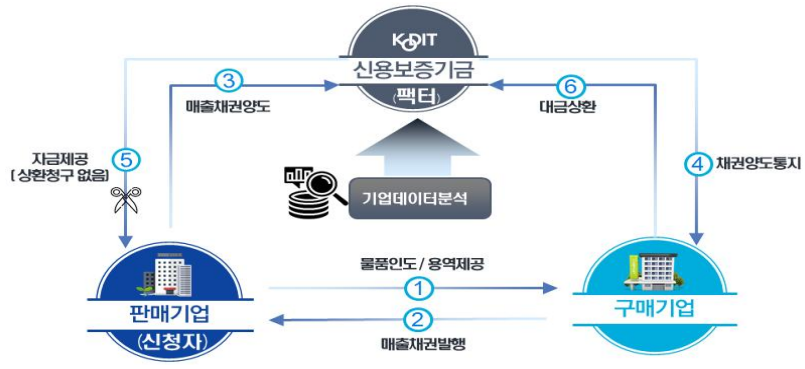
□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는 매출채권 만기일에 팩토링[462] 매출채권 구매기업으로부터의 대금 회수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3년도 징수결정액 732억 2,500만원 전액이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

<팩토링금융 지원 요건>

구분	구매기업	판매기업
대상채권	결제기일이 30~90일인 매출채권	
대상기업	신용등급 보통 이상인 상장법인 또는 외부감사의견 ‘적정’ 등급 중소·중견기업	구매기업과 6개월 이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
매입한도	최고 30억원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한도 상이)	최고 100억원 (매출액 규모별, 구매기업 신용도별 한도 상이)

(자료: 신용보증기금)

462) <팩토링 서비스 기본 구조>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팩토링 매출채권 결제기일 소요에 따른 회수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타경상이전수입을 과다계상하여 매년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차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편성 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팩토링금융'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3년도 '팩토링금융' 사업 지출계획액(수정계획액 기준)은 1회 매출채권 매입규모 225억원을 4회전하는 것을 전제로 9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상응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의 대금 회수분이 반영되어 있음.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계획액>

수입계획액	지출계획액[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상환	팩토링금융(2431-314)
993억 7,500만원	900억원
[250억원(1회 매입액)×4회전] - [250억원×2.5%(年부실률)]	225억원(1회 매입액)×4회전(평균 만기 90일 기준)

주1) 수정계획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최근 3년(2021~202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상환' 항목의 계획액 대비 수납률을 보면, 2021년 34.2%, 2022년 72.8%, 2023년 73.7%로 매년 저조함.[463]

<최근 3년(2021~2023년)간 팩토링 매출채권 회수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21년	39,750	13,592	13,592	34.2
2022년	79,500	57,890	57,890	72.8
2023년	99,375	73,225	73,225	73.7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는 팩토링 매출채권의 평균 결제기일이 69일로 매입 채권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회수되기 때문으로, 부실액·사고 발생액은 없으며 미수납액 전액이 만기 미도래액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수입계획안 편성 시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상 채권 회수액을 산정함에 따라 매년 수입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매년 팩토링 공급금액이 동일할 경우 자금 회전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수입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나, 최근 팩토링 공급금액이 증가 추세임[464]에 따라 매년 만기미도래 채권

463) 2021년의 경우 사업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2022~2023년에 비해 수납률이 낮음.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점에서 반복적으로 수입결손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차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편성 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반영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64) 팩토링금융 집행액: ('21년) 202억 4,000만원, ('22년) 595억 6,800만원, ('23년) 899억 8,000만원, ('24년 계획액) 1,500억 4,900만원

2. 이차보전지원[465]: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실적 부진에 따른 과도한 사업개편 부적절 및 사후관리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630억 200만원 중 568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2%)되고, 62억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이차보전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이차보전지원	63,002	63,002	-	63,002	56,802	-	6,200	44,893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2차연장)	27,003	27,003	-	27,003	21,788	-	5,215	50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35,999	35,999	-	35,999	35,014	-	985	44,843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부터 이차보전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 프로그램, 코로나19 긴급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희망플러스 이

465) 세부사업: 이차보전지원(2431-313)

차보전 프로그램을 운용하였음.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대한 신규 대출공급은 2020년 12월에 종료되었고, 2023년에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2차 연장분 및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이 추진되었음.

<이차보전지원 사업개요>

구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희망플러스 이차보전1)
	최초	1차 연장	2차 연장	
지원대상	코로나19 직·간접피해를 입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고신용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기 활용중인 소상공인 전체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
대상 대출자금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경우 신용 및 대환대출			
대출한도	3,000만원			3,000만원
지원내용	초저금리대출(1.5%) 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대출금리-1.5%)의 80%를 보전	초저금리대출(1.5%) 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대출금리-1.5%)의 70%를 보전	초저금리대출(2.5%) 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대출금리-2.5%)의 70%를 보전	평균 산출금리(6.3%)와 대출 적용금리(3.3%) 간 차액의 70%를 보전
지원기간	1년	1년	1년	2년
운용기간	'20.4.1.~ '21.12.31.	'21.4.1.~ '22.12.31.	'22.4.1.~ '23.12.31.	'22.1.24.~재원 소진 시
지원한도	3.5조원	-	-	2.4조원
이차보전 재원	603.75억원	484.18억원	341.52억원	1,000억원

주1)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2차 개편(2023.1.25.)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1)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실적 부진에 따른 과도한 사업개편 부적절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은 당초 계획 대비 대출공급 실적이 부진하자 사업개시 이후 두 차례 사업을 개편하면서 공급목표를 감축하였는데, 지원대상·지원기간의 잦은 변경은 적절하지 못하며 기존 이차보전 사업의 일부 불용을 야기하였으므로,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은 정부가 2022년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패키지[466]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이차보전지원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임. 총 4조 8,000억원의 대출공급을 전제로 2022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로부터 1,000억원의 이차보전 재원을 출연 받았으며 2022년 1월 24일 사업이 개시되었음.

○ 그러나 희망플러스 대출 공급실적 및 이차보전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 말 기준 4조 8,000억원 중 1조 4,439억원의 대출만이 실행되어 한도소진율이 30.1%, 이차보전은 1,000억원 중 54억원만이 집행되어 한도소진율이 5.4%로 부진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두 차례 사업을 개편하였는데, 1차 개편(2022년 8월) 시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였고, 2차 개편

466)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4.8조원, 신용보증기금)'을,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3.8조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대출(1.4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급하여 총 10조원을 지원하고자 함.

(2023년 1월) 시 지원대상자 추가 확대 및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음. 특히 2차 개편 시에는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대출 공급목표를 4.8조원에서 2.4조원으로 감축하였음.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 개요>

구분	최초(2022.1.24.)	1차 개편(2022.8.8.)	2차 개편(2023.1.25.)
지원대상	○ (최초)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 (1차)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상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 (2차)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상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		
대출한도	1,000만원	3,000만원	
지원내용	○ (최초) 이자차액 [평균산출금리(4.5%)-대출적용금리(1.5%)]의 70%(2.1%) 보전 ○ (1차) 이자차액 [평균산출금리(4.5%)-대출적용금리(1.5%)]의 70%(2.1%) 보전 ○ (2차) 이자차액 [평균산출금리(6.3%)-대출적용금리(3.3%)]의 70%(2.1%) 보전		
지원기간	1년		2년
운용기간	'22.1.24. ~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한도	4.8조원		2.4조원[1]
이차보전 재원	1,000억원		

주1) 지원기간 연장(1년→2년)에 따라 지원한도 하향조정(4.8조원→2.4조원)

(자료: 금융위원회)

□ 감축된 대출 공급목표를 기준으로는 2023년 말 기준 2조 4,000억원 중 2조 2,177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한도소진율이 92.4%, 이차보전은 1,000억원 중 404억원이 집행되어 한도소진율이 40.4%로 제고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이차보전지원 사업 집행현황(2023년 말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지원한도	지원액	한도소진율	잔여재원[1]
영세 소상공인	대출	35,000	29,032	82.9	-
	이차보전(최초)	604	506	83.8	98[2]
	이차보전(1차 연장)	484	417	86.2	63
	이차보전(2차 연장)	342	119	34.8	-
희망플러스[3]	대출	24,000	22,177	92.4	-
	이차보전	1,000	404	40.4	-

주1) '잔여재원'은 이차보전 사업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작성
2)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최초)의 잔여재원(98억원)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1차 연장)의 재원으로 사용됨
3)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은 2차 개편 기준으로 작성

(자료: 신용보증기금)

□ 먼저, 저조한 사업수요에 따라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을 위한 1,000억원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의 수가 48만명에서 8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당초 사업설계 시 수요예측이 부정확하여 실수요에 비해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대규모 불용 방지를 위한 잦은 사업변경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

○ 구체적으로, 당초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에는 '희망대출플러스' 패키지에 따라 총 4.8조원의 대출을 공급하여 약 48만명(4.8조원÷대출한도 1,000만원)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저조한 사업수요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대출한도 확대로 총 2.4조원의 대출을 약 8만명(2.4조원÷대출한도 3,000만원)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조정하여 사업 수혜범위가 축소되었음.

□ 다음으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2차 연장분은 계획액 대비 불용률이 19.3%에 달하는데, 이는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旣이용자를 포함하도록 개편한 점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2차 연장분은 2023년도 계획액 270억 300만원 중 217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52억 1,500만원이 불용(불용률 19.3%)되었음.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조기상환 등 중도해지 증가로 지원대상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실제로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잔액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 1조 9,280억원에서 10월 3,147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1조 6,133억원의 중도해지가 발생하였음.

<2023년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감소 추이>

(단위: 억원)

구분[1]	1월('22.4분기)	4월('23.1분기)	7월('23.2분기)	10월('23.3분기)	계
이차보전 대출잔액	19,280	18,787	10,539	3,147	-
중도해지	-	493	8,248	7,392	16,133
희망플러스 전환해지[2]	-	25	3,189	1,650	4,864

주1) 분기별 사후정산 방식임에 따라 해당 분기 익월 예산집행
주2) 직전 분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상 중 당해 분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명세에 포함된 기업의 대출잔액을 전환 해지분으로 추정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조기상환 금액이 크게 나타난 사유를 살펴보면,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사업개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사업 2차 개편('23.1월) 시 지원대상을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에 더하여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로 확대하였음. 다만, 지원대상이 된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기이용자의 경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상환을 전제로 하는 대환 방식으로 제한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직전 분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상 중 당해 분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명세에 포함된 기업의 대출잔액을 전환 해지분으로 추정할 경우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중도해지액 1조 6,133억원 중 4,864억원(30.1%)이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으로의 전환에서 기인한 금액임.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은 지원기간이 2년으로 길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환의 유인이 있는데, 당초 2023년도 계획안 편성 시부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개편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조기상환을 반영했더라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의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2)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산출금리의 적정성, 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의 실제 부담률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출금리와 평균 산출금리를 대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실제 대출금리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해 개산급 형태로 지급한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금의 실제 정산을 수행하고, 정산 결과 평균 대출금리가 5.4% 미만일 경우 금융기관의 이차보전금 수취 분만큼을 국고로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평균 산출금리와 대출 적용금리의 차이의 70%를 부담하고, 금융기관이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음. 2차 개편 전까지는 평균 산출금리가 4.5%, 대출 적용금리가 1.5%로, 2차 개편 후부터는 평균 산출금리가 6.3%, 대출 적용금리가 3.3%로 산출[467]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율은 2.1%였음.

□ 그런데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내역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별 융자실시액, 이차보전율 및 지원기간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액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실제 평균 산출금리 실적치를 관리하지 않고 있음.

467)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평균 산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신용등급 1등급 예상금리 등을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은행권이 추정하였음.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금융기관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 일)

구분		융자실시액 (A)	실제 대출금리 평균[1]	이차보전 지원금리(B)[2]	지원기간 (C)[3]	실제 이차보전 지원액 (A*B*C/365)
2차 개편 전까지의 신규대출 분	SC제일은행	5,823	4.50	2.10	312.91	105
	경남은행	64,222	4.50	2.10	332.17	1,227
	광주은행	12,508	4.50	2.10	332.37	239
	국민은행	134,134	4.50	2.10	338.69	2,614
	기업은행	351,756	4.50	2.10	355.24	7,189
	농협은행	102,688	4.50	2.10	328.80	1,943
	대구은행	41,424	4.50	2.10	339.49	809
	부산은행	70,192	4.50	2.10	342.94	1,385
	수협은행	447	4.97	2.10	299.35	8
	신한은행	162,098	4.50	2.10	338.35	3,155
	우리은행	169,270	4.67	2.10	324.28	3,158
	전북은행	10,150	4.50	2.10	318.34	186
	제주은행	17,141	4.50	2.10	324.37	320
	하나은행	328,049	4.50	2.10	342.80	6,470
	합계					28,808
2차 개편 후의 신규대출 분	SC제일은행	3,624	6.30	2.10	119.01	25
	경남은행	37,207	6.30	2.10	170.30	364
	광주은행	4,811	6.30	2.10	110.47	31
	국민은행	132,611	6.30	2.10	159.62	1,218
	기업은행	62,611	6.30	2.10	170.36	614
	농협은행	28,445	6.30	2.10	183.28	300
	대구은행	24,432	6.30	2.10	150.27	211
	부산은행	3,842	6.30	2.10	169.97	37
	수협은행	2,165	6.92	2.10	86.09	11
	신한은행	48,629	6.34	2.10	151.14	423
	우리은행	192,149	6.57	2.10	160.43	1,774
	전북은행	3,562	6.30	2.10	166.20	34
	제주은행	11,504	6.30	2.10	143.03	95
	하나은행	115,671	6.30	2.10	160.70	1,069
	합계					6,206

주1) 각 차주별 실제 대출금리를 차주별 지원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수치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함

주2) 이차보전지원금리(B): 지원금리(이차보전율)을 업체별 지원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주3) 지원기간(C): 이차보전 평균 지원기간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대상 실제 대출금리가 계획액 편성 시의 평균 산출금리(4.5%, 6.3%)보다 높을 경우 소상공인별 적용금리를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평균 산출금리로 모든 차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실제 대출금리가 평균 산출금리보다 낮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로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대출공급 결과 실제 대출금리가 평균 산출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기관별 실제 대출금리 평균치가 평균 산출금리와 동일한 4.5%(2차 개편 전), 6.3%(2차 개편 후)로 나타났다고 설명함.

○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 산출된 실제 대출금리를 파악한 후 실제 대출금리와 평균 산출금리를 대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기준 금융기관별 심사 결과 산출된 실제 대출금리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기관별 실제 대출금리의 진위 여부 및 계획액 편성 시 반영되었던 평균 산출금리가 적정 수준이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2차 개편 후를 기준으로 볼 때,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적용금리(3.3%)와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율(2.1%)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균 산출금리인 6.3%에 비해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 산출된 실제 금리가 6.3% 미만일 경우, 은행의 실제 부담률은 30% 미만으로 낮아짐.

- 특히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2023년도 평균 산출금리 실적치가 5.61%임[468]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사업의 평균 산출금리 실적치 역시 6.3%를 하회할 개연성이 있음.[469]

- 더구나 실제 평균 대출금리가 5.4%[470] 미만일 경우 은행은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보다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468) <2023년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금융기관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 일)

구분		융자실시액 (A)	실제 대출금리 평균[1]	이차보전 지원금리(B)[2]	지원기간 (C)[3]	실제 이차보전 지원액 (A*B*C/365)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2023년)	SC제일은행	6,222	3.80	0.91	283.64	44
	경남은행	60,671	4.31	1.27	282.80	597
	광주은행	6,894	7.07	3.20	282.92	171
	국민은행	138,489	6.23	2.61	282.44	2,797
	기업은행	145,659	5.74	2.27	282.49	2,559
	농협은행	61,582	4.63	1.49	282.03	709
	대구은행	116,091	4.47	1.38	282.28	1,239
	부산은행	3,607	6.84	3.04	282.94	85
	수협은행	264,519	5.90	2.38	282.41	4,871
	신한은행	3,275	5.57	2.15	279.92	54
	우리은행	193,967	5.93	2.40	282.42	3,602
	전북은행	7,319	5.21	1.90	280.85	107
	제주은행	3,308	6.10	2.52	284.60	65
	하나은행	282,209	5.70	2.24	282.23	4,888
	합계					21,788

주1) 각 차주별 실제 대출금리를 차주별 지원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수치

주2) 이차보전지원금리(B): 지원금리(이차보전율)을 업체별 지원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주3) 지원기간(C): 이차보전 평균 지원기간

(자료: 금융위원회)

469)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평균산출금리(6.3%)는 당시 금리인상 기조 및 역마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은행권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별도로 실제 산출금리를 관리하는 우리은행·수협은행·신한은행의 경우 금리가 6.3%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입장이나,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행 간 대출금리의 차이가 3.27%p(광주은행 7.07% - SC제일은행 3.80%)까지 나타날 수 있고, 실제 정산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평균산출금리가 적정 수준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70) 3.3%(대출 적용금리) + 2.1%(이차보전율) = 5.4%

더 높은 금리를 수취할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수행을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됨.

○ 이처럼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산출금리(6.3%)의 적정성, 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의 실제 부담률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개산급 형태로 이차보전 소요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한 후라도 실제 대출금리를 파악하여 재정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해 개산급 형태로 지급한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금의 실제 정산을 수행하고, 정산 결과 실제 평균 대출금리가 5.4% 미만일 경우 금융기관의 이차보전금 수취 분만큼을 국고로 환수할 필요가 있음.

3. 경영지도[471]: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의 사업수요 저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영지도”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잡매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기업연수, 경영정보 제공 등 다양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160억 8,200만원 중 159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1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경영지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경영지도	16,082	16,082	-	16,082	15,952	-	130	18,71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계획 대비 수요가 저조함에도 매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향후 실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만이 반영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위기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471) 세부사업: 경영지도(2431-307)

프로그램’ 또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비용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함.

□ 동 사업은 2022년 신규로 반영된 후 매년 42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과 2023년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컨설팅 실적이 부진함.

○ 두 해 모두 4,750건의 컨설팅을 목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에는 2,976건(62.7%), 2023년에는 3,308건(69.6%)의 컨설팅만을 제공하였으며, 2024년에도 7월 말 기준 2,168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계획 대비 소상공인의 수요가 저조한 상황임.

<2022~2023년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제공 건수>

(단위: 건, %)

구분	계획(A)	신청	실적	달성률(B/A)
2022년	4,750	3,088	2,976	62.7
2023년	4,750	3,938	3,308	69.6

주: ‘계획’ 건수는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 산출 시의 건수임

(자료: 금융위원회)

○ 당초 계획 대비 수요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①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의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위탁보증 및 대환보증 프로그램 이용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데, 동 프로그램의 보증해지 등으로 지원대상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② 해당 프로그램은 수탁은행을 통해 보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직

접적인 사업 안내에 어려움이 있으며,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유사 사업(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으로 시장수요가 분산되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 홍보채널 확대 등을 통해 수요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그럼에도 2024년 계획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2022년 이후 소상공인위탁보증의 신규 공급이 없으며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경우에도 2024년까지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원대상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범위[472]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감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에는 계획액 42억 7,500만원 중 37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에도 당초 계획액은 42억 7,500만원이었으나, 연도 중 계획액을 38억원으로 수정한 후 수정 계획액 전액을 집행하였음.

---

472)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22~2024년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22년	4,275	4,275	4,275	3,711	-	564
2023년	4,275	3,800	3,800	3,800	-	-
'24.7월말	4,275	4,275	4,275	1,078		-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2년간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의 수요가 저조하자, 2023년에 해당 내역의 계획액을 다른 내역으로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컨설팅 단가를 인상(90만원→120만원)하였음.

- 경영지도 사업의 예결산 내역을 보면, 2023년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계획액(42억 7,500만원) 중 11.1%인 4억 7,500만원이 위탁보증 수수료, 경영·특화 컨설팅 등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는데, 실수요에 비해 예산을 과다편성한 후 잔여재원이 다른 사업에 활용된 것으로 보임.

<2022~2023년 경영지도 사업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A)	결산(B)	차이(B-A)	예산(C)	결산(D)	차이(D-C)	예산
컨설팅 용역비	5,875	5,512	△363	5,875	5,570	△305	5,875
경영·특화 컨설팅	1,600	1,801	201	1,600	1,770	170	1,600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4,275	3,711	△564	4,275	3,800	△475	4,275
신용카드,위탁보증 수수료	7,311	5,219	△2,092	7,473	7,858	385	10,061
신용카드 수수료	3,002	1,907	△1,095	3,164	1,705	△1,459	3,660
위탁보증 수수료	4,309	3,312	△997	4,309	6,153	1,844	6,401
창업종합지원 등	2,734	3,229	495	2,734	2,524	△210	2,774
계	15,920	13,960	△1,960	16,082	15,952	△130	18,710

주: '예산'은 국회 의결된 해당연도의 당초 계획액임

(자료: 금융위원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성공드림 컨설팅 사업의 실수요를 면밀히 점검하여 그에 맞는 예산만을 반영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일반회계전입금[473]: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실적 저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회계전입금”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전입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액 및 징수결정액 837억원 전액이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일반회계전입금	83,700	83,700	83,700	83,700	83,700	-	-	80,000
-소상공인 대환보증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보증부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2년 9월 말 사업이 개시되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6,800억원, 2023년도 본예산으로 800억원의 출연을 받았음.

473) 수입목명: 일반회계전입금(91-911)

<소상공인 대환보증 출연금 산출근거>

구분	2022년도 제2회 추경	2023년도 예산
출연금	6,800억원	800억원
산출근거	8조 5,000억원÷12.5배	1조원÷12.5배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한 당초 취지와 달리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2023년 말 기준 보증 공급목표의 13.7%만을 공급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실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만을 반영하는 한편, 연말까지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추이를 고려하여 출연금 반납을 검토하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전체 출연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감액편성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출연받은 재원(6,800억원)을 활용해 2022년 말까지 6조 7,500억원을, 2023년 말까지 8조 5,000억원(누계)의 보증을 공급하고자 하였음. 2023년도 본예산으로 출연받은 재원(800억원)으로는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 2024년 말까지 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실적을 보면, 2022년 말 기준 보증공급 규모는 2,320억 8,500만원으로 공급목표(6조 7,500억원)의

3.4%이고, 2023년 말 기준 보증공급 규모는 1조 1,653억 7,300만원으로 공급목표(8조 5,000억원)의 13.7%로 매우 부진함.

<소상공인 대환보증 분기별 공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보증공급 건수	분기별 대환대출 공급규모	보증비율	분기별 대환보증 공급실적	대환보증 공급실적(누계)*
2022년	4분기	7,170	257,872	90%	232,085	232,085
2023년	1분기	4,152	203,582		183,224	415,309
	2분기	5,712	369,716		332,744	748,053
	3분기	4,824	324,570		292,113	1,040,166
	4분기	2,590	139,119		125,207	1,165,373
2024년	1분기	2,038	115,326		103,793	1,269,166
	2분기	4,134	212,086		190,877	1,460,043

주: 보증서 발급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보증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유사 대환프로그램을 출시하여 대환대출의 수요가 분산되었고, 당초 사업구조상 짧은 상환기간(거치기간 2년 도과 시 3년간 분할상환)에 대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2023년 3월, 8월, 202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공급실적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4년 말까지의 공급목표 9.5조원 중 2분기까지 15.4%(1.46조원)만을 공급한 점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당초	2023.3월	2023.8월	2024.3월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환대상 채무	'22.5.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22.5.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및 사업목적 가계대출	'23.5.31.까지 취급된 고금리(연 7% 이상) 사업자대출 및 사업목적 가계대출
접수기한	2023년 말	2024년 말		
총량한도	8.5조원	9.5조원		
상환구조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10년(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개인기업) 5천만원, (법인기업) 1억원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보증료율	연 1% 고정보증료율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최초 1년간 보증료 0.7% 추가 감면 (은행 출연)
보증비율	90%			
보증방식	위탁보증(15개 은행*에 업무 위탁)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현, 부산, iM뱅크(舊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자료: 금융위원회)

○ 더구나 당초 소상공인 대환보증을 2022년 2차 추경으로 신설한 취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당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었으나, 사업 개편과정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변경한 것은 과도한 사업 확대로 보임.

□ 아울러, 소상공인 대환보증 공급을 위한 출연금 총 7,600억원은 운용배수 12.5배를 기준으로 2024년까지 9.5조원(= 7,600억원 × 운용배수 12.5배) 공급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공급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2024년 6월 말 기준 대환보증 계정의 운용배수는 2.0배에 불과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계정 보증공급 및 부실 현황>

(단위: 억원, %, 배)

계정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6월말
저금리 대환보증	보증잔액(A)	2,316	11,276	13,544
	신규보증액	2,321	9,333	2,947
	부실잔액	2	362	480
	부실순증액(B)	2	602	644
	부실률(B/A)	0.1	5.3	9.5
	대위변제액(C)	-	248	538
	대위변제율(C/A)	-	2.2	8.0
	기본재산(D)	6,730	7,159	6,810
	운용배수(A/D)	0.3	1.6	2.0

(자료: 금융위원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실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만을 반영하는 한편, 연말까지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공급추이를 고려하여 출연금 반납을 검토하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전체 출연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감액편성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국회 시정

요구사항으로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을 지양할 것(시정)’ 및 ‘금융위원회는 향후 소상공인 대환보증과 유사한 지원사업 추진 시 과도한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집행 실적을 추후 출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이 의결된 바 있음.

Ⅵ.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기타경상이전수입[474]: 임차보증금 환입급 등 수입내역 적시 반영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환입한 금액 등을 반영한 것임.

□ 2023년도에는 당초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은 없었으나, 예금보험공사 임차보증금 환입분, 소송 비용 환입분 등이 발생하여 46억 8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3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 수입 실적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계획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	4,608	-	-

(자료: 예금보험공사)

□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임차보증금 감액분 환입분 40억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환입분[475] 5억 6,000만원 등임.

---

474) 세부사업: 법정부담금(59-593)

475)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 승소에 따라 기 지출한 소송 관련 비용(변호사 보수 등)을 소송상대방인 BNK

2) 검토의견

(1) 임차보증금 환입금 등 수입내역 적시 반영 필요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 간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상환기금의 수입 내역을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상환기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2023년도에 총 40억원을 수납했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① 2010년 보증금 감액분 7억 3,300만원, 2020년 보증금 감액분 27억 6,700만원 등 과거 보증금 등 감액분의 재정산에 따른 38억 7,000만원과 ② 2023년도 임차계약 변경에 따른 보증금 감액분 1억 2,000만원임.

< 임차보증금 등 환입 세부내역 >

(단위: 억원)

<table>
<tr><th>구분</th><th>환입금액</th></tr>
<tr><td>(과거) 보증금 등 감액분 재정산</td><td>38.7 (원금 35.2, 기간이자 3.5)
<table>
<tr><th>구 분</th><th>2010년 감액분</th><th>2011년 감액분</th><th>2020년 감액분</th><th>2021년 감액분</th><th>합 계</th></tr>
<tr><td>사옥 임차보증금</td><td>7.3</td><td></td><td>27.7</td><td>0.01</td><td>35.01</td></tr>
<tr><td>전신전화 보증금</td><td></td><td>0.2</td><td></td><td></td><td>0.2</td></tr>
<tr><td>합 계</td><td>7.3</td><td>0.2</td><td>27.7</td><td>0.01</td><td>35.21</td></tr>
</table></td></tr>
<tr><td>(당해)보증금감액</td><td>1.2</td></tr>
<tr><td>합 계</td><td>39.9</td></tr>
</table>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지주에게 청구하여 5억원 환입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공사는 상환기금으로 환입되어야 하는 공사 임차보증금 감액분이 예금보험기금으로 잘못 환입된 사실을 인지하고, 잘못 환입된 과거 임차보증금 등 감액분 35억 2,000만원과 이자 3억 5,000만원[476]을 재정산하여 상환기금으로 환입하였음.

□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치되었고, 상환기금은 2002년 말까지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 상환을 위해 2003년 1월 1일 종전 예금보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여 운용을 개시하였음. 이와 동시에 통상적인 예금보험기능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은 새로이 적립을 시작함.

<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비교 >

구 분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설치연도	'96. 6. 1('03. 1. 1 새로 적립 시작)	'03. 1. 1
근거법률	예금자보호법 제24조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설치 목적	보험금 지급 등으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舊예금보험기금('02년말 이전)의 채무 상환
주요 조성재원	보험료, 출연금, 차입금, 채권 발행, 회수자금 등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상환기금채권 발행, 특별기여금, 회수자금 등
자금지원 대상	'03.1.1. 이후 보험사고 등이 발생한 금융회사	'02.12.31.이전 보험사고 등이 발생한 부실금융회사

(자료: 예금보험공사)

□ 상환기금은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기금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했

476) 연도별 예금보험기금 누적 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기 때문에 당시 예금보험공사의 임차보증금 67억 7,600만원을 전액 부담하였음.

□ 따라서, 공사의 임차보증금 등이 감액된 경우 당연히 상환기금으로 환입했어야 함에도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으로 잘못 환입함에 따라 이 수입내역이 상환기금에 적시 반영되지 못하였음.

□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예금자보호법」은 두 기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77]

□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 간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상환기금의 수입내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 간 운영경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공사 임차보증금 분담 필요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를 전담인력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으나, 공사 임차보증금 분담과 관련하여 상환기금의 분담비율이 적정 분담비율 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이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상환기금 청산 전에 그 분담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은 예금보험공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478] 이에 따라 두 기금은 예금보

477)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 ①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험공사의 임차보증금도 분담하고 있음.

□ 2023년 말 기준 예금보험공사의 임차보증금은 37억 3,700만원인데, 이 중 상환기금은 31억 5,400만원을, 예금보험기금은 5억 8,200만원을 부담하여 상환기금 대 예금보험기금의 분담비율은 84.4 : 15.6 상태임.

< 운영경비 분담 비율 및 임차보증금 부담 비율>

구분	운영경비 분담 비율	사옥 임차보증금		
		사옥 임차보증금	기금 간 부담 금액	기금 간 부담 비율
상환기금	3%	37억 3,700만원	31억 5,400만원	84.4%
예금보험기금	97%		5억 8,200만원	15.6%

(자료: 예금보험공사)

□ 두 기금의 운영경비 분담비율은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배분규정」(예금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상환기금의 분담비율은 동 규정에 따라 상환기금의 전담인력 비율에 연동함.[479]

---

478)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4.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③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5.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479) 「운영경비배분규정」(예금보험공사 내부규정) 제7조 (기금별 배분)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예산을 기금별로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용은 상환기금에 배분하고 그 외의 비용은 예금보험기금에 배분한다.

1. 회계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중 상환기금 전담인력 관련 인건비

2. 회계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금 전담인력 비율에 연동하여 소요되는 경비

3. 회계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로서 상환기금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경비

제8조 (상환기금 전담인력 비율) ① 상환기금 전담인력 비율은 당해연도 상환기금 전담인력 정원수를 총 정원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상환기금 전담인력 비율의 소숫점 첫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 2023년도 상환기금 전담인력은 25명이고, 예금보험공사 총정원은 839명이므로, 상환기금의 운영경비 분담비율은 약 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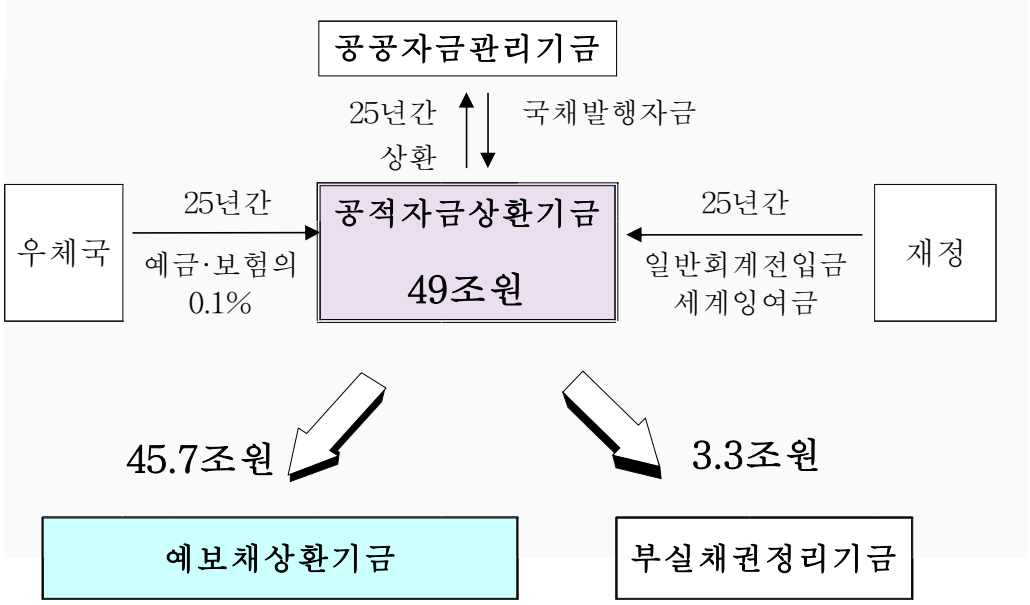
□ 운영경비에 대한 상환기금의 분담비율이 3%이므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분담비율 역시 3%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 상환기금이 공사 임차보증금의 84.4%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480]

□ 상환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은 45.7조원과 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예금평잔의 0.1%) 등으로 현재 부채 상환을 완료한 상태이나, 20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을 때 체결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간 약정[481]에 따라 상환기금의 여유재원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을 위해 전출하고 있음.[482]

480)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 이후 발생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이 전액 부담하고 있음을 설명함.

481)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의 정산에 관한 약정」 2003, 제2조(출연금의 반환) 상환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계산(이하 "재계산"이라 한다) 후 또는 기금의 부채 상환과 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한 후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분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482)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 따라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안정적인 전출 재원 확보 및 여유 재원의 정확한 추계를 위하여 상환기금의 보유 자산을 명확히 하고, 예금보험기금 회계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임차보증금의 성격상 운영경비 분담비율에 맞추어 즉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상환기금의 2027년 말 청산 전까지 그 자산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임차보증금 분담비율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Ⅶ.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 대위변제(주신보·주연보)[483]: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 강구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위변제” 사업은 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은 2023년 계획현액 5,944억 4,500만원 중 5,890억 6,700만원(99.1%)이 집행되고 53억 7,8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은 2023년 계획현액 551억 7,600만원 중 465억 7,200만원(84.4%)이 집행되고 86억 4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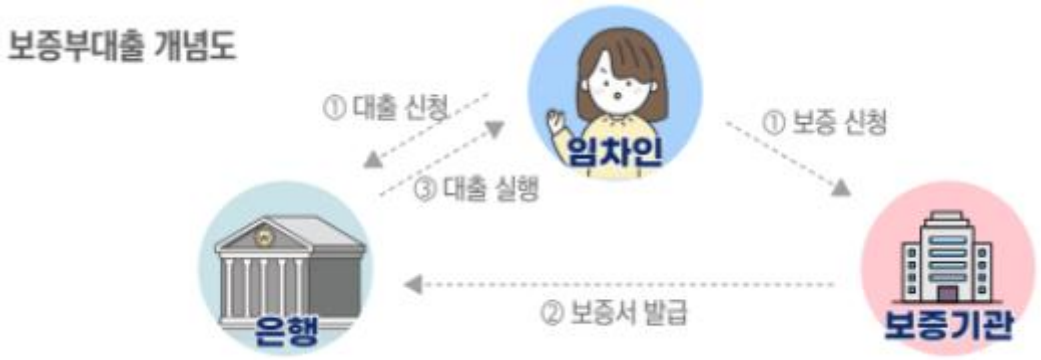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위변제(주신보)	306,100	594,445	-	594,445	589,067	-	5,379	669,400
대위변제(주연보)	24,790	55,176	-	55,176	46,572	-	8,604	31,450

(자료: 금융위원회)

483) 세부사업: 주신보운영 대위변제(2631-303), 주연보운영 대위변제(2631-303)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신보계정과 주연보계정으로 나뉘는데, 주신보계정은 개인이 주택을 건축·구입·임차·개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거나(개인보증), 사업자가 주택의 건설·임대를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거나(사업자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반환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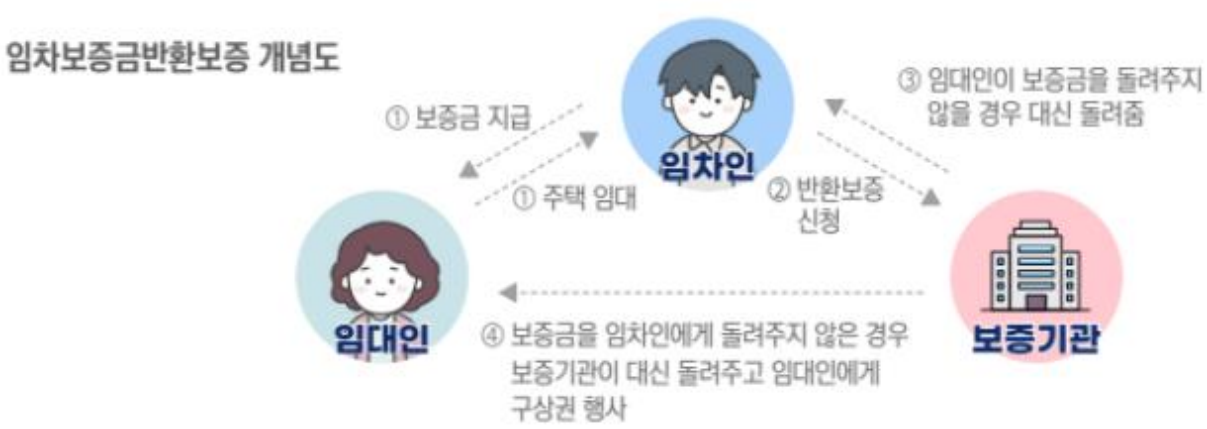
<개인보증 구조>



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림에서 “보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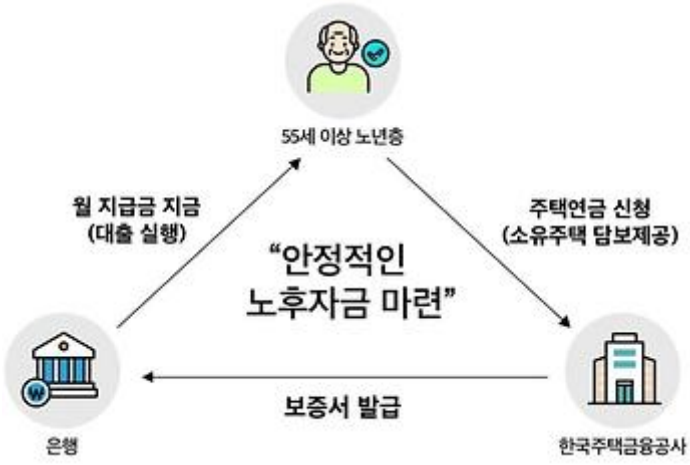
<반환보증 구조>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연보계정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 형태로 대출(이른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주신보계정과 주연보계정의 보증상품을 살펴보면, 먼저 주신보계정의 보증상품은 크게 개인보증, 사업자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나뉘

는데, 2023년말 기준 보증잔액은 개인보증 108조 7,086억원(83.1%),[484] 사업자보증 12조 4,586억원(9.5%), 반환보증 9조 6,557억원(7.4%)으로 개인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주연보계정은 주택연금보증 단일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말 기준 보증잔액은 22조 5,016억원임.

2) 검토의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위변제 후에도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기금재산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금융기관의 출연금, 보증료 등의 수입으로 기금재산을 조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정보증한도인 기금재산의 30배 내에서 신용보증을 수행하고,[485][486]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는 한편 기금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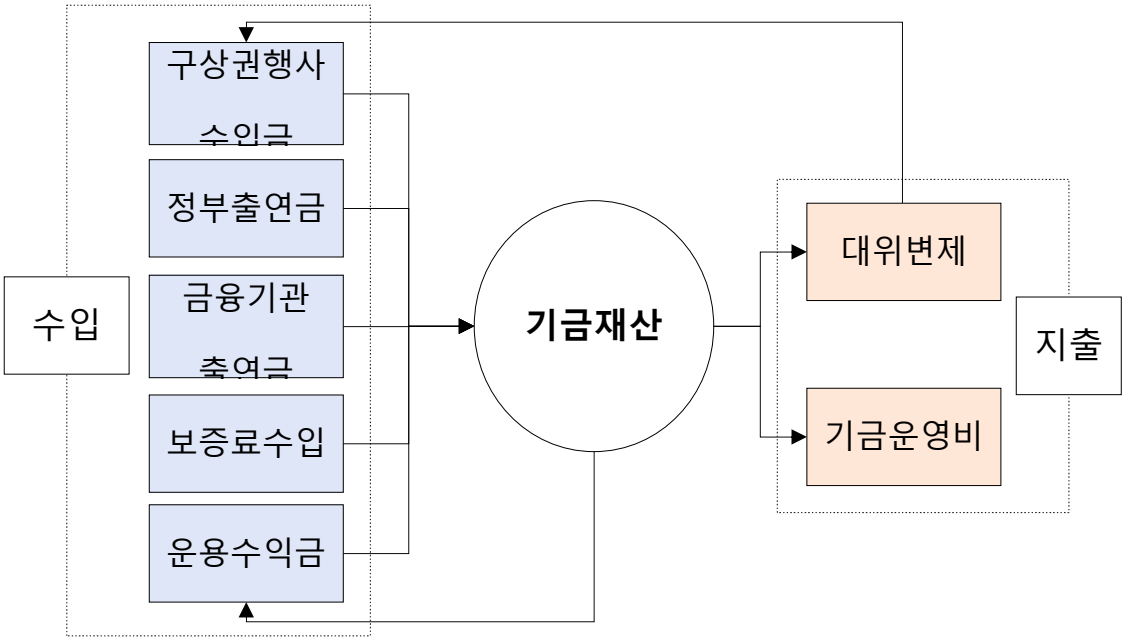
---

484) 개인보증은 다시 각 보증은 다시 전세자금보증(88조 11억원), 중도금보증(11조 4,369억원), 구입자금보증(9조 827억원) 등으로 나뉨.

485) 신용보증총액(주연보계정 제외)의 한도는 기금 기본재산과 기금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 이내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법 시행령 제28조).

486) 2024년 3월말 기준 보증배수는 주신보계정 12.0배(적정보증배수 16.3배), 주연보계정 9.4배(적정보증배수 15.4배) 수준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영구조>



○ 이러한 구조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되면 기금지출이 증가하여 기금재산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총액의 한도가 감소하여 신용보증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음.

□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신용보증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특성상, 기금의 최대 지출항목(여유자금운용 제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위변제로, 실제 2023회계연도에도 주신보계정의 지출액 6,974억 9,400만원 중 대위변제가 5,890억 6,700만원으로 84.5%를 차지하였고, 주연보계정의 지출액 730억 1,700만원 중 대위변제가 465억 7,200만원으로 63.8%를 차지하였음.

□ 특히, 2023회계연도에는 주택경기 위축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위변제 소요가 증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신보계정 대위변제 사업 지출액을 당초 3,061억원에서 5,944억 4,500만원(94.2% 증가)으로 조정[487]하여 그 중 99.1%인 5,890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연보계정 대위변제 사업 지출액을 당초 247억 9,000만원에서 551억 7,600만원(122.6% 증가)으로 조정하여 그 중 84.4%인 465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대위변제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실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보증의 대위변제액(2022년 3,053억원 → 2023년 4,983억원/+1,930억원(+63.2%))과 대위변제율(0.34%→0.57%/+0.23%p)이 크게 증가·상승하여 전체적인 대위변제액·율의 증가·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출시된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율(61억원→ 840억원/+779억원(+1,277%), 0.15%→0.87%/+0.62%p) 역시 빠르게 증가·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487) 참고로, 2022회계연도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대위변제 사업 지출 계획액을 당초 2,912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중 3,167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음.

<주신보계정 연도별·사업별 대위변제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위변제액	전체		2,150	1,870	1,784	2,488	2,286	3,168	5,891
	개인보증		1,840	1,864	1,781	2,461	2,242	3,099	5,035
		전세	1,789	1,813	1,689	2,386	2,166	3,053	4,983
		중도금	27	24	67	21	8	7	18
		구입등	25	27	25	55	68	40	35
	반환보증		-	-	-	-	-	61	840
	사업자보증		310	6	3	27	56	7	16
		PF	-	-	-	-	-	-	-
		건설등	310	6	3	27	45	7	16
대위변제율	전체		0.30%	0.24%	0.20%	0.24%	0.20%	0.26%	0.45%
	개인보증		0.27%	0.25%	0.21%	0.25%	0.21%	0.28%	0.46%
		전세	0.46%	0.36%	0.26%	0.30%	0.25%	0.34%	0.57%
		중도금	0.01%	0.01%	0.04%	0.01%	0.00%	0.00%	0.02%
		구입등	0.06%	0.05%	0.04%	0.09%	0.11%	0.06%	0.04%
	반환보증		-	-	-	0.00%	0.00%	0.15%	0.87%
	사업자보증		1.07%	0.02%	0.01%	0.05%	0.06%	0.01%	0.01%
		PF	-	-	-	-	-	-	0.00%
		건설등	2.15%	0.03%	0.01%	0.10%	0.11%	0.01%	0.02%

(자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또한, 대위변제에 선행하는 보증사고액·율 역시 빠르게 증가·상승하여 향후 대위변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2023년 보증사고액·율은 전 상품에 걸쳐 2022년에 비하여 2배 가량으로 증가·상승한 상황이고, 특히 PF보증과 건설등보증 등 사업자보증의 보증사고의 증가가 특징적임.

<주신보계정 연도별·사업별 보증사고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증사고액	전체		2,902	3,564	4,001	3,829	3,631	5,452	10,594
	개인보증		2,851	3,340	3,998	3,593	3,596	5,287	7,790
		전세	2,505	2,621	2,936	3,061	3,244	4,909	7,100
		중도금	183	491	770	219	134	212	386
		구입등	163	227	292	313	217	166	303
	반환보증		-	-	-	-	-	111	1,013
	사업자보증		51	224	3	237	35	55	1,791
		PF	-	-	-	-	-	-	360
		건설등	51	224	3	237	35	55	1,431
보증사고율	전체		0.41%	0.46%	0.45%	0.36%	0.31%	0.44%	0.81%
	개인보증		0.41%	0.45%	0.47%	0.36%	0.33%	0.48%	0.72%
		전세	0.64%	0.52%	0.46%	0.39%	0.38%	0.55%	0.81%
		중도금	0.07%	0.26%	0.50%	0.15%	0.09%	0.14%	0.34%
		구입등	0.36%	0.45%	0.53%	0.50%	0.34%	0.26%	0.33%
	반환보증		-	-	-	-	-	0.26%	1.05%
	사업자보증		0.18%	0.65%	0.01%	0.40%	0.04%	0.06%	1.44%
		PF	-	-	-	-	-	-	0.61%
		건설등	0.36%	1.28%	0.01%	0.88%	0.09%	0.10%	2.19%

(자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대위변제의 증가는 기금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기금의 보증배수를 높이고, 이로 인하여 기금의 기능인 신용보증 업무가 제약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금재산의 확충을 위하여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488]에서 금리인상, 주택경기 위축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선제

488) 실제로, 정부는 과거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1조 4,820억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바 있음.(단, 기존의 정부출연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조 4,820억원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현재 잔여 정부출연금은 없음.)

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회계연도에도 보증잔액 증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위변제 집행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신보 계정의 대위변제 사업 지출액을 당초 2,912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23회계연도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총 3회에 걸쳐 2,883억원을 상향조정하는 등 당초 예상한 집행소요와 실제 지출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계정 및 주연보계정의 대위변제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대위변제 후에도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기금재산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Ⅰ. 일반회계

1.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시 면밀한 법리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태료'[489]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 및 징수하는 항목으로, 2023년 예산액은 1억 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2,800만원이며 수납액은 △6,200만원임.

<2023년도 과태료 항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과태료(56-563)	110	110	-	110	128	△62	190	-	160
이행강제금	110	110	-	110	118	△62	180	-	160
과태료	-	-	-	-	10	-	10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대부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89) 세부사업: 과태료(56-563)

□ 이행강제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으로 부과되는 것임.

□ 그런데 2023년 이행강제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한 1억 8,000만원은 모두 미수납되었을 뿐 아니라 종전에 징수한 금액 중 6,200만원(3건)을 오히려 반납 처리하였음.

□ 또한 미수납액 1억 8,000만원(6건)의 2024년 현재까지 수납 현황을 보면, 1억 2,000만원(4건)은 2024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처분 취소(사유: 최근 판례 고려 시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결정을 하였고, 3,000만원(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3,000만원(1건)만 2024년 1월에 수납되었음.

<2023년도 세입(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부과연도	부과일자	부과대상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2020	’20.09.07.	OO학원 비리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결정 미이행 (1차 부과)	30	-	30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부과연도	부과일자	부과대상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2020	’20.12.28.	OO센터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 미이행 (1차 부과)	30	-	30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2021	’21.10.12.	OO학원 비리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결정 미이행 (2차 부과)	30	-	30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2022	’22.02.28.	OO센터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 미이행 (2차 부과)	30	-	30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2022	’22.11.29.	사립학교 회계비리 등 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30	-	30	▪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23.9.8. 1심 위원회 승소, 원고 항소(2023.9.25.)
2022	’22.11.29.	공공기관의 직장내 성추행 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2차 부과)	-	-	-	▪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제외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9.1. 선고)로 보호조치결정 취소
2023	’23.12.18.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2차) 미이행	30	-	30	▪ 2024.1.31. 수납
2023 (반환)	’23.09.26. (반환 일자)	공공기관의 직장내 성추행 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1차 부과)	-	△20	-	▪ 2022.2.28. 1차 부과하여 2022.6.30.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부과연도	부과일자	부과대상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2023 (반환)	'23.09.26. (반환 일자)	공공기관의 직장내 성추행 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2차 부과)	-	△20	-	▪ 2022.11.29. 2차 부과하여 2023.1.13.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 (반환)	'23.12.22. (반환 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1차) 미이행	-	△22	-	▪ 2019.7.17. 부과하여 2019.9.29.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위원회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 (2023.10.12. 선고)
합계			118	△62	18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결국, 2023년 이행강제금 수납 및 반납 조치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9건 중 7건이 소송 패소 또는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취소 등으로 수납 후 반납하거나 징수결정 후 수납이 불가능해진 상황임.

<2023년도 세입(이행강제금) 수납 및 반납 조치 현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 이와 같이 부과된 이행강제금 대부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보다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이행강제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규를 집행함에 있어서 신고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부과 대상자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행강제금 수납 이후 반납에 이르기까지 4년 이상이 걸리거나(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1차) 미이행 건),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취소하기까지 3~4년이 소요되는 등 상대방이 법률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기간이 장시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법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한 계약업무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는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490] 2023년도 예산현액 44억 7,300만원 중 39억 4,400만원(88.2%)이 집행되고, 5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기본경비 (비대상)	4,373	4,373	-	100	4,473	3,944	-	529	4,68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차년도 예산으로 매달 지급할 임차료 관련 계약을 전년도에 체결하고 차량 임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90) 세부사업: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임차료 3억 7,200만원 중 2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7,700만원은 정무직 전용차량 장기 임차 및 기타 행사 업무 소요 차량 임차 등을 위해 집행하였음.

<2023년도 기관운영경비(비대상) 임차료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집행내역	집행액
- 장소·건물 임차료 * 행사장·회의장 임차료 및 관사 임차료(월세) 지출	93
- 차량 임차료 * 정무직 전용차량 임차(장기) 및 기타 행사·업무 소요 차량 임차	**77**
- 시설 및 장비 임차료 * 공기청정기(장기) 및 영상·음향·전산 장비 임차	69
-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9(계획인사교류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5
합계	24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3년도에 위원장, 부위원장 등에 대한 정무직 전용 차량으로 총 7대를 임차하였고, 지출된 임차료는 총 5,853만원임.

<2023년 정무직 전용 차량 임차료 집행 내역>

(단위 : 원)

차량	용도	이용자	계약일	임차(계약)기간	금액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전용)	위원장	'22.12.1.	'22.12.1.-'23.11.30.	9,480,000원[491]
카니발	승용(전용)	고충처리부위원장	'22.12.1.	'22.12.1.-'23.5.31.	5,178,000원[492]
K8 하이브리드	승용(전용)	부패방지부위원장	'23.1.20.	'23.1.1.-'23.12.31.	8,960,400원
K7 하이브리드	승용(전용)	행정심판부위원장	'23.1.20.	'23.1.20.-'23.4.30.	2,948,000원
G80 전기	승용(전용)	부패방지부위원장	'23.4.25.	'23.5.1.-'23.12.31.	17,200,000원
G80 전기	승용(전용)	고충처리부위원장	'23.4.25.	'23.6.1.-'23.12.31.	15,050,000원
G80	승용(전용)	위원장	'23.10.23.	'23.12.1.-'23.12.31.	1,375,000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2023년도 정무직 전용 차량 임차료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위원장 차량(그랜저 하이브리드)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1일~2023년 11월 30일인 계약을 2022년 12월 1일에 체결, 고충처리부위원장 차량(카니발) 임차계약은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1일~2023년 5월 31일인 계약을 2022년 12월 1일에 각각 체결하였음.

□ 이는 차년도 예산으로 매달 지급할 임차료 관련 계약을 전년도에 체결한 것으로,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 준칙)[493]에 위배됨.

□ 또한, 계약시점인 12월 1일은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인 시점

491) 계약금액 2022년 12월분에 해당하는 임차료(790,000원)는 2022년 예산으로 지급함
4) 계약금액 2022년 12월분에 해당하는 임차료(863,000원)는 2022년 예산으로 지급함
493)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으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 준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494]의 허용범위도 넘어선 것임.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에 체결한 위원장, 고충처리부위원장 전용차량 임차계약의 계약기간('19.7.9.~'22.11.30.)이 만료되어 신규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전기차를 임차하려 했으나, 당시 반도체 부족 등으로 전기승용차 출고기간이 지연되어 기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차량 2대를 1년 연장('22.12.1.~'23.11.30.)하면서 행정착오로 차년도분의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하였으며,

○ 추후 계약 이행기간의 회계연도가 다른 계약 체결 시 장기계속계약을 통해 각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편, 2023년 1월 20일에 체결한 부패방지부위원장 차량(K8 하이브리드) 계약의 경우 착수일이 2023년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2023년 1월 20일에서야 체결하였음.

□ 이는 계약사항(차량 임차)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후계약은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

4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495]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음.[496]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월 20일에 체결한 부패방지부위원장 차량계약은 장기계속계약[497]의 3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시 업무 착오로 계약 체결이 지연된바, 향후 회계연도 차수 계약 시 해당 계약의 체결 시기를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49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496) 2020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정기감사"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이 영상제작 용역을 발주한 후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국가계약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음(주의요구)

497) "위원회 전용차량(부패방지부위원장) 임차" 장기계속계약 계약기간 : 2021.9.15.~2024.9.13.

3.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정보화사업 예산 집행 기준에 맞는 예산 운용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은 모든 행정기관과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소통창구를 통합·연계한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정부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공유·소통·토론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498] 2023년 예산은 57억 8,000만원, 이·전용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억 7,700만원으로 이 중 44억 2,900만원이 집행되고 11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200만원(2.6%)이 불용되었음.

< 2023년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민소통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2,121	-	2,121	2,115	-	6	2,583
국민소통시스템 기타운영	413	△3	410	317	-	93	300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436	-	436	435	-	1	536
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	2,810	-	2,810	1,562	1,196	52	-
합 계	5,780	△3	5,777	4,429	1,196	152	3,41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98) 세부사업: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1132-321)

2) 검토의견

정보화예산을 정보화 외 사업으로 자체 전용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되므로, 향후 집행지침에 반하여 자체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동 세부사업의 2023년도 이·전용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동 세부사업 내 공공요금 예산 3백만원을 전용하여 타 세부사업(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_1136-366)의 국내여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음.

<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이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3.6.25.)	국민소통시스템 구축및운영 (1132-321)	210-02	1	국민소통시스템 구축및운영 (1132-321)	210-07	국민생각함 패널 간담회 장소 임차료 부족
조정 ('23.11.20.)	국민소통시스템 구축및운영 (1132-321)	210-02	0.19	국민소통시스템 구축및운영 (1132-321)	210-07	국민신문고 신규 이용기관 교육장 임차료 부족
조정 ('23.11.20.)	국민소통시스템 구축및운영 (1132-321)	210-02	6.55	국민소통시스템 구축및운영 (1132-321)	210-01	국민생각함 활용자 우수자 시상식 및 간담회 개최 부상품 구매비용 부족
조정 ('23.12.6.)	국민소통시스템 구축및운영 (1132-321)	210-02	47	국민소통시스템 구축및운영 (1132-321)	210-01	정부박람회 전시관 운영 및 민원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개최비용 부족
전용 ('23.12.22.)	국민소통시스템 구축및운영 (1132-321)	210-02	3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220-01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자체전용

자료: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결산 설명자료

○ 3백만원 여비 예산의 경우 다른 일반 사업에서 충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보화사업 예산 집행 기준이 보다 엄격히 적용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지침을 위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화 관련 예산 기본지침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해당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여 준수하고 예산집행심의회 시 해당 내용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화사업과 일반사업 간 집행기준이 다른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청렴권익민간협력(1133-33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예산 과다 편성 및 활동 종료 후 해당 예산 집행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권익민간협력’은 민간단체 등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499] 2023년도 예산현액 6억 6,300만원 중 4억 5,900만원(69.2%)이 집행되고, 2억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렴권익민간협력	672	672	672	△9	663	459	-	204	455
시민협력	273	273	-	-	273	223	-	50	190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85	85	-	-	85	84	-	1	87
청렴사회민관 협의회 운영	186	186	-	△9	177	25	-	152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128	128	-	-	128	128	-	-	17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99) 세부사업: 청렴권익민간협력(1133-333)

2) 검토의견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운영 근거인 훈령이 2023년 2월까지 유효함에도 2023년 전체 기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대부분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된 예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 의사결정 및 준비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청렴권익민간협력 세부사업에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5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였음.

<2023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운영 예산 상세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내용	세목	금액
1월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분과 협의회	일반수용비	7,250
2월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분과 협의회	일반수용비	10,400
제2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성과보고서 제작·배포	일반수용비	895
임차료(6회)	임차료	2,110
유관기관 업무협의(16회)	사업추진비	1,743
근무지외 출장여비(1~12월)	국내여비	2,563
계		**24,96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내역사업의 집행률은 본예산 대비

13.4%에 불과한데, 이는 협의회 운영의 법령상 근거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이 2023년 2월 25일까지 유효하여, 기간 만료 후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 편성 시 국민권익위원회는 훈령 개정을 전제로 2023년 전체 기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 대부분의 불용을 초래하였음.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은 '18.1.3. 제정 이후 한차례 개정(유효기간 연장 : ~'23.2.25.)된 바 있고,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22. 5월 : 예산 요구안 제출→'22. 6~8월 : 정부 예산안 편성) 훈령 개정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었으며, 아직 3기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 남아있는 상태로 차년도 협의회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었다는 입장임.

○ 또한, 기존에 이미 한 차례 훈령 개정('20.2.26.)이 이루어진 바 있어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협의회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중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186백만원)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훈령 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초인 2023년 2월 25일이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시점까지는 훈령 연장 여부 및 협의회 존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이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협의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시점부터는 예산 집행을 동결하고 남은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관련 예산 일부를 연말인 12월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이는 협의회 운영 기간을 미리 결정하지 못하여 과다 편성하게 된 예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까지 한 것으로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적인 예산 조정의 범주로 이해되기 어려움.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전용 ('23.12.22.)	청렴권익 민간협력 (1133-333)	220-01	9	행정심판운영 (1137-370)	220-01	여비 단가 상승 등에 따른 국내여비 재원 마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전 의사결정 및 준비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편성 오류로 인해 과다 편성된 예산을 타 용도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5. 종합상담창구운영: 정부통합콜센터 인지도 개선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종합상담창구운영’은 국민들이 각종 행정 및 생활 관련 민원의 상담과 고충민원, 국민제안 등을 접수하고 정부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과 국민콜110운영을 위한 사업으로[500], 2023년도 예산액은 115억 4,700만원으로 이 중 107억 6,5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8,200만원(6.8%)이 불용되었음.

< 2023년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	214	8	222	189	33	214
국민콜110운영	11,333	△8	11,325	10,576	749	11,696
합 계	11,547	-	11,547	10,765	782	11,91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통합콜센터 기능 및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통합콜센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3월 이전에는 정부민원 전화가 각 부처별로 운영되어 일반 국

500) 세부사업: 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

민이 민원내용에 상응하는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불편이 초래되었음.

○ 이에 민원 접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을 확정하고, 같은 해 8월 정부콜센터 대표번호110 단일화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였음.[501]

○ 단일화 출범 이후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기관의 단일화 상담을 추가하거나 연계 상담 개시를 실시하는 등 통합콜센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대표번호로 자리잡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대표번호110을 통하여 정부민원에 대한 문의를 1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전문상담(2차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콜센터 번호 안내를 하고 있음.

< 콜센터 사업추진 연혁 >

○ 콜센터 개소(전국서비스 개시) : '07.5.10.
○ 전화상담 대행 : 행자부('07), 통계청·국세청('08), 여가부('11), 법무부('12)
○ 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개시 : 식약처·보훈처('10)
○ 정부콜센터 대표번호 110 단일화 출범 기념식 : '14.8.
※ 4개 기관 : 해수부, 농식품부, 교육부, 권익위)
○ 110정부민원콜센터 모바일서비스 개시 : '14.12.
○ 안전관련 신고전화의 119·112·110 통합 방안 확정(안전정책조정회의) : '15.1.
○ 5개 기관 대표번호 110번 단일화 상담 : '15.6.
※ 5개 기관 : 인사혁신처, 행안부, 보훈처, 식약처, 통계청
○ 4개 기관 콜센터 대표번호 110번 연계 상담개시 : '15.12.

501) 4개 기관(해수부, 농식품부, 교육부, 권익위)으로 시작

※ 4개 기관 : 과기부, 외교부, 국토부, 기상청
○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 개소 및 서비스 개시 : ’16.10.28
○ 3개 기관 콜센터 대표번호 110번 연계 상담개시 : ’16.12.
※ 3개 기관 : 법무부, 복지부, 관세청
○ 공정위 대표번호 110번 단일화 상담개시 : ’18.1.
○ 문체부 대표번호 110번 단일화 상담개시 : ’19.11.
○ 민간위탁 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 ’21.1. (228명)
○ AI기반 표준 통합콜센터 시스템 통합·구축 : ’22～계속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최근 5년간 통합콜센터(110)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다소간 상승이 있었으나, 한 번도 인지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90% 인지도 달성 후 별도의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다산콜센터 인지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콜센터 대표번호로서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502]

< 최근 3년간 통합콜센터(110) 인지도 조사 결과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지도(%)	39.1	44.3	38.6	39.0	45.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

502)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346962
(예) 다산콜센터: 모든 서울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들어 오세훈 전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시작해 70%대의 인지도를 90%에 가깝게 높였다.

르면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이와 달리 낮은 인지도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제한된 예산으로 단기간 내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로 연계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통합콜센터(110) 만족도 조사 결과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목 표	88점	90.1점	90.4점
실 적	90.1점	90.3점	90.7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러나 인지도와 관련하여서는 과거 국정감사나 결산심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되었고 콜센터로 통합 연계되는 기관이 늘어났음에도 통합콜센터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원인 분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503]

503) 통합보다 콜센터 번호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늘리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국정감사 및 결산심사시 관련 지적사항 >

구분	지적사항	비고
2014년	110콜센터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국정감사
2016년	110 콜센터 상담사의 직접고용 등 상담사들의 권익과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110 콜센터**의 홍보컨텐츠 개발 및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국정감사
2017년	**110정부민원안내 번호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 및 유관기관 간 협의 노력을 강화하고,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	결산심사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콜센터(110) 인지도 부족의 원인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통합콜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6.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1136-360) :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한 용역 수행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 진단, 반부패·청렴시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504] 2023년도 예산현액 26억 4,200만원 중 25억 4,300만원(96.3%)이 집행되고, 9,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644	2,644	-	△2	2,642	2,543	-	99	3,066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2,302	2,302	-	-	2,302	2,246	-	56	2,738
부패인식도 조사	90	90	-	-	90	87	-	3	90
부패영향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18	18	-	-	18	7	-	11	14
부패영향평가 자료 발간 등	36	36	-	-	36	25	-	11	32
부패유발요인 실태조사	12	12	-	△1	11	10	-	1	12
청렴컨설팅 운영	42	42	-	-	42	42	-	-	42
업무협의 운영 경비	144	144	-	△1	143	126	-	17	13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504) 세부사업: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1136-360)

2) 검토의견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분석 사업은 예산의 증액 및 일반연구비로의 전용 등을 통하여 연구용역으로 추진되었으나,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그치는 등 사업 성과물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실한 사업 수행으로 인해 당초 편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청렴컨설팅 운영’ 내역사업은 2022년에 일반수용비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3년에는 일반수용비 2,4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으나, 2023년에 증액된 2,400만원은 연도 중에 일반연구비로 전용되어 집행되었음.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3.28.)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1136-360)	210-01	24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1136-360)	260-01	진단·분석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해 청렴컨설팅 심층분석 일반수용비 →일반연구비로 자체 전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3년 예산 편성 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컨설팅 운영’ 내역사업에 대해 청렴컨설팅의 “심층진단 분석”을 위해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3년 3월 28일 해당 예산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였음.

○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분석 방식을 당초 자체 수행에서 연구용역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 세출예산 자체전용 요청’ 내부결재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분석 사업 연구용역 실시 필요 사유>

○ ’23년 청렴컨설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 구성원 대상 심층진단·분석 사업 신규 도입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일반수용비(1136-360-210-01) 24백만원 증액

- 본 신규사업은 6개 내외 멘티기관의 인터뷰 대상자 선정, 진단 모형(프로그램) 설계, 심층 인터뷰 진행, 결과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과 추진 단계별 다양한 행정절차가 수반**

○ 진단기관당 **10~30명의 인터뷰 대상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결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컨설팅 일정상 약 **한 달간**(~6월초)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22년 대비 인력보강이 없는 상태(5급 1명이 타업무와 병행)로 업무수행 차질이 불가피

* 그룹별 인터뷰 및 개인별 심층면접 구성, 숙련된 인터뷰어를 통한 면담, 진단 프로그램 설계, 자료 정리 및 예산 집행 등

- 따라서 일반수용비 목에서 일반연구비 목으로 변경 후 **전문 용역사업으로의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

※ 업무수행의 난이도, 업무량, 시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용역사업으로의 추진이 불가한 경우 심층진단·분석 예산 24백만원 전액 불용 우려**

자료: 국회권익위원회, '2023년도 세출예산 자체전용 요청서' 중 발췌

○ 요약하자면, 새로운 사업에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는데, 인력이 부족하여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신규 예산이 전액 불용될 것이라는 내용임.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과목을 일반연구비로 변경 후 컨설팅 심층진단을 외부 연구용역으로 추진하였는데, 동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사업목적을 "청렴컨설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심층진단·분석' 프로그램 설계 및 진행, 결과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으로 제시함.

○ 또한 과업내용으로는 심층진단 프로그램 설계, 인터뷰 대상자 모집 등 행정사항, 집단토론 및 개인별 인터뷰 진행, 진단·분석 결과물 산출 등을 들고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살펴보면, 용역수행내용이 4개 기관(방위사업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부산광역시 동구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그침.

○ 전체일정:

연번	기관명	운영일자	참여자	주요내용
1	부산동구청	23.5.30(화) 15시-16시	5명 (동구청3명, 수행사2명)	• 희망강의주제 - 고위직 관리자의 리더십과 소통능력 함양 - 구체적인 훈련을 통한 ACTION 과제 도출희망, 내부 조직 활성화를 위한 TFT운영중 - 의견을 조직문화 제도로 활성화 된 사례도 존재함
2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23.5.31(수) 14시-15시	6명 (동구청3명, 수행사3명)	• 희망강의주제 - 타기관의 사례 - 일하는 방식변화(상명하복 극복), 상호소통과 화합•참여시 보상관련 : 기념품, 내부적인 마일리지 적립 제공 예정•내부조직 활성화를 위한 TFT (혁신 어벤져스)과의 연계성 도출 희망 - 작은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 도출 필요
3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23.6.2(목) 14시-15시	7명 (한수정3명, 수행사3명, 권익위1명)	• 희망강의주제 - 소통, 불합리한 관행 근절,맑은 조직문화•기관 내 소통의 어려움 - 중간관리자와의 상위 관리자간의 소통 어려움 - 부서간 협업의 어려움•다양한 의견 도출과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교육 구성원
4	방위사업청	23.6.2(목) 14시-15시	7명 (방위청2명, 수행사3명, 권익위1명)	• 희망강의 주제 - 부서별 소통이슈 및 해결방안 도출 - 다양한 직군/세대간의 소통 방법•청렴도 개선을 위한 작은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 도출 필요 - 본인, 부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자체가 '실제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워크숍 과정에서 조직 내 부패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미있는 방식'으로서 청렴컨설팅 심층진단에 적합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워크숍 실시에 대한 내용 외에 당초 사업목적인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프로그램 설계', '진단·분석

결과물 산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임.

□ 또한, 실시기관별 워크숍 결과보고서에는 결론으로 ‘신생 조직으로서의 시스템 고도화’, ‘부서간 직원간 소통 협력 촉진’, ‘부서장이 대화의 장 마련’ 등 해당 기관의 조직운영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산을 투입하여 수행한 사업의 성과물로 보기에 미흡함.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당초 편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7.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1136-361) : 교육·강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다변화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교육및의식확산’은 공직자·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과정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려는 사업으로,[505] 2023년도 예산현액 21억 4,200만원 중 20억 6,400만원(96.4%)이 집행되고,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152	2,152	-	△10	2,142	2,064	-	78	2,239
청렴교육과정운영	618	618	-	△35	583	569	-	14	739
청렴교육시설운영	711	711	-	38	749	726	-	23	726
청렴교육콘텐츠 개발·보급	128	128	-	-	128	123	-	5	90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200	200	-	-	200	186	-	14	200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335	335	-	△7	328	315	-	13	384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160	160	-	△6	154	145	-	9	70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발간	-	-	-	-	-	-	-	-	3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505) 세부사업: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2) 검토의견

청렴 교육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문적 강의내용이 아님에도 특정 프로그램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특정 강사 및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양하고 신규 강의개발 및 교육내용·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청렴교육과정 운영' 내역사업에는 청렴교육 강사료 2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2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청렴교육 강사료는 청렴연수원이 공직자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담당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총 616건의 교육·강의에 대해 2억 6,400만원을 지급하였음.

□ 그런데, 이 중 10회 이상의 강사료를 동일인에게 지급한 사례가 2023년의 경우 17건이나 되며, 2022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건, 13건에 달함.

<최근 3년간 동일인에게 10회 이상 강사료를 지급한 사례>

2023년			2022년			2021년		
연번	강사명	지급횟수	연번	강사명	지급횟수	연번	강사명	지급횟수
1	조*란	21	1	문*근	19	1	김*광	27
2	김*영	19	2	김*향	16	2	안*진	20
3	김*향	17	3	한*희	13	3	김*용	18

2023년			2022년			2021년		
연번	강사명	지급횟수	연번	강사명	지급횟수	연번	강사명	지급횟수
4	김*성	16	4	이*중	12	4	김*희	18
5	한*나	15	5	김*성	12	5	조*란	16
6	조*훈	15	6	한*정	11	6	박*희	15
7	이*중	15	7	이*주	10	7	박*은	11
8	한*희	13	8	박*희	10	8	박*희	11
9	김*성	13	9	강*우	10	9	정*효	11
10	장*성	13	10	황*영	10	10	이*주	11
11	A*oM	12				11	정*정	11
12	안*진	12				12	이*일	11
13	문*근	12				13	김*원	10
14	황*영	12						
15	한*정	12						
16	정*정	11						
17	김*원	1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2023년에 21회로서 가장 많은 횟수의 강사료 지급이 이루어진 강사의 경우에는, 동일인에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7회에 걸쳐, 도합 1억 1,241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음.[506]

50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연수원이 청렴과 법령을 교육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소리와 접목하여 교육과정에 활용 중이며 해당 강사의 경우 이를 위한 판소리 전문가라고 설명함.

<최다 횟수의 강사료 지급이 이루어진 사례 지급 내역>

연도	지급횟수	지급액(원)
2015	16	10,235,000
2017	27	13,973,200
2018	44	26,144,000
2019	44	23,168,100
2020	7	3,257,280
2021	16	10,235,000
2022	8	6,102,500
2023	21	16,175,800
2024	4	3,119,600
합계	**187**	**112,410,48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와 같이 청렴 교육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문적 강의내용이 아님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일반국민 대상 교육과 공직자 대상 교육의 구분 없이 특정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집행 방식이라 할 수 없을 것임.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론 교육을 비롯하여 교육생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공연형·참여형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연형·참여형 강의의 경우 강의 특성상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력풀이 적어 다양한 강사 활용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향후 교육 과정 운영 시 신규 강사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강사를 활용하면서 교육

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교육 및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정 강사 및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양하고, 신규 강의개발 및 교육내용·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8. 부패신고자보호보상: 구조금 집행 부진 및 처리기간 지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부패신고자보호보상’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통해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507] 2023년도 예산액은 28억 3,200만원, 이·전용 등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2억 7,900만원으로 이 중 42억 7,400만원이 집행되고 500만원(0.1%)이 불용되었음.

< 2023년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부패행위신고자 보상금	2,697	1,351	4,048	4,048	-	2,864
부패행위신고자 포상금	80	113	193	193	-	80
부패행위신고자 구조금	20	△17	3	3	-	20
일반운영비	35	-	35	30	5	25
합 계	2,832	1,447	4,279	4,274	5	2,98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급 실적이 저조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구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처리절차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07) 세부사업: 부패신고자보호보상(1136-364)

(1) 구조금 집행 부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지출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08]

508)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⑦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 구조금 사건 처리 절차 >

(1단계) 접수 및 배정		(2단계) 사건 조사		(3단계) 안건 상정 및 지급 결정	
신청 접수 (신청인→위원회)	▸	사실관계 조사 및 구조금 지급요건 검토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월 1회)	전원위원회 결정 및 통지

○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 결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내 구조금 편성 예산 2,000만원 중 300만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행 부진에 대하여 구조금 처리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와 신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신청인의 신청 취하 등으로 기각되거나 종결되는 사안들이 발생하여 2022년에 비해 2023년 구조금 집행액이 감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부패신고 구조금 지급 현황 >

구분	처리(건)				지급금액(원)
	인용	기각	종결	합계	
2019년	-	-	-	-	-
2020년	-	-	1	1	-
2021년	-	3	5	8	-
2022년	3	5	4	12	17,429,630
2023년	3	10	4	17	2,980,600

* 부패신고 구조금은 2019. 10. 17. 제도가 처음 신설·시행되어 접수·처리 실적이 없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러나 이는 2022년 구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 등 노력을 지속함에 따라 당시 예산액 1,000만원을 상회하는 1,7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7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서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구조금 집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음.[509]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 노력 등을 통해 구조금 집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509) 2020년 정무위원회 결산 지적 사항(구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한 후속조치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산 설명자료에 기재한 내용임.

(2) 구조금 처리기간 지연

□ 2023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조금 지급에 있어 법정기한 준수 및 일부 우선 지급 등 구조금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2024. 3. 5.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최대 18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개선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부패신고 구조금 지급 평균처리기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처리기간	-	54일	89일	114일	194일

* 부패신고 구조금은 2019. 10. 17. 제도가 처음 신설·시행되어 접수·처리 실적이 없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러나 이는 2022년 기준 평균처리기간이 114일이라는 점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연장에 대한 규정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9조제4항[510]

510)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의 법정기한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한편, 2023년 평균처리기간은 2021년 89일, 2022년 114일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와 피해비용 간 인과관계 파악, 보완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장기화된 사건 3건(처리기간 각각 565일, 462일, 326일)을 2023년 4분기에 집중 처리함에 따라 타 연도보다 평균처리기간이 급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설명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처리기간을 계산해도 102일인데, 이 역시 법정기한인 90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됨.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와 관련한 구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구조금 지급의 신속한 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⑤ ~ ⑥ (생 략)

9.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사업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전용 발생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교육 및 홍보,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으로,[511] 2023년 예산은 8억 5,400만원, 이·전용 등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억 8,900만원으로 이 중 7억 6,500만원이 집행되고 2,400만원(3.0%)이 불용되었음.

< 2023년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사업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부정수급 신고처리	99	△13	86	80	6	98
신고센터 운영	49	3	52	50	2	49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및 홍보	101	1	102	98	4	62
이행실태 점검	18	△15	3	3	-	14
공공재정환수법 발전방안 연구	24	-	24	12	12	19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포상금	563	△41	522	522	-	749
합 계	854	△65	789	765	24	99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511) 세부사업: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1136-366)

2) 검토의견

엄밀한 사업계획 및 정확한 예측 없이 전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불필요한 전용이 재차 발생하게 되었고, 그 전용도 사업 간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 결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사업은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의 국내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3,000만원을 전용(23.10.27.)한 후, 연말(23.12.22.) 동 사업의 국내여비 부족분이 발생하자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시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동 사업으로 300만원을 전용하였음.

< 전용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① 전용 ('23.10.27.)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220-01	30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220-01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 부족분 자체전용
② 전용 ('23.12.22.)	국민소통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02	3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및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220-01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자체전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재정법」 제46조는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사업간 유사성이나 시급성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512]

○ 이는 예산의 전용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므로 전용하는 사업간 유사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그런데 동 사업은 엄밀한 사업 계획 및 정확한 예측 없이 전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불필요한 전용이 재차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512)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①전용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변경[513]으로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전용 당시 동 사업의 계획에 따라 향후 여비 집행을 예상하고 예상 집행잔액에 한하여 전용하였어야 함에도, 정확한 예측 없이 전용이 이루어짐으로써 ②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됨.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항 처리, 실태조사 등 현지출장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소요분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 소요는 사전에 예상이 가능했다고 보이므로 당초 ①전용 시 이 금액을 감안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으로 전용할 금액을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

○ 또한, ①전용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사업으로 전용된 금액 또한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국내여비 예산현액 6억 1,700만원 중 1,200만원 불용 발생)에서도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소요예산을 고려하지 못한 ①전용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 내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예산 전용은 최소한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타 세부사업으로부터 전용을 재차 받게 되는 ②전용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

□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사업 간 유사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예산집행지침은 정보화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

513) ①전용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이후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관련한 출장이 증가하게 되어 국내여비 부족분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②전용은 자체전용을 할 수 없는 사업을 전용한 것으로 지침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업 간 유사성 측면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예산 전용은 엄격한 요건 하에 최소한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0. 행정심판운영: 국내여비 적정 집행 및 전용 최소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행정심판운영’은 행정심판 운영지원, 전문검토위원 운용, 모의행정심판 경연 등을 위한 사업으로,[514] 2023년에는 예산 10억 6,900만원, 이·전용 등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1억 100만원으로 이 중 10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0.6%)이 불용되었음.

< 2023년 행정심판운영 사업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행정심판운영지원	682	25	707	703	4	708
전문검토위원운용	362	10	372	369	3	372
담당자전문교육등	13	1	14	14	-	13
모의행정심판경연	12	△4	8	8	-	12
행정심판통합추진	-	-	-	-	-	72
합 계	1,069	32	1,101	1,094	7	1,17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514) 세부사업: 행정심판운영(1137-370)

2) 검토의견

내역사업 편성액의 50%에 달하는 예산을 전용하여 국내여비로 사용한 것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라는 세부지침에 부합하기 어렵고, 국회의 심사 내용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므로 향후 불요불급한 국내여비의 집행을 최소화하는 등 지침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행정심판운영” 사업 중 ‘행정심판운영지원’ 내역사업의 국내여비 예산은 4,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전용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00만원으로 그 중 6,6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도 결산설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성액(4,200만원)의 50%에 달하는 2,200만원 예산 전용 금액은 다른 세부사업 내 국내여비를 전용함으로써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됨.[515]

< 2023년 행정심판운영 사업 결산현황 >

구분 (날짜)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9.22.)	청렴권익민간협력 (1133-333)	220-01	9	행정심판운영 (1137-370)	220-01	중앙행심위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전용 (’23.10.27.)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136-361)	110-03	10	행정심판운영 (1137-370)	110-03	전문검토위원 보수 부족분 충당
전용 (’23.12.1.)	이해충돌방지 제도운영 (1136-368)	220-01	13	행정심판운영 (1137-370)	220-01	중앙행심위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515) 행정심판운영 사업 내 타 내역사업 활용 부분: 3백만원
- 담당자 전문교육(△1백만원), 모의행정심판경연(△2백만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예산의 이·전용에 대하여 2023년 국내여비 예산이 전년 대비 2,600만원 감소하였고,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단가 인상 요인이 발생함[516]에 따라 여비가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행정심판운영지원 내역사업 국내여비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44	49	73	68	42
집행액	44	39	53	62	6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러나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 등의 경상경비와 관련하여서는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라는 세부지침이 적용되고 있고, 그에 따라 2024년 내역사업 내 국내여비 또한 2023년도 편성액과 동일한 금액(4,2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됨.

○ 기관기본경비나 다른 세부사업 내 국내여비와 달리 동 세부사업에 있어 현장 확인 및 조사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건에 대한 출장비가 국내여비 편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

516)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 여비 지급표 개정(2023. 3. 2.)
- 1일 기준 일비 및 식비 지급 단가가 각각 2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인상됨

여 편성하도록 한 취지는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솔선수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편성액의 50%에 달하는 예산 전용은 이러한 지침과 예산안 편성 과정 및 국회의 심사 내용을 형해화시키는 것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국내여비 집행 시 불요불급한 집행을 최소화하는 등 지침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

1. 일반회계 재무결산: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상각 관리 미흡

1)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형자산 명세서를 살펴보면,

○ 전기의 무형자산(소프트웨어)은 기초장부가액 7억 7,000만원에서 신규취득으로 22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으로 3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음.

○ 당기의 무형자산(소프트웨어)은 기초장부가액 27억 4,100만원에서 신규취득으로 19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정부 내 자산 이관으로 10억 3,700만원, 감가상각으로 8억 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음.

<무형자산 명세서>

(단위: 천원)

■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내역	기초 장부가액	취득/ 자본적지출	처분	감가상각	기타증감	기말 장부가액
소프트웨어	769,626	2,286,400	-	△315,490	△4	2,740,532

■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내역	기초 장부가액	취득/ 자본적지출	처분	감가상각	기타증감	기말 장부가액
소프트웨어	2,740,532	1,911,957	-	△806,533	△103,743	3,742,213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또한,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당기 프로그램순원가 중 감가상각비가 9억 1,500만원으로 전기에 비해 4억 4,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관리운영비 중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전기에 비해 7,100만원 증가한 7,900만원으로 나타남.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Ⅰ. 프로그램순원가	38,723	32,017	6,706	20.9
16. 감가상각비	**915**	**467**	**448**	**95.9**
Ⅱ. 관리운영비	17,628	16,264	1,364	8.4
16. 감가상각비	**79**	**8**	**71**	**887.5**
Ⅲ. 비배분비용	164	178	△14	△7.9
Ⅳ. 비배분수익	3,427	1,124	2,303	204.9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3,087	47,336	5,751	12.1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53,087	47,336	5,751	12.1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검토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무형자산(소프트웨어) 중 보안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과도하게 짧게 설정하여 비용의 과다계상과 자산의 과소계상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합리적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는 등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방지에 사용되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당기에 무형자산으로 신규취득하고 모두 내용연수를 1년으로 설정하여 상각을 진행하였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당기에 취득한 보안소프트웨어 가액은 2억 9,300만원인데, 이 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를 모두 1년으로 설정하여, 감가상각액을 1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구입일부터 2023년 말까지의 기간을 반영). 기말장부가액은 1억 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음.

<당기 취득 보안소프트웨어 감가상각 명세서>

(단위: 원)

물품	취득일자	취득단가	내용연수	당기 감가상각액	기말장부가액
트랜잭션보안 및 바이러스보호 소프트웨어	2023-03-15	7,600,000	1년	6,333,333	1,266,667
	2023-03-15	7,600,000	1년	6,333,333	1,266,667
	2023-08-28	17,091,889	1년	7,121,620	9,970,269
	2023-08-28	17,091,893	1년	7,121,622	9,970,271
	2023-08-28	18,851,349	1년	7,854,729	10,996,620
	2023-08-28	27,648,649	1년	11,520,270	16,128,379
	2023-08-30	22,118,918	1년	9,216,216	12,902,702
	2023-08-30	34,673,450	1년	14,447,271	20,226,179
	2023-08-30	44,237,832	1년	18,432,430	25,805,402
	2023-10-27	21,500,000	1년	5,375,000	16,125,000
	2023-10-31	17,000,000	1년	4,250,000	12,750,000
	2023-10-31	17,000,000	1년	4,250,000	12,750,000
	2023-10-31	20,240,000	1년	5,060,000	15,180,000
	2023-10-31	20,240,000	1년	5,060,000	15,180,000
합계		292,893,980		112,375,824	180,518,15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그러나, 다른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내용연수를 5년으로 설정하

고 있어, 보안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를 1년으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사용관리 소프트웨어 설정 내용연수>

물품	설정 내용연수	물품	설정 내용연수
사무용소프트웨어	5년	데스크탑통신소프트웨어	5년
경영관리소프트웨어		통신서버소프트웨어	
음악또는소리편집소프트웨어		파일시스템소프트웨어	
그래픽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소프트웨어	
웹페이지작성및편집소프트웨어		인증서버소프트웨어	
DB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		유틸리티소프트웨어	
정보검색또는서치소프트웨어		전자메일소프트웨어	
해석또는과학소프트웨어		트랜잭션보안 및 바이러스보호 소프트웨어	1년 혹은 5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또한, 과거 취득한 동일한 품목의 보안소프트웨어를 내용연수 5년으로 설정하여 상각한 사례가 있고, 이미 내용연수 5년을 도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로 물품을 처분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므로, 보안소프트웨어는 장기간 사용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음.

<5년 이상 사용 미처분 보안 소프트웨어>

(단위: 개, 원)

물품	개수	총 취득단가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기말 장부가액
트랜잭션보안 및 바이러스보호 소프트웨어	36	428,055,120	428,019,120	36,0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거 취득 보안소프트웨어 감가상각 명세서>

(단위: 원)

물품	취득일자	취득단가	내용연수	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	기말 장부가액
트랜잭션보안 및 바이러스보호 소프트웨어	2020-02-14	701,160	5년	549,242	151,918
	2021-02-25	49,768,630	5년	29,031,701	20,736,929
	2022-12-05	31,900,000	5년	6,911,667	24,988,333
	2022-12-05	31,900,000	5년	6,911,667	24,988,333
	2022-12-05	31,900,000	5년	6,911,667	24,988,333
	2022-12-05	20,240,000	5년	4,385,333	15,854,667
	2022-12-05	20,240,000	5년	4,385,333	15,854,667
	2022-12-05	21,010,000	5년	4,552,167	16,457,833
합계		207,659,790		63,638,777	144,021,013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재무제표 주석 역시, 무형자산(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5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설정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음.

<재무제표 주석: 무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소프트웨어	5년 ~ 10년	정액법

□ 짧은 내용연수의 상각은 비용의 과다계상 및 자산의 과소계상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기존 자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요불급한 자산을 새로이 취득할 근거가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용연수 설정과 관련하여, 조달청 쇼핑몰에서 구매 시 검사·검수 과정에서 별도로 내용연수를 입력하지 않으며 쇼핑몰에서 설정된 내역이 자동으로 디브레인(d-brain, 디지털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 연계되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내용연수의 설정은 법적권한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합리적으로 설정[517]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 결산 시 이

517) 기획재정부예규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8. **(내용연수)** (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권한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만,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종류		기준내용연수
광업권		20
산업재산권	상표권	5
	저작권	10
	특허권	10
	실용신안권	5
기타무형자산		5
소프트웨어		**5**

를 점검하고 상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합리적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여 자산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운영지원[518]: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부적절한 예산 전용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국내여비, 정책연구비 등 비인건비성 경비와 상용·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30억 1,900만원 중 27억 900만원(89.7%)이 집행되고 3억 1,000만원(10.3%)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위원회운영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위원회운영지원	3,019	-	-	3,019	2,709	-	310	2,72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검토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년인턴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일용임금(110-04목)으로 자체전용하였는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물건비(200목)에서 인건비(100목)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유사한 집행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518) 세부사업: 위원회운영지원(1030-3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5월 3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11월까지 운영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2023년 8월 1일 위원회운영지원 사업 내 일반수용비(210-01목) 3,900만원을 일용임금(110-04목)으로 자체 전용하였음.

○ 3명의 청년인턴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배치되어 국외 동향자료 조사, 행정업무 지원, 기록물 조사·연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인건비(100목), 물건비(200목), 이전지출(300목), 자산취득및운용(400목), 상환지출(500목), 전출금등(600목), 반환금및손실금등(710목)에 대하여는 각 목 내에서 자체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물건비(200목)에서 인건비(100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즉, 청년인턴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일용임금(110-04목)으로 전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체전용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야 했음.[519]

519)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비목별 전용권 위임현황>

구분	목 (25개)	자체전용대상	자체전용제외(기획재정부 협의)
100 (인건비)	110 (인건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타 비목에서 110-02목(기타직보수), 110-03목(상용임금), 110-05목(연가보상비)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200 (물건비)	210 (운영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타 비목에서 230목, 240목, 250-03목(특정업무경비), 210-12목(복리후생비)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 주요사업비 내 210-08목(유류비)에서 타 비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220 (여비)		
	230 (특수활동비)		
	240 (업무추진비)		
	250 (직무수행경비)		
	260 (연구용역비)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상금 등(310-03목)은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 320목, 330목, 340목, 350목, 360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 단, 320-09목(고용부담금)은 인건비(110목)로부터의 자체전용 허용 - 340-03목(해외자본이전), 360-03목(연구개발건축비), 360-04목(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360-05목(연구개발활동비 등)은 자체전용 허용
	320 (민간이전)		
	330 (자치단체이전)		
	340 (해외이전)		
	350 (일반 출연금)		
	360 (연구개발 출연금)		
400 (자산취득 및 운용)	410 (건설보상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410목(건설보상비), 420-03목(공사비), 420-04목(감리비)로의 자체전용은 현행 총사업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 420-01목(기본조사설계비), 420-02목(실시설계비), 420-05목(시설부대비), 490목(지분취득비)는 자체전용에서 제외
	420 (건설비)		
	430 (유형자산)		
	440 (무형자산)		
	450 (융자금)		
	460 (출자금 등)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480 (예탁금)		
	490 (지분취득비)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710-01목(예비비), 710-02목(예비금)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600 (전출금 등)	610 (전출금 등)		
700 (예비비등)	710 (예비비 및 기타)		

(자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36)

□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전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520]: 사업실적 부진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민간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및 평가 사업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①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및 제도개발 지원, ② 정책 성과 공유, ③ 개인정보보호 교육, ④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⑤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 ⑥ 개인정보보호정책 운영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61억 800만원 중 60억 9,500만원이 집행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동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접수행 방식’,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 방식’ 및 ‘개인정보보호협회 보조 방식’으로 집행되었음.

520)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6,108**	**-**	**-**	**6,108**	**6,095**	**-**	**13**	**7,142**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1,139	-	-	1,139	1,136	-	3	1,078
정책성과 공유	227	-	-	227	217	-	10	185
개인정보보호 교육	928	-	-	928	928	-	-	835
자율규제 활성화	1,720	-	-	1,720	1,720	-	-	1,790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	1,314	-	-	1,314	1,314	-	-	2,474
개인정보보호 정책운영 지원	780	-	-	780	780	-	-	78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 추진체계>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기관명	지원 금액 [실집행액]	불용액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발 지원	직접수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00	3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639 [627]	12
정책성과 공유	직접수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0	10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127 [123]	4
개인정보보호 교육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928 [902]	26
자율규제 활성화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1,370 [1,320]	50
	보조	개인정보보호협회	350 [350]	-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1,314 [1,278]	36
개인정보보호 정책운영 지원	직접수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	-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773 [636]	137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검토의견

(1) 출연 및 직접수행 방식의 정책연구 간 차별성 확보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을 통한 연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연구사업이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술전문성이 필요한 연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고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등 정책연구 간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내역사업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법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11억 3,900만원 중 11억 3,600만원(99.7%)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의 예산현액 11억 3,900만원 중 6억 3,900만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되었는데, 그 중 6억 2,700만원(98.1%)이 실집행되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내역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1,139	-	-	1,139	1,136 [1,124]	-	3	1,07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회계연도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사업(내역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한국인터넷진흥원	639	639	639	-	639	627	-	12	98.1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 등 정책 지원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법령개정과 신기술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연구용역과 개인정보 보호의 법 정합성 및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시 연구용역으로 구성됨.

□ 한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른 세부사업인 위원회운영지원[521] 사업에서도 집행되고 있는데, 동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521) 세부사업: 위원회운영지원 1030-300

보호위원회가 직접수행하고 있음.[522]

○ 동 사업의 정책연구비는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1억 4,000만원(93.3%)이 집행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위원회운영지원(1030-300) 정책연구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위원회운영지원 조직혁신지원	442	-	-	442	420	-	22	508
- 정책연구비	150	-	-	150	140	-	10	15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그런데, 최근 3년간 두 사업의 연구목록을 살펴보면, 그 연구내용이 유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을 통한 연구목록 중에 '개인정보 보호 동향 분석', '법제 개선방안', '법령간 정합성 연구'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연구가 포함됨.

522) 위원회운영지원(1030-300) 사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를 활용해 사업부서의 신청 등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을 수행함.

<2021~2023 직접수행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 연구목록>

연도	「위원회운영지원(1030-300) 사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접수행 연구목록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사업」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 연구목록
202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재규정 개선방안 연구	**2021년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 연구	**EU 미국 등 주요국 법제도 및 동향 심층 분석**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 연구	**한-EU 적정성 결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한계와 미래 발전방안 연구	**국제통상협정 및 주요국 개인정보 이전 제도 현황 연구**
2022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방안	**2022년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디지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무·형사법 등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
	심결제도 분석을 통한 위원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운영 방향 정립	**생체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디지털 기반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보호 현황 분석
2023	국세·산업분야 기존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 연구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동향 분석 용역**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지표 개발 연구	클라우드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 연구 용역
	데이터 경제시대 경쟁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조사 및 영상정보 보호방안 연구**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활용 정책 연구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연구 용역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일반적으로 출연은 여건상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을 통해 수행할 연구용역은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술전문성이 높고, 그 연구내용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높아 연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523] 및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524] 연구,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525]의 데이터 형식 표준화 연구 등의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기술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사업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① '개인정보 보호 동향 분석', '법제 개선 방안', '법령간 정합성 연구'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관련 연구라는 점에서 기술전문성의 필요가 높지 않고, ② 일부 연구용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수행하는 연구용역과 그 내용이 유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을 통해 별도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임.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술전문성이 필요한 연구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되,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연구 및 주요국 동향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정책연구 간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523)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 연구개발(R&D)(1033-301)
524) 세부사업: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1033-303)
525) 세부사업: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적 부진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업은 그 실적이 목표 대비 부진한데,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 수요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역사업은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교재를 개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9억 2,800만원을 출연하여 9억 200만원(97.2%)이 실집행되고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내역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개인정보보호 교육	928	-	-	928	928	-	-	835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내역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한국인터넷진흥원	928	928	928	-	928	902	-	26	97.2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2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 첫째, ‘개인정보처리자 교육’은 ① 개인정보처리자 수준에 따라 초급(개인정보 취급자)·중급(개인정보 담당자)·고급(개인정보 책임자)으로 분류하여 진행되는 수준별 교육,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분야에 따라 사업자 과정, 신기술 과정, 공공기관 과정, 법위반 사례별 과정, 영상정보 처리기기 과정으로 분류하여 진행되는 분야별 교육, ③ 민간기업 중 중소·스타트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강사파견을 통해 진행되는 소규모 사업자 교육으로 이루어짐.

○ 둘째, ‘정보주체 교육’은 ① 아동 및 청소년(초·중·고)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과정, ②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고령층, 장애인, 유학생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과정, ③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 과정으로 이루어짐.

□ 해당 사업의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 ‘수준별 교육’의 경우 교육 참여인원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55.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교육운영 횟수가 2022년 30회에서 2023년 37회로 증가하였음에도 총 교육 참여인원이 7,212명에서 5,479명으로 전년대비 약 24% 감소하였음.

<2022~2023 개인정보 처리자 '수준별'교육 운영 실적>

(단위: 명, %)

	2022				2023			
	회차/시간	목표인원	참여인원	달성률	회차/시간	목표인원	참여인원(전년대비 증가율)	달성률
초급	12회/7시간	3,600	2,591	72.0	15회/4시간	3,450	2,184 (△15.7)	63.3
중급	12회/7시간	3,600	2,900	80.6	14회/4시간	4,200	2,064 (△28.8)	49.1
고급	6회/7시간	1,800	1,721	95.6	8회/4시간	2,150	1,231 (△28.5)	57.2
계	30회	9,000	7,212	80.1	37회	9,800	5,479 (△24.0)	55.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수준별' 교육과정보다는 '분야별'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목표에 미달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분야별' 교육과정에서도 신규과정인 영상정보처리기기 과정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참여인원의 증가세가 나타나지 아니함.

<2022~2023 개인정보 처리자 '분야별'교육 운영 실적>

(단위: 명, %)

	2022		2023		
	회차/시간	참여인원	회차/시간	참여인원	증감(증가율)
중소·영세 사업과정	4회/7시간	236	4회/4시간	146	△90 (△38.1)
신기술과정	6회/7시간	405	6회/4시간	413	8 (1.98)
법령위반 사업자 과정	3회/7시간	676	3회/4시간	355	321 (△47.5)
공공기관 과정	3회/7시간	524	6회/4시간	561	37 (7.06)
영상정보 처리기기 과정	미진행		3회/2시간	1,046	1,046
계		1,841		2,521	680 (36.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또한, 정보주체 교육에서 취약계층 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과 교재를 매년 개선하였음에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신청인원의 부재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2022~2023 정보주체 대상별 교육 운영 실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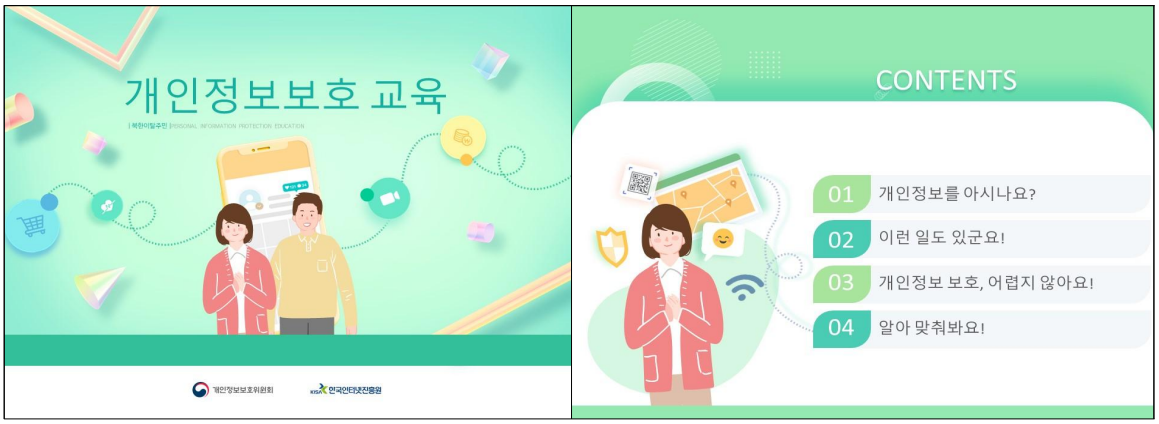
	2022		2023	
	교육횟수	교육인원	교육횟수	교육인원
고령층	5	96	17	1,086
장애인	3	52	11	374
유학생	2	139	2	583
다문화	1	12	3	30
학교밖 청소년	미진행		4	79
북한이탈주민	-	-	-	-
계	11	299	37	2,152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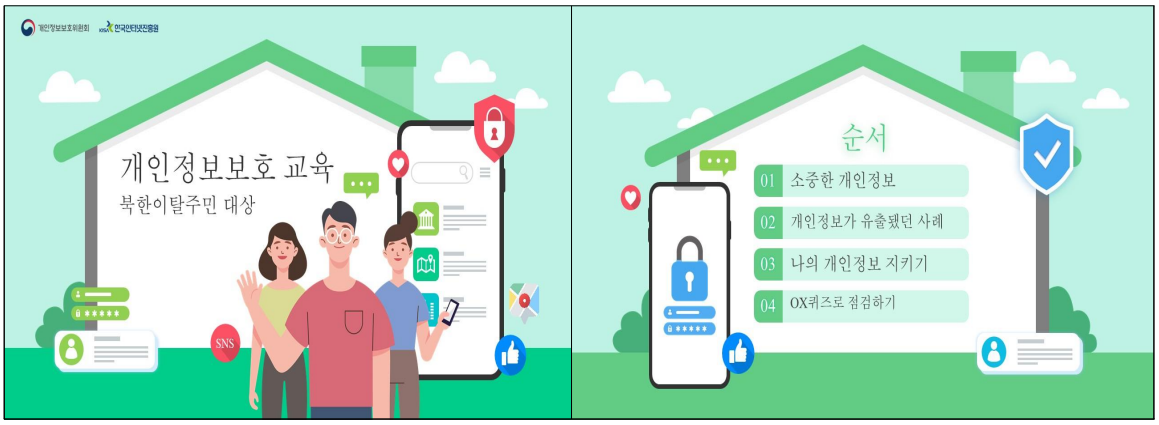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을 위해 약 30개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원치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2022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2023년에 동일한 기관에 다시 홍보를 진행하였고, 교육신청 인원 역시 부재하여 2년 연속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2022~2023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재>



2022년 북한이탈주민 교육 교재



2023년 북한이탈주민 교육 교재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교육과정을 개편함으로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자율규제 활성화 사업의 법적 위탁근거 보완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 활성화 사업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자율규제 활성화” 내역사업은 민간분야 자율규제 촉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17억 2,000만원이며, 이 중 13억 7,000만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되어 13억 2,000만원(96.3%)이 실집행되고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자율규제 활성화(내역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자율규제 활성화	1,720	-	-	1,720	1,720 [1,670]	-	-	1,79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회계연도 자율규제 활성화(내역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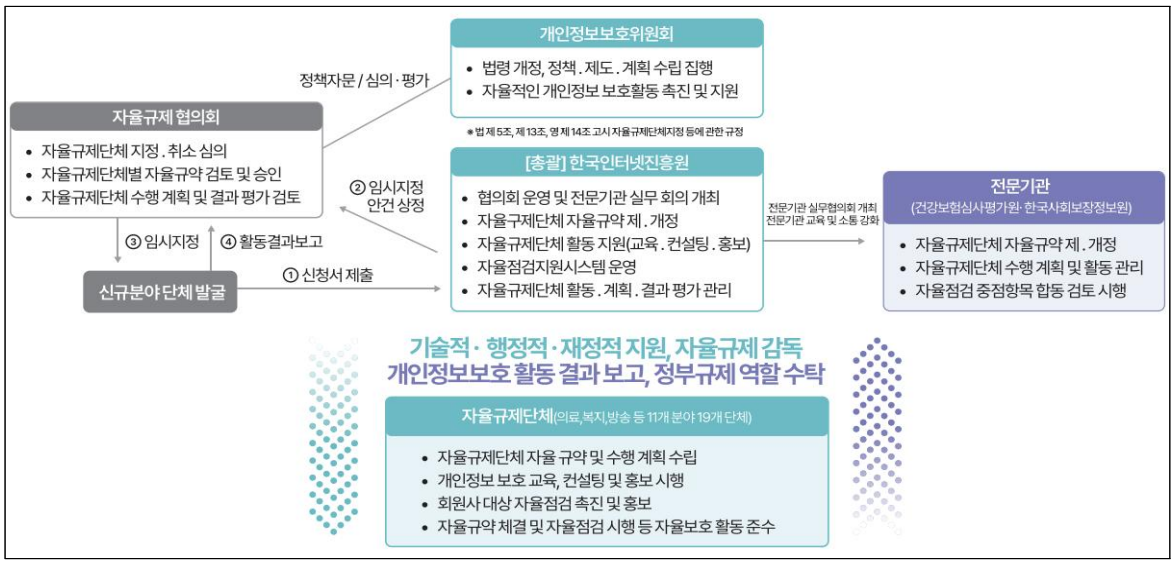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기관)						
	예산(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한국인터넷진흥원	1,370	1,370	1,370	-	1,370	1,320	-	50	96.3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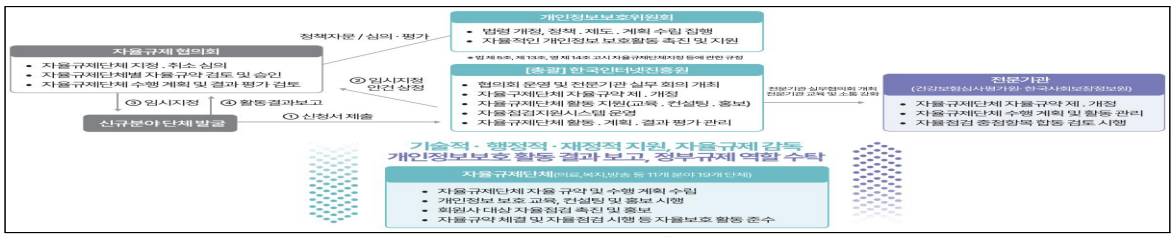
□ 자율규제제도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규제규약'의 수립·이행 및 자율점검 등 민간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인 회원사로 구성된 업종별 협회 및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약 제정 및 개정 등의 활동을 지원하게 됨.[526]

<자율규제제도 운영 구성도>



526) 「202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257



(자료: 「202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p.257)

□ 이와 같은 자율규제 활성화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527]를 근거로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동법 제68조[528]를 근거로 동 사업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있음.

□ 그러나, 법 제6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2조[529]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 관련 업무 중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②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업무만을 위탁 가능 업

527)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28)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52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업무의 위탁)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5.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이하 생략)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생 략)

무로 설정하고 있음.

- 즉, 자율규제 활성화 사업의 주된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등은 위탁 가능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 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 관련 업무 및 위탁가능 업무>

법 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 관련 업무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위탁가능 업무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별 규약을 제정하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협회 및 단체의 지원과 육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그러나,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업무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포괄적으로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법적 위탁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업무 위탁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사업 실적 부진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사업의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한데,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 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임.

□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7억원을 출연했으며, 출연된 경비 중 6억 6,300만원(94.7%)이 실집행되고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내내역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자율규제 활성화	1,720	-	-	1,720	1,720 [1,670]	-	-	1,790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700	-	-	700	700	-	-	10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회계연도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내내역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A)	집행액	교부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B)	이월	불용	실집행률(B/A)
한국인터넷진흥원	700	700	700	-	700	663	-	37	94.7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해당 사업은 본인의 삭제 신청·접수에 따라 담당자를 매칭하여 삭제 지원 상담을 수행하고, 삭제 혹은 접근배제 요청권한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임받아 신청인을 대리하여 게시판 담당자에게 요청한 이후 이를 확인 및 모니터링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24세 이하 국민은 본인이 18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글·사진·영상 등에 대하여 삭제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사업 게시물 삭제 등 절차>

삭제 신청 접수	⇒	삭제 지원여부 결정	⇒	삭제 또는 접근배제 지원	⇒	모니터링
•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접수		• 담당자 매칭 • 지원 대상 여부 판단 • 삭제 또는 접근배제 대상 게시물 파악		• 게시판 담당자에게 삭제(또는 접근배제) 요청 • 검색목록 배제 요청		• 삭제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삭제 지원 상담은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매칭하여 요청 게시물 유형에 따라 유형별 조치방법과 자기게시물 입증에 필요한 보완사항 등을 상담·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삭제 지원 게시물 유형별 조치방법〉

구분	게시물 유형	조치방법
유형1	•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으나, 게시물 삭제 권한 미부여 등으로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접근배제 요청
유형2	•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하여 삭제가 어려운 경우 등	검색목록 배제 요청
유형3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게시물을 제3자가 복제한 경우로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게시중단 요청 지원
유형4	•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자기게시물인 경우 •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삭제 방법 등 안내)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등 지원의 2023년도 사업목표를 29명이 하루 평균 3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 20,880건으로 설정하였음.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 처리건수 목표〉

* 29명 × 3건 × 20일 × 12개월 = 20,880건
  (시범사업 시행 시기에 따라 투입인력·비율 조정)
* 사업 총괄(1명), 삭제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전담(2명)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그러나 실제 운영결과, 신청건수 11,487건, 처리실적 10,813건으로 목표 대비 처리실적이 약 52%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2023년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 실적>

(단위: 건, %)

목표		실적		목표건수 대비 실적	
목표건수	20,880	신청건수	11,487	신청건수	55.0
		처리실적	**10,813**	처리실적	**51.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건수 자체의 부족이며, 신청자의 보완 요청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및 삭제 대상 정보가 게재된 사업체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도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낮다고 설명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홍보를 통해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료보완 상담 및 사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하여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속도를 높임으로써 사업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위원회기본경비[530]: 부적정 비목 집행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위원회기본경비”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원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정책국은 2023년 예산현액 2억 2,000만원 중 2억 1,100만원(96.0%)이 집행되고, 900만원(4.0%)은 불용되었고, 운영지원과는 2023년 예산현액 1억 6,200만원 중 1억 5,200만원(93.6%)이 집행되고, 1,000만원(6.4%)은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위원회기본경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위원회기본경비 (개인정보정책국)	212	-	8	220	211	-	9	165
위원회기본경비 (운영지원과)	162	-	-	162	152	-	10	18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검토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반수용비로 관서업무추진비를 선집행하고 국외출장 통역비용을 지불하는 등 예산상 비목과 불일치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30) 세부사업: 위원회기본경비(개인정보정책국)(7011-251), 위원회기본경비(운영지원과)(7011-253)

□ 현재 예산과목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다시 장·관·항·세항·목별로 분류되는데, 장·관·항은 기능별·성질별·소속기관별로 분류되고, 세항은 부서의 기능별·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되고 있음.[531]

□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되며, 크게는 100(인건비), 200(물건비), 300(이전지출), 400(자산취득 및 운용), 500(상환지출), 600(전출금 등), 700(예비비 및 기타) 등 7개 그룹으로 분류되고, 그 아래에 210-01(일반수용비), 240-02(관서업무추진비) 등 세목이 존재함.[532]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공고료 및 광고료,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 소규모물품구입대가, 특수목적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추진비(240-01목)으로는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등을,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으로는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등 기관의 공식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로 ① 간담회·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식사 비용을 처리하고 추후에

531)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예산과목>
532)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한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1. 5.

관서업무추진비로 정정하거나 ② 기관 내부 운영을 위한 다과류를 구입하거나 ③ 국외출장 시 통역비용을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첫째, 개인정보호위원회는 2023년 1월 25일 간담회, 업무협의 등의 명목으로 19건, 약 330만원의 식사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처리한 뒤, 2월 24일 19건 전체를 취소하고 관서업무추진비로 정정하였음.

-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초 업무추진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확정하여 배정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배정 전에 디브레인 1월 월마감 시점이 도래하여 일반수용비로 카드대금을 처리한 후 지급을 정정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는 목·세목 기준으로 이루어진 예 편성 및 심의의 취지에 어긋나게 선처리 후 정정한 것으로, 1월중 간담회 및 업무협의 등을 진행할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집행방식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발생한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연초에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산 (재)배정을 조속히 완료하는 등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인정보호위원회는 2023년 전체에 걸쳐 일반수용비로 다과류, 샐러드 등 식료품을 구입하였음.

-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간담회, 기자인터뷰 및 외부인 면담 등을 위하여 구입하였으나, 집행의 부적절성을 인지하고 2024년 2월 1일부터 집행을 중단하였다는 입장임.

○ 셋째, 개인정보호위원회는 2023년 7월 10일 “이탈리아 로마 출장

통역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는데, 통역비 등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사업추진비(240-01목)로 집행하여야 함.

□ 비목은 경비 성질별로 구별되어 편성되고, 국회 예산심의 시 사업별·기능별·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 시 식사비용, 다과류 구입비용, 통역비용 등을 사업·관서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적정한 비목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